



정책자료 2022-05-0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인구정책기획단



BIG
DATA



■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강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장
공동연구진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최정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편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은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책자료 2022-05-0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932-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f.2022.05.2>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11
제1절 기초발제: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13
제2절 토론 및 제언	28
 제3장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47
제1절 가족의 변화와 미래 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49
제2절 ‘인구위기’? 시민들의 삶을 인구로 바라보는 ‘사회의 위기’	53
제3절 한국 사회는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출산정책에서 인구정책으로, 인구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60
제4절 영화 ‘브로커’를 통해 본 미혼모와 입양가족의 삶	68
제5절 새로운 친밀성, 다양한 생애주기	74
제6절 생애 다양성의 문화적 요인	80
 제4장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897
제1절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89
제2절 가족과 돌봄의 민주적 재구성	94
제3절 스웨덴 가족의 다양한 모습, 가족문화, 가족복지정책	104
제4절 노인 돌봄, 요양원과 요양병원 너머	117

제5절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서 동거, 그리고 출생률	126
제6절 부성휴가가 가족 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135
제5장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139
제1절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준비는 되어 있나?: 현황과 과제	141
제2절 저출생·초고령 사회의 문제들과 해결방안	174
제3절 저출산의 뉴노멀화와 난잡한 돌봄	205
제4절 Covid-19 이후,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고령화와 노동 변화에 대한 대응-	234
제6장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	267
제1절 한국의 인구 현상과 가족 변화	269
제2절 저출생과 청년세대	274
제3절 가족의 변화와 재생산 위기	281
제4절 젠더, 성 평등(성차별), 가족문화	293
제5절 토론 및 제언	300
제7장 결론: 정책적 함의	313
제1절 저출산(생)·고령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315
제2절 평등성과 다양성의 강화	318
제3절 가족 제도(법) 개혁의 시급성	320



참고문헌	323
------------	-----

부 록	331
-----------	-----

[부록 1]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자문 자료 ·	331
---	-----

[부록 2] 포럼 및 컨퍼런스 안내문	348
----------------------------	-----

표 목차

〈표 1-1〉 각 포럼별 개최 현황	9
〈표 2-1〉 민족주의 가치 코드	16
〈표 2-2〉 민족주의 규범 코드	17
〈표 2-3〉 민족주의 목표 코드	17
〈표 2-4〉 성공주의 가치 코드	18
〈표 2-5〉 성공주의 규범 코드	18
〈표 2-6〉 성공주의 목표 코드	19
〈표 2-7〉 생존주의 가치 코드	19
〈표 2-8〉 생존주의 규범 코드	20
〈표 2-9〉 생존주의 목표 코드	20
〈표 2-10〉 힐링주의 가치 코드	20
〈표 2-11〉 힐링주의 규범 코드	21
〈표 2-12〉 힐링주의 목표 코드	21
〈표 2-13〉 좀비주의 가치 코드	22
〈표 2-14〉 좀비주의 규범 코드	22
〈표 2-15〉 좀비주의 목표 코드	22
〈표 2-16〉 가족주의 가치 코드	23
〈표 2-17〉 가족주의 규범 코드	24
〈표 2-18〉 가족주의 목표 코드	24
〈표 2-19〉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가치 코드	25
〈표 2-20〉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규범 코드	25
〈표 2-21〉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목표 코드	25
〈표 3-1〉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	77
〈표 5-1〉 연령별 기대여명	147
〈표 5-2〉 은퇴연령층(66세 이상) 빈곤율(2016~2020)	150
〈표 5-3〉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대책	155
〈표 5-4〉 급여별 수급자 현황(2022.3)	169



〈표 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169
〈표 5-6〉 보건복지 분야 예산(2022년)	181
〈표 5-7〉 안정소득	182
〈표 5-8〉 서울시의 안심소득	184
〈표 5-9〉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	184
〈표 5-10〉 남북한 경제지표 비교 (2021년)	194
〈표 5-11〉 복지국가의 정의	236
〈표 5-12〉 공적연금 지출 전망	250

그림 목차

[그림 3-1] 하위지역별 합계출산율 변화(1950~2020)	61
[그림 3-2]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사회조사)	74
[그림 3-3] 청년세대의 경향성	75
[그림 3-4] 가족 형태의 새로운 연대방식	80
[그림 4-1]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95
[그림 4-2]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	96
[그림 4-3] 남한의 성별 고용률 격차: 비혼/비자녀 여성과 기혼/유자녀 여성 비교	101
[그림 4-4]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	102
[그림 4-5] 지인의 보너스 가족사진	108
[그림 4-6] 보너스 가족 스틸 사진	109
[그림 4-7] 아동수당 내용	115
[그림 5-1] 총인구 규모 추이(1949~2021)	142
[그림 5-2]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을 추이	143
[그림 5-3] 생산연령인구 추이(중위)	144
[그림 5-4]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144
[그림 5-5] 총인구와 고령 인구 추이(중위)	145
[그림 5-6] 세계와 한국의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	145
[그림 5-7]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치	146
[그림 5-8] 부양비 전망	147
[그림 5-9] 연령대별 고용률(2018~2021)	148
[그림 5-10] 연령대별 고용률 비교	149
[그림 5-11]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151
[그림 5-12] 55~79세 근로 희망자	151
[그림 5-13] 55~79세 중 생활비 보충을 위한 근로 희망자 비율	152
[그림 5-14]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50~2017)	166
[그림 5-15] 빈곤율(OECD 회원국, 2021년)	168
[그림 5-17]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169



[그림 5-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2021년, 성별/연령대별)	170
[그림 5-20] 소득 분위별 비율의 변화(1990~2016년)	172
[그림 5-21] 2021년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구조	175
[그림 5-22]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추계	178
[그림 5-23] 임금 수준별 기혼자 비율	180
[그림 5-24] 아파트 평균가격	188
[그림 5-25]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개혁안	190
[그림 5-26] 노동·돌봄·여가 지향 정도	235
[그림 5-27] 복지국가의 성격	237
[그림 5-28] 노동의 변화, 인구의 변화가 가져오는 두 가지 요구	238
[그림 5-29] 논의 범위와 문제 구성	239
[그림 5-30]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추정치	241
[그림 5-31] 스웨덴 생애 고용량	243
[그림 5-32] 스웨덴 노동시간	244
[그림 5-33] 전 세계 노동 소득분배율 추이	245
[그림 5-34]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57
[그림 5-35] 노령화지수, 세대유형별 가구 구성비, 성·연령별 1인가구 구성비	258
[그림 5-36]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2022.9.)	258
[그림 5-37]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	259
[그림 5-38]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259
[그림 5-39] 요약: 새로운 복지국가의 탐색 중 하나로서 돌봄 사회	265
[그림 6-1] 한국 인구감소 추이	308
[그림 6-2] 주요국의 출산율 추이	309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1년 12월 통계청이 전망한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1,400만명 넘게 감소한 3,766만명이며,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8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52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졌으나 2019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18명으로 세계 최저출산국이 되었고,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져 2020년대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사상 최저 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결국 지금은 ‘백악이 무효’인 상황으로 저출산 관련한 모든 연구와 정책들, 그리고 막대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출산장려 정책과 제도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2005년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전반적인 정책에 약 22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사실상 없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과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 및 가족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임금 격차의 심화와 불완전 고용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세대 내 이질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는 공정과 정의, 복지와 분배를

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둘러싼 갈등을 증가시키는 한편, 젊은이들의 '5포' 현상으로 표출되는 다수 청년들의 좌절감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확대해 오고 있다. 학교 졸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이라는 기존의 생애주기가 불가능해지거나 이러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 또는 출산의 기피를 초래해왔고, 그 결과 초저출산과 고령사회라는 매우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청년세대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갖게 만들었고, 이는 '출생'과 '인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과 결혼과 관련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진 상황에서 만혼, 비혼, 무자녀, 동거가구, 황혼이혼, 1인 가구 등 각 세대마다 또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은 기존 가족의 구성과 형태, 의미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의 형태와 의미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동거, 비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인식 전환 및 제도 혁신을 위해 싱글맘(대디)가족, 동거가족, 비혼모 출산, 비혼여성의 아이 입양, 정자은행, 낙태죄 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및 가족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도 개혁과 새로운 인구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출산 및 육아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둔 기존의 가족정책에 더하여 가족 및 인구와 관련된 변화하는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인구문제에 접목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삶, 가족의 다양성, 인구의 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필요한 정책은 경제논리 및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단순한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2030년부터 시작될 급격한 인구감소 사회에 대응

하여 변화된 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다양한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일 것이다. 즉, 개인의 다양한 삶의 질 보장과 성평등, 가족 및 개인의 다양성과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 개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구정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급격한 인구 변화 및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코로나19의 상황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화되어 왔기에 기존의 인구정책이나 가족정책, 경제적 시각 중심만의 대응으로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당면한 출산율 급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인들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러한 원인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의 한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가능성을 성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국가주의적 시각 외에 각 개인의 주관적 태도와 가치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삶의 경로에 대한 미시적, 사회문화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의 변화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태도와 행위, 다양한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등에 대한 깊이있는 사회·문화적 접근과 분석을 가족과 인구문제에 적용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비혼선언’, ‘비혼식’, 기업의 비혼 지원금 제도 도입 등은 전례없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이에 본 연구는 여러 학문 및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구현상과 관련된 사회 집단 및 계층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식, 주장, 대응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 관점, 주관적·심리적 관점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족의 관계, 다양한 인구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들을 공론화하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고 새로운, 다른,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총괄 주제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2. 세부 내용

본 연구의 세부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둘째는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셋째는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그리고 넷째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이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의 변화와 개인, 공동체
- 다양한 삶의 형태(방식)와 가치관
- 개인의 주관적 태도와 가치관 및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경로에 대한 분석
- 가구(가족) 아닌 개인 기준의 가족인구정책과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한 논의
- 연대와 합의의 스웨덴 모델 등, 서구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보장 및 개인-가족 관계를 살펴봄

나.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 사회의 다양성이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사회와 개인)
-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가족 구성(형성)에 미치는 영향(개인과 가족)
- 가족 개념의 확대와 법적 혜택 부여: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비혼 등 가족의 다양성 존중
- 다양한 출생에 대한 논의와 비혼 입양 문화의 확산 및 수용을 위한 법적 보호 및 지원
- 다양한 생애주기, 생애 다양성의 문화적 요인

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다.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 성평등한 사회와 문화, 성평등 정책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벨, 고용기회 및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 가족과 돌봄의 민주적 재구성
-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여성의 '출산 안할 권리', '출산할 권리')
- 양성평등 정책의 확대(임금 평등, 남성 육아참여 확대 지원 등)
- 가족내 젠더 문제 분석 및 해외 사례 분석
- 가족 문화, 가족 복지 정책
- 결혼(제도)과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라.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개인과 가족, 사회 관계
- 개인의 자유(주체성과 독립성)의 보장 vs. 사회 결속, 사회통합
- 더 나은 사회에서의 개인과 가족 관계
- 주체적 개인에 기반한 사회공동체 의식 고양
- 다양성, 성평등, 관용과 인정, 사회규범의 사회화와 학습
- 미성년의 인권, 사회적 권리 및 보호 보장, 다양한 교육플랫폼 접근 용이성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와 긍정적 미래 비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
- 다양성, 성평등, 관용과 인정, 사회규범의 사회화와 학습
- 새로운 저출산(생) 고령사회 정책

3. 연구방법

본 연구과제는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라는 대주제 아래 각 세부주제 및 세부 내용들에 대한 여러 연구 분야와 사회 집단 및 계층의 다양한 관점과 문제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위한 열린 포럼 형식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개인과 가족, 사회공동체(인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대별, 세대간, ‘세대융합’의 열린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연령대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관점과 ‘세대융합적’ 공론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패널(전문가)을 섭외하여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포럼의 형식은 컨퍼런스형 포럼 1회, 공론화형 열린 포럼 3회의 총 4회의 포럼을 수행하였다. 각 포럼은 개최시 상황에 맞춰 1차, 2차 포럼과 4차포럼인 컨퍼런스는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회의로 진행하였고, 3차 포럼은 비대면의 줌회의로 진행하였다. 각 포럼별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1〉 각 포럼별 개최 현황

포럼	일시	세부 주제
1차 포럼	2022. 6. 16(목)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2차 포럼	2022. 9. 16(금)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3차 포럼	2022. 10. 7(금)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4차 포럼 (컨퍼런스)	2022. 11. 18(금)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제1절 기초발제: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제2절 토론 및 제언

제2장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제1절 기초발제: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¹⁾

1. 가치, 규범, 목표

‘가치’는 오랫동안 사회학의 주된 주제였다. 여기에는 파슨스의 영향이 크다. 행위의 일반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인류학자 및 심리학자와 함께 1951년 출간한 『일반행위이론을 향하여』에서 파슨스는 클러크혼의 가치 개념을 채택한다. “가치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구별 짓는 것으로, 가용한 행위의 양식, 수단, 목적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한 것의 개념이다.”²⁾ 이 개념에서 핵심은 ‘바람직한 것’과 ‘선택’이란 용어다. ‘바람직한 것’은 한 개인이나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규범적 이상이다. 무엇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지 구분함으로써 사실 세계는 비로소 규범 세계가 된다. ‘선택’은 바람직한 것을 규범적 이상으로 삼아 행위의 양식, 수단,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행위의 양식, 수단, 목적이 여럿이 될 정도로 사회가 충분히

1) 최중렬(계명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문화사회학회 회장)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1차 포럼 (2022.6.16.) 기초발제문 내용임

2) K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ed. T. Parsons, E. A. Shils, pp. 388-433. NY: Harper. p. 395.

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떤 행위의 양식, 수단, 목적이 더 바람직한지 계산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사회가 양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계산하려면 양화되어야 하고, 양의 측정에 근거가 되는 보편적 화폐가 있어야 한다.

가치를 이렇게 정의하면, 가치 개념 자체가 근대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파슨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회도 규범적 이상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근대 사회라고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전근대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행위의 양식, 수단, 목적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충분히 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대적인 가치 개념은 가치, 규범, 목표를 분석적으로 나눌 때 보다 분명히 이해된다.

가치는 특정한 사회적 행위를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을 제공하는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다. 인간 실존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모든 힘으로부터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애매성은 행위자에게 어떻게 행위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대전환하는 시기에는 인간 실존의 모순이 극대화된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 지 길을 잃은 상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 있는 세계관으로 엮어 안내해줄 상징체계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기댈 그 무엇도 없기에 가치론적 질문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인간은 이러한 가치론적 질문을 등불 삼아 실존적 모순을 헤쳐나간다.

규범은 특정한 사회적 행위를 적절과 부적절로 분류하는 에토스 또는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도덕적-미학적 상징체계다. 같은 가치를 믿는 사람이라도 이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스타일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인은 종파에 따라 금욕주의 또는 신비주의 방식으로 일상을 조직해서 구원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규범은 이렇듯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규칙이다. 규범은 역할을 맡은 행위자의 행위 규칙에 대한 기대다. 특정 역할을 맡은 행위자는 역할에 기대되는 행위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기대된다. 이는 기대되는 역할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수행했느냐에 따라 평가를 난다. 규범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도덕적 기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잘 수행하거나 위반하면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규범이 추상적인 가치와 달리 특정한 에토스나 라이프스타일로 구체화되는 이유다.

목표는 특정한 사회적 행위를 효율과 비효율로 분류하는 수단-목적 도식을 제공하는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다. 목표 차원에서는, 주어진 목표를 어떠한 수단을 써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전통으로 내려온 습속이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는 데 효율적이라면 계속 해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새로 만든 법이나 제도가 더 목적을 성취하는 데 효율적이라면 습속 대신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목표는 도구적이다. 목표는 또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구를 임기응변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이다.

이러한 가치, 규범, 목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마주한 한국 현실을 분석해보면 어떨까?

2. 민족주의: 공동체의 불멸성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인의 최고의 가치는 공동체의 불멸이었다. 작게는 가족공동체,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 공동체의 불멸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인이자 누구나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의무였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속해서 진행된 ‘국민국가 만들기’ 덕분이다. 핵심은 실존적 상태에 빠진 한국인의 삶에 공동체의

불멸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국가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국가는 전통과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전근대적 민족’과 전통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근대적 국가’의 기괴한 결합이다. 민족 중심의 국민국가 만들기는 불멸하기 위해 전통을 ‘연속’시키려고 한다. 국민국가가 연속시키려는 전통의 핵심은 에스니이다. 에스니는 “공동의 조상, 공동의 역사 기억, 공유된 문화, 특정 영토와의 연합, 그리고 연대감의 신화를 소유한 인간 집단”³⁾이다. 반면 국가 중심의 국민국가 만들기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만인을 원자적 개인으로 만들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시민권 제도를 가동한다. 발전주의와 민주주의로 구체화된 한국의 민족주의는 국민에게 현세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민족공동체의 불멸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가르친다. 성장하고, 생산적인 것이 성스러운 가치로 추앙받는다.

〈표 2-1〉 민족주의 가치 코드

가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	
	성	속
공동체의 불멸성	성장하는, 생산적	쇠퇴하는, 비생산적,

민족의 불멸성을 추구하는 규범은 금욕주의이다. 생산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향락을 멀리하고 일상을 금욕노동하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3) Smith, Anthony D. 1988. “The Myth of ‘Modern Nation’ and the Myths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1(1): 1-26.

〈표 2-2〉 민족주의 규범 코드

규범	규범적-미학적 상징체계	
	적절한	부적절한
금욕주의	금욕노동	향락

공동체의 불멸성을 성스러운 가치로 삼아 금욕주의 규범에 따라 노동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초일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단-목적 도식을 통해 볼 때 일상적 수단을 통해서 는 효율성이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캔두이즘! 성과를 내기 위해 온갖 편법, 위법, 초법, 탈법이라도 써서 극한의 자발적 노력을 기울인다.

〈표 2-3〉 민족주의 목표 코드

목표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	
	효율적	비효율적
캔두이즘	초일상적	일상적

3. 자기계발 담론: 개인의 성공

외환위기 이후 자기계발 담론이 출현하였다. 자기계발 담론은 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아를 경쟁하는 시장 안에 위치지우라고 요구한다. 사회적 공간이 마치 행위자들이 내기물을 두고 치열한 포지션 경쟁을 벌이는 장처럼 변해버리고 있다. 자기계발 담론의 자장(磁場)은 ‘성공-생존-힐링-좀비’로 넓게 포진되어 있다.

가. 성공주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성공 담론이 나온다. 성공학이나 처세술로 불리던 ‘자조 담론’이 그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발전주의 담론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성공의 단위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성공주의 가치 코드는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 가치 코드와 다를 바 없다.

〈표 2-4〉 성공주의 가치 코드

가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	
개인의 성공	성	속
	성장하는, 생산적	쇠퇴하는, 비생산적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방식은 단순히 금욕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이때의 개인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닥쳐오는 온갖 ‘리스크’를 관리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작은 변화라도 몰입해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변화, 혁신, 자유, 책임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내면으로부터 진정되게 추구하지 않고, 성공을 위한 삶의 ‘스타일’이나 ‘애티튜드’로 도구화한다.

〈표 2-5〉 성공주의 규범 코드

규범	도덕적-미학적 상징체계	
몰입주의	적절한	부적절한
	도구적	실존적

목표 차원에서는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자기계발 문화상품이 제공한 지침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 2-6〉 성공주의 목표 코드

목표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	
	효율적	비효율적
자기계발	자기계발 지침을 실천하는	자기계발 지침을 실천하지 않는

나. 생존주의

생존주의 세대의 마음은 생존/낙오 코드를 근본으로 한다. 이제 자아는 ‘기업가’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생존주의자’다. 성공주의 코드를 통해 삶을 살아보았자 실제 삶은 성공은커녕 생존도 어렵게 거꾸러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꿈꾸던 개미들은 ‘쪽박’을 쳤다.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다수 노동자도 더는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특히 3포, 5포, 7포, 심지어 N포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은 성공주의 코드를 활용해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렸다.

〈표 2-7〉 생존주의 가치 코드

가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	
	성	속
장기 생존	생존하는	낙오하는

생존주의자는 자아를 도구화하면서도 그 자아와 진정성을 유지한다. 외부의 잣대가 더는 추악한 것이 아니라 선망하는 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온통 긍정적인 세상에서는 기만적으로 자아를 도구화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거의 실존의 바닥까지 내려가 진정되게 자기계발 해야 생존할 수 있다.

2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표 2-8〉 생존주의 규범 코드

규범	도덕적-미학적 상징체계	
진정성	적절한	부적절한
	진정된	비(非)진정된

성과의 유효성은 단기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혁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때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성실하게 기존 방식으로 관성에 따라 활동하면 된다.

〈표 2-9〉 생존주의 목표 코드

목표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	
관성	효율적	비효율적
	관성을 따라	혁신하는

다. 힐링주의

힐링주의 코드는 생존경쟁에 나섰다 실패한 사람들을 ‘힐링’하여 다시 경쟁 대열에 복귀하도록 고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가치의 차원에서는 성공은커녕 생존에도 실패했기에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표 2-10〉 힐링주의 가치 코드

가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	
개인의 힐링	성	속
	치유하는	상처받은

규범의 차원에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단지 자신의 자아와 도구적 관계를 맺어서는 깊게 베인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표 2-11〉 힐링주의 규범 코드

규범	도덕적-미학적 상징체계	
진정성	적절한	부적절한
	진정된	비(非)진정된

생존경쟁에 패배한 원인은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 어서 마음공부를 통해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세상과 내가 하나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를 괴롭히고 패배시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패배의 고통이 치유될 길이 보일 것이다.

〈표 2-12〉 힐링주의 목표 코드

목표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	
마음공부	적절한	부적절한
	마음공부 하는	마음공부 하지 않는

라. 좀비주의

좀비주의 코드에서 성스러운 가치는 좀비스럽게 되는 것이다. 좀비스럽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행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자기계발을 통해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사는 정상인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2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표 2-13〉 좀비주의 가치 코드

가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	
공동체의 소멸	성	속
	좀비스러운	정상인다운

좀비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나가야 한다. 이는 다른 좀비에게 물려서 자신이 먼저 파괴되어야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다른 정상인들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한다.

〈표 2-14〉 좀비주의 규범 코드

규범	도덕적-미학적 상징체계	
정신나간	적절한	부적절한
	정신나간	‘제정신의

좀비는 결코 다른 좀비를 공격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상적인 인간을 공격하는데,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정상인이란 사실상 생존주의자들뿐이다. 좀비가 안전한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물어뜯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소수의 1%만 빼고는 대부분 생존주의자로서, 사실상 잠재적 좀비다.

〈표 2-15〉 좀비주의 목표 코드

목표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	
파괴	효율적	비효율적
	파괴하는	보존하는

4. 자기계발 담론의 밖

자기계발 담론 자장 밖에 두 가지 코드가 존재한다. 하나는 가족주의 코드이다. 가족주의 코드는 자기계발 담론의 자장의 힘이 덜 미치는 지방에서 발견된다. 지방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경쟁의 장 안에 놓지 않는다. 대신 가족적 자아로 살아간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생존하려고 악을 쓰지도 않는다. 힐링의 필요성도 없고, 더 나아가 좀비가 될 염려도 없다.

다른 하나는 나르시즘적 개인주의 코드다. 이는 패션이 사회적 삶을 조정하는 원리로 널리 확산된 것과 연관된다.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모든 사회적 관계 밖에 위치지운다. 남을 의식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자기를 과시해서 지위를 얻거나, 인정 투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거나, 자아를 연출하여 남과 공연을 벌일 필요가 없다.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는 환상적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

가. 가족주의

가족주의 코드에서 최고의 가치는 가족의 행복이다. 당장 부모에게 최대한 손 벌리지 않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구성하는 길이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평범한 정상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표 2-16〉 가족주의 가치 코드

가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	
	성	속
가족의 행복	가족의 행복	가족의 불행

2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평범한 정상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가능할 정도의 좋은 노동시장에 들어가도록 자기 계발해야 한다. 몰입하지 않고 적당하게 관여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자신이 겸연쩍기는 하다.

〈표 2-17〉 가족주의 규범 코드

규범	도덕적-미학적 상징체계	
적당주의	적절한	부적절한
	성찰적 겸연쩍음	비(非)성찰적 자신감

주변의 습속을 수단으로 삼는다. 습속을 따라 행위하는 것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수단-목적 도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행위를 조직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자기계발 담론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표 2-18〉 가족주의 목표 코드

목표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	
습속	효율적	비효율적
	가족주의 습속	자기계발

나.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자기환상적 쾌락

나르시시즘적 코드에서 성스러운 가치는 자기환상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타자의 인정을 추구해보았자, 기껏해야 가족의 인정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인정은 오히려 자유의 속박으로 변질된다. 이럴 바에는 타자의 인정을 아예 추구하지 않고 자기 환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표 2-19〉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가치 코드

가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	
나르시시즘 개인주의	성	속
	자기환상적 쾌락	타자로부터의 인정

자기환상적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규범은 재미(fun)다. 사회의 전통적 규범이 가하는 의무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재미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할 때 나타난다.

〈표 2-20〉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규범 코드

규범	도덕적-미학적 상징체계	
재미	적절한	부적절한
	재미있는	의무적인

재미있게 자신의 자아를 패션인으로 설정하여 새로움에 대한 체험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자기환상적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사소한 차이를 통해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만들고 자기환상적 쾌락에 몰두한다.

〈표 2-21〉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 목표 코드

목표	도구적-전략적 상징체계	
자기환상	효율적	비효율적
	새로움 추구	기존의 것 답습

5. 무엇을 할 수 있나?

막스 베버는 일찍이 근대성이 가치 영역의 다신교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에는 가치 다신교가 나타나

지 않는다. 기껏해야 공동체의 불멸성, 개인의 성공, 가족의 행복,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가 이 글에서 확인한 가치이다. 한국사회가 기능적으로는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가치의 차원에서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왜 다양한 가치 영역이 분화하지 않을까?

베버에 따르면 가치 영역이 분화되려면 무엇보다도 현실을 부정하는 초월적인 구원종교가 출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초월적인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가 출현하고, 이를 규범적 차원에서 실현할 형제에 윤리가 나타나야 한다. 형제에 윤리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좁은 이웃 윤리를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를 강제한다. 이 윤리를 따르려면 혈연, 지연, 학연에 따르는 자연발생적 욕망을 억누르고, 일상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만 한다. 초월적인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가 논리적 정합성과 목적론적 정합성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면 보편적 윤리와 삶 사이에 극도의 긴장이 야기된다. 이 긴장으로부터 역설적으로 가치 영역이 분화된다. 즉 형제에 윤리에 종속된 각 영역이 윤리를 뚫고 일어서 초월적 가치를 스스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의 역할을 맡은 것은 민족주의이다. 민족의 불멸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발전주의와 민족주의가 다뤄왔다. 하지만 더는 한국인들은 민족주의를 따라 삶을 조직하지 않는다. 기존 방식대로 불멸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저출산은 이것의 한 징후적 예시에 불과하다. 베버의 진단으로 따르다면, 한국의 초월적인 구원종교의 역할을 해왔던 민족주의가 모두가 준거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로서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규범적 차원에서 아무리 금욕주의를 강제해도 더는 따르지 않는다. 이 틈을 비집고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계발 담론이 치고 들어 왔다. 수단-목적 도식을 통해 주관적 가치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베버가 말한 문화적 인간

이 비로소 등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껏해야 한계효용 차원에서 주관적 가치를 계산하는 왜곡된 경제적 인간이다. 한계효용이라는 주관적 가치를 계산해낼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 안으로 다시 숨어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작은 차이 만들기를 통해 자기환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민족주의가 더는 현실을 부정하는 초월적인 구원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때 국민국가 만들기를 추동한 민족주의는 한국인에게 구원을 약속한 종교의 구실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 마주한 현실은 신분 사회에 버금갈 정도로 갈가리 찢긴 참혹한 몰골이다. 이제 한국인들은 민족주의를 벗어나 일시적으로 실존적 상태에 빠졌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었다. 루만을 따라 말하자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한계에 처하고 체계의 위기 또는 죽음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주의가 더는 현세의 삶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넣지 못한다. 민족주의가 약속한 구원보다 더 초월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필요하다. 사회학 이론이 나서야 할 때다.

P.S. 짐멜의 가치론: 짐멜에 따르면 가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할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 가치평가는 무엇인가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만 발생한다. 기다림의 인내, 탐색의 노력, 노동력의 적용, 그렇지 않으면 바람직한 것에 대한 금욕. 그러나, 보통 희생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짐멜은 가치가 가격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이런 점을 볼 때, 청년이 가치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드러난다. 주어진 일을 얻기 위해 희생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럴 바에는 아예 희생하기를 포기한다. 저출산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헌신하는데, 얻은 금전적 가격이 아예 없거나 너무 낮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데 자신의 미래를 베팅하지 않는다.

이는 베버와 파슨스로 이어지는 행위자와 다르다. 이 행위의 전형은 독실한 신자의 금욕적인 헌신에서 나타난다. 사회가 규정한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고려하고 계산하지만 결국 그 사회의 규범이 안내하는 대로 특정 수단을 고른다. 사회화가 아주 잘된 모범생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이런 모범생이 아니다. 그렇게 해보았자 희생한 대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짐멜과 고프만의 행위자와 유사하다. 이 행위의 전형은 운명에 자신을 맡긴 도박사의 도박에서 나타난다. 자주적인 결단, 위험 감수, 숙명성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면 아예 베팅을 안 한다.

제2절 토론 및 제언

1. 토론 1: 다양한 삶의 형태와 가치관⁴⁾

발제를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그리고 그 조합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삶의 방향과 여러 이벤트가 결정될 것인데, 토론은 저출산 현상과 관계있는 결혼 및 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4)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1차 포럼(2022.6.16.) 토론문 내용임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다양해 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구성하고 실천하는 가족의 모습도 매우 다양해졌다. 결혼이 당연하고 대부분이 결혼을 하던 시기에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서 가족이 시작되고, 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서 가족이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기 때문에 가족은 지금보다 획일적이었다. 그러나 결혼 관계가 영원하지 않기도 하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등 결혼을 기준으로 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더 이상 한국 가족을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한 개인의 삶은 혼자 살거나 결혼하는 삶, 둘 중 하나로 구분해왔다면, 이제는 한 개인이 선택한 지금 삶의 방식이 평생 유지되지도 않고 여러 방식을 걸쳐가며 변화할 수도 있어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형태와 가족 모습의 변화의 특징을 결혼과 출산 이행, 그리고 가구 통계 변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에 약 33만 2천 건에서 2020년에는 약 21만 4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인구 1천 명 당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로 보면, 1996년 9.4명에서 2020년에는 4.2명으로 20여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의 고리가 강한 우리 사회는 혼인 감소와 함께 출생아 수 또한 꾸준히 감소해 2000년에 약 63만 5천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0년에는 약 47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로도 감소해 2020년 약 27만 명까지 하락하였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최근 몇 년간 매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한국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혼자 사는 인구는 증가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인구는 감소하는 등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거나 확대하는 행동에서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개인적 환경의 변화와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일 것이다. 여러 환경적 영향이 있겠지만 오늘 포럼의 주제에 맞추어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사회조사의 결과를 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23.8%에서 2010년에는 30.7%, 그리고 전체 2020년에는 40% 이상(41.4%)으로 증가하여 결혼이 선택이라는 생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과 관련된 환경이나 조건이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고 이러한 조건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와 혼인율 변화를 보면 이런 생각의 변화가 결국 실천에 반영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삶의 형태는 통계상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형태도 있다. 예를 들어 동거 형태를 들 수 있다. 통계상 결혼을 택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실제 생활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삶도 감소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혼인인구 통계는 혼인신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혼인인구 감소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인구의 감소를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면, 사회조사 결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사람은 2020년 59.7%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이전보다 결혼의 당위성은 감소하고 비혼 동거에 대한 개방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12)45.9%→('14)46.6%→('16)48.0%→('18)56.4%→('20)59.7%). 특히, 2018년에 과반이 동의하는 결과에 이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낮은 연령대에서 이에 대한 동의가 높은 것을 찾아볼 수 있어, 당분간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적인 결혼이나 출산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이행할 텐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살더라도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생각이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생각은 또 다시 더욱 자신에게 유리한, 혹은 편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과정이 반복된 순환의 결과가 결혼이나 출산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생활방식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속도나 저연령대의 변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제 개인의 삶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다각도에서 받아들이기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에서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무자녀 등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족 구성 방식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3년 전보다 증가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삶의 방식에 동의한다는 생각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실천하는 것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렇게 괜찮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실천을 하고자 했을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차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우리 사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짙은 편이라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사람들은 낯설어하거나 편견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다양한 방식의 삶을 마주할 가능성이 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혼자 또는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더라도 낙인이나 도덕적 판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제도나 정책적으로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실

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과 가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연구, 정책 등 여러 자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현실의 삶과 사회 환경이나 제도 사이 괴리를 좁히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토론 2⁵⁾

발제를 요약하자면, 저출생은 초월적 상징체계로서 민족주의가 힘을 잃은 징후적 예시이며, 공동체의 불멸성을 성스러운 가치로 삼는 민족주의의 자리에 성공주의, 생존주의, 힐링주의, 좀비주의의 특징을 갖는 자기계발 담론이 자리하게 되었다. 자기계발 담론의 밖에는 가족주의 코드와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의 코드가 존재하며, “민족주의가 약속한 구원보다 더 초월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매체”가 필요하다.

가. 저출생과 고령화는 왜 문제인가(the matter of problematizing)

단지 경제적인 문제일 뿐인가? 삶의 질의 문제인가? 노인 문제는 삶의 질의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저출생은 어떠한 문제인가? 실업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모순이지 않은가? 저출생을 단지 ‘산업예비군’의 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문제일까? 따라서 왜 저출생과 고령화가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출생은 국

5) 하홍규(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1차 포럼(2022.6.16.) 토론문 내용임

가 차원에서 문제화하는 것이지, 개인 차원에서는 별문제가 아니다. 반면, 고령화는 개인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길어진 노후 생활은 개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가지는 문제점

저출생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경제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저출생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다. 성스러운 가치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의 타당성

신성한 것이 가지는 힘을 고려할 때 최종렬 교수의 발표는 타당한 논의이다. 행위자에게 신성하다는 것은 지고의 가치,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제도나 상징, 지배 세력이 신성하다고 하다면 그것은 강력한 정당성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신성한 것은 사회변동의 힘이다.

라. 민족주의가 과연 1997년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초월적’ 상징체계였는가?

성과 속의 구분과 초월성과 내재성의 구분은 동일하지 않다. 성스럽다는 것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것의 내용은 다르지만 모든 사회에는 신성시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민족주의, 경제주의, 가족주의는 모두 성스러운 가치였다). 그러나 신성한 가치와 현실 사이에

3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초월적인 이상(ideal)이 필요하다. “한국의 초월적인 구원 종교의 역할을 해왔던 민족주의가 모두가 준거할 수 있는 초월적인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로서 힘을 잃었고” 이를 대체할 다른 초월적인 구원종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아 생긴 문제인가? 아니면 민족주의(가족주의)는 원래 초월적이지 못했는가? 오히려 경제주의가 성스러운 가치로 지배하여서, 초월적 가치의 등장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마. 가치의 생성 문제

문제화의 중요성은 가치가 경험의 의미를 묻고 답해 가는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이다. 가치는 “누군가와 나눈 깊은 감정적 유대, 강렬한 공동체 감정, 종교적 경험, 독재 체제의 인권 유린, 전쟁 중의 파괴와 공포, 물질적 불평등의 참상, 소수자를 향한 폭력을 겪거나 목도하는 경험 등”(신진욱 2018, 23) 기존의 자아를 뒤흔드는 비일상적 체험에서 탄생한다. 가치의 생성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이다.

3. 토론 3⁶⁾

현재의 저출산, 저출생은 이미 30년 전 지금 2030세대 태어나던 시기 정해진 미래였다. 이미 1983년 인구 대체율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생아 수를 계속 줄여왔기 때문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따른 인구정책이 완벽하게 성공했다 볼 수 있다. 여기

6) 이예스더(중앙일보 기자, 복지팀장)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1차 포럼(2022.6.16.) 토론문 내용임(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에 더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의학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선호 사상에 기반한 여아선별 낙태가 성행했고, 1994년에 이르러서는 출생성비가 116에 달할 만큼 성비 불균형까지 커졌고 출생아 수는 1980년대 초반생에 비해 반 토막 났다. 현재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은 출생 시기부터 이전 세대의 반의 반이고 모수 자체가 줄었다. 모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최근 5년 새 1도 안되는 합계출산율이 되었다.

민족주의가 더는 우리 현재 삶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지 못한다는 최종렬 교수의 기초발표에 공감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대로면 2100년에는 인구 2,000만명이고 2300년에 소멸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되고 이후 근로세대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연금제도가 지탱가능하다. 이런 경고는 섬뜩하지만 지금 2030 세대에게는 남의 일이다. ‘사회 유지를 위해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출생아 수 줄어드는게 뭐가 문제야?’ 이런 입장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 공포 마케팅은 그들에게 당장 내 삶을 움직일 동기가 되지 않는다. 자기계발 담론, 성공주의, 생존주의, 힐링주의...등, 여러 스펙트럼으로 흩어진 사회로 분화되었다.

과연 민족주의가 약속한 구원보다 초월적인 가치가 있을까? 2030 세대가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비혼, 비출산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조직마다 MZ 세대를 두고 말이 많이 나온다. 개인주의, 합리주의, 손해는 절대 참지 않으며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이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생존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다. 이들 뒤를 잇는 2000년대생, 2010년대생은 더할 것이다. 20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국민이 성공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고 달리다가 갑자기 생존~좀비까지 흩어지는 듯하다. 해봐도 안되면 힐링-좀비로. 생애 주기 동안 추구하는 가치가 계속 달라질 듯하다.

현재 40대 이상, 기성세대가 과연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가치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을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개인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성공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환경이었던게 아닌가. 현재의 2030대는 별세계에서 와서 국가나 민족은 나몰라라다. 나만 아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등지가 없는데 새가 알을 낳겠냐” 저출산 현상을 진단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초저출산 문제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과도한 경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논의가 인구문제에서 시작돼야 한다. 청년 인구의 60%인 36만~42만 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30년 후에 청년이 20만~30만 명밖에 안 남을 것이고, 이들이 수도권에 머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개별적인 정책으로 보면 당장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게 통합적 지원, 일자리+주택이다. 서울이 블랙홀처럼 청년들을 빨아들여 결혼과 출산을 막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로 분절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 관점에서 ‘청년 생애주기 정책’으로 통합하하고 미혼에서 결혼 및 출산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생애주기 정책’ 안에는 일자리와 주거 이외에 자녀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총망라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구성해야 한다. 또 각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창출하여 지방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어떤 청년이든 원하는 일을 지방으로 분산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삶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 보사연 변 연구위원의 최근 분석에 매우 공감한다. 가족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실제 가족의 모습은 하루가 달리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한 사람의 삶은 혼자 살거나 결혼하는 삶, 둘 중 하나가 아니며, 지금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이 평생 유지되지 않는다. 법적 테두리 안의 가족만을 인정하고 보호·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은 시대를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해 변해야 하고 개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삶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한다.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보완과 대안적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해나가야 계속 변화하는 가족의 미래 모습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인이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가족생활을 하더라도 낙인이나 도덕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제도나 정책적으로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환경 마련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최근 5년 새 그나마 이런 논의의 첫발을 뗀 사회적 공감대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간 정부의 저출산 컨트롤 타워는 복지부 아래였는데, 그런데 새 정부가 여가부를 해체하며 여가부와 인구 문제를 합쳐서 부처를 개편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되면 가장 최악이라고 분석하는데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인구문제 자체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인구정책은 저출산 현상의 완화도 있지만, 인구감소가 초래할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책을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국방·조세·연금·국가 연구개발·지역산업 인력 확보 등의 거시적인 중장기 전략을 짜고 기획해야 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름만 대통령 직속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안 그래도 힘없는 위원회를 여가부를 해체하며 여가부와 합친다고 한다. 인구가 중요하다고 하니 그걸 떼다가 가족 업무에 갖다 붙이려는 것이다. 여가부를

개편한 미래가족부가 범정부 조정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4. 토론 4)

필자는 비영리 청년단체의 설립자이자, 필드에서 전국 천여명의 청년들과 사회공헌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다. 또 한편으론 스물일곱 살에 창업하여 근 10년여간 회사를 경영해 온 청년사업가이기도 하다. 형식을 떠나 공론의 장이 될 본 포럼에 참가한 패널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이에 필자는 NGO 활동가로서의 시각과 자본주의 속 기업경영인으로서의 시각 두 가지로 토론에 참여코자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고찰일 것이라 생각한다. 평소에도 이번 포럼의 핵심 아젠다인 저출산 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사실 발제문에 적어주는 것처럼 사회학적인 현상 해석과 이에 기인한 이론적 접근들은 학자가 아닌 저에겐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적으로 훌륭한 철학자들이 존재했고, 이들의 삶에 대한 해석과 연구결과에 따른 주장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들은 어쩌면 보다 현장에서의 눈높이를 더 중요시 여기고 날이 갈수록 격변하는 문화적 환경과 이들 속에서 존재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뉴패러다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의 패널분들의 구성을 살펴봤을 때 필자는

7) 국도형(청년문화포럼 부회장/한국사회공헌협회 회장)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1차 포럼 (2022.6.16.) 토론문 내용임

청년을 대표하는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고자 한다.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지위가 아주 높은 고위직 관료 출신의 관계자가 찾아왔다. 선거를 도와달라는 이유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있었다.

“현세대의 젠더 갈등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돌아왔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젠더 갈등은 일부의 기우에 불과할 뿐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젠더 갈등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반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는 위치에 계셨던 분의 인식관이었기에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입장에서 젠더 갈등은 결코 등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치적인 담론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더 얘기할 순 없지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선거들의 결과만 보더라도 20대 여성과 남성들의 표가 어떤 식으로 분리되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학문에 기인한 현상 해석보다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핵심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이로 인한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의 변화보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주체들 간의 ‘갈등’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이들의 진정성 있는 애타투드의 부재에 그 원인을 찾는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심지어 지역 간의 갈등까지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다. 현장사업가의 눈으로 봤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추진력뿐만 아니라 실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험적 연륜을 매우 필요로 한다. 세대 간의 갈등은 시니어들의 경험적 연륜과 청년들의 에너지, 창의력 등을 결합시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일자리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창업 위험성'에 대한 장벽을 낮추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창업 시장 활성화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들은 시니어들과 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시니어들은 나약하다고 판단되는 청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재의 대한민국 창업 시장은 철저하게 시니어 창업 시장과 청년 창업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지 못하니 사업 실패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여 개인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있어 큰 대못을 박는 형국이다.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젠더 간의 갈등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같은 터전의 구성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느라 과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만남 이전의 상대방 사상이나 이념 체크까지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자본주의의 폐해 속에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이런 갈등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꾸준히 쏠아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터져버린 것들이 다양한 분야와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물론, 그간 정부 주도하에 꾸준히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자체에는 심지어 갈등조정관이라는 새로운 공무원직이 생겨나기도 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과정과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다. 필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필자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바로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은 세금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지역 청년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축제에 예산이 수천만 원씩 쓰여지는데 정작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공

공행정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반복해서 참여한다. 지자체 산하 청년 네트워크라고 만들어진 집단은 단순히 모여 차나 몇 잔 마시고 본인 들끼리 형식적인 토론을 주고받은 뒤 어떠한 실천 없이 해산된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진정성과 눈높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것이 상호 간에 인지되어 ‘아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사회 각 분야 다양한 곳에서 소통, 소통하고 외치고 있지만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런 소위 ‘판떼기’들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아주 형식적인 선에서 하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판을 만들어내는 여러 집단들은 왜 이 일이 중요한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단순한 숫자놀이에 불과한 행정적 결과물에 집중할 뿐 애초부터 갈등 해소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을 비판하거나 특정 인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미시적 관점이 아닌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굳이 정부 주도하에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긴 했지만 반대로 충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희생까지 담보하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까지 분열되어버린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그냥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잘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필자가 느끼는 갈등에 대한 체감은 위험을 넘어 위협을 느끼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언가를 달성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쓰이는 곳들 또한

형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형태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례행사처럼 즐겁지도 않은 축제들을 열어 소수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것보다 갈등집단들을 정밀하게 나누어 이들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로가 이런 것들을 향유하며 쌓는 신뢰의 장들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역할은 딱 여기 까지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권이 바뀔때 따라 제도적 일관성과 이에 따른 스탠스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순간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키’는 민간에서의 ‘자발적 문화형성’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라 본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듯 특정한 집단 주도하에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은 필연적으로 강제성을 띠 수밖에 없다.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갈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임을 느끼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자유의지 하에 가져가야 한다. 그러려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 해소’를 사회적 해결과제의 핵심으로 삼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학 등의 학문적 접근을 통해 집단과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풀어낼 수 있는 민간에서의 신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런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 현장에선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공존 사회에 대한 필요성과 이념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의 상대적 가치를 강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거부감이 덜하고 이익집단의 이익 관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범국민적 구심점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 또는 종교가 아닌 한국에만 존재하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민족이념을 ‘이타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

운 사회학적 프레임이 제시되면 어떨까 싶다. 물론 완벽한 이념이나 사상이 존재하지 않듯 민족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겠으나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국가와 민족을 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있기에 충분히 거부감이 적은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롭게’ 한다는 영역을 구체화 시키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들이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면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거스를 수 없는 개인주의 흐름 속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구심점을 만든 뒤 다양한 분야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어준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떠나 앞으로도 꾸준히 생겨 날 새로운 갈등들과 이로 인해 파생될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거시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5. 토론 58)

발제자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치, 규범, 목표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가치, 규범, 목표의 경로 의존성이 깨지는 시점을 1998년 외환위기로 규정하고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사회는 민족주의가 지배하던 사회이고,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는 자기계발 담론에 기초하여 성공-생존-힐링-좀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며 이외에도 가족주의와 나르시즘적 개인주의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민족주의가 힘을 잃고 그 사이를 자기계발 담론이 치고 들어온 형국이며 소위 ‘초월적인 구원 종교’가 부재한 상태로 초월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상징적으로 일

8) 이성준(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 강사)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1차 포럼(2022.6.16.) 토론문 내용임(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필요하다.

한 국가가 지나친 파편화(예. 개인의 원자화)에 이르지 않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는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연구 주제가운데 하나(예.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논쟁)이다. 몇 가지 (비교적) 명백해 보이는 점은, ① 민족주의는 국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최소한의 필요조건(특히, 국가적 위기 시 두드러지는 편)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이 감소 ②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파편화 가속(한국의 경우 파편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③ 파편화가 심화되면서 능력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여러 새로운 세대 및 집단 간 갈등으로 이어짐(예. 젠더 문제, 소득 격차 문제) ④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서로를 견제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유주의는 능력주의를 거쳐 이기주의로, 공동체주의는 권위주의를 거쳐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① 민족주의가 와해되면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공공선이 부재하고 이에 관한 공론장 논의도 부족한 점, ② 세계화 문제(그런데 과연 세계화는 공동체주의의 '적'인가?), ③ 물질주의 및 경쟁주의의 심화('경제적 인간'의 승리)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반전의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있지는 않다(상대적 빈곤).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파편화가 이전보다 훨씬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자유주의의 종말?).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공동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물론, 공동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민족주의를 대체할 만

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과연 스웨덴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균형은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스웨덴의 균형은 국가주의적 개인주의(statist individualism)에 기초한 균형이다. 스웨덴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와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지만 전체주의와는 다른 모습이다. 개인 간 사랑 또는 친밀한 관계는 개개인의 독립을 전제로 하며, 국가는 사회공학적 믿음에 기초하여 이러한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웨덴 게이트”는 적어도 일부는 사실이다(예: 노부모가 아들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 아들에게 집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는 빠른 속도로 퇴조하고 그 자리를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 메꾸면서 근대성은 스웨덴 문화의 핵심(!)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강한 중앙집권적 정부와 시민 민주주의(예. 코포라티즘)가 동시에 공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권리보다 연대와 합의의 중요성이 항상 강조된다(예. Janteslag). 이는 스웨덴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다(농부와 왕이 항상 중심적인 역할).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민 및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사민당의 지지를 하락과 더불어 정부 구성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탄핵도 빈번하다. 특히, 1990년 경제위기 이후, 더불어 EU 가입 이후 세계화 및 유럽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소위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4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하지만 스웨덴에서 연대와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건재하며, 따라서 스웨덴 모델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진단도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스웨덴의 사례가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인가?

스웨덴에서 연대와 합의가 여전히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원인은 ① 연대와 합의가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강한 편(예. 경로의존성), ② 사회공학적 믿음에 기초한 정책적 의사결정, ③ 이를 가능케 하는 스웨덴의 문화적 토양(예. 철저하게 독립적인 개인)이다.



제3장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제1절 가족의 변화와 미래 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제2절 ‘인구 위기’? 시민들의 삶을 인구로 바라보는
‘사회의 위기’

제3절 한국 사회는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4절 영화 ‘브로커’를 통해 본 미혼모와 입양가족의 삶

제5절 새로운 친밀성, 다양한 생애주기

제6절 생애 다양성의 문화적 요인

제3장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제1절 가족의 변화와 미래 가족을 위한 정책과제⁹⁾

1. 가족의 변화

20세기 동안 가족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은 단연 핵가족화일 것이다. 여기에서 핵가족화는 단지 가족의 형태적 변화, 즉 함께 사는 친족의 범위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단순화된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생활 단위가 부부와 자녀로 단순화된 것은 20세기 동안의 사회 변화를 가족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 할 것 없이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부모집을 떠나 생계 기반이 있는 도시로 이동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연애결혼이 부상했고, 새로 형성된 가족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관계보다 점차 더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부부간의 성적, 정서적 만족이 강조되었으며, 아동의 정서적 가치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물론 20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된 남아선호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핵가족에 대한 친족, 특히 부계친족의 영향력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나아가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친족의 강고한 영향력에 주목하여

9)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저출산·고령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2차 포럼(2022.9.16.) 패넬발표문 내용임

한국을 ‘가족주의 사회’로 규정하였고, 이는 행위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에서 모두 관찰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적어도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녀의 가치를 추상적인 가계계승(대 잇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오랜 친족 관계의 영향력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경유하면서, 20세기의 가족은 핵가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핵가족화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의 계보적 연결 대신에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 가족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가족은 함인희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단순화되고 현재화”되었다.

이러한 핵가족화가 반드시 가부장제의 위축을 동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를 성역할 규범의 강화와 약화의 동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핵가족화는 현대적인 성역할 분리를 가져왔다. 산업화에 따라 일터와 가정이 분리됨으로써, 가정은 생산활동으로부터 차단된 가사와 돌봄의 장소가 되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계부양을 담당하는 역할과 가정 내에서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역할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역할로 할당되었다. 이러한 현대적인 성별 분리 또는 성역할 규범은 핵가족화에 수반된 가족에 대한 개인의 강조라는 추세 또는 가치와 긴장을 초래하였다. 이는 특히 여성들의 삶에서 잘 드러난다. 여성들은 교육, 노동시장 참여, 경제적 소유 등 여러 가지 기회와 권리로부터 배제되기 쉬웠으나, 핵가족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교육기회나 취업기회가 여성들에게 점차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21세기 첫 20년 동안 한국 가족이 겪은 변화는 20세기 동안의 핵가족화를 진척시킨 측면과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들은 신체적·경제적 부양만이 가족이 제공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서적인 만족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부부 사이, 부

모-자녀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핵가족이 점차 부모를 비롯한 친족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얻어왔듯이, 이제 개인들은 가족 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상적인 부부상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청년세대 대상의 사회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분리형 부부가 아닌, “함께 일하고 함께 기르는” 협력적 부부상에 대한 지지이다. 미래 가족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는 개인의 다층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로서 가족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성 역할 의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부터 20대이거나 미혼이며 여성인 사람들의 성 역할 의식은 다른 집단들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었다. 1970-80년대 경제성장과 핵가족화 추세에서 확산된 성 역할 규범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크게 변화하였고, 비혼/만혼 등과 같은 혼인 행동과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40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결혼의향은 이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조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배적인 문화와 사회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성역할 규범과 타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고등교육의 확대,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성장한 젊은 여성들은 가족 형성(결혼과 출산)이든 성 역할 규범이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30대 남성 42.5%, 여성 33.6%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의 급격한 확산은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는 커플의 증가와 함께, 저출산 추세가 더 심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비혼, 이혼,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모든 생애 단계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자가 증가할 것이며, 생애의 한 시점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사는 시간은 생애의 일부분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 생애를 기획할 수 있는 안정된 소득과 소속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축소되어 왔다. 결혼 진입이 늦어지거나 포기되고 경제적 사유에 따른 이혼과 별거 등이 1인 가구의 비중 증가에 기여했다. 여성의 취업과 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졌지만, 남녀가 모두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개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 가족생활을 위축시키고 혼자 사는 인구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가족형성과 유지에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현실이 개선된다고 해서, 과거의 가족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 단독부양에서 공동부양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가족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부양에서 찾기 어렵게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애정적 관계로서의 가족, 시장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돌봄 관계로서의 가족이 기대되고 있는 가족이라면, 이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혈연과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가족 단위로 보장하는 정책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족을 모형으로 만들어진 낡은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아직 오지 않은 가족의 출현에 개방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2절 ‘인구위기’? 시민들의 삶을 인구로 바라보는 ‘사회의 위기’¹⁰⁾

1. 들어가며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인구위기를 반복해서 국가의 위기로 규정해왔고, 가족정책의 주요한 정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인구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인구’의 위기로 규정하지만, 많은 시민은 시민들의 삶을 ‘인구’로 바라보는 국가의 태도를 위기로 보고 있다”(김순남, 2022) 이 말은 사회적 삶, 관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중요한 의제들이 저출산이라는 블랙홀같은 이슈의 하위범주로 도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나 정책적인 기조를 통해서 저출산은 위협적이고, 공포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불안케하고,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지만 그 미래가 누구의 미래인지, 그리고 그런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부족하다. 다만, 우리는 반복해서 ‘비상경제’, ‘국가의 미래의 위기’, ‘저출산·고령화는 가장 큰 위협... 이민 적극 개방해야’라는 언론들의 기사 제목을 볼 수 있다. 가족 다양성의 의제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는 ‘난임 치료 21번까지 가능’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고, 비혼 출산이라는 것 또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맥락에서 일부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와 함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경고음을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10) 김순남(성공회대 연구교수/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2차 포럼(2022.9.16.) 패넬발표문 내용임

를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삶이 ‘인구’라는 숫자화된 수치로 소환되는 ‘사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대비적으로 배치되면서 생산적인 인구와, 생산적이지 않은 인구를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이주민’이 상호공존의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동원’되는 사회에서, ‘저출산’은 이러한 사회적인 조건과 무관한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의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출생을 저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성장중심, 발전중심,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하는 사회 분위기, 차별과 배제를 ‘정상적인 삶’으로 상상하는 사회 환경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의 연결과 자유로운 유대를 상상하기 힘들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인 신뢰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얼마나 잘사는지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종합적으로 상위권을 달렸으나 세부항목인 사회자본에선 바닥권을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과 개인의 신뢰, 국가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얼마나 건실해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무형의 저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국가에 대한, 개인 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 지수가 전체 167개국 중 14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동의 레바논, 아프리카의 우간다, 동유럽의 벨라루스, 남미의 페루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것은 교육자본이나 보건 부분은 2위, 4위를 보이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이다(연합뉴스, 2019.11.25.)¹¹⁾

이러한 결과들은 시민과 시민 간의 유대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 연결되는 시민들의 삶이 가능한 사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정책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하는 것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삶의 다양성이 존중될 때, 우리는 미래세대와의

11) “한국인 상호신뢰 바닥진다....사회자본 168개국 중 142위”, 연합뉴스, 2019.11.25.

연결을 기획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능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정상인구, 정상출생, 정상 가족의 욕망을 당연시하는 사회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비혼”(조선일보, 2017.11.09.)이라는 기사처럼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저출산 해소’라는 구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일까?

이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처럼 결혼 이주정책을 확대 시행한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결혼을 위한 남녀 만남 추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혼을 시민들의 삶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결혼 친화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지자체들은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결혼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대전, 전남, 충남, 그리고 부산 등이다. 이러한 조례안의 통과는 ‘출생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미혼남녀 중매’ 사업들의 추진배경과 동일하다. 예를 들면, 진주시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진행하고, 대구 달서구는 20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해서 배우자를 찾아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결혼 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을 위해서 총예산 67억을 들여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웨딩 TV, 2021.06.30.). 이러한 지자체들의 ‘결혼장려사업’은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걸까? 이러한 조례의 효과는 실제 불평등의 이슈를 비혼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결혼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곳 중의 하나인 충청남도 조례안의 목적 일부를 보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 분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이 보다 더 안정

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결혼' 생활이며, 시민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데 당연한 전제이기에, '그렇지 못한 시민들'은 이토록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김순남, 2022)¹²⁾

그러면, 이런 기조에서 “결혼해도 애 안 낳아...‘혼인 대비 출산비도 역대 최저 수준”(중앙일보, 2022. 03. 15)이라는 기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쉽게 생각해도 결혼 자체가 아니라 직장환경, 육아 환경에 의해서 출산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2015년도 이후에 세종시가 줄곧 출산율 1위가 되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최근 조사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이 높고, 가사노동 부담이 잘 이루어질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자명하다(한국일보, 2022.08.27). 왜냐하면 미래 세대와의 연결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관계맺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떤가에 깊게 영향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노동시장에서 M자 유형의 젠더 불평등이 심하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일수록 결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비혼이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지은숙, 2020)¹³⁾. 또한, 더 이상 시민들은 결혼이 당연하고, 출산이 당연하지 않으며, ‘정상 가족 만들기’를 위한 국가의 욕망에 부합하고 싶지 않은 가치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이전 시절을 꿈꾸지만 시민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해 왔고, 다른 삶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12)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13) 지은숙, 2020.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비혼담론의 특성과 생애서사 구축에서 나타나는 정치성”, 《한국문화인류학》, 제 53권 1호, 179-218.

가족변동 상황에서도 국가는 현재의 위기를 불평등한 돌봄이나 위계적인 성별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변동을 ‘인구위기’로 축소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기조로 언급되고 있고, 성장주의에 기반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도구적인 성격을 공고히 하고 있다(김순남, 2022). 이렇듯, 출산을 해소를 위한 인종차별적인 대응들은 이미 한국으로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만난다. 서울시 29개 자치구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많은 부서 명칭이 ‘출산다문화팀’ 혹은 ‘출산장려다문화팀’, ‘출생다문화지원팀’인 사회에서, 출산이라는 결혼이주여성의 ‘기능’은 장려하고, 필요로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원권을 갖는 것에서는 후순으로 밀리고 있다. 도구적인, 기능만을 필요로 하는 방식의 출산정책, 인구정책은 이미 실패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의 다양성의 방향을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3. 인구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망과 시민적 유대를 확보하기

인구정책이 아니라 인구를 넘는 공동체와 시민적 유대는 왜 중요한가? 그것은 삶의 다양성이 사회의 토대이며, 그러한 삶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이 이동해야 하며, 다양하게 시민들이 유대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구축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 성과 재생산권리뿐만 아니라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거나 돌봄을 주변적인 가치가 아닌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재정의하는 돌봄 정의의 관점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될 때, 시민과 시민이 다

양하게 자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미래의 세대와의 유대로서의 ‘출생’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인구정책 중심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출산을 해야 한다는 ‘증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거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운영지침에서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별첨 3’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용에서 ‘임신 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란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택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허위 임신 불법 낙태”로 판명될 시 공급계약 해지한다”라는 조항을 통해서 많은 주거정책이 신혼부부 중심으로 시민들의 유대를 상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 또한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에 머무르는 관점을 드러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기초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유대와 다양한 가족실천의 관점으로 사회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폐지와 혈연과 결혼을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 779조 조항의 삭제 등은 시민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유대를 사회가 존중하는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비장애 여성들의 결혼 안에서의 출산을 당연시하는 ‘출생의 정상성’이 아니라 다양한 유대의 관계망 속에서 세대가 연결되는 돌봄이 가능하고, 그것을 국가가 지지하는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현재 사회의 고립이며, 폐쇄성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상호의존의 생태계가 가능한 사회적인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 체계가 없는 국내 고립인구의 비율이 2019년 기준 21.7%로 OECD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성아, 2022)¹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고, 노년 인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부족한 나라 1위가 한국이라고 한다. 현재, 시민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단절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인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혈연, 결혼 가족을 넘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 사회가 불신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사회를 바꾸어야만 한다.

많은 시민들이 더 이상 가족은 혈연이나, 결혼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비친족 가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그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방역 정책의 ‘가족’ 또한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있지 않으므로, 확진자 가족의 PCR검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반해 민법상 가족에게만 무료로 이뤄졌다. 함께 거주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출생을 위한 도구로서의 시민의 삶이 아니라 실제 서로를 돌보고, 다양한 친밀적 유대를 만들어가는 개인들의 삶에 주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기반한 인간 재생산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돌보고, 상호의존하는 삶을 재생산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방향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나, 다양하게 서로를 돌보고 상호의존관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확보되어가는 사회가 될 때,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돌봄을 강제하는 사회의 분위기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질 수 있으며, 아이가 태어날 때 혼외자나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차별적인 ‘이상한 사회’가 아니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유대할

14)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 305권 3월호, 74-86.

권리 속에서 출생이라는 관계성이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라는 통계수치가 아니라 가족 상황 차별을 없애면서 다양한 시민의 삶에 주목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경험하는 현재, 이곳에서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사회는 ‘인구 위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인구로 바라보는 ‘사회의 위기’임을 공적으로 의제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제3절 한국 사회는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출산정책에서 인구정책으로, 인구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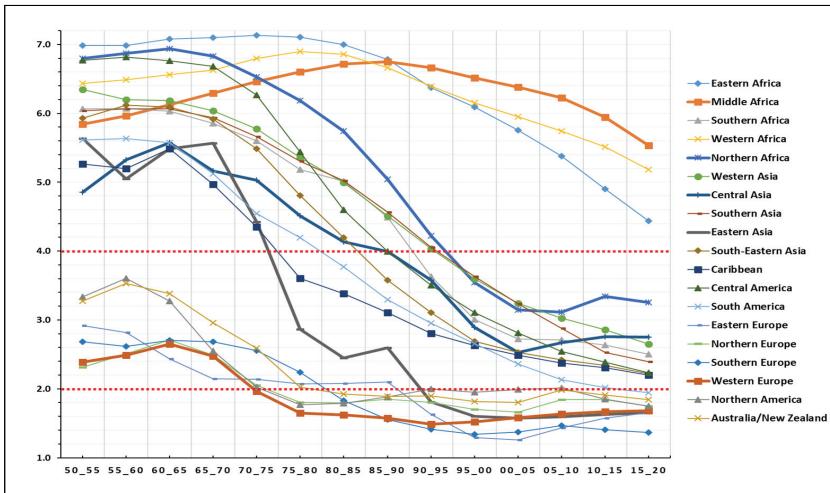
이번 포럼의 기본 취지를 저출생, 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 현상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로 거칠게 이해하고 전환의 방향을 대략 짐작해 보았다. 개인, 가치, 뉴 라이프스타일, 가족의 다양성, 사회의 다양성, 사회공동체 등, 이러한 키워드가 앞으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저출생 사회와 가족 관련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 무엇이 문제이고 중요한지,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두서없이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5) 이상직(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2차 포럼(2022.9.16.) 패널발표문 내용임

1. 발전주의 체제의 인구동태

먼저 저출생 사회와 가족 관련해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이 질문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지금보다는 많아지면 좋겠다. 사회 수준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은 장기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추동한 것은 사회와 개인 수준 모두에서 ‘발전주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였다고 생각한다. 발전주의라는 말을 꼭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GDP 증가와 사회 이동으로 요약되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림 3-1] 하위지역별 합계출산율 변화(1950-2020)



주: 그래프를 좀 더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지역은 제외
자료: UN(2019).

[그림 3-1]을 보면 변화의 폭과 속도의 차이가 다를 뿐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 변화의 방향은 같다. 1950년대부터 봤을 때 짧은 기간 출산

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추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유배우자율의 증가, 다시 말해 결혼의 보편화와 관련이 있다. 근대 가족체제가 전후 자본주의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후의 하락은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과 관련 있다.

세계 평균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크게 두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첫 번째 시점은 1960년대 후반이고, 두 번째 시점은 1980년대 후반이다. 첫 번째 시기에서 주요 요인으로 꼽는 것이 경구 피임약의 보급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발전주의 체제의 세계적 확산이 출산율 하락을 낳은 맥락이었다. 서구가 제시한 발전의 전략에서 핵심이 인구억제였고, 그 수단으로서의 가족계획이었다. 1980년대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국제이주 양상이 급변했던 시기이다. 발전주의 체제의 제2 물결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발전주의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인 수준에서 보면 평균 출산아 수는 줄곧 줄었다.

그러니까 이 추이는 장기적인 추이이고 그것을 추동한 발전주의라는 원리는 우리 사회의 근본 주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발전주의 원리의 구성 요소는 생산성, 경제적 합리성, 계산가능성 등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가치체제에서 생명은 생산성 있는 노동력으로 '통제' 되고, '관리' 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다. 넓은 의미의 돌봄, 살림 활동이 우선 순위가 될 수가 없다.

관련해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현상 예측의 역설이다. 1800년경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결국에는 생산 능력의 제약으로(어떤 방식으로든) 인구 규모가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 그때 인구는 그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세계 인구는 이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억제정책을 폈다. 그런데 억제정책을 폈을 때에는 이미 출생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였다. 그로부터 불과 50년 만에 많은 국가들이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50년 뒤의 모습은 또 어떨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저출산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저출산 추이는 예상되었던 인구 폭발을 막은 “조용한 기적”(다니엘 코엔, 『출구없는 사회』, 122쪽)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발전주의라는 사회조직의 원리가 바뀌지 않는 한 (합계)출산율이 높아 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저출산 대책도 발전주의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쑥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인구 현상에 대해 좀 더 겸손해지자는 것이다. 생명을 대하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생산성의 관점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분류/배제하고, 조직하려는 경향성을 어떻게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의 의존-자립의 개념, 노동이라는 개념 등 우리 사회의 근본 조직 원리를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인구정책은 기존 질서나 규범을 전제한 규범적 예측보다는 현상적 관측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측에는 조작(생명통제)의 욕망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인구정책은 인구(출산) 정책을 펴서 인구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성장에 대한 일면적 이해에 근거해 막연한, 근원적 공포감만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인구추계의 위기 조장 효과를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가와 사회가 출산을 강조하면 할수록 인간을, 생명을 도구적으로 보는 프레임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상자들에 한정한 현금 지원을 주된 도구로 삼은 출산정책은 더 이상 보편 정책도 아닐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출산하지 않는 이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 되돌아보면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말은 과거에도 통하지 않았던 말이다. 국가를 위해 아이를 덜 낳았던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이들 덜 낳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았기에 덜 낳았던 것이다.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가족정책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을 촉진했을 뿐 추이의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았다.

정작 인구구조의 상세 내용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 정책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것 같다. 발전주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국가 관점에서의 희망 사고가 인구 현상 변화에 따라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가족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는 내외의 평가가 정책적 개입으로 인구 현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희망 사고 경향을 더욱 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적응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량에 집중하기보다 분포와 구성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구감소의 경향을 수용하는 가운데 전환의 과정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것 이냐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에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관점의 전환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정책 수준에서도 전환의 움직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전환된 관점을 제도, 정책 수준으로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는 각론 수준에서, 구체적인 맥락 내에서 인구 규모, 구성변화를 관측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 한국 사회는 다양해졌는가?

저출산 현상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다양화 등을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

는 것 같다. 먼저, 이 지점에서도 가령 다양성을 포용해 (결국에는, 은연 중에는) 출산율을 높이자는 식의 구도 설정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와 별개로 한국 사회가 다양해졌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사회 조직 원리로서의 획일성/다양성 논의와 현상으로서의 획일성/다양성 논의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해서 그렇다는 것과 다양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이다. 역할 관계의 변화와 가치 관계의 변화는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다.

과연 가치가 다양해지고 있는가?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넓어졌고, 그와 연관되어 이른바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졌을 수는 있지만 삶에 대한 태도랄까 삶의 형식 측면에서는, 또는 생명이 제도화(의료화, 조직화, 시설화)되는 방식의 측면에서는 오늘날의 삶이 과거보다 획일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죽었다면, 오늘날에는 고도로 통제되고 조직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대부분이 태어나고 죽는다. 일상과 생애도 통제되고 조직화된 환경(학교, 회사, 제도 등)에서 조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출생 경향은 물질적인 것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저출생 경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 비슷해진 것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단일 경쟁 체제에 편입된 것의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 비교의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는 것이다. 결혼을 늦게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비교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3. 정책 맥락에서 다양성이라는 말의 위치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집단을 분류하고 포착해 그들에게 맞는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른바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도 이렇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세밀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는 식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접근법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다양성 자체를 목표로 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란 어쩔 수 없이 획일성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편성의 논리로 정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편성의 정책/제도를 구상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근대 가족 모델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비주류적인 것으로 여겨져 배제되어 온 이들을 (보편성의 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다양성을 지향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유연화는 삶의 경직화”라는 표현(강수돌, 노동을 보는 눈)을 본 적이 있다. 거꾸로 보면 노동의 경직화가 삶의 유연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노동의 경직화를 삶의 기본 조건의 보편 보장이라는 말로 바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발전주의를 넘어설, 도구적 인간관을 넘어설 정책 논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여성 정책, 가족 정책, 청년 정책이라는 말의 딜레마도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 관계가 다양해질 것이 예상된다면 가족보다는 개인 단위 사회정책을, 가족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 단위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령 육아 수당을 돌봄 수당으로, 육아시간을 돌봄 시간

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태어나고 죽는 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인구를, 생명을 여전히 생산인구, 부양인구로, 인력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생명을 도구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 생명을 보살핀다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정책의 논리를 상상해 보면 좋겠다. 취약한 생명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서로 돌보는 사회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정책적 상상을 해보았으면 한다. 아이들 돌보는 문제에서 사람을 돌보는 문제로, 사람을 돌보는 문제에서 생명을 돌보는 문제로 정책의 기조가 확장되면 좋겠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보존하기만 한다면 다양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감소는 연착륙을 고민하지 않으면 혼란과 어려움을 낳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성장과 공급, 확충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오는 가운데 왜곡된 사회시스템을 재편하고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동시에 돌봄의 문제, 국방의 문제, 교육의 문제, 건축의 문제 등 다양한 각론의 맥락에서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많아지면 좋겠다.

제4절 영화 ‘브로커’를 통해 본 미혼모와 입양가족의 삶¹⁶⁾

1. 영화 ‘브로커’에 베이비박스는 없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는 한국의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한 영화다. 미혼모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아픔을 대변해준 것과는 별개로, 영화 속에서 베이비박스는 범죄의 빌미가 되는 단순 소재로 등장한다.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상자’로 전락한 것이다. 실제 베이비박스에서는 아기가 들어오는 순간 벨이 울리고 근무자들 중 한 사람이 아기를 구조한다. 동시에 또 한 사람은 뛰어나가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을 찾는다.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극도로 예민한 주제였다. ‘애초에 이런 장소가 있으니 아기가 유기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베이비박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브로커〉 대사 속에도 이와 같은 언급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도 베이비박스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여 미혼모의 자립 기회를 뺏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소방관이 있어서 불이 나고, 형사가 있어서 범죄가 생긴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베이비박스는 단순 유기 현장이 아니다. 운영자들은 돌아서는 보호자의 발길을 붙잡아 상담하고 양육 지원을 한다. 한국의 베이비박스는 사회가 외면한 미혼부모의 응급 구조, 미성년자 출산, 장애아 양육 등 어느 하나도 가뻔지 않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밀집된 현장이다.

2012년 8월, 새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생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를 두려워한 이들은 서울 난곡동

16) 정은주(전국입양가족연대 활동가/『그렇게 가족이 된다』 저자)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2차 포럼 (2022.9.16.) 패넬발표문 내용임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 과거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던 베이비박스 아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들 중 70%에 가까운 1,300여 명의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했다. 베이비박스 아동은 부모로부터 보호가 완전히 포기된 아이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며, 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형 보호’이다. 그러나 통계로 드러난 유기 아동의 최종 경로는 시설보호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미혼모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 지원수단을 찾아내는 건 너무나 힘들다. 위급한 이들에게 긴급지원의 손길을 내미는 베이비박스의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먼저 지원하고 차후에 행정처리 하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베이비박스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그럼에도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공공시스템에 닿지 못하는 임신부가 있다면 베이비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스러지지 않도록 베이비박스가 제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레 ‘소멸’하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생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으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2017년 아동복지법이 강화되면서 아이를 되찾으려 온 생모를 경찰이 인지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시작했다. 처벌을 피하려면 생부모가 절대 아이를 찾지 말아야 하는 셈이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2020.12.1)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생부모를 알 권리가 함께 실현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출생신고를 피하고자 하는 생모가 베이비박스까지 아기를 데려와서 두거나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아기를 두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베

이비박스가 하고 있는 역할, 즉, 위기에 놓인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국가가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 한국에서 미혼(부)모로 산다는 것

“목사님, 아기와 함께 죽으려고 약을 타 났어요. 상담을 해봐도 입양 보낼 여건이 안 돼요. 부모님과 학교가 알게 되면 제 인생은 끝나요!” 서울 난곡동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전화를 건 어린 미혼모는 절규했다. 2009년 설치된 이후 베이비박스에는 이런 절박한 목소리가 수없이 들려왔다. 한편, 2017년 군포의 베이비박스에 자신의 아기를 두고 갔던 생모가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신분이 발각되었다.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데려가 양육하던 그는 생후 8개월 무렵 아기를 살해했다. 이 사건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거나, 생모가 키우도록 강요하는 것이 해답이 아님을 말해준다. 물론 미혼모에 대한 다각도의 집중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021년 6월 30일, 정부는 공적 입양체계를 개편했다. 생모가 입양을 원할 시 입양기관 아닌 관공서를 찾아야 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민간 입양기관을 배제한 자리에 들어선 이들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다. 이들의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다. 짧은 교육과 경험, 특히 입양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위기 임산부나 미혼모들이 입양을 위해 직접 자기 발로 관공서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입양 상담을 진행하려던 한 여성에게 입양기관이 구청을 연결해주자, 그가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가는 일이 일어났다.

미혼부모의 삶을 생생히 풀어낸 미디어의 모델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티브이엔)를 들 수 있다. 이 드라마는 고등학생들이 낙태 아닌 출산을 택했을 때, 공동체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는지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을 사회 속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편견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낱알이 증언한다. 그러나 대중문화평론가 황진미씨는 이 드라마 속에서 낙태를 고민하던 여학생이 임신부를 선포하는 순간 ‘캐릭터 붕괴’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함께 고민하는 남학생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내 아이’를 꿈꾸는 맹랑한 소년이라고도 했다(한겨레, 2022년 4월30일치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중). 그의 글 속에서 묘하게도 미혼부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선이 읽힌다. 미혼부는 도망가고 미혼모만 남아 낙태를 선택하는 이야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확장되면 맹랑하다는 말이 난무하는 현실 사회의 시선 말이다. 이제는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미혼부모와 베이비박스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나오기 바란다.

3. 한국에서 입양가족으로 산다는 것

‘브로커’에는 입양하고자 하는 세 쌍의 부모가 등장한다. 첫 번째는 아기 외모를 품평하며 가격을 흥정하는 해괴(?)한 이들이다. 두 번째는 경찰인 수진이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자 위장 입양부모로 데려온 이들이다. 이들이 가짜임을 동수(강동원)가 눈치채면서 함정수사는 무산된다. 세 번째는 아이를 사산한 부부로서 진정성을 갖고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정식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음지에서 영아 매매를 시도하는가?

까다로운 입양절차와 비밀입양 선호, 생모의 출생신고 회피와 맞물려
음지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이 많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한 보도에서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사회의 혈연주의에 따른 비공개 입양과 까다로운 양부모 자격조건도 인터넷 입양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동방사회복지회 김혜경 가족지원부장은 “비공개 입양도 인터넷 입양의 사유가 된다. 친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해서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인터넷 입양을 찾는다. 기관을 통해 입양하려면 경제력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인터넷 입양을 찾는다”고 밝혔다. (‘인터넷 입양, 알고 보니 산생아 매매’ 베이비뉴스 2012.4.26)

한 전문가는 인터넷 매체의 칼럼에서 베이비박스와 입양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썼다.

...베이비박스를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과 비유한 것은 놀랍다. 마리아는 예수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잘사는 중산층 소위 ‘정상가정’에 입양 보내져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죽을 때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았을지언정,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화 ‘브로커’를 보고 ‘베이비박스’를 이렇게 호도한다면 시쳇말로 영화를 엉덩이로 본 것임에 틀림없다(영화 <브로커>와 베이비박스, 너 자신을 세탁하라! / 권희정(인류학 박사), 2022.09.03., 프레스인)

이 글을 읽고 드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1) 입양이란, 위기가정으로부
터 아이를 빼내어 이른바 ‘정상가정’으로 배치하는 일인가? 2) 정체성 혼
란은 입양인이라면 피해가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것인가?(사족: 예수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날 뻔했다. 글쓴이의 논리를 빌어오자면 요셉의 결
단으로 인해 ‘정상가정’으로 편입됐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면서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된 호소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였다고 한다. ‘버려짐’에 대한 말들은 우리 사회에 무성히 많다. 이에 대해 감독은 꼭 답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실상 조물주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도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다. 생부모들이 버린 것은 다만 ‘양육권’일 따름이다.

장애아나 남자아이는 국내입양이 되지 않아 대부분 해외입양이 되는 현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자화상이다. 그럼에도 무작정 ‘해외입양 즉각 중단’을 외치는 이들은 아이들을 시설에서 자라도록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처럼 경직된 일련의 아동보호 정책들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미혼모와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진보적 운동가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낸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입양은 마치 보수주의자들의 철 지난 타령 같은 주제로 전락하고 말았다.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부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양을 위축시키는 데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베이비박스 폐지와 해외입양 즉각 중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몇몇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적극 부응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국가 책무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입양을 축소할 수 있는 법 조항 신설에 앞장섰다.

가족의 다양성을 말할 때 미(비)혼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강조하지만, 입양 가족을 말하는 것은 뒤떨어진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전문가들에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입양정책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시작해보기 바란다.

제5절 새로운 친밀성, 다양한 생애주기¹⁷⁾

1. 요즘 청년은 왜 이럴까?

‘표준적 성인기’ 규범을 만족시키는 청년들이 감소하는(글로벌) 추세이다. 주거비 부담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교육→취업→연애·결혼→출산·육아→내 집 마련...이 어렵다.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3포+취업, 내 집 마련 포기), 7포(5포+인간관계, 희망 포기).... N포/완포/전포(삶 포기)로 가고 있다.

[그림 3-2]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사회조사)



연애, 결혼, 출산(친밀성)은 청년의 특권이다. 친밀성은 사람들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기본적 전제이며, 관

17) 정병은(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작은물결연구소 대표)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2차 포럼 (2022.9.16.) 패널발표문 내용임(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슬라이드 발표문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계의 정도를 결정짓는 바로미터이다. 청년이 특권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회, 과연 미래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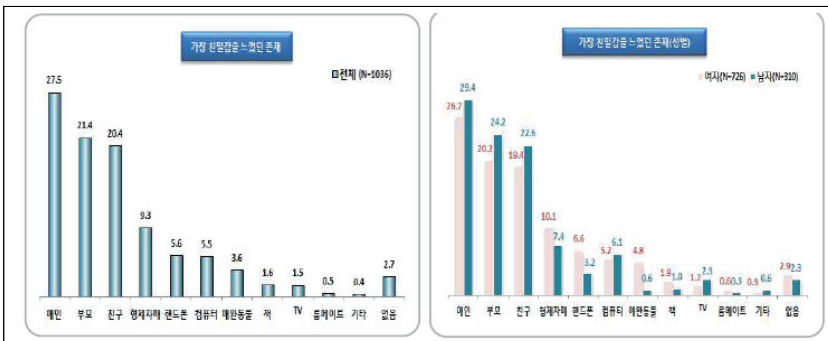
과연 청년의 3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일까? 그럼 충분한 경제력이 주어진다면? 잘 나가는 고소득 전문직 골드미스/골드미스터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더했던 예전에는 또 어땠는가?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를 향해 “내가 네 나이일 때 주어진 대로 살았으니 ‘징징대지 말라’...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조선일보, 2015.9.22.)고 강변한다.

가치관의 변화 및 청년층의 의식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

2. 요즘 청년의 친밀성의 실태

친밀한 관계는 내면으로 밀도가 높은 관계맺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달 간 생활하며 가장 친밀감을 느낀 대상?”에 대한 한 조사에서....핸드폰(5.6%), 컴퓨터(5.5%), 책(1.6%), TV(1.5%)의 응답율이 상당수 보인다. 이는 타인과 ‘접촉’하기보다는 ‘접속’하는 것을 편하함을 의미한다.

[그림 3-3] 청년세대의 경향성



자료: 문은영, 김정숙(20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요즘 청년을 3포로 꼬이는 요인: 개인화로의 사회변동

가. 미약한 사회안전망, 불안한 노동시장

- 1) 생존에 급급한 “나에게는 가족도 사치”다. 노동의 유연화는 연애, 사랑, 가족 등 한정된 시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친밀성과는 맞지 않는다.

“...만약 남자친구랑 저랑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다면 더 일찍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업은 신혼부부 대출도 지장이 있거든요...”

- 2) 친밀성의 과도한 비용: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한다.” 소비를 통한 ‘로맨스 각본’, 버거운 결혼비용 등이다.

“...고작 2주 만에 그녀와의 만남을 그만뒀다. 돈. 돈이 문제였다... 그녀를 만나는 2주 동안 내가 쓴 금액은 18만 원이 넘었다... 문제는 나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도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다...”

나. 각자도생과 맞바꾼 ‘정서적 허기’

- 1) 청년세대는 자기 계발과 스펙 쌓기에 몰두하느라 여력이 없다.

“...지금 당장 내 앞가림하기에도 바쁜데, 연애다 결혼이다 신경쓰느니 차라리 나에게 집중하고 싶다. 5년 뒤라고 크게 좋아질 거라는 확신도 없고...”

- 2) 연애도 능력이고 스펙이다. 한 대학 졸업축하 현수막에 쓰여진 ‘토익 985점, 오픽, ZD, 한국사 1급, 컴활2급, 문화인류학 복수전공, 문화비평학 연계전공, 대기업 입사, “현차남친”’에서도 청년세대의 인식을 알 수 있다.

4. 요즘 청년을 3포로 떠미는 요인: 전통적 결혼 및 가족제도

가. 진정한 관계를 억압하는 결혼제도

- 1) 결혼을 ‘가족 사업’으로 보고 있다. 개인간 결합이 아니라 집안간 결합인 것이다. 결혼정보회사의 신규회원 정보에는 가족 배경을 요구한다. ‘남부럽지 않은 결혼’ / ‘남들만큼 하는 결혼’, “그 아버지 뭐하노?”
- 2) 가부장적 결혼 및 가족제도의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대한 기대는 향상되고, 남성의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의문이다.

〈표 3-1〉 가사노동시간(가정관리+가족돌봄)

2009년				2014년				2019년			
맞벌이		남편만 취업		맞벌이		남편만 취업		맞벌이		남편만 취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7	200	39	378	40	194	47	376	54	187	50	341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나. 도구주의적 가족 경영에 깔린 책임감 부담

가정은 가족간 정서적 친밀감이 강조되는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 영역의 생존과 경쟁 논리를 뒷받침하는 기능적 단위로 작동하기도 한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정서적 사랑을 넘어 자녀가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도록 지원하는 의무까지 포괄하며, 가정내 성별화된 실천을 통한 계급 재생산을 위해 부모는 가족 관리에 몰두한다. 그 결과, “한국의 가족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과부하 상태”이며 “가족 피로”를 겪고 있다.

“결혼하면 안정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의 책임감은 가지고 싶지 않고... 제일 큰 이유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였어요. 결혼이란 게 가정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것...”

5. 정말로 포기했나?

포기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못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의 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다. ‘하지 않는 것/못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경우에는 “이생망”, “헬조선”처럼 하지 않기/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좌절, 절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한다. 한편 ‘마땅히 해야 하는데’에 방점을 두는 경우에는 연애/결혼/출산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연애와 결혼은 인생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미혼(未婚)이 아니라 비혼(非婚)인 것이다. “결혼의 무게”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결혼/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전통적 결혼제도는 이제 그만”은 집안간 결합, 가족 비즈니스를 거부하는 것이다.

6.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

‘정상적인’, ‘표준적인’ 생애과정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생애과정’들이 있다. 통과의례로서의 연애-결혼-출산이 아니라 생애과정의 편차와 변이의 수가 많아지면서 탈표준화, 탈구조화되고 있다. 사회적 관습에 맞추기보다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를 추구한다.

이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연애보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있다면, 연애쯤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닌가? ...3포-5포-7포-N포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포기된 것들의 공통점은, 그 항목들이 각자의 삶에 진정 중요한 가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이라는 것이다.”

연애-결혼-출산의 ‘선택’은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관습에 맞추기보다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혼자만의 삶을 선택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포기가 아니라 비연애, 비혼, 무자녀를 선택한 것이고, 불안정한 고용시장, 취업난 등의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화의 사회변동, 각자도생,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 및 시대에 맞지 않는 결혼 및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비혼이라는 하나의 삶의 방식 안에는 여러 모습이 존재한다. 결혼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토록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은, 너무 선부르지 않은가”

따라서 ‘선택이 아닌 강요’받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비혼에 대해 신나게 떠들면서도 한편으로 찜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 밖의 삶에 대한 불안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울타리를 뛰쳐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느슨한 안전망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 8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7. 새로운 질문: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혈연과 결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타인과 연대하고 서로를 돌보겠다는 사람(시민)들의 출현하고 있다.

[그림 3-4] 가족 형태의 새로운 연대방식



제6절 생애 다양성의 문화적 요인¹⁸⁾

1. 들어가며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에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로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

18) 안미향(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2차 포럼(2022.9.16.) 패널발표문 내용임

고 또한 지난 6년 연속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2022). 이와 더불어 우리 청년 세대의 생애과정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최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1인 가구의 증가’, ‘비혼주의 선언’, ‘워라벨 문화’ 등의 담론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담론들은 주로 청년 세대의 생애과정의 변동과 관련지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성 촉진 요인들’과 ‘다양성 지체 요인들’로 나누어서 개인의 생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생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

가. 다양성 촉진 요인들

1)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현재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적 태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이고, 가족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는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는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학생, 1인 가구에서 비동의 의견이 높았다. 이는 청년 세대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규범적인 태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하나의 추세임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2008-2020)가 보여주는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8년에는 68%였으나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20년에는 51.2%가 되었다.

또한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는 모습이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인 ‘혈연이나 혼인 중심’의 가족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51.1%인 반면, 확장된 가족 개념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61.7%, 그리고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45.3%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결혼(91.4%), 이혼 혹은 재혼 (87.6%), 비혼 독신/1인 가구(87.0%)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고,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것(79.4%)과 남녀가 동거하는 것(69.4%)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특히 비혼 동거의 수용도는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65.5%→67.0%→69.4%)하는 추세이고, 비출산 혼인 가구에 대한 수용도는 다양한 가족 유형 중 전년 대비 상승폭(12.3%)이 가장 컸다. 이러한 비혼 동거와 비출산 혼인 가구에 대한 수용도는 30대 이하 연령층, 학생, 미혼, 1인 가구에서 특히 높았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제 청년세대에게는 결혼은 선택이 되고, 가족은 반드시 혈연과 혼인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일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2) 전통적인 젠더 규범의 변화

현재 청년 세대는 과거 세대와는 달리 남녀 모두 ‘노동 중심적 생애’를 우선시하고 있고,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며 성역할 평등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1):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2019)에 따르면, 청년세대(2030 세대)는 남녀 모두 ‘노동 중심적 생

애'를 우선시하고 있고, 자신의 노동중심적 생애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의 친밀성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여성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남성들은 대개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 중심적 생애를 유지해 온 반면 여성들은 과거의 가족 중심적 생애보다는 노동 중심적 생애과정을 중요한 생애전망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 세대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 대해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사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의 19%, 남성의 26%만이 동의하고 있고, '여성이 가정일과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열 명 중 일곱 명, 가장 동의도가 낮은 30대 남성도 거의 절반이 동의하고 있다. 이는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고 여성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 역할 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양육, 가사참여에 대한 동의율은 80% 수준에 달했고, 여성의 일('일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도 70%에 가까웠다. 이처럼 청년 세대 내에서 평등한 성 역할은 어느 정도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규범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젠더 규범의 약화로 이제 청년 세대는 노동 중심의 생애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평등한 성 역할을 어느 정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양성 지체 요인들

1)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1)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85.8%)은 비록 과거에 비해 편견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편견이 매우 많다는 비율이 31.4%나 되었다. 특히, 비혼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55.3%),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아이를 기르는 것(56.1%),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녀가 아이를 낳는 것 (46.6%)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24.1%)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한 편견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 모습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고,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편견이 많은 가족은 동성 커플(연인) 가족(81.2%)이고, 그 다음이 미혼부(77.5%)/ 미혼모(76.7%) 가족,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여성혼자 64.4%, 남성혼자 6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여전한 사회적 편견과 특정한 가족 형태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 및 편견은 앞으로 청년 세대의 생애전망에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이 된다고 본다.

2)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

우리 사회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 인식이 높고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성 불평등 문제들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성 불평등 인식 및 현실의 성 불평등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의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요약」에 따르면, 한국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65.4%, 남성의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을 했고, '남녀평등하다'는 응답은 5년 전에 비해 상승했지만(2016년 21.0% → 2020년 34.7%), 여성은 27.8% 남성은 41.7%로 그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런 인식 차이는 현실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가사·돌봄 영역은 여전히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인데, 응답자의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답하였고, 여성의 71.5%, 남성의 66.6%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들에 대해서도 남녀 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 여성은 '경력단절(32.0%)', '고용상 성차별(20.4%)',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14.8%)', '여성에 대한 폭력(14.5%)' 순인 반면, 남성은 '고용상 성차별(29.0%)', '경력단절(24.8%)', '여성에 대한 폭력(14.2%)', '낮은 돌봄 참여(10.2%)' 순이었다. 이러한 사회의 성 불평등 및 성 불평등 문제들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성 불평등 문제들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특히, 청년 여성들의 다양한 생애전망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다. 나가며

이상으로 생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을 촉진 요인과

지체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애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요인들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전통적인 젠더 규범의 약화를 들 수 있고, 생애 다양성을 지체시키는 요인들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특정 가족 형태들, 즉 비혼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편견과 더불어 동성 커플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과 사회의 성불평등 및 현실에서 직면하는 성 불평등 문제들에 대해 남녀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애 다양성의 촉진 요인들과 지체 요인들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환적 저출생 대응책 구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청년 세대의 생애과정이 그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제도적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애 다양성과 관련된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제4장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제1절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제2절 가족과 돌봄의 민주적 재구성

제3절 스웨덴 가족의 다양한 모습, 가족문화.

가족복지정책

제4절 노인 돌봄, 요양원과 요양병원 너머

제5절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서 동거, 그리고

출생률

제6절 부성휴가가 가족 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제1절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¹⁹⁾

이번 포럼의 주제인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에 대해 필자는 (젠더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감수성이 결여된) 사회복지정책 전공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연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저출생 사회의 젠더 문제와 여성의 권리

저출생 사회는 과연 개선해야 할 문제인가? 저출생 사회는 여성에게 나쁜가? 그렇지 않다면 저출생 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저출생 사회는 인구수의 적정 규모로의 감소를 가져오는 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적정 규모의 기준은 지구환경과의 공존과 조화이다. 또한 인구수 감소는 생산부문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젠더 불평등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평등 효과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저출생 사회의 문제점을 사회적 부양 능력의 저하에서 찾는다. 하지만 저출생 사회라고 무조건 사회적 부양 능력이 줄어드는가? 저출생 사회는 인구수 감소를 넘어설 만한 생산력 증가를 수반한다면 그 자체가 문

19)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3차 포럼(2022.10.7.) 패널발표문 내용임(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제가 아닐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수 감소는 무조건 공적연금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장기 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 고용률 변화 역시 중요하다. 흔히 후세대의 불리함을 말하지만 노동이란 생산요소는 감소해도 미래사회 물질 자본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후세대가 가지는 가능성 - 소수인 미래세대가 다수의 현재 세대가 이룩한 사회적 자산(자본/지식,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모두 활용하면서 높은 수익/생산성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 도 있다. 소수 노동자로도 충분한 사회적 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 총량이 증가한다면 은퇴세대에 대한 사회적 생산물 분배 역시 용이해질 수 있다. 단순히 연령대별 인구수에 따른 사회적 부양비 계산은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감소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적정 인구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등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요컨대, 저출생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출산을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꾸 사회적 기여, 혹은 사회적 의무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 신장이란 면에서 부작용이 크다. 사회정책에서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고 돌봄 비용을 사회화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을 도구화시키는 접근은 피해야 한다. 이미 개인의 삶과 정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 저출생 사회와 여성의 행복?

이에 대한 답은 불분명하다. 어떠한 저출생 사회인가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출산 혹은 비출산 선택이 자율적이기보다는 상황(특히 생산부문의 요구, 돌봄 자원 제약 등)에 의해 정해진다면 저출생 사회가 반드시 여성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행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출산, 양육, 가족의 구성 등이 있으며, 그 중요성이 큰 경우, 개인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제약된 결과가 저출생 사회라면 이는 행복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감이라는 것 역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다른 행동 패턴이 자리 잡을수록 행복의 요인 역시 가족 바깥에서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다. 즉, 저출생 사회가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여성의 행복 요인 역시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저출생 사회를 무조건 파괴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가치, 행복 등에 대한 개념과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계기로 바라보면 어떨까? 더욱이 저출생 사회는 노동 대 자본의 힘 관계를 노동에 유리하게 변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3. 돌봄과 가족문화

사회적 돌봄과 가족 돌봄은 적정 비율 혼합의 문제일까? 비율의 변화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돌봄의 내용과 가족 돌봄의 내용 역시도 따져볼 문제이다. 일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온 사회적 돌봄의 증가는 한국에서는 돌봄의 상업화 경향을 수반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 기반한 민간기관들의 생존과 경쟁을 생각해보라. 노인고객 유치에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출혈과 수가 인상 요구, 민간기관 요양의 질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발생한다(가족 내 무급의 여성 착취보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착취가 나올까?).

가족의 돌봄 부담은 대체로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로 돌보는 사람이었던 가족원의 행복 수준과 돌봄을 받는 사람(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행복 수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거주 시설의 질 차이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시설에 있는 노인, 장애인의 행복 수준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족 돌봄 문화(돌봄 양, 내용 등)의 변화는 아동에 대한 집중 돌봄, 즉, 부모의 아동 돌봄 시간이 증가했다. 자녀 수는 줄었지만 부모의 돌봄 총량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사이에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아버지 돌봄 시간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다. 이것은 성 평등의 진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돌봄과 교육의 혼합, 돌봄 인식 변화 - 특히 아버지 돌봄이 가지는 인적자본 투자 효과에 대한 주목 - 역시도 배경으로 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아동 돌봄 시간이 증가하는데, 이는 아버지 돌봄이 자녀교육에 가지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계층 재생산 혹은 계층상승에 대한 욕구 역시 그 동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남녀 가사노동시간의 격차 감소세와 자녀 돌봄 시간(신체적 돌봄 제외)의 격차 감소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가족의 노인 돌봄 문화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아동에 대한 돌봄과 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 차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양은 시설화로 증가했다. 재가 요양 역시 요양보호사의 돌봄 역할이 크다. 가족 구성의 변화와 가족의 돌봄 문화 변화로 인해 노인에게는 가능한 한 오래 ‘자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은 커졌다. 사회적 돌봄의 양은 증가했지만, 돌봄의 전제인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보편적이며 본질적’이라는 생각은 별로 일반화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노인으로서 돌봄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의문이 커지지 않았나?

전근대적 가족에서 이루어지던 위계적 돌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상호적이며 평등한 돌봄이 아니라 돌봄 공백과 단절인 것처럼 보인다(이는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인상임). 그 배경에는

노인에 대한 존중 감소와 사회적 편견이 있다. 더 이상 자원이 아닌 노인. 뒤쳐진 존재, 사회를 뒤쳐지게 만드는 존재(아동은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평가되어 비용투입이 정당화됨). 따라서 노인에 대한 비용투입에 꺼려하게 된다 - 완벽한 외모와 신체에 대한 추앙 문화.

상호돌봄이 있는 공동체로서 가족에 대한 환상(!)은 이를 위한 짧은 노동시간이다. 아동 돌봄과는 달리 노인 돌봄 문제는 개인에게 시간과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다른 문화이다.

4. 돌봄과 복지국가

수직적 불평등 심화와 돌봄의 양과 질의 불평등이다. 아동에 대해서는 평등화 기제(각종 수당, 돌봄체계)가 작동하여 돌봄-교육 결합한 계층 재생산 시도와 갈등한다. 하지만 노인 돌봄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최소 돌봄 보장은 되지만 상층과의 돌봄 질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계 창출’의 위험은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의 권력 불균형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복지국가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면서 단순히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저소득층에 대한 돌봄 자원 보완 및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보편적 돌봄의 실현, 돌봄 받는 자에 대한 권력 부여와 협력-돌보는 자들의 합리적 역할 분담(돌봄-감독-평가-개선)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가족의 변화, 생애,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가족 외 다른 공동체에 대한 요구를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이유로 가족은 시설만큼 방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설만큼 가족도 폐쇄적일 수 있다. 대안은?

제2절 가족과 돌봄의 민주적 재구성²⁰⁾

1. 여성에게 전가되는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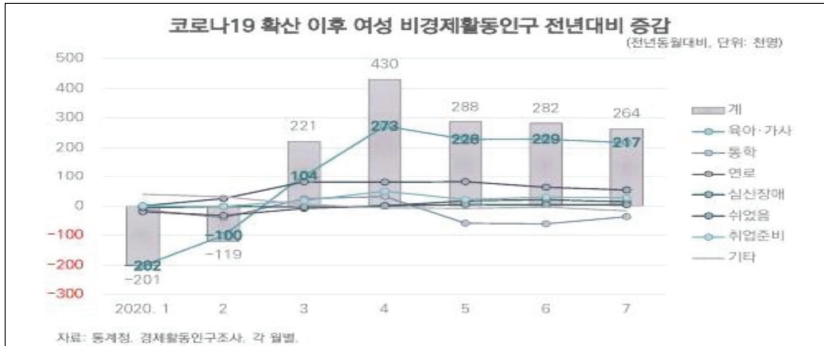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공적 영역의 돌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 돌봄의 위기를 여성의 돌봄 노동을 통해 해소하려는 전략은 가정 안팎에서 여성의 지위를 계속 약화시키고, 성 불평등의 구조 또한 고착화·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 ‘육아와 가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 참조, 김원정 2020).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코로나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한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확인’ 설문조사에 따르면,²¹⁾ 응답자의 56.3%가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노동자 본인의 하루 평균 돌봄노동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 중에서 ‘2~4시간 이내’ 증가가 17.2%, ‘2시간 이내’ 증가와 ‘6시간 이상’ 증가가 각각 13.8%, ‘4~6시간 이내’ 증가가 11.3% 순이었다(김명숙 2020).

20)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3차 포럼(2022.10.7.) 패널발표문 내용임

21) 설문 조사의 대상자는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고, 유효 응답자 수는 318명이었다.

[그림 4-1]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자료: 김원정(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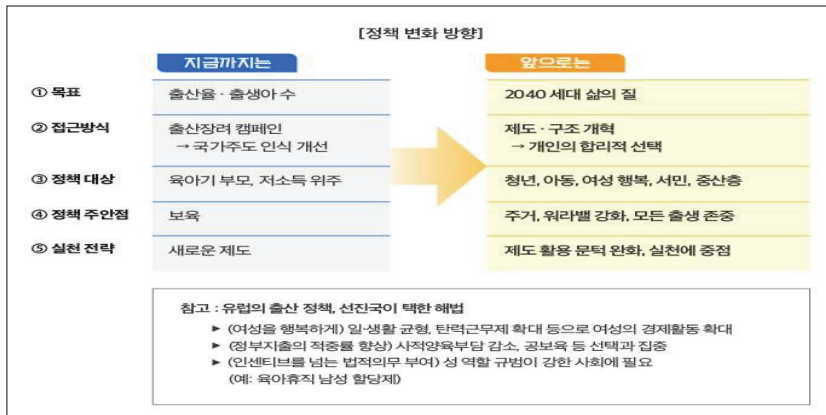
돌봄 공백의 문제는 맞벌이 가구일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돌봄에 있어 어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 중에서도 맞벌이 여성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20). 또한 자녀 돌봄 분담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여성이든 외벌이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가족 간 갈등 경험은 남성(32.7%)보다 여성(40.0%)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또한 남성(49.3%)보다 여성(66.0%)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김영란 2020).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가정에서는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정상 가족의 출산과 출산 이후만 생각하는 저출산 정책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면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증가를 목표로 했던 패러다임을 ‘2040세대의 삶의 질’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그림 4-2] 참조). 이를 위해 접근방식은 출산장려 캠페인에서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상은 육아기 부모와 저소득 대상에서 청년·아이·서민·중산층·여성행복으로, 정책은 보육 중심에서 주거와 일·생활 균형 강화로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그림 4-2]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



자료: 정책브리핑(2020)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90일간 월 50만원 지원),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16.5만원→5.6만원+국민행복카드),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일(日) 1시간 단축 추진(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의 80% 지원(상한 150만원)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

년으로 확대, 임금 100% 지원(상한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한 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등이다(정책브리핑 2018).

이 정책들을 알게 됐을 때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부가 자녀 출산을 결심할까?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낳을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들은 출산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저출산 정책들은 출산을 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조건을 갖춘 사람들, 즉 남성도 육아가 가능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부부에게만 해당할 뿐,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아이가 있음에도 출산정책의 혜택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출산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해도 임신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은 출산을 결심하거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다. 더욱이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데 3개월 동안 50만 원 지원(총 150만 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다. 육아 휴직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성별 임금 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경제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육아 휴직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혁 없이 출산할/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말기,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가족 정의 규정 삭제, ‘건강가정’을 ‘가족’으로 수정, 차별적 단어(혼중자, 혼외자 등)의 변경 등을 추진했다.

그런데 새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 하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건강가정기본법 하의 가족 규정(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을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가정’ 표현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진주 2022).²²⁾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부처들이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2022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²³⁾ 예산(2022년 157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22) 여가부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23)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2개월 이내 산모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 원어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펍몰 ‘에코몰’을 통해 회당 3만~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신준섭 2022).

(신준섭 202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을 48억3400만 원에서 27억5900만 원으로 42.9%(20억7500만 원) 삭감했다(김지원, 2022).

3. 가족과 돌봄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모자란 건 일할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다. 그 적은 일 자리마저 심지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니? 그 인구가 무엇을 생산할 수 있기에? 이런 마당에 출산장려, 출산 독려는 누굴 부양하길 는컸녕, 자기 밥벌이도 해결 못해 눈물 흘리는 젊은이만 늘리는 일 아닐까.”(장강명, 2018.01.04.)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4월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2020년 2월보다 2.7%p 감소했고(남성은 1.8%p 감소), 여성 취업자 또한 2020년 2월보다 61만 7천 명 감소했다(남성은 40만 1천 명 감소). 한편,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2020년 2월 기준) 69만8천 명 증가했고(남성은 45만 4천 명 증가), 여성 실업자는 6만 6천명 증가하는(남성은 5만7천 명 증가) 등 여성의 경제지표가 남성보다 훨씬 악화되었다(전기택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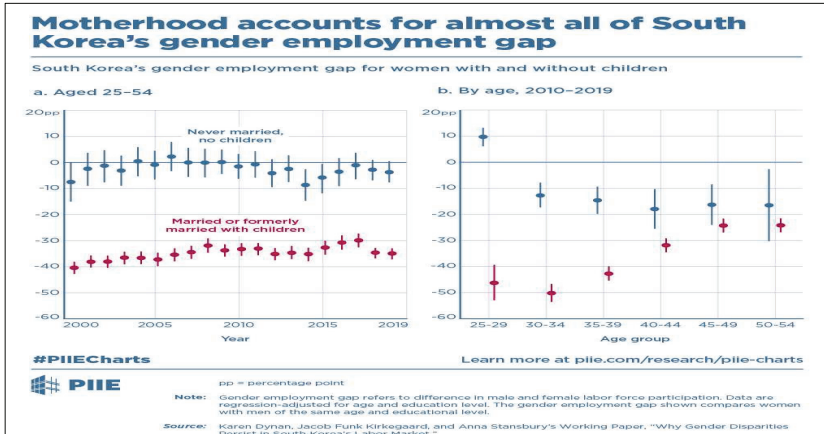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5%, 남성은 72.6%로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19.1%p로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M자형 모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용근로자(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비율은 52.0%로 남성(56.6%)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임시근로자는 여성이 24.4% 남성이 11.4%로 두 배 이상 높다. 임금근로자 중 여성 정규직 비율은 52.6%로 남성 69.0%보다 낮은 반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7.4%로 남성 31.0%보다 16.4%p 높다.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남성과 비교해 더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 선임연구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라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 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장수현 2022).

키르케고르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연령과 교육 수준을 가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을 비교하면, 비혼/비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결혼/유자녀 여성은 남성뿐 아니라 비혼/비자녀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3] 참조).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뿐 아니라 성취와 성공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는 이유이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외면하고 출산과 가족, 돌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림 4-3] 남한의 성별 고용률 격차: 비혼/비자녀 여성과 기혼/유자녀 여성 비교



자료: Karen Dynan, Jacob Funk Kirkegaard and Anna Stansbury(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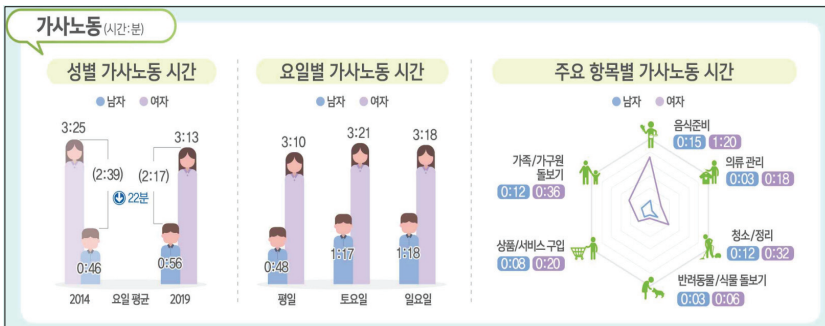
4. 젠더 관점에 기초한 가족과 돌봄의 민주적 재구성

가정주부는 ‘맘충’으로, 일하는 여성은 ‘독한 여자’로 보는 시선이나 여성에게는 수퍼우먼(일과 가정의 양립)을 요구하는 반면, 남성에게는 동일한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파업은 지속될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은 60~70%(평일: 60.8%, 주말: 71%)가 가사노동을 하는 반면, 여성은 92%가 가사노동(평일: 91.6%, 주말: 93.3%)을 하고 있다(통계청 2020).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노동 시간을 보면, 남성은 평일에는 48분, 주말에는 1시간 17분, 여성은 평일에는 3시간 10분이고 주말에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 참조). 이는 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의 일로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더욱이 여성이 혼자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37분으로 가장 적은 반면, 남성이 혼자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4시간 48분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이는 여성에게만 일과 가정의 양립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림 4-4]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



자료: 통계청(2020)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은 일반적 모델도 아니었고, 앞으로는 더욱 더 불가능하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반면, 주거 비용과 자녀교육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든든한 남편과 따뜻하고 센스있는 아내’라는 ‘핵가족 낭만주의’(황두영 2020, 41)에 기초한 가족상은 버려야 한다. 더욱이 가족 구성의 범주와 인식이 점점 더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⁴⁾ 정부가 이러한 변화 수용

24) 여성가족부가 2021년 5월에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1),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응답자 중 56.3%로 나타났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주된 이유는 ‘저소득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이 32.0%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 집단보다 개인적 삶과 여유를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이 30.4%로 그 뒤를 이었다. ‘법적 혼인·혈연 관계만 가족’이라는 응답 또한 51.1%로 2020년보다 13.2%p 하락했고,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5.4%p 상승한 45.3%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정상 가족’에 기초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용과 부담은 더욱 더 커지는 반면, 그 효과는 높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가족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는 특정 개인과 집단만이 아닌 사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코로나19는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2020년 8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49%가 ‘돌봄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47.57%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그리고 보건의료, 교육,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아이 돌봄(보육)에 대해 90% 이상이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돌봄교사, 보육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 80% 정도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선경·김희강 2021).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을 포함해 가정과 돌봄이 성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재편성될 때 정치·경제·사회 전 영역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 장애인, 노동자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징적 대표성(symbolic representation)이 아닌,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entation)을 갖출 수 있도록 참여자의 수(number)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성별균형(gender balance)과 다양성(diversity)을 고려해야 한다.

수용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이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형태를 ‘정상 가족’으로 보는지를 살펴본 결과(이소연 2022), ‘국제결혼 다문화가족(87%)’, ‘입양 가족(86%)’, ‘재혼 가족(86%)’, ‘한부모 가족(76%)’, ‘무자녀 가족(76%)’, ‘조손 가족(64%)’, ‘미혼모(56%)·미혼부(54%)’, ‘소년·소녀가장 가족(45%)’ 등으로 나타났다. 동거, 동성, 대안, 일반위탁가정을 정상 가족으로 보는 응답률은 30-4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제3절 스웨덴 가족의 다양한 모습, 가족문화, 가족복지 정책²⁵⁾

1. 들어가며

스웨덴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다. 아니 자유롭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가족 형태는 “삼부(Sambo 동거)”다. 10대부터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동거도 존재하거니와,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관계에 확신이 설 때까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결혼의식을 하기 전까지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²⁶⁾ 더욱이 결혼을 국가/사회라는 공적 기구가 규정하고 구속하는 시스템(System)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활동가(Aktivist)들까지 합치면 동거가족은 더 많아진다. 활동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웨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결혼서약서에 글자 몇 개 써놓고 사는 거나, 그냥 그런 종이 쪼가리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무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동거만 하고 늙을 때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그들을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시스템(각종 복지 시스템, 의료보험, 아동복지, 연금 등)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같은 성 동거자 혹은 결혼자에게

25) 최선경(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외국문학연구소 강사)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3차 포럼(2022.10.7.) 패널 발표문 내용임

26) 이 지점이 다른 유럽국가들과 다른 지점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아이를 두세 명 낳은 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커플을 많이 봤다. 결혼을 하면 지역신문 등에 결혼사진으로 소식을 알리는데 이 때 이 결혼사진에는 자신들이 낳은 어린 자식들이 함께 있다.

도 해당된다.

동거와 결혼 가족의 형태 외에 또 다른 “같이 살기”의 가족 형태에는 “새르부(Särbo / living apart together?)”라고 불리는 가족의 한 형태이다. 필자는 대학사회에서 이런 가족의 모습을 꽤 많이 보았다. 고학력자, 고수입자들의 모습의 일부분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다만 이 언급을 증명할 그 어떠한 통계적 숫자는 찾지 못했다. 이들은 각자의 집이 있지만 상당히 밀접하게 파트너와 함께 생활한다. 일정 기간 상대방의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들의 가족과도 어울린다. 아이들이 이혼한 엄마와 아빠 집에서 각각 반반씩 사는 대신, 어른이 파트너의 집에 가서 종종 사는 것이 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본다. 참 자유롭다. 물론 이혼한 가족에게만 Särbo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에는 “이혼 가족”이 50% 남짓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²⁷⁾ 이 숫자는 동거하다가 이혼한 가족은 빼고 시청에 결혼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니만큼 실제로는 더 많은 이혼 가족이 있을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혼하는 가족은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²⁸⁾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천주교가 우세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에서는 이혼에 대한 리버럴한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차적 이유는 한 가족이 이혼했다고 해서 사회의 복지제도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한다.²⁹⁾ 오히려 이혼한 가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혼 가족, 편모가정, 이혼 자녀에 대한 복지 제도는 더 세분화되어 이혼으로 인해 이들과 이들

27) <https://www.scb.se/hitta-statistik/sverige-i-siffror/manniskorna-i-sverige/skilsmassor-i-sverige/> (2022-04-08)

28) <https://aatos.app/se/skilsmassa/artiklar/statistik-skilsmassa/> (2022-07-1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verige-i-siffror/manniskorna-i-sverige/skilsmassor-i-sverige/> (2022-04-08)

29) <https://aatos.app/se/skilsmassa/artiklar/statistik-skilsmassa/> (2022-07-10)

의 자녀가 사회적 소외자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련하게 사회적 보호막이 되는 복지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간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⁰⁾

위에 언급한 가족의 형태 중에서 다른 유럽국가들과 좀 더 다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특징지어지는 스웨덴 가족의 형태는 아마도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자유로운 “이혼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스웨덴의 이혼율이 50%라면 그들에게 이혼은 우리 집 아니면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고 일생에서의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전 파트너와 원수지간으로 남기보다는 친구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에피소드는 그들의 가족문화, 좀 더 나아가 스웨덴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가족문화에 대한, 좀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는 또한 스웨덴을 특징지어주는 복지정책과 전혀 무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글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보너스 가족(Bonusfamilj)”과 “라떼 파파”

스웨덴에서는 이혼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또 다른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갈 때 그 새롭게 맺어지는 가족의 구성원을, 그리고 그 역방향으로 그 새로운 파트너가 내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상대방의 이혼 전 가족의 구성원을 “보너스 가족”이라고 부른다. Bonus란 단

3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verige-i-siffror/manniskorna-i-sverige/skilsma-ssor-i-sverige/> (2022-04-08)
<https://www.soderbergpartners.se/newsroom/blogg/karlek-och-skilsmassor-i-eu--vad-galler/>
<https://endbright.se/endbightrapporten/endbightrapporten-2021/>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divorce-rates-by-country>

어를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편찬하는 스웨덴어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영어에서 유래된 언어이기에 케임브리지 사전에서도 또한 찾아보기로 한다.

- 케임브리지 사전³¹⁾
 “money you receive in addition to the usual amount, often because you have worked hard”
 “a pleasant thing in addition to something you were expecting”
- 아카데미 스웨덴어 사전(Svenska Akademiens ordbok)³²⁾
 “extra tilldelning av pengar etc. utöver det normalt gällande el. avtalade”(계약된 것, 일반적으로 주는 돈 외에 추가로 나누어주는 돈, 혹 그러한 것들)

이미 유추하다시피 이혼 가족이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호칭 “보너스 가족”은 이혼 가족이란 부정적 표의에서 충분히 벗어날 만큼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시각적 효과를 위해 보너스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해보겠다.

첫 번째 사진은 지인의 보너스 가족사진이다. 지인의 시아버지는 세 번 결혼했고 각각 다른 어머니를 가진 남매(8명)들이 있다. 이 사진은 그 자식들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손자 손녀(18명)들이 함께 모였다. 스웨덴 여름의 밝은 백야처럼 밝은 모습을 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다. 작금의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가족사진이 아닐까?³³⁾

31)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korean/bonus>

32) <https://svenska.se/tre/?sok=bonus&pz=1>

33) 가족 구성원의 상당수가 지금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그림 4-5] 지인의 보너스 가족사진



두 번째 사진은 스웨덴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보너스 가족 (Bonusfamiljen)』(2017-2022)의 스틸 사진이다.³⁴⁾ 처음 계획은 3부작이었으나 지금까지 4부작까지 방영되었고 시청자들의 요청 하에 지금 5부작 방영을 준비 중에 있는 듯하다. 이 드라마 시리즈가 이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상들을 코믹하게 표현하면서 이 복잡한 가족형태의 얽히고설킨 관계망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aha experience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34) 이 사진에는 보너스 가족의 모든 일원이 등장하지 않았다. 추가적 인물들이 더 있다.

[그림 4-6] 보너스 가족 스틸 사진



이 관계망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미 소개된 “라떼 파파”³⁵⁾도 등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보너스 가족을 얼마 전 꾸린 이 라떼 파파는 이 새 가정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다운증후군)를 돌보다가, 다운증후군의 베이비를 돌보는 새로운 여성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면에서 더 이상의 드라마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겠다.

이 드라마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보너스 가족”이 내포하는 스웨덴 가족문화이다. 이 시리즈가 코메디 장르이기에 사건 발생과 전개가 때로는 과장되게 연출되기는 하나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적 틀, 다시 말해 결국에 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각각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respect/respect)”하며 대하는 기본적 관계 맺음은 잃지

35) <https://www.aftonbladet.se/relationer/a/2154ex/nu-kommer-lattepapporna>
(2005-12-28)
<https://www.hbl.fi/artikel/572a2b28-0d4c-4e0a-90e5-62d1faeb8fd9>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4510>
<http://www.yes24.com/Product/Goods/7096023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25490.html>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가슴 밑바닥에는 “따스한 감정선”이 늘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어른이건, 아이 건에 상관없이! 그리고 외적 사건 즉 이혼을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어나가는 서사가 주를 이룬다.

3. “보너스 가족”, “보너스 엄마, 아빠”, “보너스 자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호칭을 토대로 한 스웨덴 가족문화의 간략한 발달사

이혼 가족에게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보너스”란 단어가 개입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언어는 사회의 변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호칭에 대한 변화사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는 것도 또한 스웨덴 가족문화 변천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공해준다.

- a. 1300년대 후부터 생긴 어휘: 의붓엄마, 의붓아빠, 의붓자식 (Styvmamma / stepmother, stypappa / stepfather, styvbarn / stepchild) → 사악한 의붓엄마의 이미지 생성
- b. 1983년에 처음 등장한 단어: 플리스틱 엄마, 플라스틱 아빠 (plastikmamma, plastikpappa) →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 플라스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뉘앙스를 가진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관심거리인 지금은 위험한 오염의 대상이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또 다른 대체단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 c. 1997년에 처음 등장한 단어: 보너스 엄마, 보너스 아빠, 보너스 자식 (bonusmamma, extrapapa, extrabarn)
- d. 덤으로 따라온 엑스트라 엄마, 덤으로 따라온 엑스트라 아빠, 덤으

로 따라온 혹은 얻은 자식(extramamma, extrapappa, extrabarn)
 e. 단지 아빠의 파트너, 엄마의 파트너, 파트너의 자식일 뿐 → 더 나아가 이제는 이혼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다시 합친다 해도 어떠한 보너스 부모 혹은 엑스트라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이혼한 엄마 아빠의 집에서 반반씩 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엄마 혹은 아빠가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너스 가족 안으로 들어가 새로 가족 구성원이 된 사람은 단지 아빠/엄마의 파트너일 뿐이라는 사고! 새로 꾸려진 추가 가족원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부모 혹은 자식으로서 암묵 중에 강요되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은 단지 자기 자신, 독립적 자기 자신이 되면 충족되는 한 지붕 아래의 구성원이 될 뿐이다. 단 파트너의 어린 아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어른으로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준다. 한 스웨덴 친구(동거남과 아들이 있었는데 헤어짐)는 지금 이전 파트너와 헤어지고 자녀를 가진 다른 파트너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했던 말임.

4. “국민/인민의 가족(Folkhemmet)” 그리고 스웨덴 가족복지 제도의 태동

앞서 언급한 이혼 가족 그리고 이혼 가족들이 새롭게 다시 구성한 가족에 대한 호칭의 변화는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Välfärdsystem)의 변화와 함께 병행하여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엄마, 아빠, 아들(과거에는 특히 맏아들), 딸(과거에는 특히 맏딸),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호칭은 가족 내에서 암묵 중에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역할(role)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칭들은 가족 내의 구성원들이 자기 자

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가족 구성원에게 강요되는 역할에는 정신적인 것 외에도 경제적 역할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정치적 바탕에는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 - 이혼 가족, 장애인, 여자, 아이들 등 - 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제가 처음 언어로 표출된 때는 거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인민의 집Folkhemmet”이라는 단어는 스웨덴 사회를 대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기표다.³⁶⁾

한 나라의 국민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기표, “국민/인민의 집(Folkhemmet)”이라 일컬어지는 이 단어는 사실상 어떠한 “구체적 정치/정책 목표(bestämd politisk målsättning)”를 칭하는 단어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 표현은 단지 사회민주당(사민당)의 당수였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이 1928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언급을 했고, 이후 스웨덴 모델(Den svenska modellen)의 근본적 사고를 대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은유적 표현이 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³⁷⁾

이 “국민/인민의 집” 모델은 1972년 사회민주당 여성협회의 젊은 여성들이 가족정책 토론자료를 만들어 정치적 변화를 시도할 때 다시 대두되었다. 이들은 『미래의 가족. 사회민주주의 가족정책』³⁸⁾이란 토론집을 만들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토론을 시도했는데 이 토

36) <https://www.opendemocracy.net/en/folkhemmet/>,
<https://nordics.info/show/artikel/folkhem>,
<https://www.nordiskamuseet.se/kunskapsomraden/folkhemmet>
<https://www.thelocal.se/20180705/folkhemmet-how-emigration-class-struggle-and-womens-rights-helped-create-the-peoples-home-of-sweden/>

37) <https://www.so-rummet.se/kategorier/folkhemmet>

38) Familjen I framtiden. En socialistisk familjepolitik. Sveriges Socialdemokratiska kvinnoförbund, Stockholm, 1972.

론집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가족에 관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논의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짧은 책자에서 당시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태동된 것이다.

이 젊은 여성들이 꿈꾸던 가족정책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예를 들어 무엇이 사민당 가족 정책인가? 모두가 평등한 조건 - 여자권 남자권 - 에서 일한 권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줘라,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라, 사회적 계층적 유동성에 대해 고민하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가 사회적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직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들에 대한 복지, 휴가 등에 대한 토론을 담았다.

이들은 당시 그들의 이러한 꿈이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자”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요원한 꿈이었던 그들의 토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메타포로만 생각했던 지금의 “국민/인민의 집” 복지정책을 서서히 만들어나간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국민/인민의 집”에서 태동한 구체적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 복지제도가 어떻게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헤어지고 자유롭게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5. 스웨덴 가족 복지제도 2022

가. 부모휴가(Föräldrarledighet)³⁹⁾

기간은 1년이나 휴일, 휴가까지 다 합치면 거의 1년 반 정도이다. 대상은 부모(엄마, 아빠)인데 그 중 한 부모(엄마건 아빠건)가 세 달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 달은 사라진다. 부모휴가 수당은 자기 월급의 80%이나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자기 수입의 80%를 전부 받지 못한다. 그럴 경우 다니는 회사나 기관에서 조금 더 휴가 수당을 보충해주기도 하는데 이진 국가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

나. 아이돌봄 수당(Vård av barn)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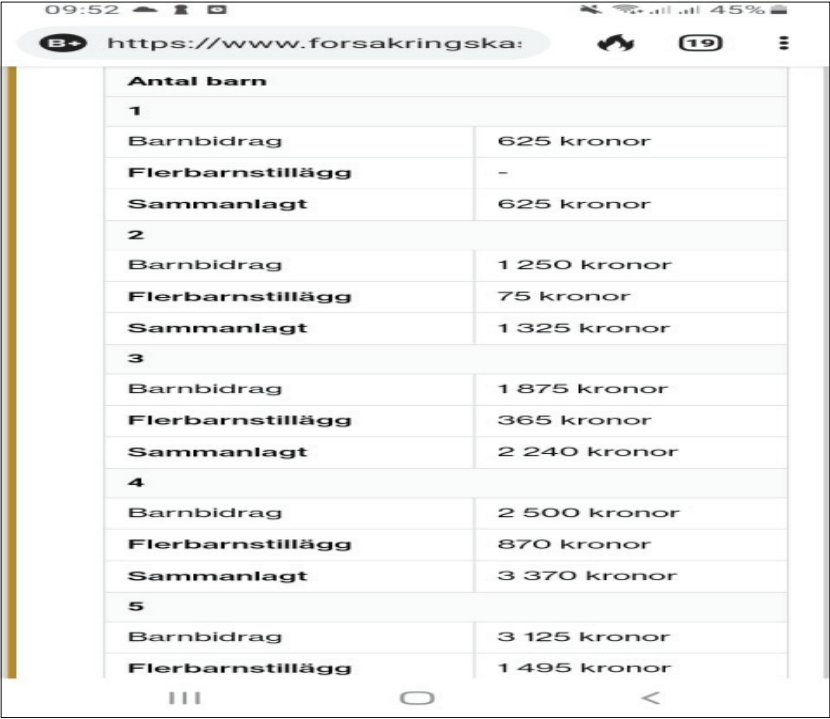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아팠을 때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보며 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 월급의 80%를 받는다. 1년에 최대 120일 동안 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규정도 있어 아이가 12살이 넘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심하게 아프냐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 규칙과 보육 수당이 각각 정해지는데, 12살까지, 16살까지, 21살까지 각각 다른 규정이 정해진다.

39)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foraldrapenning>

40)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vard-av-barn-vab>

다. 아동수당(Barnbidrag)⁴¹⁾

[그림 4-7] 아동수당 내용



The screenshot shows a mobile browser interface with the URL <https://www.forsakringska.se>. It displays a table of child benefits (Barnbidrag) and additional child benefits (Flerbarnstillägg) for different numbers of children (Antal barn). The table is organized into sections for 1, 2, 3, 4, and 5 children. Each section lists the base benefit, the additional benefit, and the total benefit (Sammanlagt).

Antal barn	
1	
Barnbidrag	625 kronor
Flerbarnstillägg	-
Sammanlagt	625 kronor
2	
Barnbidrag	1 250 kronor
Flerbarnstillägg	75 kronor
Sammanlagt	1 325 kronor
3	
Barnbidrag	1 875 kronor
Flerbarnstillägg	365 kronor
Sammanlagt	2 240 kronor
4	
Barnbidrag	2 500 kronor
Flerbarnstillägg	870 kronor
Sammanlagt	3 370 kronor
5	
Barnbidrag	3 125 kronor
Flerbarnstillägg	1 495 kronor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를 몇 명 낳았느냐에 따라 아동수당이 달라진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지점은 위에 적혀 있는 수당이 한쪽 부모에게만 가는 아동수당에 대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625크로나의 두 배 1,277크로나의 아동수당이 한 가족에게 주어 진다는 이야기다.

41)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on/foralder/barnbidrag-och-flerbarnstillagg>

이는 스웨덴에는 이혼 가족이 50% 남짓하기에 가능한 발상이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고 아이가 한 달에 2주는 엄마 집에서, 나머지 2주는 아빠 집에서 살기 때문에 625크로나는 엄마 은행구좌로, 나머지 625크로나는 아빠 은행구좌로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추가 수당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 가족에게 주어지는 총 아동수당은 $2,240+2,240=4,480$ 크로나이다.

라. 학비보조금+학비대출⁴²⁾

학비보조금(Studiebidrag)은 스웨덴에서는 모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이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에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생활비가 일부 보조금으로 나온다. 한 달에 약 3,300크로나이다. 그러나 조건은 학습 속도가 100%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비대출(Studielån)은 대학교에 다닐 때는 대출을 할 수 있는데 학습 속도가 100%일 경우 아주 낮은 이자로 7,700크로나를 생활비로 대출할 수 있다. 이자가 아주 낮고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비해 갚아가는 액수가 달라진다. 월급이 적으면 매번 갚아야 하는 액수는 당연히 낮아진다. 월급이 아주 적다면 평생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한 대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학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가 대출은 $3,300\text{보조금}+7,700\text{대출}=11,000\text{크로나}$ 정도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42) <https://www.csn.se/>, <https://www.csn.se/bidrag-och-lan/studiestod/studiemedel.html>

6. 나가며

앞서 보여주는 2022년도의 가족복지제도를 토대로 보면 이혼가족에 대한 그 어떠한 규제나 불평등한 조건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혼으로 인해 그들이 취약해지게 될 수 있는 조건들에 더 귀 기울여 아동수당 등의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릿말에 보여주었듯 스웨덴의 가족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가족형태도 스웨덴의 복지정책에서는 소외되지 않는다는 “표피적” 해석을 해본다.⁴³⁾ 이는 스웨덴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닐까 상상해본다.

제4절 노인 돌봄, 요양원과 요양병원 너머⁴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정의한다.⁴⁵⁾ 쉽게 말해 건강보험이 ‘의료(진단 및 치료)’를 지원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자의 ‘돌봄(요양원 입소 및

43) 통계적 분석 자료가 없기에 표피적이란 표현을 이 지면에 쓴다.

44) 송병기(의료인류학자)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3차 포럼(2022.10.7.) 패널발표문 내용임

45)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ongtermcare.or.kr>

방문 요양’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사회보험의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와 돌봄을 분리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보건학자 김창엽의 지적처럼, 이는 두 보험의 독립적 재정 운용이나 의료와 돌봄의 기능 분화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⁴⁶⁾ 그보다 눈여겨볼 점은 의료는 병원에서 전문가가 하는 행위인 반면, 돌봄은 집이나 요양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치부하는 인식이다. 병원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보호자는 간병을 맡는 게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의료진이 치료가 끝났다고(혹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판단하면 환자는 요양 시설로 가서 돌봄을 받도록 권장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료와 돌봄의 분리를 당연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일상에서 돌봄과 의료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예컨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계를 무 자르듯 쉽게 나눌 수 없다. 의사가 없는 요양원에서도 의료는 중요한 요소이고, 요양보호사가 없는 요양병원에서도 돌봄은 필수적이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을 받지 못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질병 치료가 아닌 돌봄 목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요양병원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이기에 돌봄은 의료진이 아니라 보호자나 간병인이 맡는 게 당연시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요양원에는 입소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가 상주한다. 문제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을 정도의 노인은 이미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중환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요양보호사가 고령의 중환자를 떠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요양원은 ‘어르신의 마지막 집’이라고 표현되지만 대개 임종 상태에 가까워진 입소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진다. 어르신의 ‘진짜’ 마지막 집은 병원이다. 이처럼 돌봄과 의료는 요양

46) 김창엽. 2021. “상품화된 의료에 돌봄은 없다.” [한겨레21] 1370호.

원과 요양병원 사이에서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 환자, 보호자, 의료진, 돌봄 노동자가 현행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로 만들었을까? 그 기능과 역할을 기존의 건강보험이 흡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탄생했을까? 이 제도는 2000년대 들어 급부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즉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인구 위기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논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와 위기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국어사전은 인구를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로 정의한다. 통계청이 수행하는 인구 총조사처럼, 인구는 ‘객관적 사실이나 지식’의 형태로 통용된다. 그러나 인구는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이다. 여기서 정치는 신문에 등장하는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같은 범주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성원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인류학자 백영경의 분석처럼, 인구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상상하는 방식이자 공동체의 운명을 해석하는 근거로 작동한다.⁴⁷⁾ 예컨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이 근대화를 위한 요소였다는 관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인구의 제한이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정치적 상상과 인식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산아와 양육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인구수는 군사력의 척도였고,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는 통일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점차 분단의 장기화가 전망되고, 국방력에 대한 이해도 병력에서 첨단 무기 중심으로 달라졌다. 따라서 인구에 대한 관념도 남북간 체제 경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거듭났다. 특히 경제 개발이

47) 백영경. 2013.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 1960년대 『사상계』속의 정치적 상상과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 《여성문화연구》29호, 7~13쪽.

남한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일이자 체제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농촌의 과잉 노동력, 도시의 높은 실업률, 낮은 공업 수준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은 농촌의 ‘무분별한’ 인구 증가는 제한하되 자본주의 산업화를 이끌 도시의 ‘정예화’된 인구 증가는 장려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학자 조은주는 1960~70년대 “가족계획사업은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아 임금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아버지와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일상적 실천을 일반적인 삶의 과정으로” 정착 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한다.⁴⁸⁾ 즉 이 사업은 단순히 산아제한을 통한 국가 발전이 아니라, 개인들이 일과 가족(계급과 젠더)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정상적인 가족(4인 가족)과 특정한 생애주기(일, 결혼, 출산 시기 등)가 이념처럼 퍼졌다. 이처럼 인구는 과거·현재·미래를 규정하고, 사회 성원이 믿고 따라야 할 삶의 형태를 창출하는 일종의 ‘기획’이다.

그러면 인구와 짝을 이루는 위기(crisis)란 무엇인가? 통상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는 이 말은 고대 그리스어 ‘κρίσις(krisis, 크리시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명사 κρίσις는 분리, 구별, 선택, 그리고 판단, 생각, 결정을 의미한다. 요컨대 위기를 이루는 두 축은 ‘시간과 행위’이다. 위기는 찬성과 반대, 선과 악, 삶과 죽음, 퇴보와 진보처럼 길이 양쪽으로 갈리는 중대한 순간과 그때 해야 하는 최선의 선택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비’로 불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는 개념이다.⁴⁹⁾

48)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파주: 창비, 276쪽.

49) 라인하르트 코젤렉. 2019.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1: 위기』서울: 푸른역사.

1. 인구 위기론에서 추출된 노년

다시 돌아와서, 인구와 위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화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그 대응책 마련을 주요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이는 인구를 둘러싼 정치적 상상과 인식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예컨대 정부는 〈2004년 보건복지 백서〉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진단하고(과거), 그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며(미래),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현재)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90년대 이전에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출산 억제 정책 등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2003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저출산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경제활동 인구가 그들의 노후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생산가능인구와 노동생산성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증가,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간 갈등 첨예화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다. (...)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단절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⁵⁰⁾

50) 『2004 보건복지 백서』, 보건복지부, 2005, 95~97쪽.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오늘날 유행가처럼 울려 퍼지는 인구 위기론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출산·고령화가 성장을 위협한다는 진단이 아니라, ‘특정한 인구’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된다고 판단한 근거이다. 이 담론은 복지 제도(연금, 의료보험 등)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가족(특히 여성)이 노인을 부양하며, 국가 재정을 경제성장을 위해서 쏟아붓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위기로 규정한다. 국가(정부와 국회)는 기존 제도의 기저를 이루는 정치적 상상과 인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즉 저출산·고령화로 명명되는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력이 약하거나, 부양자가 없거나,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인구, 즉 ‘의존적 노인’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정부와 국회는 노인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원 및 요양병원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2003년 10월 23일자 <의학신문> 기사에 따르면, 김성순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대정부 질의에서 “치매·중풍환자, 정신질환 노인들을 수용하는 요양 시설이 태부족해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살피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요양병상을 대폭 확충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병원과 구분해 노인병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⁵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인부양에 관한 국가의 시선이 가족에서 의료와 시설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추진되고 있었고, 국가는 노인부양을 집→급성기 병원→요양병원→요양원이라는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응하고자 했다.⁵²⁾ 이 새로운 시스템은 무엇보다 노인이 생산가능인구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이제 돌봄

51) “노인수가 개발-병원 설립기준 완화해야”, 『의학신문』, 2003. 10. 23.

52) 권진희, 「법 탄생에서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주요 이슈를 통해 본 시사점」, 『의료정책포럼』 15(2), 8~14쪽.

이 필요한 노인은 집을 떠나서 환자가 되어야 했다. 물론 그가 급성기 병원(행위별수가제 적용, 과잉진료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가능성)에 오래 있는 것은 곤란했다.

개인과 국가 모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많이 필요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008년 1월부터 일당정액제(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를 적용함으로써 비용 통제를 했다. 게다가 같은 해 7월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료가 아닌 ‘수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게 ‘노인 의료는 요양병원에서, 노인 수발은 요양원에서’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원 의사는 ‘당연히’ 필요 없었다.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공급을 늘렸다. 요양병원의 수는 2000년 약 20개에서 2008년 700여개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1500개를 넘어섰다.⁵³⁾ 요양원의 수도 2008년 1800여개에서 2019년 5500여개로 폭증했다. 대다수는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었다.⁵⁴⁾

다시 말해, 저출산·고령화 위기 속에서 등장한 노인부양 정책은 민간 시설의 설립과 운영규제는 완화하되 비용 통제는 강화했다. 그 결과 노인 환자와 병상 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 수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0명을 돌보는 요양원이 나오고, 간호사 1명이 환자 40명을 관리하는 요양병원도 등장했다. 이런 환경에서 의료진과 돌봄 노동자가 노인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존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열악한 노동 조건은 근무자뿐만 아니라 노인의 인권 문제로도 이어진다. 예컨대 입소 노인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CCTV

53) “전국 요양병원 1천개 시대 들어섰다”, [메디칼타임즈], 2012. 3. 23; “작년 요양병원 당 요양급여비용 39억원”, [의료앰복지뉴스], 2021. 11. 5.

54)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한겨레], 2019. 5. 13.

가 과다하게 설치되고, 낙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 범위가 넓어지며, 식사 수발이 필요 없도록 ‘콧줄’이 삽입되고, 화장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저귀가 남용된다. 이러한 소식이 인구에 회자될수록 시설 관계자는 ‘효’와 ‘사랑’을 강조한다. 하지만 도덕적 수사는 대개 열악한 노동 조건을 은폐하는데 기여한다. 결국 문제가 또 터지지 않도록 입소자의 ‘안전’만 강화된다. 그렇게 노인의 서사적(biographical) 삶은 탈각되고, 삶의 존엄성은 의료적·생물학적(biological) 문제로 치환된다. 입소 노인의 ‘수분·영양 공급’은 본질이 되고, ‘입맛’은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된다(먹는 입만 가진 존재, 즉 ‘人口’로 전락한다). 한편 가족보호자는 간병(비), 의료비, 시설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국가가 여전히 노인부양을 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노인, 보호자, 돌봄 노동자, 의료진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

2. 노년기 삶의 형태

오늘날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노인 시설로만 볼 수는 없다.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출생률(생산가능인구)로 환원하는 인구 위기론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문제적 노인’, 그를 둘러싼 규범, 가치, 감각, 기준, 법 등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이라는 실체로 현현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정상 가족’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를 위기로 상정했고, 발전에 쓸모있는 인구와 쓸모없는 인구를 분류했다. ‘의존적 노인’은 이러한 정치적 상상과 인식 속에서 선별되고, 의료적·생물학적 차원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집안일’에 머물던 노인 부양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시장으로 옮겨갔다. 이제 개인이 좋은 돌봄을 받고자 한다면, 즉 숙련된 간병인, 쾌적한 시설, 섬세한 의료적 지지, 자유가 보

장되는 일상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취약 계층’은 연명의료를 받으며 영세한 시설에 방치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설의 주 수입원은 국가의 지원금(의료 및 요양보험 수가)이다. 거대한 ‘돌봄 위탁 피라미드’가 작동하고 있는 형국이다.⁵⁵⁾ 이처럼 노년이 불평등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계에서 노화와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세포의 노화까지 걱정하며 돈을 쓰고 몸을 관리한다. 노인 요양 시설 너머, ‘인구’라는 정치적 상상에 기반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등장한 불평등한 삶의 형태를 마주하고 있다.

이제라도 저출산·고령화라는 틀에서 벗어나 노인 돌봄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노인 돌봄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출산이든 고출산이든 상관없이, 한국의 노인 돌봄은 여러 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다. 그 시작은 오늘날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고, 노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자 동료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존엄한 노년과 죽음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때다.

55) 김영화 외. 2021.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서울: 시사IN북, 85쪽.

제5절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서 동거, 그리고 출생률⁵⁶⁾

1. 출생률과 규범의 변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84만 명에서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감소하고 15~64세인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20년 72.1%에서 2070년 46.1%로 감소한다고 한다(통계청, 2020b). 여러 자료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생 원인으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등을 지목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저출생과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제적 문제를 보완하는 ‘현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6년간 28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사용됐지만 합계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했다.

주거비와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출생률이 높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타당한 지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PIIE)에서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 한국의 재정 및 출산율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 중엔 실소득 대비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지만, 출생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있다(PIIE, 2021). 이러한 지적에는 단순 비교보다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저출생의 문제는 경제적 원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저출생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이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출생률도 낮지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혼외 출생률이 매우 낮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56) 김재현(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3차 포럼(2022.10.7.) 패널발표문 내용임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한국의 혼외 출생아는 6,974명이었다(통계청, 2020a). 혼외 출생률은 2.3%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프랑스 60.4%, 스웨덴 54.5%, 영국 48.4% 등으로 한국보다 약 20~3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혼외 출생도 높지만, 합계출생율도 1.84명이라 한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혼외 출생이 높다는 것은 출산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 결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한국처럼 결혼 내에서만 출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규범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외에도 혼외 출산과 동거 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혼외 출산과 육아에 적합한 유연한 노동 환경 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흔히 아는 것과 다르게 북미나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도 결혼이 감소하는 대신 동거와 혼외 출산이 늘어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Cherlin, 2004). 이러한 현상을 인구 변동이라 한다. 도시화 과정에서 기존 가족이 소규모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을 1차 인구 변동으로, 이혼의 증가, 결혼의 지연,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을 2차 인구 변동으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고 나서야 동거와 혼외 출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Lesthaeghe and Kaa, 1986).

한국의 경우 생애과정은 교육, 취업, 결혼, 출산의 순서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교육 수준의 상승은 첫 직장을 갖는 시기가 지연되고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의 시기도 늦어지게 된다. 이는 곧 가임 기간의 단축으로 연결되어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새로운 규범으로서 동거

결혼이라는 제도 외에 출산과 양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는 동거가 대표적일 것이다. 가족을 형성,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인 동거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낯설고 부정적 선입견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75% 정도가 혼외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소영, 2018). 반면에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의견이 57%, 반대의견이 43%로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나운 이수민, 2021). 조사 시기와 대상에 따라 의견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쩌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응답하는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동거하는 사람들에 관한 통계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동거 부부의 삶은 실제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알려준다.

이러한 선입견과 옳지 않다고 보는 시선은 실제적인 차별로 나타난다. 특히 정부의 지원과 정책은 동거가족을 차별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였다.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소위 '정상 가족'만이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차별을 낳을 수 있다.

개인 생애사적 사건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다만 정부는 개인이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고 시도한다면 정부는 차별하지 말고 모든 방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의 지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정상 가족'만 지원하고 '정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에서 ‘정상 가족’은 언제부터 존재하였을까? 김혜경의 논문에 따르면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핵가족이라는 용어가 소개되며 가족 규범은 큰 변화를 겪는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을 제조업 부문으로 유인하는 동시에 산아제한을 하는 가족계획 사업이 필요하였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을 매우 부정적으로 개념화하는 가족 담론들이 공론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핵가족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여겨지다가 1980년대 소자녀 직계가족 규범이 확립된다. 알고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족 규범이 정착한 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정상 가족’이라는 틀 안에 많은 사람이 차별받는 것은 경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3. 동거와 혼외 출산의 의미

정상 가족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개인에게 행동에 대한 권장 또는 금지하기 때문에 생애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와 순서를 통제한다. 즉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은 인구학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겪는 변화는 곧 동거와 결혼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혼외 출산과 동거가 비교적 보편적인 나라의 동거는 어떠한 의미일까?

한국에서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이유는 결혼 부부보다 현신의 정도가 낮다는 인식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현신이란 부부 또는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를 의미한다(Johnson, 1991).

국내 연구에서는 헌신에 관해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았다. 그나마도 결혼한 부부의 관계 내에서만 소개되었을 뿐이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동거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결혼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가족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연구되었다. 동거가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혼외 출산과 결혼 외 부부의 지원과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헌신은 개인적, 도덕적, 구조적 헌신으로 구분 가능하다(Duncan & Barlow, 2012). 개인적 헌신은 파트너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덕적 헌신은 마음과 감정에 상태보다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무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헌신은 주택, 재정, 자녀 등으로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상황에 기반한다.

4. 동거와 헌신

헌신의 개념을 활용하여 동거와 변화된 규범을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의 한 도시에서 동거 부부를 인터뷰하여 그들에게 동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Berrington, Perelli-Harris, Trevena). 영국에서도 전통적인 생애과정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 동거의 증가, 이혼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고등교육의 확대,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 주택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혼, 연애, 출산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형성에서 주택 소유가 중요한 조건이었지만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족 형성의 순서는 더욱 다양해진 것이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가족 구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순서가 덜 표준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 신혼부부의 84%가 결혼 전에 동거하며 일반적으로 약 4년 동안 동거한다고 한다. 영국 전체의 출산 중 절반 정도는 혼외에서 발생한다. 결

혼 부부의 이혼 수준도 1970~80년대 크게 증가하다가 최근에 하락했다. 아마 동거의 증가와 안정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커플의 선택이 증가한 탓이다.

이러한 변화는 태도와 가치를 반영한다.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 중 62%가 아이를 갖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4%,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28%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동거의 의미와 그들이 생각하는 헌신의 의미 또한 달라졌다. 결혼이 더 이상 헌신의 유일한 표현과 수단이 아니기에 동거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동거 생활의 유지는 출산과 주택 구입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동거 부부가 결혼 부부만큼 가정을 유지하고, 출산과 육아와 같은 영역에서도 헌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성인으로서 시작을 친척과 지인에게 알리는 통과 의례의 기능을 하였지만, 결혼식은 상징적인 행사의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5. 결혼보다 나은 동거?

동거를 경험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결혼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점에서 동거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에서도 파트너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헌신과 약속의 유지는 물론이고, 일부는 결혼보다 동거 생활에서 더 큰 헌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동거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은 결혼 서약 안에서 한 약속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결혼이 헌신의 최고의 표현이라 여겨진 것과 다르게 새로운 규범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은 동거보다 더 많은 헌신과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이혼율은 결혼제도에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실제로는 결혼이 더 큰 헌신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거는 도덕적 의무 또는 구조적 헌신에 제약받지 않아서 강한 개인적 헌신으로 집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동거 부부는 강한 개인적 헌신을 누리면서 이혼의 비용과 같은 구조적 헌신에서는 자유롭다. 특히 결혼 후 도박 중독 등 파트너의 치명적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혼 과정이 고통스럽다. 게다가 변호사 선임에서 비싼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낙인은 동거 파트너와 헤어지는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처럼 결혼의 실패와 그로 인한 이혼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동거보다 언제나 크다. 결국, 동거는 헤어짐의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구조적 헌신에서 결혼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여러 연구에서 동거는 결혼에 비해 헤어질 가능성이 크고 동거를 한 부부가 결혼하였을 때 이혼할 가능성은 동거하지 않고 결혼을 한 부부보다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동거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쉽고 간단할 것이라는 예상과 염려가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과 지속성은 동거 부부의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동 소득 및 공동 투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거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6. 헌신의 이동

출산, 결혼의 순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 장기 거주지 확보와 같은 생애과정의 순서가 불확실해지고 연기되었다. 결혼을 위한

주택 구입이 어려워져 주택-결혼-출산이라는 규범도 변화하고 있다. 가족 형성과 관련된 궤적이 증가하고 순서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헌신의 모습도 다양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규범은 인구 구성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고 있어서 동거 및 결혼과 관련하여 헌신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 혼인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함께 주택 대출을 받는 것과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보다 더 큰 헌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헌신에서 주택 대출과 자녀를 포함하게 되면 그 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결혼만큼이나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순서로 삶을 꾸려가지 않고도 다양한 방식과 유형으로 헌신을 나타낼 수 있다.

규범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헌신을 보여주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개인화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관계에 대한 헌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뷰의 내용은 헌신, 동거 및 결혼의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고, 동거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헌신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 주택 구입, 출산과 같은 헌신의 전통적인 지표는 덜 표준화되고 부차적인 것으로 변화했다. 인터뷰 대상자들도 결혼을 “다음 단계”라고 하지만, 이 단계가 인생의 특정 시점에 올 필요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출산을 위한 “자연적인 진행” 또는 “파트너십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에 관한 계획과 의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파트너십 안에서 생애과정 어디에서나 출산이 가능하다. 응답자들은 결혼으로의 “자연스런 진행”을 자녀를 낳은 후 또는 집을 구입한 후 한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동거 부부들이 자녀 양육과 주택 구입과 같은 공동

대출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동거 부부의 경우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 헌신을 활용한다. 또한, 생애과정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동거 부부와 혼외 출산의 이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동거 부부와 혼외 출산을 경험한 개인은 교육 수준에서 특징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에딘은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의 출산 중 94%는 결혼생활에서 발생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57%가 첫 아이를 낳을 때 미혼이라 말한다⁵⁷⁾. 에딘이 만난 저소득층 미국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결혼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에서 상향 이동의 가능성은 적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그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몇 안 되는 삶의 의미자 긍정적인 정체성 중 하나이다. 집을 먼저 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이를 낳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동거 부부와 그 자녀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들을 향한 차별을 멈추고 도움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57) <https://www.harvardmagazine.com/2012/07/when-having-babies-beats-marriage>

제6절 부성휴가가 가족 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⁵⁸⁾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2005년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는 합계출산율이 2명에 근접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인 프랑스는 2019년 1.96명, 2021년 1.83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덕분이다.

프랑스는 가족 단위로 접근하여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개입한다. 국가 주도의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보육정책을 가족지원제도 측면에서 접근한다. 또한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높은 출산율을 위한 프랑스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은 엄마가 사용하는 출산휴가 / 부성휴가 / 부모 육아휴직과 같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에 있어 남녀 역할의 평등을 위해 아버지 참여를 장려, 보육 시설 확충, 육아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우선 프랑스의 육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면, 육아를 위한 여러 휴가/휴직제도가 있다. 모성 휴가(출산휴가)는 출산 후 엄마에게 주어지는 휴가로 출산 후 최소 8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급여의 84-100%를 지급한다. 부성휴가는 유급 남편 육아 휴가이며, 부모 육아휴직은 보육을 목적으로 부부가 사용하는 장기 휴직제도이다. 이 중에서 특히 부성휴가는 부부의 평등한 양육 및 가사참여를 통해 가족 내 남녀불평등 및 사회

58) 홍지영(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제3차 포럼(2022.10.7.) 패널발표문 내용임 (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의 남녀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한 제도로 가정 내 성차별을 축소하여 사회의 성 불평등 현상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과연 프랑스의 부성휴가 제도가 남녀의 부모 역할, 가사분담, 남녀의 직업적 평등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제기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지만 기존의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남녀 차별 완화에 있어서는 기대보다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성들에게 내재된 정체성으로 인한 것이다.

부성 육아 휴가(conge de paternite / 남편 육아 휴가)는 2002년 유급휴가로 처음 실시되어 2002년에는 14일로, 이후 2021년부터 28일로 기간이 늘어났다. 즉, 2002년 3일의 출산휴가와 이후 11일 추가 휴가였다가 2021년 3일의 출산휴가와 이후 25일 추가 휴가로 늘어났는데, 1차로 4일, 이후 21일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할 때 최소 5일을 사용한다. 다자녀 출산의 경우는 32일의 휴가가 있으며, 부성휴가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휴가 사용 후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성휴가는 가족 내에서 육아/가사에 있어 남편의 참여를 통해 가족 내 성평등을 이루고, 이후 직장 내에서의 남녀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25일이라는 남편의 짧은 휴직 기간 동안 남편은 가사와 양육 활동 중 양육 활동 선호한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분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아내와 함께 하는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남편들은 여전히 여성이 가사와 양육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남편의 행위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부성휴가 이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프랑스의 부성휴가 제도가 남녀의 부모 역할, 가사분담, 남녀의 직업 평등에 대한 효과를 평가해 볼 때, 남성에게 내재된 정체성으로 인해 기대보다

미미한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경제적 노동 활동에서 찾으며, 가사 및 육아 분담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역할을 결정하는 것은 아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남성에게 내재화된 역할 규범으로 인해 남성은 가사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이 인식하는 모성애와 부성애 차이는 모성애는 자연적, 부성애는 개발되는 것으로 단기 육아 휴가가 남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남녀 역할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남녀 역할 평등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직업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결국 장기적 육아휴직이 필요하며, 남편이 육아 및 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2달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내 없이 홀로 양육하는 남성에게서 가사분담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남녀 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이 걸린다는 연구결과(Bunnning 2015)에 의하면 남편의 행위변화는 남편이 장기적으로 혼자 아이를 돌볼 때 발생한다. 결국 프랑스의 부성휴가는 성 역할 평등이 아닌 성별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에서 실시하는 남편 육아할당제가 필요하다.

남편 육아할당제(아빠 육아할당제)는 남편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총 480일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중 90일은 남편이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라떼대디). 남편 할당제 정책으로 가족 내에서 남녀가 균등하게 역할을 배분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 국가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휴직급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25일간 부성휴가 외에 2014년 남녀평등법으로 인해 부모 육아휴직을 부부가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 육아 휴직이 이전에는 남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6개월씩 총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편의 6개월이 엄마에게 할당될 수 없다.

문제는 프랑스의 경우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단기 부성휴가는 기존의 급여 수준에 맞추어 지급되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육아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수당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직업적 요소로 인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것은 여성의 직업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결국, 프랑스의 경우 단기 부성휴가로 인한 한계를 채우고자 남편 할당제를 사용했으나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관계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육아 휴가와 휴직 기간에 있어 뒤처지지 않는 국가이다. 엄마의 모성 휴가 3개월과 부모 육아휴직 1년(선택)이 있으며 아빠의 경우는 부성휴가 3일과 부모 육아휴직 1년(선택)이다. 이 경우 부모 육아휴직에는 남편에게 따로 할당되어 있는 기간은 없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6%) 주로 여성이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남편 할당제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긴 것도 여성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남편 할당제에 대한 공약을 만들었는데, 남편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급여(부모급여)를 늘리는게 중요하다. 육아휴직급여가 적으면 남성들이 휴직을 꺼리게 되고,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것은 많은 경우 부모급여가 높기 때문이다.



제5장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제1절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준비는 되어 있나?:

현황과 과제

제2절 저출생·초고령 사회의 문제들과 해결방안

제3절 저출산의 뉴노멀화와 난잡한 돌봄

제4절 Covid-19 이후,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제 5 장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제1절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준비는 되어 있나?: 현황과 과제⁵⁹⁾

1. 서론

2022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생, 고령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변화는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OECD 회원국인 한국은 두 가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이 2021년에 0.8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59명)보다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노인 빈곤이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이 43.4%(2018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라는 것이다.

노동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떠안고 있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이다. 지금까지 생산가능인구의 주축이었던 이들이 서서히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자녀인 에코 세대(1979~1992년생) 가운데 노동시

59)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부원장)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발표문 내용임

장에 안착하지 못한 청년(34세 이하)이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고용 문제가 동시에 정부의 뒷다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겠다.

2025년이면,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글은 초고령사회의 도래가 촉박해진 이 시점에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를 고민해보기로 한다. 이에 저출생·고령사회의 현재를 살펴보고,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2. 통계로 확인해보는 저출생·초고령 사회

통계청의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총인구가 51,738천 명으로 전년 대비 91천 명 감소하였다고 한다([그림 5-1]). 이는 정부 수립 이후에 실시한 1949년의 센서스 집계 이후에 처음 감소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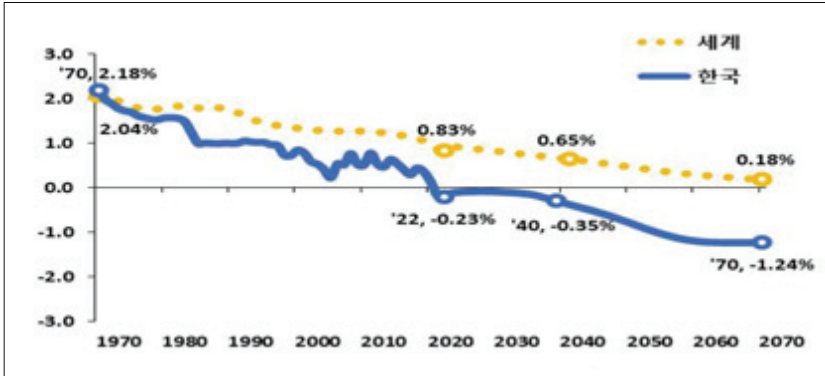
[그림 5-1] 총인구 규모 추이(1949~2021)



주: R은 등록센서스 방식의 총조사인구를 뜻하며, 나머지 연도는 현장조사 방식의 총조사인구임.
 2010년은 두 방식 모두 작성
 자료: 통계청(2022a, 6쪽)에서 작성.

[그림 5-2]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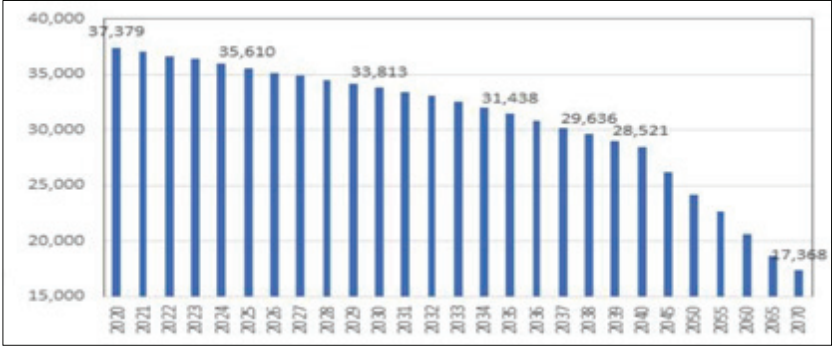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b), 1쪽.

놀라운 사실은 2022년 인구성장률이 -0.23%로 전망되는 가운데 2040년에는 -0.35%, 2070년에는 -1.24%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림 5-2]). 이에 대하여 세계는 2022년 0.83%, 2040년 0.65%, 2070년 0.18%로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의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 73.4%로 정점에 이른 뒤에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는 71.0%, 2040년에는 56.8%, 2070년에는 46.1%로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5-3, 5-4]).

14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그림 5-3] 생산연령인구 추이(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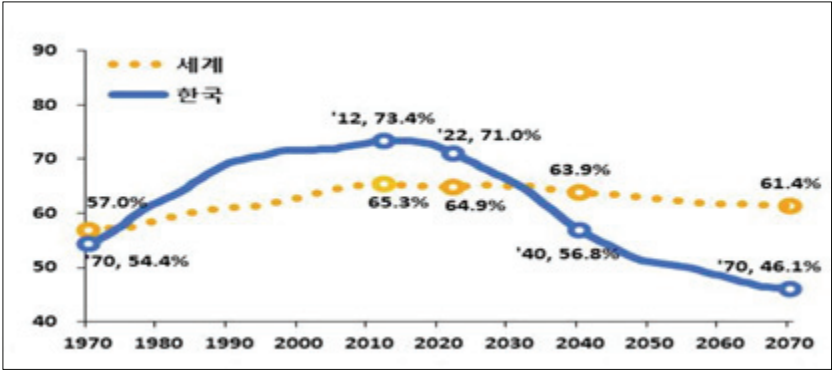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21, 60쪽)을 이용하여 작성

[그림 5-4]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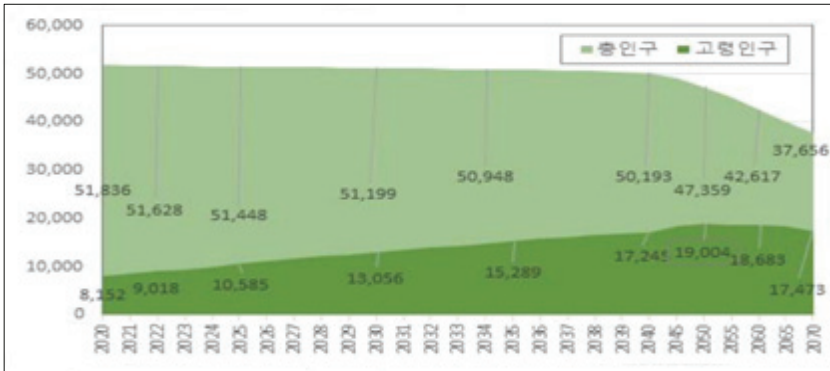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b), 2쪽.

이 흐름과는 달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서고, 2025년에는 1,059만 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며, 그 뒤로도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 1,90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5]). 이에

따라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도 2022년에 17.5%, 2040년에 34.4%, 2070년에 46.4%로 거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령인구로 채워질 것이라 한다([그림 5-6]).

[그림 5-5] 총인구와 고령 인구 추이(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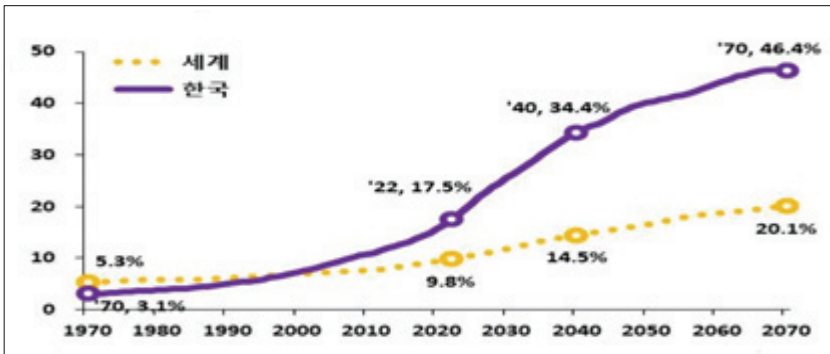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21, 57쪽)을 이용하여 작성.

[그림 5-6] 세계와 한국의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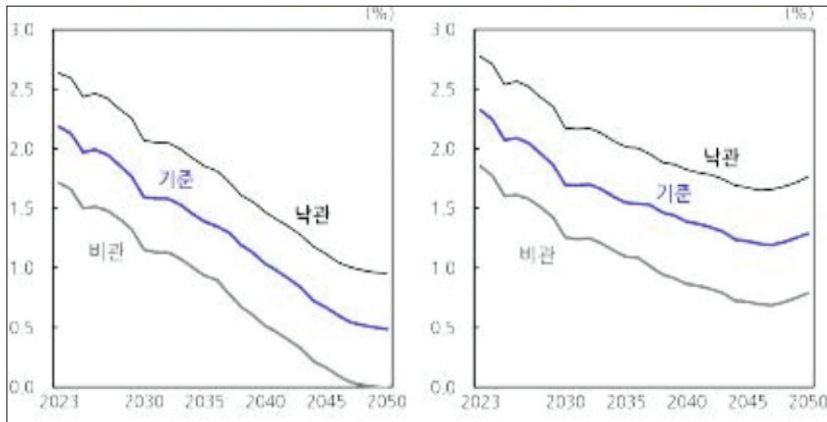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b), 2쪽.

이처럼 노동공급의 감소와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장기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수반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5-7]). 2050년에 경제성장률은 0.5% 수준, 1인당 GDP는 1.3% 수준을 보일 것이라 한다.

[그림 5-7]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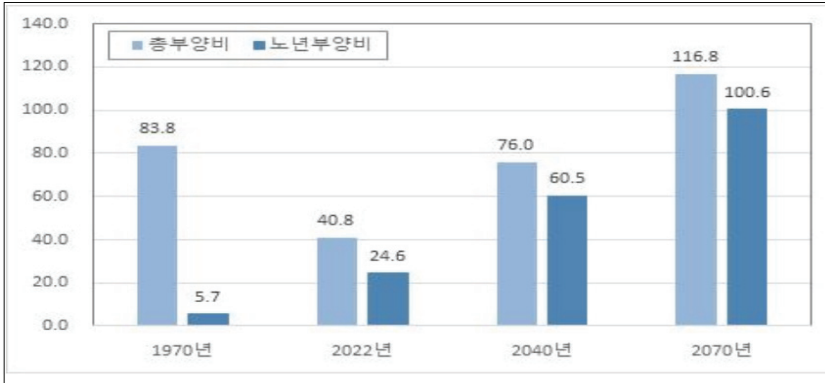


자료: 김지연 외(2022), 6쪽.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노년 부양 부담의 증가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로 표시되는 노년부양비가 2022년 24.6명에서 2040년에는 60.5명, 그리고 2070년에는 100.6명으로 늘어나서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하여야 할 고령자가 1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그림 5-8]). 사회가 고령자를 부양하여야 할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 이는 사회보장체계의 와해와 세대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게 된다.

[그림 5-8] 부양비 전망

(단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주: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자료: 통계청(2022b, 16쪽)에서 작성.

〈표 5-1〉 연령별 기대여명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 (B-A)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 (B-A)
2005	17.7	15.5	19.6	4.1	10.6	9.2	11.6	2.4
2010	19.1	16.8	21.2	4.4	11.6	10.0	12.9	2.9
2015	20.3	18.2	22.4	4.2	12.4	10.8	13.7	2.9
2017	20.8	18.6	22.7	4.1	12.7	11.1	14.0	2.9
2018	20.8	18.7	22.8	4.1	12.7	11.1	14.1	3.0
2019	21.3	19.1	23.4	4.3	13.2	11.5	14.6	3.1
2020	21.5	19.2	23.6	4.4	13.3	11.6	14.7	3.1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2) 2016. 12. 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

자료: 통계청, 「생명표」(통계청(2022c, 27쪽)에서 재인용).

앞에서 설명은 생략하였으나, 통계청(2021)에 따르면, 2022년에 7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1.5%로 총인구 10명 가운데 70세 이상 인구가 1명을 조금 넘어서지만, 점점 늘어나서 2070년에는 39.5%로 총인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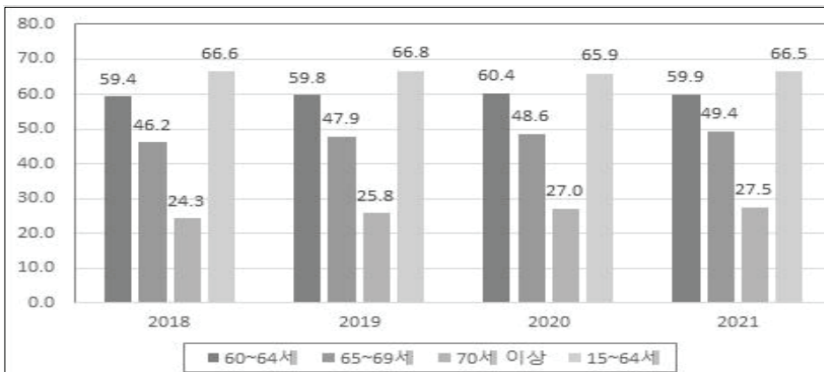
명 가운데 70세 이상 인구가 4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기대여명도 경제성장과 함께 계속 높아져서 2020년 현재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이며,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이다(〈표 5-1〉). 말하자면, 80대 후반까지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들이 건강한 상태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과 더불어 노후가 안정되어야 함은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

3. 고령자의 경제활동

그렇다면 고령자는 어떠한 생애를 보내고 있을까? 이를 여기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생산연령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2021년 현재 15~64세의 경우에는 66.5%이며, 60~64세는 59.9%, 65~69세는 49.4%, 70세 이상은 27.5%이다(〔그림 5-9〕).

〔그림 5-9〕 연령대별 고용률(2018~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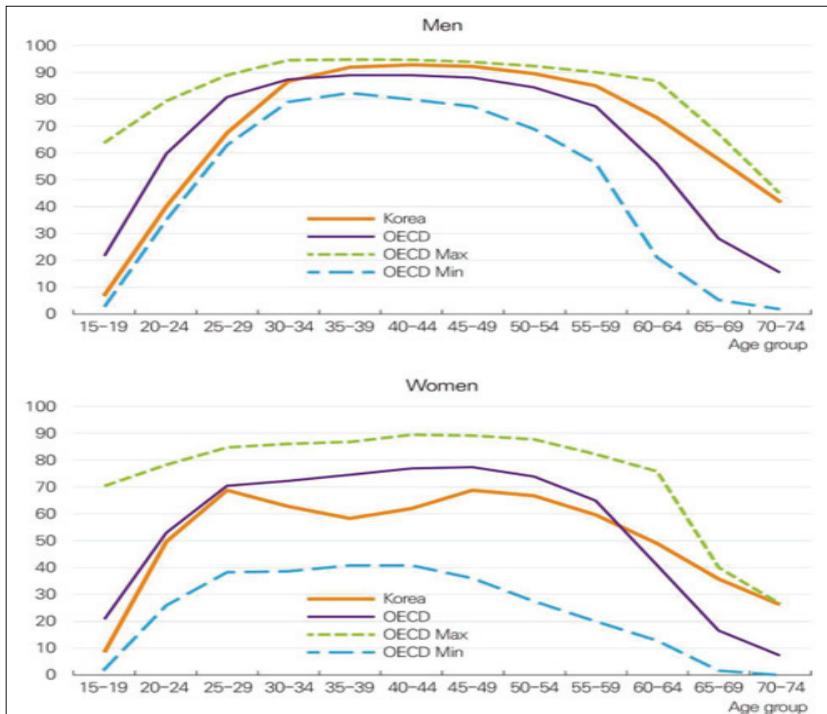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2021(국가통계포털에서 내려받아 작성).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60~64세 고용률이 2021년에 약간 낮아진 것을 예외로 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양성 모두 고령자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크다는 사실도 확인된다(그림 5-10).

[그림 5-10] 연령대별 고용률 비교

(단위: %)



자료: OECD(2020)(이승호(2020, 10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한국의 고령자는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일까? 은퇴 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는데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의 경우에 60.2%이다(〈표 5-2〉).

〈표 5-2〉 은퇴연령층(66세 이상) 빈곤율(2016~2020)

(단위: %, 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¹⁾		지니계수 ²⁾		소득 5분위 배율 ³⁾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2016	58.7	45.0	0.568	0.425	49.47	9.05
2017	58.3	44.0	0.564	0.419	45.97	8.82
2018	59.9	43.4	0.560	0.406	41.99	7.94
2019	61.0	43.2	0.554	0.389	42.82	7.21
2020	60.2	40.4	0.554	0.376	43.13	6.62

주: 1)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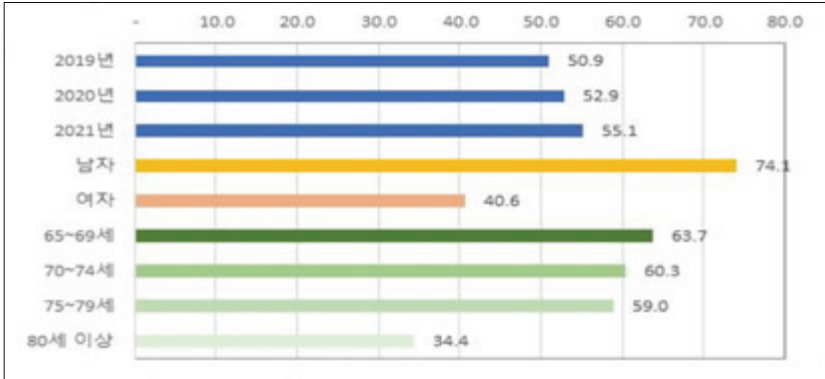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2c: 74쪽에서 재인용).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율은 2021년 현재 55.1%로 거의 절반 가까이 연금 없는 생활자임을 알 수 있다(〈그림 5-11〉).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40.6%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며, 80세 이상은 34.4%에 그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55~79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앞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7월에 가깝다(〈그림 5-12, 5-13〉). 게다가 이들 가운데 생활비에 보태고자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이 6월 가까이 되니 55~79세 고령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생활비에 보태고자 일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림 5-11]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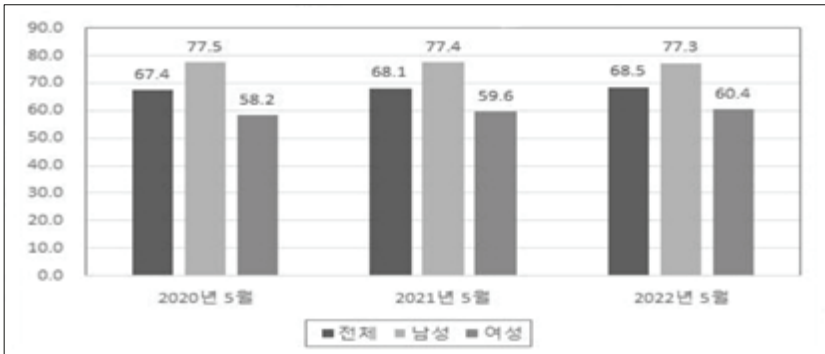


주: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수(65세 이상)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통계청, 2022c: 75쪽에서 재인용)

[그림 5-12] 55~79세 근로 희망자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0~22(국가통계포털에서 내려받아 작성).

[그림 5-13] 55~79세 중 생활비 보충을 위한 근로 희망자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0~22(국가통계포털에서 내려받아 작성).

4.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이상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초고령 사회는 곧 들이닥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그다지 준비가 되어있질 못하다. 이 절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고민해 보아야 할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고령자 노동시장은 노동을 공급하는 고령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이라는 두 주체로 구성된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임이 분명하지만, 이 결정에는 외부환경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정리한다면, 첫째, 고령자의 숙련을 퇴장시키며, 이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둘째, 디지털 전환의 영향과 유사한 플랫폼 노동(platform labor)의 확산, 셋째, 역시 전통산업의 쇠퇴와 함께 고령자가 도태될 우려가 큰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넷째, 저성장 시대의 노인부양 문제, 다섯째,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에 단절이 있는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여섯째, 늘 고질

적 문제로 지적되는 기업 조직의 연공서열식 문화와 연공급 구조, 일급제, 갈수록 심화하는 대·중·소기업 격차(원·하도급 격차)이다.

이 환경 속에서 고령자 노동시장에서는 5대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첫째는 고령자의 숙련이 새로운 기술 수요와 괴리를 보이는 기술 미스매치, 둘째는 고령자 일자리 정보가 시장에서 공유되지 못하는 마찰적 미스매치, 셋째는 노동 수요의 부족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넷째는 연금 크레바스라 하는 고용-연금 미스매치, 다섯째는 기업의 부담에 가중되어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임금-생산성 미스매치이다.

각각에 대한 해결로는 기술 미스매치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강화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찰적 미스매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상담이라는 고용서비스 제공, 노동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급 미스매치는 고용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고용-연금 미스매치는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장기에 걸쳐 법정 퇴직 연령을 상향하고, 연금제도를 개편하며,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자가 기업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금-생산성 미스매치는 임금체계 개편과 직업훈련 강화, 직업훈련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미스매치의 해결이야말로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의 목표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와 같은 미스매치가 고령자 노동시장 곳곳에 작용하고 있다. 먼저 60세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임금근로자가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2020년에는 50대 남성의 고용률이 낮아진 사실도 우려할 만 한 일이다. 정년 60세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 지도 5년이 되었으나 정년 60세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웃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년 폐지나 연장보다는 고용확보 조치로 일본 기업은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보완적 장치

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 크레바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식이 현재의 일자리에 계속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자리에 서는 소득 감소도 상대적으로 낮기에 고령자로서도 사회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기업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연금 크레바스가 2~3년이지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의 65세(1969년생 이후)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제조건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라 볼 때, 제4차 기본계획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취업 문제이다. 고령자가 건강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수요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계속 고용도 중요하지만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고령자의 실업 기간, 다시 말해서 재취업 소요 기간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강조하지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라는 세 가지 수단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고령 저학력자,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의사는 높으나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적은 편이다. 반대로 남성 저학력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사실도 보인다. 이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제공도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고령자가 재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일용직, 자영업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득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실 이들이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소득의 급격한 감소 경험을 줄여주는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다.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을 고민하기에 앞서 잠깐 일본의 고령화 대책 추이를 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듬해인 1971년에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1986년에 고령자 고용안정법으로 변경하면서 60세 이상 정년 노력 의무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 노력 의무화를 추가하였다.

〈표 5-3〉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대책

	한국	일본
1970년		고령화사회(7% 이상) 진입
1971년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8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변경 60세 이상 정년 노력 의무화
1990년		희망자 대상 정년 후 재고용 노력 의무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년부터 시행) - 60세 이상 정년 노력	
1994년		고령사회(14% 이상) 진입
1998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2000년	고령화사회(7% 이상) 진입	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
2006년		초고령사회(21% 이상) 진입 65세까지 고용확보 의무화 (대상자 한정)
2007년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12년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60세 이상 정년외무화)	희망자 전원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2016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실시 시작	
2017년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고령사회(14% 이상) 진입	
2021년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의무화
2022년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5년	초고령사회(21% 이상) 진입 예상	

이에 대하여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1991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대책으로서 제시하였다. 제도적 장치로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

하여 일찍 대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차이라 한다면, 일본은 ‘의무화’였다면, 한국은 ‘노력’으로 강제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자 다시 4년 뒤인 1998년에 60세 이상 정년의무화로 변경하였고, 2년 뒤인 2000년에 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로 진행하였다. 한국도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다시 2006년에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때 65세까지 고용확보 의무화로 대책이 수립되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뒤인 2007년에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하였으며, 5년 뒤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하였다. 이와 함께 2013년에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2016년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일본의 경우에 고령사회 진입이후에 실시되었다면, 한국은 고령사회 진입 1년 전에 실시되었다. 차이라 한다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부터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가 일본의 경우에 28년 소요되었다면, 한국은 16년인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높아진 영향이기도 하다.

일본은 2013년부터 희망자 전원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로 나아가고, 2021년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의무화까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60세 정년 정착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이라도 60세 이상 정년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이전에 대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는 누구나 최소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968년생이 2032년에 64세가 되어 연금 수급 연령에 해당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최상이다. 현 정부로서는 조속히 이 문제

해결에 매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이는 당면한 큰 제약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험을 살린다면, 65세 고용확보 이후에는 10년 이내에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부터 70세 취업 확보 조치 의무화까지 27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소요될 것이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 기간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이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 둘째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들 이전 세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먼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제2차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본다면, 이들은 이제 임금-생산성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이다. 말하자면, 생산성이 정점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들은 비록 정년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생산성 괴리로 기업으로서는 정년 이전에 이들을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예상하는 근로자는 창업이라는 경력 경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원방안은 임금체계 개편과 역량 강화 훈련을 통한 임금-생산성의 괴리 축소일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재직근로자의 역량 강화 훈련 참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에게 적극 생애 경력 설계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이들의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퇴직연금 수익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로 국민연금 수급은 가능한 세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1953~60년생은 정년 60세를 맞이하였더라도 2021년 현재 61세에 해당하므로 1960년생의 경우에 2022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1961년생은 연금 수급 연령이 62세부터이며, 2021년에 정년을 맞이하는 나이이다. 이는 1962~1964년생에게도 차례로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연금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에게는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고용연장을 유도하도록 하고, 계속 고용 장려금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주된 일 자리에서 이탈하였거나 정년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재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 지원 서비스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점진적 은퇴 경로를 설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아울러 따라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제1차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세대는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학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재취업을 최대한 지원하되 노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노후 소득을 보충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초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관련 단순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제1차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에서도 노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자는 정책 대상으로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크레바스는 심각한 문제이다. 바로 제2차 베이비붐 세대 이전인 1965년생부터 연금 수급 연령이 64세로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할 때, 4년간의 공백이 생긴다. 1965년생은 2025년에 정년을 맞이하며, 이들은 2029년에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1965년생이 정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다. 역산해볼 때, 2022년부터는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 교체 시기인 만큼 1년 뒤인 2023년부터 고용연장 논의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늦어도 2024년 이전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 법 개정으로 제2차 베이비붐 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연장은 1969년생 이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므로 늦어도 현 정부 집권 기간 내에 고용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절-1. 토론 160)

이 글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준비를 점검하는 글이다. 연구자가 속한 한국노동연구원이라는 제도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이 글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를 통해 한국 사회가 저출생·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고령자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볼 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60) 최종렬(계명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문화사회학회 회장)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

셋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고령 노동자와 기업이 결정할 것 이지만, 외부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1) 고령자의 숙련을 퇴장시키며, 이 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2) 디 지털 전환의 영향과 유사한 플랫폼 노동(platform labor)의 확산, 3) 전 통산업의 쇠퇴와 함께 고령자가 도태될 우려가 큰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4) 저성장 시대의 노인 부양 문제, 5) 은퇴 연령과 연 금 수급 연령에 단절이 있는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6) 기업 조직의 연공 서열식 문화와 연공급 구조, 7) 갈수록 심화하는 대·중소기업 격차(원하 도급 격차).

이러한 외부 환경 속에서 고령자 노동시장에서는 여러 미스매치가 발 생하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5대 미스 매치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자의 숙련이 새로운 기술 수요와 괴리를 보이는 기술 미스매치 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훈련 강화
- 2) 고령자 일자리 정보가 시장에서 공유되지 못하는 마찰적 미스매치 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인, 구직 정보 제공과 상담이라는 고용서 비스 제공
- 3) 노동 수요의 부족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 용 인센티브 제공
- 4) 연금 크레바스라 하는 고용-연금 미스매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장기에 걸쳐 법정 퇴 직 연령을 상향하고, 연금제도를 개편하며,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함 으로서 고령자가 기업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

- 5) 기업의 부담에 가중되어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임금-생산성 미스매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직업훈련 강화, 직업훈련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다.

핵심 주장은, 1)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는 누구나 최소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 65세 고용확보 이후에는 10년 이내에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노동시장 정책을 세 갈래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 1)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 임금-생산성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 즉 생산성이 정점을 넘어서는 상황. 기업으로서는 정년 이전에 이들을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하려는 유인이 발생.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재직근로자의 역량 강화 훈련 참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이 필요.
- 2)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고용연장을 도모하는 정책: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 계속 고용장려금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 그래야 제2차 베이비붐 세대에게 입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3) 제1차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노후 소득을 보충하고, 디지털 기초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관련 단순 일자리 창출도 가능.

이러한 주장은 노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발표자의 현실적인 정책이라 여겨진다. 문화사회학자인 논평자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두 가지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 인구 위기론이 번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주장의 출처는 일찍이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를 주장했던 일본이다.

위기론은 다음의 논리로 이어진다. 1) 인구구조 변화로 조세수입 감소: 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공급 부족, 2) 연금, 의료, 개호(介護)보험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증가 → 국가재정에 부담, 3) 세대 갈등 유발: 현역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을 더욱 가중, '실버 민주주의'(silver democracy)가 강화되면서 청년세대와 갈등.

이러한 위기론은 성장전략과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해결책이 모색된다. 핵심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조정이다. 1) 노동시장 구조조정: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고 고령자가 은퇴시기를 늦추어 노동시장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경제적 동기를 강화, 2) 사회복지정책 조정: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서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감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결국 사회복지 대상자를 대량생산한다.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로 진입하지 못한 청

년, 여성, 고령자는 비정규직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종사하다가 은퇴 후에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다. 한국의 위기론도 이러한 일본의 모델을 따라서 논의되는 것 같다. 첫째 질문은 이렇다. 지금까지 일본의 모델을 따라 한국사회의 인구 위기론을 진단하고 처방해온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사실 일본의 모델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비용을 위한 조세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모델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일본과 다른 성공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가?

둘째, 노동시장의 외부 환경으로 문화 환경을 고려해주면 좋을 듯하다. 세대를 아무리 분석적으로 나누어 대안을 모색한다 해도 성장주의 또는 발전주의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고령자에게 노동력 공급을 확대해서 사회복지지출을 위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고, 정년연장과 사회복지제도 개혁 등을 통해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막고자 한다. 성장주의 모델에 따르면 결국 성장전략과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문화 환경을 고려해서 모델을 바꾸면 다른 질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산)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 것 자체를 사회 문제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까지 인구를 성장시킨 것은 성별 노동 분업에 기초한 가부장적 질서(전일제 정규직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였다. 이 모델이 현실에 맞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도, 이 모델에 따라 살아가느라 남성은 과잉 생산 노동, 여성은 과잉 돌봄 노동, 자녀는 과잉 학습 노동에 시달렸다. 온 사회가 장시간의 과잉 노동하느라 죽어 나갔다. 삶의 목적이 노동 그 자체를 위한 노동이 되어버린 노

동 중독 사회, 이런 사회가 이제 성장의 한계에 처했다. 이것이 과연 사회 문제인가? 이 사회문제를 풀자고 또 다른 성장주의를 모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문화 환경의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문화의 핵심은 의미의 문제다. 작게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의미,’ 크게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의 변화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는 반드시 공적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문화에 대한 근본 성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 국가주의, 성장주의, 가족주의 등이 그 예다. 문화사회학자가 볼 때, 지금은 이 모든 공적 상징체계에 대한 성찰이 극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사회적 삶에 의미를 부여해왔던 문화에 대해 더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표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소비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문화가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아이가 더는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는 점이다. 새로 오는 자를 거부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성찰성은 극대화되는데, 국가 제도의 성찰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큰 문제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 제도가 문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1절-2. 토론 2: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한 방식: 고령의 역할/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⁶¹⁾

발표자는 인구구조 변화가 어떠한 상황을 초래할지를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다. 논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토론자로 작은 이견이나마 말씀드려 보고자 한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논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준비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전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위기 진단의 계산식 자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발표자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노인 빈곤율에 주목하면서 위기의 성격을 진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비생산인구는 늘어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공급(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비중 증가는 장기경제성장을 하락과 함께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수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 경제성장률 하락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노년 부양 부담의 증가이다.”(발표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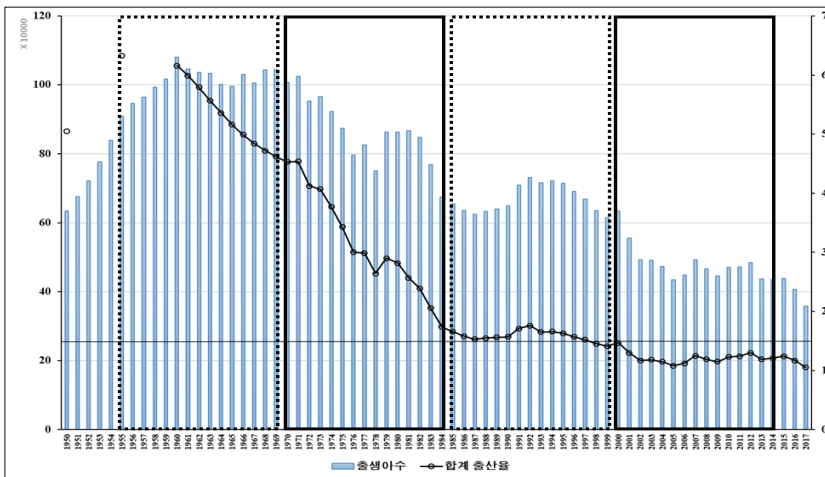
가구 단위로 생각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불안정해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로 치면 만 59~67세이다.⁶²⁾ [그림 5-1]에서 확

61) 이상직(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

62)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64세 인구가 ‘주된 일자리’(50세 이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연령은 평균 49.3세이다.

인할 수 있듯이 상당한 규모이다. 둘째, 이들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가 노동시장에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 30~43세입니다. 이들도 상당한 규모이다. 이러한 진단과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

[그림 5-14]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950~201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가. 진단의 전제는 무엇인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와 같은 지표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특정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문화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어진 지표로 위기를 진단하기보다는 현실을 새롭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자체에 대한 고민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⁶³⁾ 좀 더 생각해보면 이 지표는 결국 근대의 발전주의 논리

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문제의 원인이 발전주의적 지향 자체에 있다고 본다면 발전주의의 논리로 발전주의가 낳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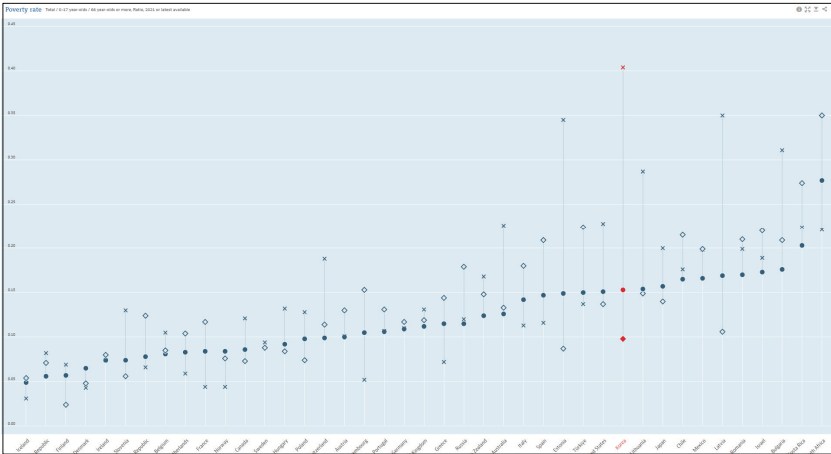
가령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5~20세 인구가 생산인구인가? 65~70세 인구가 비생산 인구인가?(약 절반이 '고용'되어 있다) 65세라는 경계는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65세 이상 인구는 '부담'스러운 인구인가? 30년 전의 65~70세 인구와 지금의 65~70세 인구는 같은 인구인가? 한국 사회는 이들에게 얼마나 주고 있나?

한국의 빈곤 가구가 약 300만 가구라고 한다(약 2,000만 가구의 15%, 평균 가구원 수 2.5명, 빈곤 가구의 가구원은?). 빈곤 가구의 가구원을 1명이라고 가정하면 300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가 약 230만 명이고(총인구의 약 4.6%), 생계급여자는 약 150만 명(총인구의 약 2.9%)이다. 복지제도 밖에 있는 빈곤 인구(차상위계층)가 약 150~200만 명이다.

63) 한 예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들 수 있을 것 같다(계봉오 2020). “인구 고령화 지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장래연령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인구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진행되는 현상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장래 연령에 기초한 대안적 지표를 인구 고령화 지표로 추정하고 이를 전통적인 인구 고령화 측정치와 비교한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전통적인 인구고령화 측정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천천히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인구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건강수준 향상이 갖는 긍정적 함의를 포괄해야 함을 시사한다.”(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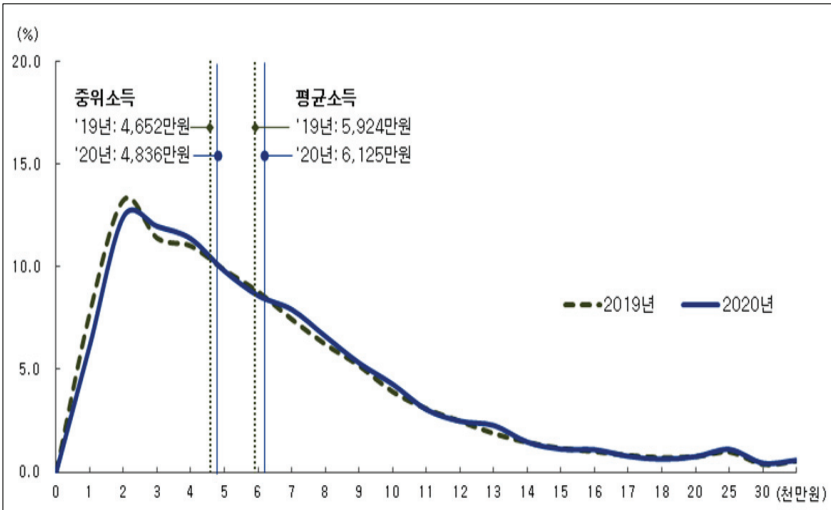
16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그림 5-15] 빈곤율(OECD 회원국,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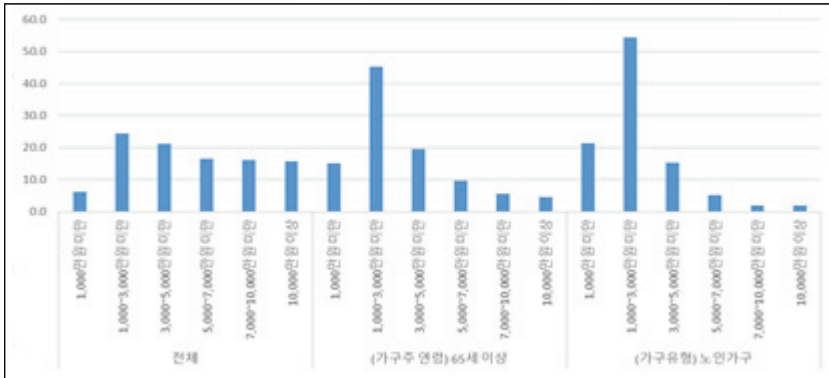
* 빈곤율(소득이 가구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 한국 0.153(66세 이상 0.404)

[그림 5-16]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자료: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그림 5-17]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분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표 5-4〉 급여별 수급자 현황(2022.3)

(단위: 명)

총 (중복제외)	생계 (중위소득의 30%)	의료 (중위소득의 40%)	주거 (중위소득의 46%)	교육 (중위소득의 50%)
2,377,233 (4.6%)	1,516,375 (2.94%)	1,433,756 (2.78%)	2,189,781 (4.24%)	283,245 (0.01%)

*주민등록인구현황(2022.3) 기준 총인구수: 51,610,695명

〈표 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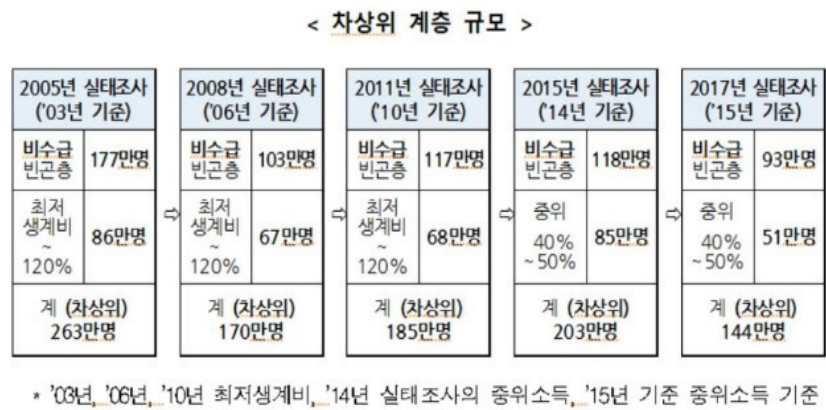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교육급여 (중위 50%)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주거급여 (중위 46%)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의료급여 (중위 40%)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생계급여 (중위 30%)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기준 중위소득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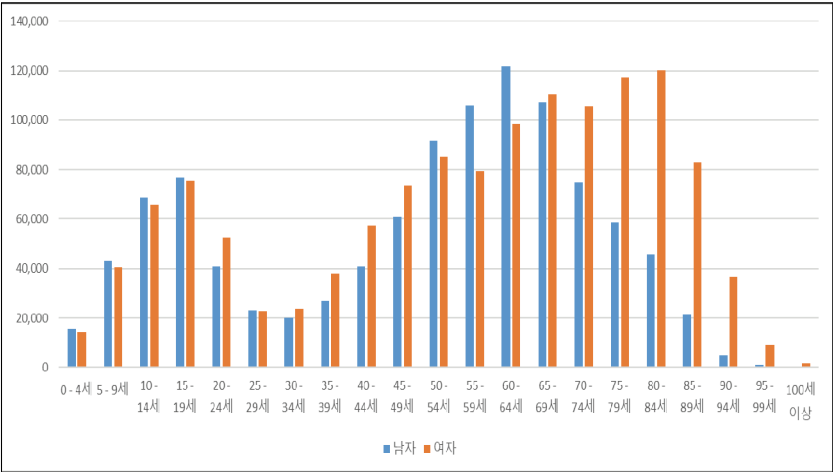
*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17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그림 5-18] 차상위계층 규모



[그림 5-1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2021년, 성별/연령대별)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도 최대 5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58만원에 제한다. 노년층이 많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가난한 노인이거나 가난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으로 살아간다. 한 전형성이 『가난의 문법』에 나오는 ‘폐지 줍는 노인’인 것 같다.

나. 제시된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는가?(또는 실현 가능한가?)

발표자는 구체적인 진단으로 고령자 노동시장의 5대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였다. ① 고령자 숙련과 기술 수요의 괴리(-직업훈련 강화), ② 고령자 일자리 정보의 미유통(-정보제공), ③ 노동 수요 부족(-고용 인센티브 제공), ④ 고용-연금 미스매치(퇴직 연령 상향), ⑤ 임금-생산성 괴리(-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①, ③, ⑤는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④는 노동-복지 제도의 연계 문제로 보인다.

1차적으로 생각하면 모두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원론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관점의 한계는 없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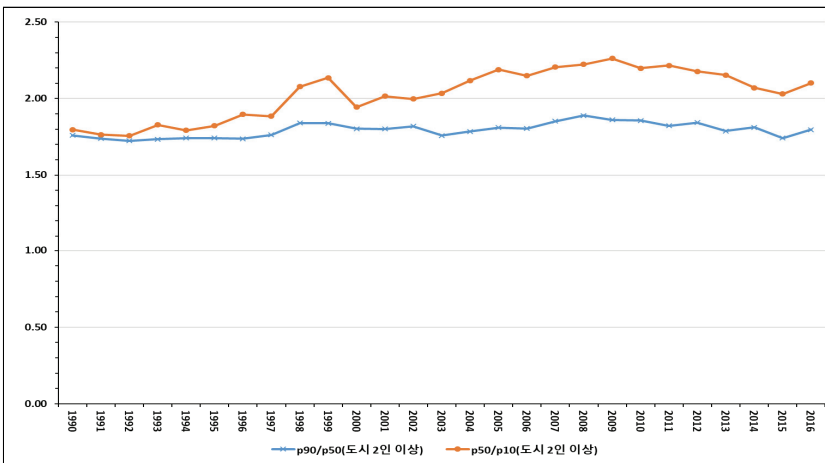
피고용자는 더 생산성있는 존재로 훈련시키고, 고용자에게는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은 (특히나 디지털 전환, 플랫폼 노동, 녹색 전환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일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피고용자와 고용주)의 변화로 풀려는 것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 진단이 맞고, 해법도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부정적 효과는 없을 까? 불평등적 함의는 무엇일까?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그러한 접근이 어떠한 불평등적 효과를 낳을까 하는 것이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도모(임금체계 개편과 역량 강화 훈련)하고,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도모(생애 경력 설계 참여)하고, 이들 이전 출생 세대는 점진적으로 퇴장할 수 있도록 지원(재취업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디지털 기초 교육)하는 접근이 흑여 계층 차별적인 효과를 낳지는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지 궁금하다. 한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징이 중간층과 하층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림 5-20] 소득 분위별 비율의 변화(1990~2016년)



주: 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라. 일본 사례의 함의

일본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일본은 계속 탐구해야 할 비교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차적인 제도 비교의 한계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일본의 1998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조치와 한국의 2013년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의미는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규범력이 강하다고 한다(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기업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짐). 한국은 규범력이 약한 가운데, 차별적으로 효과가 발생(고학력, 남성, 공공, 정규직, 대기업, 유노조사업장 중심으로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한다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60세 이상 정년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 65세까지 고용이 확보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 65세 고용확보 이후에는 10년 이내에 70세까지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p. 14)라는 제언은 다소 원론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은 어떤 것일까, 묻게 된다.

빠른 법제 도입과 약한 현실 규정력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을 것 같다(일본은 반대로 현실에서 먼저 관례화되고 법제가 뒤따름). 향후에는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지 그 변화 과정과 맥락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일본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노동시장 정책을 복지제도와 연계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노동, 임금노동, 노동소득 등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 볼 여지는 없을까 궁금하다. 인간을 생산성/생산력으로 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서 노동관계를 조직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제2절 저출생·초고령 사회의 문제들과 해결방안⁶⁴⁾

1. 서언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생산연령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교육·국방 인력 부족,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며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말한 것처럼,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를 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를 인식하고 전 정부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라며 “인구 문제는 비상상태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해도 10년,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싶은 정도”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모든 경제 사회 문제가 (인구문제에서) 커지고 완화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관되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 저출생 초고령 사회의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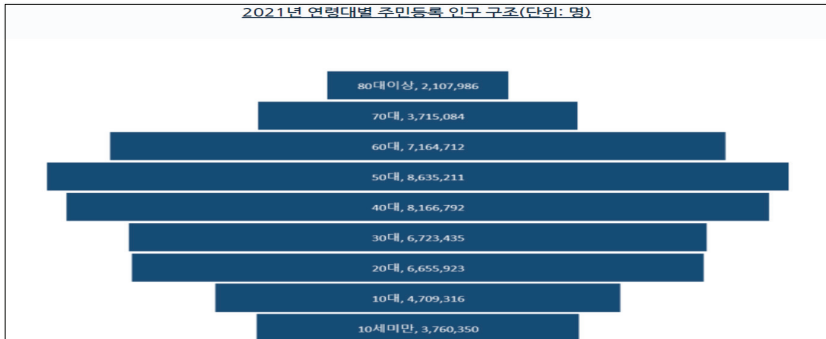
조 장관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의 문제로, 첫째, 생산연령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를 지적했다. [그림 5-21]을 보면, 앞으로 일자리에서

64) 이양호(연세대 신과대학 명예교수)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발표문 내용임

퇴임하는 사람들보다 일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적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그림 5-21] 2021년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구조

(단위: 명)



현재 0~29세는 약 1,500만 명, 30~59세는 약 2,350만 명, 60세 이상은 약 1,300만 명이다. 현재는 핵심노동인구인 30~59세 인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지금은 약 2,350만 명이 약 1,300만 명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는 약 1,500만 명이 약 2,350만 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들은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의료해택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언론 보도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내년 취업자 수를 1만 8천 명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는 2023년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순유입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10만 6천 명에서 내년 15만 1천 명으로 증가한다. 반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인 핵심노동인구 비중 급감에 따른 취업자 감소 폭은 올해 8만 6천 명에서 내년 16만 9천 명으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악화한다).

둘째로, 조 장관은 교육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월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 추계에 근거해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 47만 4,996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2년 입학 가능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 명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2/3 가까이 폐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폐교되는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 등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실직할 것이며, 대학이 있던 도시들은 경제가 크게 위축할 것이다.

셋째로, 조 장관은 국방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2021년도 출생아 260,562명 중 절반인 130,281명 정도가 남자 어린이일 것이고 그들이 성장해서 모두 입대해서 1년 6개월을 근무한다 해도 사병 수는 20만 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현재 사병 수인 329,000명에 비해 크게 적은 숫자이며, 북한의 군인수인 128만 명에 비해도 매우 적다.

넷째로, 조 장관은 지방 소멸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출산가능 인구분포를 볼 때 앞으로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1년도 출생아 수인 260,562명을 유지하고 평균수명이 9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23,450,580명이 될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 인구인 26,037,840명보다 250여만 명 정도가 더 적은 숫자이다. 지방 소멸은 명약관화하다(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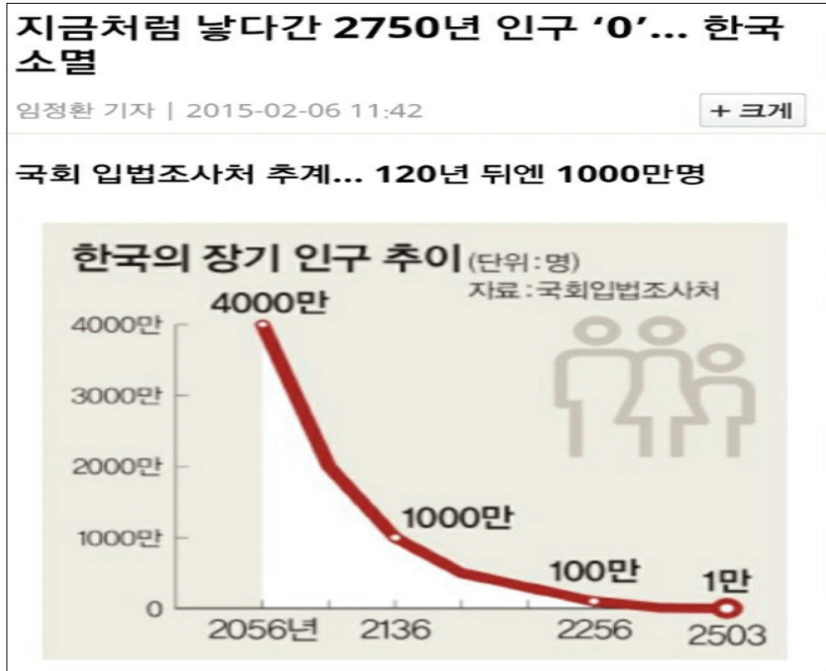
다섯째로, 조 장관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령사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적은데 반해 노인들이 많은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노인들을 부양할 사람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3. 저출생의 원인

몇 년 전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 5-22]에서 볼 수 있듯이, 2136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되고, 2256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된다(이것은 합계출산율이 1.10명이 넘을 때의 추계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콜먼은 23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에는 260,562명의 어린이가 태어났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금년 8월까지 출생아 수가 10,563명이 감소했다. 금년에는 출생아 수가 250,000명 이하가 될 것이고 합계출산율은 0.80명 이하가 될 것이다(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6년 0.69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6명대를 기록해 0.7명대로 진입한 후 2023년 0.74명, 2024년 0.71명, 2025년 0.70명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26년에는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봤다).

[그림 5-22] 국회 입법조사처 인구추계



앞으로 계속 합계출산율이 0.80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세대 후에는 출생아 수가 100,000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50,000명 중 여자 어린이가 125,000명 정도 될 것이고, 여기에 합계출산율 0.80명을 곱하면 100,000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세대 후, 즉 100년쯤 후에는 출생아 수가 16,000명이 되고, 6세대 후, 즉 200년쯤 후에는 약 1,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인 대체출산율 2.1명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60만 명의 어린이가 출생해야 한다. 60만 명×평균 수명 83.5세=5,010만 명). 미래의 출생아 수를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1세대 $250,000\text{명} \div 2 \times 0.80 = 100,000\text{명}$

2세대 $100,000\text{명} \div 2 \times 0.80 = 40,000\text{명}$

3세대 $40,000\text{명} \div 2 \times 0.80 = 16,000\text{명}$

4세대 $16,000\text{명} \div 2 \times 0.80 = 6,400\text{명}$

5세대 $6,400\text{명} \div 2 \times 0.80 = 2,560\text{명}$

6세대 $2,560\text{명} \div 2 \times 0.80 = 1,024\text{명}$

앞으로도 합계출산율이 계속 0.80명이 되고 평균수명이 90세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30년 후에는 약 4,450만 명이 될 것이고, 60년 후에는 약 2,340만 명이 될 것이고, 90년 후에는 약 936만 명이 될 것이다. 앞으로 30년간은 주로 0-29세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것인데 약 600만 명을 낳을 것이다($1,500\text{만 명} \div 2 \times 0.80 = 600\text{만 명}$). 그 다음 30년간은 약 240만 명이 태어날 것이다($600\text{만 명} \div 2 \times 0.80\text{명} = 240\text{만 명}$). 그다음 30년간은 약 96만 명이 태어날 것이다($240\text{만 명} \div 2 \times 0.80\text{명} = 96\text{만 명}$). 예상되는 장래인구를 표로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현재인구 약 $1,500\text{만 명} + 2,350\text{만 명} + 1,300\text{만 명} = 5,150\text{만 명}$

30년후 약 $600\text{만 명} + 1,500\text{만 명} + 2,350\text{만 명} = 4,450\text{만 명}$

60년후 약 $240\text{만 명} + 600\text{만 명} + 1,500\text{만 명} = 2,340\text{만 명}$

90년후 약 $96\text{만 명} + 240\text{만 명} + 600\text{만 명} = 936\text{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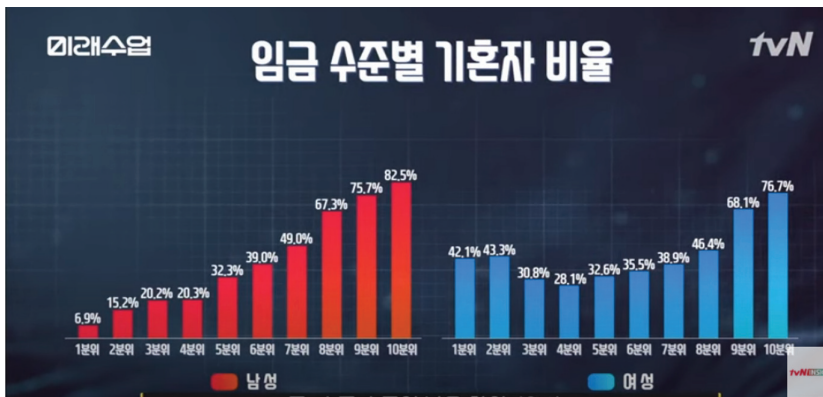
120년후 약 $38.4\text{만 명} + 96\text{만 명} + 240\text{만 명} = 374\text{만 } 4,000\text{명}$

150년후 약 $15.36\text{만 명} + 38.4\text{만 명} + 96\text{만 명} = 149\text{만 } 7,600\text{명}$

180년후 약 $6.144\text{만 명} + 15.36\text{만 명} + 38.4\text{만 명} = 59\text{만 } 9,040\text{명}$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5-23]을 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 상위 10%는 82.5%가 결혼을 하는 반면 임금 하위 10%는 6.9%만 결혼을 한다. 또한 임금 상위 50%는 63%가 결혼을 하는 반면 임금 하위 50%는 19%만 결혼을 한다(이 그림을 보면, 여성들의 경우 임금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들에 비해 작다).

[그림 5-23] 임금 수준별 기혼자 비율



한때 3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하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021년도 저출산 대응예산은 43조 원이었다. 그러나 출생아수는 2020년도 272,337명에서 2021년도 260,562명으로 감소했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시점에 왔다. 저출산 대응예산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방법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는 사람들을 크게 도와주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해주어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출산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부모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부모수당을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4. 저출생 문제의 해결로서 안정소득제의 도입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정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약 217조 원(〈표 5-6〉)이다.

〈표 5-6〉 보건복지 분야 예산(2022년)

[표 1-1]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구 분	(단위 : 억원, %)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a)
합 계	1,997,427	2,176,658	9.0
기초생활보장	153,243	167,638	9.4
취약계층지원	45,132	47,884	6.1
사회복지일반	13,710	9,473	△30.9
아동·보육	85,582	91,827	7.3
여성·가족·청소년	12,001	14,289	19.1
노인	188,723	204,592	8.4
주택	335,184	358,263	6.9
공적연금	600,408	629,823	4.9
보훈	58,866	59,308	0.8
건강보험	107,688	119,242	10.7
보건의료	34,232	101,264	195.8
식품의약품안전	6,086	6,619	8.8
고용	258,402	259,383	0.4
노동	92,595	100,736	8.8
고용노동일반	5,574	6,045	8.5

이 가운데 공적연금, 보훈, 보건, 노동 등에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고 나

면 115조 원 정도가 된다. 이 돈으로 <표 5-7>처럼,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 매월 1인당 70만 원의 안정소득을 지급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 소득의 50%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려면 매년 약 440조 원이 필요하지만, <표 5-7>과 같이 지급한다면 1/4 정도가 필요하다. 증세 없는 안정소득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매월 280만 원을 지급받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면 180만 원을 지급받고, 월 소득이 560만 원 이상이면 지급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안정소득제와 기존의 복지제도를 병행하게 하되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급한다. 과도기가 지나면 안정소득으로 일원화하되 중증장애인의 경우처럼, 필요한 경우, 추가지급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안정소득도 매년 인상한다. 그리고 현재의 지역 건강보험의 경우처럼 6개월마다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여 안정소득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표 5-7> 안정소득

(단위: 만원)

월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안정 소득	실제 소득	안정 소득	실제 소득	안정 소득	실제 소득	안정 소득	실제 소득	안정 소득	실제 소득	안정 소득	실제 소득
0	70	70	140	140	210	210	280	280	350	350	420	420
100	20	120	90	190	160	260	230	330	300	400	370	470
200	0	200	40	240	110	310	180	380	250	450	320	520
300	0	300	0	300	60	360	130	430	200	500	270	570
400	0	400	0	400	10	410	80	480	150	550	220	620
500	0	500	0	500	0	500	30	530	100	600	170	670
600	0	600	0	600	0	600	0	600	50	650	120	720
700	0	700	0	700	0	700	0	700	0	700	70	77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20	82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현재의 복지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4인 가구에게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현재에도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경우 생

계급여를 매월 1,536,324원(2023년도에는 1,620,289원임)을 지급받고, 주거급여를 매월 506,000원을 지급받고, 그 외에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매월 583,444원(2023년도에는 623,368원임)을 지급받고, 주거급여를 매월 327,000원을 지급받고, 그 외에도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소년 소년 가장일 경우 이에 더해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안정소득안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제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서울: 자유기업원, 2022), 242-243쪽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제시한 예에서 보듯 부의 소득세제는 소득의 변동을 고려하지만 그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다. 그 주요 목적은 모든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간단명료한 수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거대한 관료기구를 피하고, 상당한 정도의 개인 책임을 유지하며, 개인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인을 계속 살려두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1978년에 65세 이상을 제외한 4인 가족에 대한 기초공제액은 7,200달러였다. 부의 소득세제가 존재하여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에 대한 보조금 교부율이 50%이었다고 하자. 이 경우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은 3,6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을 잡고 소득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줄지만 가족 전체의 총소득, 즉 보조금 더하기 벌어들인 수입은 증가한다. 만약 벌어들인 수입이 1,000달러면 보조금은 3,100달러로 줄지만 총소득은 4,100달러로 올라갔을 것이다.... 가족이 벌어들인 수입이 7,200달러가 되면 보조금은 영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18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표 5-8〉 서울시의 안심소득

(단위: 만원)

월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안심 소득	실제 소득	안심 소득	실제 소득	안심 소득	실제 소득	안심 소득	실제 소득	안심 소득	실제 소득	안심 소득	실제 소득
0	82	82	138	138	178	178	217	217	256	256	293	293
100	32	132	88	188	128	228	167	267	206	306	243	343
200	0	200	38	238	78	278	117	317	156	356	193	393
300	0	300	0	300	28	328	67	367	106	406	143	443
400	0	400	0	400	0	410	17	417	56	456	93	493
500	0	500	0	500	0	500	0	500	6	506	43	543
600	0	600	0	600	0	600	0	600	0	600	0	600
700	0	700	0	700	0	700	0	700	0	700	0	70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표 5-9〉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

(단위: 만원)

월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시민평 생소득	실제 소득	시민평 생소득	실제 소득	시민평 생소득	실제 소득	시민평 생소득	실제 소득	시민평 생소득	실제 소득	시민평 생소득	실제 소득
0	97	97	163	163	210	210	256	256	288	288	331	331
100	47	147	113	213	160	260	206	306	238	338	281	381
200	0	200	63	263	110	310	156	356	188	388	231	431
300	0	300	13	313	60	360	106	406	138	438	181	481
400	0	400	0	400	10	410	56	456	88	488	131	531
500	0	500	0	500	0	500	6	506	38	538	81	581
600	0	600	0	600	0	600	0	600	0	600	31	631
700	0	700	0	700	0	700	0	700	0	700	0	70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0	80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0	900

서울시의 안심소득안(〈표 5-8〉)과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안(〈표 5-9〉)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안은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의 가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가 다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많이 든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안과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안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안정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제나 시민평생소득제의 경우보다는 적을 것이다(안심소득제나 시민평생소득제에서는 가구인들을 전체 분산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안정소득제에서는 소득이 있는 가구인과 소득이 없는 가구인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안전소득은 소득이 있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5. 안정소득제의 기대효과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면 매월 28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며, 가구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80만 원을 지급받아 38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명의 자녀를 낳으면 매월 42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며, 가구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320만 원을 지급받아 52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즐거운 삶을 위해 일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안정소득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헬 조선, 즉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말했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지상천국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헬 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드는 것은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적어 먹고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아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정소득을 지급해준다면 지방에서도 먹고살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으면 지방의 경제가 살아

날 것이다. 지방의 경제가 살아난다면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것이다.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달 주당 36시간⁶⁵⁾ 미만 취업자는 전년 대비 345만 9,000명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79만 4,000명 급감했다. 일은 하지만 임금이 많지 않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안정소득을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프롤레타리아 시대에서 프레카리아트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는 라틴어 프롤레타리우스(Proletarius)에서 유래했고, 프롤레타리우스(Proletarius)는 프롤레스(Proles)에서 유래했다. 프롤레스(Proles)는 “자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라틴어 사전에서는 프롤레타리우스(Proletarius)를 “단지 자녀를 낳음으로써 국가에 봉사하는 최하층의 시민”(a citizen of the lowest class who served the state only by being the father of children)이라고 설명한다. 사실상 프롤레타리우스들은 자녀를 낳아 국방인력과 노동인력을 공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Precario)와 프랑스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합성어이다. 프레카리오(Precario)는 ‘불안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 프레카리우스(Precarius)에서 유래한 말이다. 프레카리우스(Precarius)는 프레코르(Precor)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프레코르(Precor)는 ‘구걸한다’, ‘요청한다’, ‘기도한다’는 뜻이다. 구걸하거나 요청해서 얻는 것이므로 불확실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되려면 프레카리아트 시대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프롤

65) 주 36시간은 하루 7시간 남짓(주 5일제 기준)으로 보통 전일제와 시간제 근무를 가르는 기준 역할을 한다. 근무 시간이 짧아 급여가 작고 신분도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레타리아 시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국가가 안정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언론 보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발표⁶⁶⁾에 의하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이 69만 명이다. 연구진은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칭 ‘국민기본생활보장지원제도’를 제시했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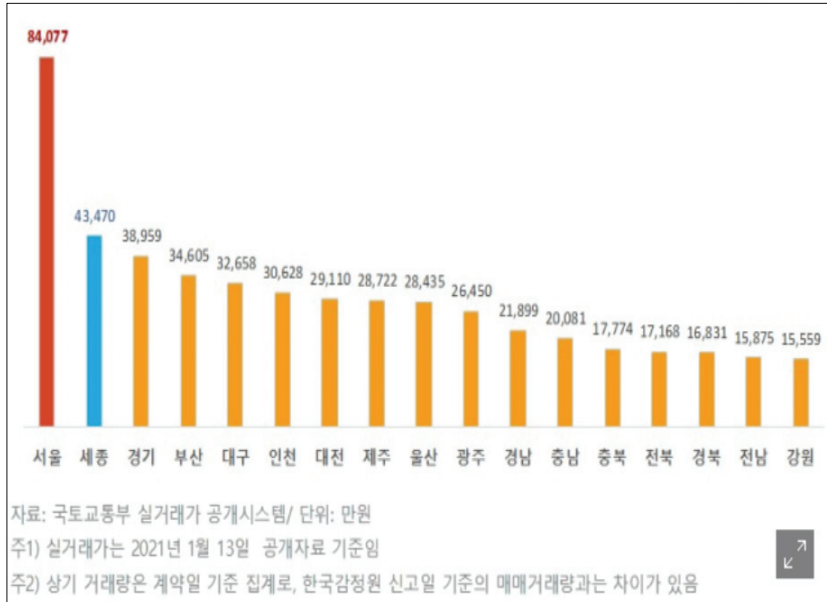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복지 서비스 종류는 2022년 11월 12일 현재 모두 4,819건이다. 중앙부처가 364건, 지자체가 4,095건, 민간이 360건이다. 복지제도를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안정소득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론 보도를 보면,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이 74만 정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옳은 말씀이다.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하여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다. 안정소득도 국가가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대상 국민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이나 국민연금 소액 수령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6) 김태완·이주미·김기태·정세정·오성욱·송치호,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현황과 복지-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18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그림 5-24] 아파트 평균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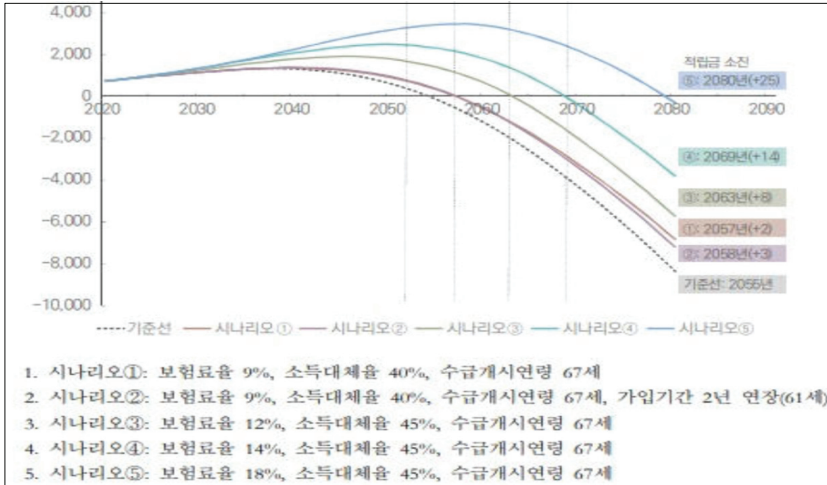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자가 주택 빈곤층(house poor)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그림 5-24]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의 5배 정도가 된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모여들지 않고 전국으로 분산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자가 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빈집은 151만 1,306가구이다. 인구를 전국에 분산시킨다면 이 빈집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대출비율이 102.2%로 매우 높다. 홍콩 94.5%, 태국 88.7%, 영국 83.2%, 미국 77.7%, 말레이시아 69.4%, 일본 64%, 중국 63.3%, 유로 지역 59.1%, 싱가포르 56.2% 등이다. 가계대출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을 위한 대출일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과 대도시

에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가계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면 인구밀집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5,699명으로 OECD 국가의 제1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2,050명)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2,100명)의 8배, 이탈리아 로마(2,950명)의 5배, 프랑스 파리(3,550명)와 독일 베를린(3,750명)의 4배,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4,750명)와 영국 런던(5,100명)의 3배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부산(1㎢당 4,320명)과 비교해도 서울엔 4배 더 많은 수준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켰더라면 헬러원 참사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연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5]를 보면, 2056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약 1,500만 명이 납부하는 연금 불입액으로 약 2,350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적은 액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는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소득이 없는 노인 부부는 매월 14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고, 연금이나 기타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들은 매월 90만 원을 지급받아 가구의 전체소득이 190만 원이 될 것이므로 노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그림 5-25] 국민연금 고갈 시점과 개혁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11월 11일 열리는 한국연금학회 세미나에 앞서 11월 10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도 “기초연금이 없을 때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이 45.6%(2020년 기준)인데, 기초연금 대상은 노인의 70%로 광범위해 대상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며 지급대상을 70%에서 50%로 줄이고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 대신 월 5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경우 빈곤율 개선효과는 12.2%p, 빈곤갭(차이) 개선 효과는 31.2%p 증가한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50% 중에도 소득이 더 많은 사람과 더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정소득제처럼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되어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면 건강보험료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2023년 1조 4,000억 원, 2024년 2조 6,000억 원, 2025년 2조 9,000억 원, 2026년 5조 원, 2027년 6조 8,000억 원, 2028년 8조 9,000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다. 수지 적자가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 2,400억 원(2021년 말 기준)에서 2028년 -6조 4,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사람은 줄고 보험금을 수령해 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는 데 그 한 원인이 있다. 출생아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고용보험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고용보험기금은 2016년 8,300억 원, 2017년 1조 2,300억 원이었으나 2018년 -2조 9,200억 원, 2019년 -8조 1,300억 원, 2020년 -21조 8,600억 원이었다. 당분간은 실업수당과 안정소득을 병행하여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겠지만, 과도기가 지나서 안정소득으로 일원화한다면 고용보험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국가부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D1)이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28년 뒤인 2060년에는 정부의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3배 안팎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필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가 되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쓰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되어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면 세금 징수액이 증가해서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이다. 물론 지금부터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면 유아 및 아동 관련 분야에서 경제 성장이 있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기업하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해고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어 기업들은 고용과 해고를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경영계에서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다. 다인 다가구의 경우 임금을 삭감할 경우 국가가 삭감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임금 인상요구도 줄어들 것이다. 임금을 인상하면 인상금액의 절반을 국가가 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하면 다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노동하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아무도 갑질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갑질하는 직장은 사라질 것이다(임금 수준은 높으나 근무환경이 나쁜 직장보다는 임금수준은 낮으나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쉬워질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다인 가구의 경우 감액되는 임금의 절반은 국가 지급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하면, 부자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소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는 대부분 안정소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다인 가구 근로자는 안정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정규직의 임금은 월 348만 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188만 1,000원이다. 현재는 159만 9,000원의 차이가 나지만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그 차이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남북한의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표 5-10〉), 2021년도 남한의 1인당 GNI는 4,048만 2천 원이고 북한의 1인당 GNI는 142만 3천 원이다.

남한의 1인당 GNI는 북한의 1인당 GNI의 28.4배이다. 만약 남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한다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음속의 통일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북한 주민들의 바람을 거슬리지 못할 것이다. 1인당 GNI가 142만 원인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가 아니면 매년 1인당 840만 원을 지급해주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들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의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이고, 달러 대비 환율은 공식적으로 100원이다(실제로는 4,000원 정도라고 한다). 달러로 환산하면 월 임금은 30달러이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안정소득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한다면 약 500 달러이고, 그것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의 16배가 넘는 금액이 될 것이다.

19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표 5-10〉 남북한 경제지표 비교 (2021년)

No	구분	남/북한	단위	'21	'20	'19	'18	'17	'16
1	인구	북한(A)	천명	25,484.1	25,367.9	25,250.4	25,132.3	25,014.2	24,896.6
		한국(B)	천명	51,744.9	51,780.6	51,709.1	51,606.6	51,361.9	51,217.8
		(B/A)	배	2.0	2.0	2.0	2.1	2.1	2.1
2	명목 GNI	북한(A)	조원	36.3	35.0	35.6	35.9	36.6	36.4
		한국(B)	조원	2,094.7	1,957.7	1,941.1	1,905.8	1,843.2	1,747.1
		(B/A)	배	57.8	56.0	54.6	53.1	50.3	48.0
3	1인당 GNI	북한(A)	만원	142.3	137.9	140.8	142.8	146.4	146.1
		한국(B)	만원	4,048.2	3,776.6	3,753.9	3,693.0	3,588.6	3,411.2
		(B/A)	배	28.4	27.4	26.7	25.9	24.5	23.3
4	경제 성장률	북한(A)	%	-0.1	-4.5	0.4	-4.1	-3.5	3.9
		한국(B)	%	4.1	-0.7	2.2	2.9	3.2	2.9

그리고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코로나 19 등등과 같은 특별한 재난이 있어도 특별예산을 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6. 안정소득제에 대한 우려

반면에 안정소득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사람들이 놀고먹으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더 좋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놀고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놀고먹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경제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식당이 많은데, 식당 절반이 문을 닫는다면 나머지 절반이 두 배의 수입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GNI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누진적이기 때문에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수납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비 수급대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언론보도를 보면, 2021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자 943,720명 중 40.3%인 380,584명이 탈락했다). 안정소득제에서는 일을 한다고 해서 탈락되는 일이 없으며, 일을 하면 안정소득은 감소하지만 가구의 전체소득은 증가한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3D 업종은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3D 업종의 임금을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3D 업종의 임금을 인상한다면 3D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7. 결론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쇠퇴와 나아가서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미래가 전개될 것이다. 안정소득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멸망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애국의 길이었다. 지금은 인구가 없어서 쇠퇴와 소멸의 길로 갈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애국의 길이다. 국권을 상실했다면 국권을 되찾으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인구가 없어서 소멸된다면 회복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많은 면에서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정소득제가 도입되어 성공한다면, 많은 나

라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더 좋게 변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다.

제2절-1. 토론 167)

가. 저출생 원인에 대하여

발표자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적한다. 남성 저소득자의 혼인율이 고소득자의 1/3이 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소득을 제안한다.

소득보장이 결혼과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나, 얼마나 직접적이며 효과성이 높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다.

개인 수준에서 인구학적 요인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결혼 연령과 소득수준이 중요하다. 거시 수준에서 경제적 요인은 국민소득의 증가, 경제성장 여부, 실업률 등이다. 사회정책 차원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도와 출산력을 제고하는 영향 변수로 소득상실에 대해 소득보장을 해주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와 아이 보살핌 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고 해당 비용을 사회화시켜주는 ‘공보육,’ 기타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지출 증가를 상쇄시켜주는 ‘아동(가족)수당’ 제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정책이다.

소득 불평등 완화는 수많은 대책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115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면, 다른 저출산 정책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구축

67)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될까 우려된다.

나. 기존 정책이 무용지물이기에, 안정소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가?

발표자는 2021년 저출산 예산으로 43조 원이 투입되었는데,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43조 원이 투입되지 못했다. 향후 원금을 회수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관련 임대·용자 사업이 24조935억 원으로 56.1%를 차지한다.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고용지원이나 취업 훈련사업도 3조9,183억 원, 게임산업 육성(78억 원), 만화산업 육성(40억),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126억)이나 인공지능 융합형 기술인력 역량 강화(50억) 같은 저출산 대책과 거리가 먼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43조 원 중 출산·난임 지원과 양육과 보육 및 가족정책 지출 등 저출산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13조9,614원으로 32.5%만을 차지한다.

국제비교를 해보아도, 한국의 가족 정책 지출은 매우 낮다. 한국은 2018년 현재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이 GDP대비 1.2%로,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 3.39%, 프랑스 2.85%, 영국 3.23% 등에 비해 1/3 정도 수준이며, OECD평균 2.12%에 비해서도 1/2 수준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다. 안정소득 설계에 대한 질문

- NIT 방식에서는 소득 분기점을 설정해야 하는데, 중위소득의 % 수 준인가?
- 자산 Test는 하는가?
- 가구 단위인가 개인 단위인가?
- 현 복지제도에서 통폐합될 것은 무엇인가?

라. 안정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바탕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임금인상 욕구 완화나 해고의 용이성,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효과 등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특히, 안정소득이 연령 제한 없이 일정 시장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수혜자는 노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는 만큼 안정소득 수혜자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을 제고 효과가 투입되는 115조 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2. 토론 268)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원리상 차이가 없는 제도가

68) 은민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

부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이다. 기본소득이 선불로 기본소득을 받고 연말에 소득세를 내는 반면, 부의 소득세는 연말에 소득성과를 보고 그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소득보다 많으면 세금을 내고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적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곧 기준소득보다 많은 소득자에게서 받은 세금으로 기준소득 이하 소득자에게 지불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환급형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실행된다면, 정(+)의 소득세 납세자와 부(-)의 소득세 수혜자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처럼 부의 소득세 기본 아이디어도 기본소득만큼이나 매우 쉽고 단순하다.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 모두 수혜 결과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지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과세를 하느냐, 연말 정산 후에 소득세를 받거나 내는 것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는 현실에 적용될 때는 그 차이가 크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받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막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요구와 부자에게도 똑같이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부의 소득세는 재원과 부자 지급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기존 사회보장제도들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 형편에 따라 그 대상과 급여 수준의 조절을 통해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아마도 이러한 부의 소득세의 자의성과 탄력성 때문에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부터 동시에 관심과 지지를 받는지도 모르겠다.

부의 소득세는 일을 해서 시장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에 비례해서 일부가 감액된 부의 소득세를 급여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오히려 머무르려고

하는 기존 공공부조의 ‘복지의 덫’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복잡하고 고비용이 드는 복지 행정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세금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반대로 “세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인지만 결정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근로유지, 탄력적인 설계, 급여감액, 차등 지급 등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실현가능성(정치적 지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재정 부담)에 유리한 요소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창했던 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흐트마저 “공정하게 말해,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의 소득세 제도 쪽이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부의 소득세는 기본소득에 비해 조세와 지출의 총량이 훨씬 작다.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다. 둘째, 세액공제는 기본소득과 달리 노동자의 순임금을 늘려주기 때문에 수급원천이 본인 노동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셋째, 표준적인 조건부 최저소득 제도에서 부의 소득세 제도로 이행하는 쪽이 행정적으로 더 순조롭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Basic Income, 2018:100-101)라고 주장하였다.

본 글은 NIT를 활용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소득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기대효과를 꼼꼼히 기술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 매월 1인당 70만 원의 안정소득을 지급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소득의 50%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려면 매년 약 440조 원이 필요하지만, 도표 5와 같이 지급한다면 1/4 정도가 필요하다”에 대해,

: 어떻게 약 110조 원(440조의 1/4에 해당하는)을 마련할 것인지 재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 증세는 쉽지 않으며 증세없이 시행할 경우 기존의 일반 사회복지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매월 280만 원을 지급받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면 180만 원을 지급받고, 월 소득이 560만 원 이상이면 지급받지 못할 것이다”에 대해,

: 근로 인센티브는 어디서 발생시킬 것인가. 1970년대 기존 캐나다와 미국의 실험에서는 근로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구직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근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들의 학력, 인종, 지역 수준, 가족구조 등에 의해 동일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제도와 병행시 이 4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수많은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가령 소득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게 되고, 이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EITC,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나 실업부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국민 전체의 근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안정소득제와 기존의 복지제도를 병행하게 하되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급한다. 과도기가 지나면 안정소득으로 일원화한다”에 대해,

: 현재 거미줄 같은 한국의 현금 복지 관련 제도들과 점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오히려 더욱 어렵다. 어떤 제도를 통합할지 선별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고 나름대로 그 제도를 만든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안정소득제를 시행함에 따라 유사제도들의 흡수와 통합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야 비용적으로도 (그만큼 예산을 축소 조정될 것이므로) 설득력이 높을 것이며 유사한 제

도를 병행하는 것에 따른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4인 가구에게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현재에도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매월 1,536,324원(2023년도에는 1,620,289원임)을 지급받고, 주거급여를 매월 506,000원을 지급받고, 그 외에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매월 583,444원(2023년도에는 623,368원임)을 지급받고, 주거급여를 매월 327,000원을 지급받고, 그 외에도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소년 소녀 가장일 경우 이에 더해 교육급여를 지급받고 있다”에 대해,

: 현행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생계급여 금액 등은 지급액이 아니고 선정기준이다. 현행 기초생보제도에서는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별하여 소득인정을 감액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을 의미)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성된다. 가령 4인 가구의 전체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인 153만 6천 원-100만 원=53만 6천 원을 지급받는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면 매월 28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며, 가구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80만 원을 지급받아 38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명의 자녀를 낳으면 매월 42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며, 가구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320만 원을 지급받아 52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

: 저출산이 소득만의 문제인가. 출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택,

직업 등 너무나 다양하다. 특히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가 소득보다 더 큰 변수일 수 있다. 그리고 출산 자녀의 수에 따른 급여액 증가를 이유로 출산을 독려하는 것은 특히 여성계로부터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또한 출산 가능 연령이 아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자가 주택 빈곤층(house poor)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의 5배 정도가 된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살지 않고 전국으로 분산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자가 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

: 서울, 경기로의 집중 원인이 소득 때문만인지 의문이다. 주택에 미치는 영향도 자녀교육, 직장문제, 취업 준비, 교육, 정보 접근성, 인적 네트워크 유지 등 다양하다. 또한 전국의 지방으로 사람들이 분산되면 그곳 주택가격도 예전같지 않고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오를 것이다. 인구분산, 지역 불균형, 인구소멸지역 문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고용보험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용보험기금은 2016년 8,300억 원, 2017년 1조 2,300억 원이었으나 2018년 -2조 9,200억 원, 2019년 -8조 1,300억 원, 2020년 -21조 8,600억 원이었다. 당분간은 실업수당과 안정소득을 병행하여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겠지만, 과도기가 지나서 안정소득으로 일원화한다면 고용보험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에 대해,

: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후적, 소극적 사회보험)의 목적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업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 지급하는 고용안정 관련 급여와 취업자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많은 구직 독려 급여와 고용 상태 유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업급여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만 하는 조건부 급여이다. 조건없이 제공하는 안정소득과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료로 유지되는데 만일 그 근로자가 이미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상태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기업들은 고용과 해고를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좀 더 용이해질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노동하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아무도 갑질하는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갑질하는 직장은 사라질 것이다”에 대해,

: 서로 모순된 주장이며 고용과 해고, 노동 환경에 안정소득이 부분적으로 영향이 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흐름, 탈산업화, 금융통화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남북한의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다. 만약 남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한다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기를 원할 것이다” “안정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코로나 19 등등과 같은 특별한 재난이 있어도 특별예산을 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에 대해,

: 통일에 미치는 안정소득의 효과는 무리한 추정이며, 재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의료적, 응급지원적 성격의 재난지원금과 일상적으로 지급하는 안정소득은 별개라고 할 수 있다.

토론자도 근로 형태나 근로 유무와 상관없이, 불안정한 근로 연령층에게 일정 수준까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주는 NIT 방식의 ‘근로참여소득보장제’ 방안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근로 연령층 중에서 근로 능력을 영구상실한 자들은 공공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들을 제외한 미취업자에서부터 저소득근로자들까지 망라하는 근로 참여소득 지대를 설정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 지급’ 한다면 근로유인을 유지하면서도 굳이 가능성이 희박한 전국민고용보험을 만들 이유가 없고, 실업부조는 자연 흡수될 것이며, 근로 연령층을 위한 NIT 방식의 참여소득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었다.

세부적인 수치가 꼼꼼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과대학 원로 명예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외면치 않고 안정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는데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제3절 저출산의 뉴노멀화와 난잡한 돌봄⁶⁹⁾

1. ‘행복의 약속’을 포기한 시대의 소확행

한동안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레이먼드 카버를 좋아했던 무라카미 하루키는 카버의 단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A Small, Good Thing〉⁷⁰⁾에서부터 소확행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 ‘상실의 시대’

69) 임옥희(경희대 휴머니티칼리지 명예교수)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발표문 내용임

70)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에 실린 단편. 앤은 아들 스코티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주문한다. 생일날 여덟 살 짜리 아들은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흘 후 어이없

를 넘어 ‘포기의 시대’에 이르러 한국의 젊은이들은 별것도 아닌 소소한
 지만 확실한 행복이나마 단단히 챙기고자 한다. 성취지향 사회에서는 행
 복 또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
 고, 행복해지는 것만이 무의미하게 던져진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행위라는 주장이 널리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근대 이후 행복
 은 우연히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것
 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3포 세대가 포기하지 못한 소확행에는 일종의
 정치적 의미가 실려 있었다. 만약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 하나
 장만한 뒤 햇살 좋은 거실에 앉아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이 행복
 한 미래로 연상된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엄청난’ 행복은 이미
 포기했다. 하지만 ‘소소한’ 행복만큼은 포기하지 못해, 라는 항변의 정치
 가 소확행이었다. 누구나 공짜로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물, 공기, 햇살마
 저 마음대로 누릴 수 없을 만큼 양극화된 시대에 소소한 행복이나마 어디
 에 있는지 궁금해진다.

2022년 8월 8일 서울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는 신림동 세
 모녀의 반지하 셋방을 10분만에 완전히 잠기게 만들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보았던 관객이라면 영화 속에서 홍수로 인해 반지하Banjiha
 셋방이 한순간에 잠기고, 번기가 역류하는 장면을 떠올렸을 것이다. <기
 생충> 개봉 당시 필자에게 이 장면은 계급적 양극화의 극적 효과를 노린

이 죽는다. 빵가게 주인은 케이크 찾아가라는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해댄다. 앤은 분노
 가 폭발하여 빵가게로 쳐들어간다. 빵가게 주인에게 ‘이 나쁜 놈아, 내 아들은 죽었어,’
 라면서 폭언을 퍼붓다 무너져내린다. 빵가게 주인은 며칠 굶었을 테니 ‘별 것 아니지만
 도움이 될’거요라면서, 오븐에서 갓 구운 따뜻한 계피롤빵을 앤에게 건네준다. 앤은 그
 와중에도 갑자기 허기를 느꼈다. 그 롤빵은 따뜻하고 달콤했다. 이 발제문을 작성하던
 중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역장이 무너져내리는 죽음에 어떤 애도가 가능할까? 충분한
 애도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남은 공동체의 책무로서 우리
 는 어디서 따뜻한 계피롤빵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것이지만 현실적이기보다 과잉으로 느껴졌다. 그래도 영화에서 반지하 가족은 가까스로 탈출했다. 영화적 개연성을 위해 감독이 이들 가족을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실은 허구보다 더욱 허구적이고 우발적이며 잔혹하다. 송파구, 신림동, 수원 세 모녀의 죽음과 자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노약자, 장애인, 싱글맘, 여성, 아이)의 보이지 않았던 삶이 한순간에 드러난 경우다. 우리는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를 보면서도 보지 않는다. 그런 공간은 ‘예외적인’ 비상사태에서만 노출된다. 지옥고에서 살게 되면, 누구나 공짜로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햇살 한 조각도 평등하게 즐길 수 없다. 권여선의 <손톱>⁷¹⁾에서 물류회사 임시직인 소희는 뽕족한 모서리에 엄지손톱이 꿰리는 사고를 당한다. 사고로 조퇴를 하고 한강을 지나가면서 스물한살 소희는 처음으로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마주하게 된다.

행복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되었다. 행복추구는 ‘건강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고전적인 행복론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eudiamonia, 즉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이자 선한 삶이다. 좋은 삶으로서 행복한 삶은 적극적으로 추구해볼 만한 삶이다. 불행, 고통, 수치, 불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해지고 싶어할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향상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진보 서사의 핵심이다. 행복의 약속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유예된 희망의 약속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고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3포 세대, n포 세대라는 말에는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임에도 포기한다는 항변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71) 권여선, <손톱>, 『아직 멀었다는 말』(문학동네, 2020).

젊은 세대들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 포기의 대상들은 3포 세대가 역설적으로 욕망하는 것들이다. 한 사회가 정상적인 삶으로 극복해주는 것들, 사랑, 연애, 결혼, 아이, 집, 직장, 가족, 건강, 시민권, 국적 등이다.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의 행복은 커진다고 믿는다. 만약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을 구성한다면, 그것을 결여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재생산의 정점에 있는 MZ 세대들이 무엇을 포기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가 왜 저출산의 뉴노멀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2. 가부장제의 구조변동: 이슬아의 『가녀장 시대』

내가 사는 곳은 노원구 상계동이다. 이곳은 소형 주공아파트가 밀집해서 2010년까지만 해도 아이딸린 젊은 부부가 많았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퍼져나갔다. 어느 날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2022년 현재 노원구 소재 초등학교 2곳이 통폐합(상계초, 중현초) 예정이고, 도봉고는 2024년 폐교가 예정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손바닥 공원에는 아이들이 아니라 노인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풍경으로 바뀌었다. 아이들의 놀이터 공간은 줄어들고, 반려동물 쉼터가 만들어졌다.

리 에델만의 말처럼 미래의 약속이 아이라고 한다면(Lee Edelman 2004), 한국 사회에서 미래의 약속은 과연 약속이 될 수 있을지 미심쩍다. 21세기에 이르러, 인간종의 등지를 밀고 들어온 종들이 반려종처럼 보인다. 빠꾸기는 노랑할미새, 종달새 등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새의 등지에 탁란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새들은 빠꾸기 알을 포란한다. 산란한 후에 빠꾸기 새끼들은 노랑할미새 알이나 새끼들을 밀어내고 자신

이 그 등지에 스며든다. 요즘은 반려종이 인간종의 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뼈꾸기 새끼들이 되고 있다.

결혼한 이성애 핵가족 스윛홈의 이상이 변화된 지 오래다. 반려(종)가족 천오백만 시대다. 수도권 지역은 젊은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한다. 3포 세대가 보여주다시피, 이성애자들도 결혼, 임신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일 수도, 좋은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일 수도 없다.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도착할 아이들은 마냥 축복일 수 없다. 빈곤의 대물림으로 사회적 삶의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런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자기 아이들을 내보내고 싶을까?

동거든, 결혼이든 관계가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중산층 여성의 주택실현의 불가능성>에서 한 여성은 집 하나를 물려주지 못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최시현 2021). 드라마 <금수저>에서처럼 부모를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이 물려받는 원가족이 가난하다면 그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히고 있다. 취업도 불확실하고, 집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살지도 않는다면⁷²⁾,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계급으로 나뉘질 정도다. 결혼한다고 한들 아이는 포기하게 된다. 그것이 3포 세대라는 젊은 남성들의 자조적인 서사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의 이상은 여전하다. 건강한 시민 주체로서 구성되는 이성애 핵가족은 정상 가족으로 이상화된다. 가족 중에서 남성 가장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돌봄을 주로 하는 가사노동자

72)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수도권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창희는 서울이라는 노른자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흰자위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는 시공간적인 한계로 데이트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로 성별 분업을 상상한다. 성별 분업은 동성 사회를 구축하는 구조적 장치다. 이성애 정상 가족의 구조변동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결혼한 이성애 핵가족만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스윗홈의 모델로 삼는다. 이런 가족 이데올로기를 역전시켜놓은 것이 이슬아의 『가녀장의 시대』(이슬아 2002)이다.

『가녀장의 시대』는 이슬아 작가의 원 가족을 모델로 한 장편소설이다. 이 장편은 소설과 에세이의 경계가 모호해서 문학과 사회학, 다큐와 허구를 오가면서 장르의 경계가 혼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가부장제적 패러다임을 패러디하는 명랑하고 맹랑한 소설이다. 어린 시절 슬아는 가부장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를 실제에, 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날 낳은 것은 엄마인데요, 라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개인의 탄생은 물려받은 세계 속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탄생은 언제나 이미 상속받은 가족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자손의 생산은 가문의 대를 잇는 여성의 중차대한 과업이라는 점을 슬아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다. 그런 할아버지의 가부장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것이 손녀인 슬아다. 슬아는 1인 여성가구주로서 모부를 건사하는 생계부양자가 된다.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은 베티 프리단의 ‘이름모를 병’에 시달리는 교외의 전업주부들처럼 ‘맘고리즘’에 시달리다가 정신줄마저 오락가락한다. 생계부양자 남편이 ‘퐁퐁남’으로 집안일을 도와주지만, 경단녀 김지영은 집안에서 아이와 함께 고립된 채 살면서 아픈 몸과 마음을 견디다가 마침내 정신줄까지 놓치게 된다. 소설적이라기보다 르포르처럼 보였던 김지영으로부터 10년이 지나, 92년생 이슬아에 이르면 그녀는 아예 가녀장이 되어 있다. 『가녀장의 시대』에서 이슬아는 SNS 블로거, 에세이스트, 강연자로서 셀럽이 되고, 출판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 슬아는

자기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팔아서 생계도 척척 해결한다. 책을 써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유명세도 탄다. 그 집에 출판사를 차린다. 그리고 모부를 직원으로 하는 가족사업체를 꾸린다.

여기서 반전은 생계부양자로서 아빠 웅의 위상은 완전히 붕괴된다는 점이다. 웅은 더 이상 가부장도 아니고 생계부양자도 아니다. 모부와 딸의 관계가 단지 역전된 것이 아니라 가부장 질서의 핵심으로 여겼던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개념도 슬아가 가져간다. 가문과 효(사람의 자식된 도리로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오)와 같은 할아버지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질서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철저히 종속된다.

마트 직원, 식당 종업원, 빵집 점원, 구제품 옷장수, 등 온갖 생계 노동에다 가사노동까지 이교대를 해왔던 엄마 복희씨는 생존에 필수노동을 하는 사람이므로 출판사의 정규직이 된다. 아빠 웅은 주로 바깥 일을 하는데(슬아의 책 배달, 강연 장소 마이크 설치에서부터 다양한 일들) 엄마 복희의 돌봄 가사생존 노동에 비하면 필수노동이 아니므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 가녀장의 시대 딸은 데이팅앱을 통해 남자를 만난다. 대화가 통하면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한다. 딸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모부는 딸이 남자를 데리고 오면 그날은 모텔로 간다. 맞담배를 피면서 아버지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렸지만, 세 사람의 월급을 책임져야 하는 슬아는 때때로 모부가 부럽다. 마감에 시달리면서 글을 쓰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모부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자기 공간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넷플릭스를 보면서 여유를 즐긴다.

가부장제에서 가모장제가 아니라 아예 가녀장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인 것만은 아니다. 장 보르리야르가 주장하듯 ‘유토피아가 기록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바로 지금에서 나온 것, 오늘의 질서가 놓치고 있는 것.’(사라 아메드 2021)이기도 하다. 이슬

아처럼 오늘의 질서가 놓친 것을 지금 포착하는 예리한 시선은 유토피아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직장생활 5년 차에 지쳐서 경력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한다. 생계부양자를 선택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성애 정상가족을 꾸리지만 정작 김지영 자신은 정상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비정상’이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면 1인 가구 가녀장 이슬아는 자기 삶을 살기 위해 이성애 결혼의 세계로 들어갈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인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여 섹스의 문제도 데이팅앱으로 해결한다.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난자를 냉동할 것이고 사유리처럼 혼자 출생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도 교육부는 뒤를 향해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을 예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성 평등, 성 소수자와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 교육과정 입법을 예고했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미래없는 미래의 약속: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와 김멜라의 〈저 녀들〉

김혜진의 『딸에 대하여』(2017)에서 레즈 커플인 레인과 그린은 늙은 엄마의 집에 얹혀 살게 된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육십 대 여성 ‘나’는 젠이란 팔십 대 치매 노인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젠은 젊은 시절 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교수를 했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한국계 입양아들과 미혼모, 이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정작 본인을 돌봐줄 가족 하나 없다. 지금 현재 젠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나’의 보살핌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젠의 삶을 보면서 ‘나’는 대학 강사인 딸의 장래가 염려스럽다. 딸은 갑자기 월세를 낼 테니까 집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한다. ‘나’의 딸은 해고당한 동료 강사의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 동료 강사뿐만 아니라 딸 본인도 시간강사 자리에서 해고된다. 3천만원 보증금에 월세로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린은 보증금을 빼서 해고된 강사의 복직 투쟁과 생활비에 사용하게 된다. 보증금마저 날린 딸은 ‘나’에게 월세를 낼 테니까, 원가족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최은영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가 보여주다시피 아주 희미한 한 줄기 빛이라도 있으면 잡고 싶지만, 대학사회의 위계질서에서 최하층인 대학 강사들은 유명처럼 보이지 않다가 10년의 세월이 지나 어느새 소멸된다. 그린처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기도 한다.

‘나’는 딸에게서 자신이 간병하고 있는 젠의 모습을 본다. 딸의 미래가 젠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무시로 엄습한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딸이 번듯한 사위를 데려와서 가족을 구성하면 오죽 좋을까 싶다. 너희는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외롭게 살다 죽을 테냐고, 라면서 ‘나’는 따진다. 다 네가 행복하길 원해서야, 별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냐, 라는 전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나’가 딸의 행복을 염려하는 마음 한 켠에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인해 더욱 가난해질 외동딸의 가난이 곧 ‘나’의 미래라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다.

너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누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함께 가길 할 수가 있나, 사회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나’의 지적이다. 그러자 그린이 반박한다. 왜 남편이나 자식만 가족이 되는 건데? 엄마, 레인은 내 가족이야, 친구가 아니고. 엄마, 레인은 내 친구가 아니라고. 나한테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라고 그냥 내 가족이라고. 남편이고 아내

고 자식이라니.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니? 결혼을 할 수 있니? 새끼를 낳을 수 있니?(김혜진 2017) 너희가 하는 건 그냥 소꿉장난 같은 거야. 라고 '나'는 반박한다.

딸이 지금 레인과의 생활에서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지만 엄마인 '나의' 반응은 결혼해서 남편, 아이가 있고 집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쿼어로 사는 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진단한다. '나'는 네가 오직 행복하길 바란다면 딸이 행복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불행한 그런 소꿉장난은 그만두라고 설득한다. 초상이 나면 아직도 남자만이 상주가 되는 시대다. 파트너가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으로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함께 일궈온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없다. 이들의 쿼어 서사는 독거노인 여성의 가난과 질병(치매)과 돌봄의 문제와 교차되어 있다. 돌봄을 혈연운명공동체로 묶어놓고 가족 단위로 해결해왔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젊은 여자, 늙은 여자, 혼자인 여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딸에 대하여』가 딸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보수적인 엄마의 입장에서 보는 서사라고 한다면, 김멜라 <저녁놀>은 가난하지만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레즈 커플을 사물 화자인 '나' 딜도의 시선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구에서 쿼어 서사는 오랫동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다. 그러면 쿼어 가족을 권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언해피 엔딩에 저항하듯 <저녁놀>의 상상력은 발랄하다. 눈점과 먹점은 예술대학 시절 만나서 행복한 연인이 된다. 그 시절 비디오방, PC방, 모텔을 전전했던 눈점과 먹점은 졸업 후 5년 만에 마침내 보증금을 낀 월세 옥탑방을 얻게 된다. 비로소 두 사람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중에 마당 넓은 집을 얻게 되면 개랑 고양이도 키우기로 한다.

먹점은 어느 날 눈점에게 우리 딜도로 한 번 해볼까,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입술로 그 단어를 발음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딜도를 책갈피라고 부른다. 그들은 많은 단어 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은어화한다. 모텔도 그런 단어 중 하나였다. 모텔은 도서관으로, 섹스는 독서로 바꿨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갈피를 넘기면서 독서할까?는 ‘모텔에 가서 딜도를 활용하여 섹스할까’라는 두 사람만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책갈피를 사용할 기회조차 전혀 없었다. 버스사고로 트라우마가 생긴 눈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먹점과 눈점은 ‘망망대해에 빠진 조난자들처럼 막막하고 절망스러웠지만 서로를 부표처럼 끌어안으며’ 버텨나갔다(김멜라 2021a) 눈점은 지쳐서 돌아온 먹점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함께 나눈다. 그들은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취약성으로 인해 더욱 결속된다.

‘나’ 책갈피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 여자들은 날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한다. 조류독감과 살처분으로 4천 원 하던 달걀 한 판이 8천 원으로 뛰었고 대파 한 단이 6천7백 원이 되었다. 눈점과 먹점은 대파를 키워서 먹기로 했다. 플라스틱 통에 심은 대파 통을 둘 자리가 없어서 결국 ‘나’의 자리를 대파가 대신한다. 그 대신 나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나’보다 대파, 파파야가 우선이었다. 그들은 미니멀 라이프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물건으로 분류된다. ‘나’는 통탄한다. 내가 어찌다가 대파와 경쟁하게 되었는가. 모모는 자기 존재가 무화되는 혼란 속에서 눈점과 먹점에게 분노한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낡은 관습과 편견의 태양이 저물고 그 이후에 도래하는 희망을 아침놀로 상징했다. 반면 태양을 상징하듯 ‘나’는 자신의 황혼과 마주하면

서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혐오와 분노를 유발한다. ‘나’는 태양신화의 정점이자, 남성적 나르시시즘의 상징인 태양이 아니라 저녁놀이러니. 저녁 놀이 지나면 그나마 용도가 다한 쓰레기로 버려질 운명이었다.

그러다가 모모는 자신의 용도변경을 수궁할만한 명분을 찾고자 한다. 먹점과 눈점은 점점 좁아지는 방을 정리하고자 한때는 설렘을 주었던 예술 서적들을 정리한다. ‘나’는 버려진 책들을 밤낮으로 읽는다. 그리고 ‘나’의 위대함을 재확인한다. 두 여자가 내린 ‘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반지성적인지 깨닫는다. 쓸모없음은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빛나는 보석이었다(김멜라 2021a; 김멜라 2021b). ‘나’는 인류문명의 시원에서부터 숭배받았다. 무수한 남근상을 보면 예술과 창조의 동력이었다. 그런데 창조의 적대세력인 여자와 여자가 맺는 ‘불모’의 관계를 통해 감히 ‘나’의 남근적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는다.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면 조퇴를 하면, 다들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기 반려자가 아프다는 소리조차 못하는 위인들 아닌가. 상대를 잃어도 애도할 수조차 없는 주제들이다. 여자들이 살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다. 신혼부부 대출도, 혼인 신고도, 사망 신고도, 상주도, 무엇도 못하는 주제에 나를 무시하다니, 하고 ‘나’는 분노한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넘어 소소한 쓸모로서 안마기가 되는 자신의 운명을 ‘나’는 결국 받아들인다. 눈점과 먹점에게 한때는 설렘을 주었던 예술은 이제 실패의 기술이 되어버렸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실패의 기술을 통해 쓸모없음의 예술이 된 ‘나’는 황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른 용도로 무수히 변경될 수 있으니까. 작가의 말처럼 남근의 모조품인 모모의 용도가 변경되듯, 정상성 규범도 변경되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남성성의 권위는 조롱감이 되고, 남근이 섹스와 생산성의 상징으로 기

능하는 시대도 지나갈 것이다.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는 과정에 추락하는 모모의 슬픈 연대기는 또한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가족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가족은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수행적인 것이다(김순남, 2022). 동성 가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그 미래없음이 현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를 상실할 수 있다. 저출산이 새롭고도 낯선 ‘정상적’ 현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재생산 역량의 상실은 미래를 위한 역량 상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다. 과거를 증언할 인간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는 건 과거가 어떤 미래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내 고통을 보상해 줄 미래에 대한 환상을 상실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환상을 위협한다. 나중에 오게 될 어떤 것을 위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라는 관념은 역설적으로 상실을 염려함으로써 미래가 있다는 환상을 관념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저녁놀〉은 미래 없음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 없음은 미래에 대해 노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미래가 없다는 부정을 긍정하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현재에 없는 것을 늦게 도래할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질서가 놓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프레드릭 제임슨의 말처럼 유토피아는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드러난 구멍과 결여에 주목하는 것이다. 유토피아 형식은 대안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의 목적은 대안이란 없다는 믿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저녁놀〉이 보여주듯,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파도는 언젠가 우리를 더 높은 물마루에 올려줄 것이다. 실패의 파고에 휩쓸려 익사할 것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물마루로 올라설 것이라는 역설을 기대하게 된다.(김멜라 2021b, 69-70)

4. 이웃사촌 가족과 난잡한 돌봄

〈나의 해방일지〉에서 엄마의 자리는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는 압력밥솥 앞이다. 그날도 밥을 안쳐놓고 냇을 빼고 있다가 밥 뜸이 들 때까지 잠시 자리에 웅크리고 눕는다. 그 순간 엄마는 밥솥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이 드라마에서 엄마는 이름이 없다. 남편, 세 자녀들, 자녀들의 동네 친구들은 전부 이름을 갖고 있고 이름으로 불린다. 이 시골 동네로 떠밀려온 수상쩍은 구씨마저 성은 가지고 있다. 엄마의 터무니없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든 가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상실했는지 애도한다. 엄마의 보살핌 노동은 투명하고 당연해서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사라지자 비로소 엄마의 돌봄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보이게 된다. 엄마는 죽음으로 비로소 자기 이름을 갖는다. 엄마의 이름 곽혜숙이 유골함에 적혀 있다. 화장터에서 나온 그녀의 인공관절은 온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버틸 수 있도록 해주었던 장치였다. 맏딸인 염기정은 엄마가 과로사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마침내 이르게 된다.

남편 염제호씨는 낮에도 짙은 어둠이 깔린 적막강산이 된 집에서 비로소 깨닫는다. 자기가 가족을 건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건사했다는 사실을. 염제호와 세 자녀들은 전부 일자리를 갖고 있다. 남편 염제호는 자영업 싱크대 공장을 경영하면서 습관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세 자녀들은 임금(정규직, 비정규직이든 하여튼)을 받는 직장

을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일자리가 없는 엄마에게 모든 돌봄 노동을 전가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엄마의 자리이므로. 그 엄마가 사라진 자리, 엄마의 부재에서 그들의 삶이 엄마에게 얼마나 기생했던가를 깨닫게 된다. 보편적 생계 부양이 아니라 보편적 돌봄이 이들의 삶에 이미 언제나 기본가였다. 하지만 돌봄 노동은 무한한 가치가 있음으로 무임금, 무가치한 노동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런 엄마는 가부장제의 부역자가 된다.

돌봄⁷³⁾은 페미니즘의 우산 아래서도 복잡계에 해당한다. 로즈메리 통의 『페미니즘 사상』⁷⁴⁾의 개정판인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2019)은 하이픈-페미니즘의 입문서다. 개정판에서는 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정신분석학/실존주의 페미니즘과 같은 고전적인 범주 이외에 돌봄중심 페미니즘을 별도의 장으로 할당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디폴트는 어떤 형태론도 돌봄이었다. 그런데 '돌봄 중심 페미니즘'이라는 장을 로즈마리 통이 개정판 『페미니즘: 교차적 관점에서』에서 덧붙여야 했다는 것이 흥미롭다. 특히 코로나 이후 더 케어 컬렉티브의 『돌봄 선언(The Care Manifesto)』이 보여주다시피, '난잡한' 돌봄의 문제는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도 복잡한 지형으로 재이론화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돌봄에 대해 대단히 복잡한 입장을 취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돌봄 자체를 완전히 시장의 논리에

73) 다니엘 잉스터는 『돌봄: 정의의 심장』에서 돌봄을 이렇게 정의한다. 좋은 삶을 위해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초역량(교육)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고통의 최소화(의료돌봄)하고 의식주 청결한 환경, 신체접촉, 애정 등 사회적 삶의 관계를 전부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74) Rosemarie Tong, *Feminist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Westview Press, 1989)가 2017년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Routledge, 2017)이다. 번역판본은 『페미니즘 사상』(한신문화사, 2000)의 개정판은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학이시습, 2019)로 번역되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교재용 소개라고 할 수 있다.

동화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병리적 현상 중 하나다. 그로 인해 친밀성의 모든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에 맡겨지게 된다. 다른 한편 돌봄에 대한 가부장제의 병리적인 측면의 하나로, 돌봄은 여성적인 영역으로 성역화한다. 가정에서의 돌봄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벗어난 피난처, 안식처로 신성화된다. 여자들은 그것을 무임금 가사노동이라고 말하고 가부장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의 노동’(매들린 번팅 2022)이라는 이름 아래 친밀성의 공간으로서 가정을 건사하는 돌봄노동은 전-사회적, 전-자본주의적인 것이 된다. 무임금 돌봄노동은 무임금이기엔 헌신, 희생, 사랑으로 이상화된다. 그런 돌봄의 역할은 약자인 여성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셀마 제임스, 마리아로사 델라코스타, 실비아 페데리치, 낸시 폴브레, 이들의 계보를 잇는 낸시 프레이저 등이 지적했던 여성적 돌봄 장소로서 가정은 시장 논리의 강압에 지친 남성에게 정서적, 성적 보상을 제공하면서 자본주의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집과 가족은 혁명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리시스트라테(Lysistrata)』에서 리시스트라테처럼 돌봄노동 파업(성파업)을 상상해본다면? 실비아 페데리치는 사회적 재생산으로서 돌봄을 ‘혁명의 영점(zero)’으로 분석한다(실비아 페데리치 2013). 재생산 돌봄 노동을 임금화하면 여성이 사적 영역으로 유폐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페데리치는 주목한다. 페데리치는 돌봄 노동의 임금투쟁은 혁명적 관점이며 심지어 여성주의 관점에서 제출된 유일한 혁명적 관점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마리아 리즈가 주장하듯, ‘여성 노동은 공기와 물같이 공짜로 구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 간주된다. 돌봄노동은 사회적 노동이 아니라 여성의 자연적인 속성에서 비롯

된 것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돌봄, 양육, 배려, 미소와 같은 감정 노동, 가사노동은 천성적인 것이므로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 가족은 사회이전 단계가 되고 집안에서 하는 여성의 일=여성성의 발현으로 배치함으로써, 돌봄노동의 무임금성은 사랑의 이름으로 지워진다. 가사노동의 자연화(여성화)를 종식시키고, 집안일을 노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투쟁한다. 재생산노동의 정치화 투쟁은 가사노동+임금노동의 이 교대로 더 많은 노동을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임금을 지불하라는 투쟁이다. 가사노동의 무임금화를 통해 기업과 국가는 가부장제의 배당금을 챙기는 진정한 남성(Man)이기 때문이다.

21세기적 상황에서 돌봄 노동의 임금 투쟁화는 낡고 보수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돈 몇 푼 더 받아서 결혼생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돌봄 노동의 임금화라고 해봤자, 그것 자체가 가부장제의 유지에 공모하는 것이 된다. 재생산 없는 퀴어들은 임신, 출산,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입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애 결혼 제도 정상성 유지로부터는 벗어난 것이다. 그들은 이성애의 고물창고인 가내 재생산노동으로 진입하기를 거부한다. 트랜스젠더/퀴어의 경우 임신, 출산을 경험함으로써 모성이 만들어진다는 이데올로기도 거부한다. 이성애 결혼제도와 같이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사회관계는 바꾸지 않고 단지 돌봄노동에 보수화를 통해 가부장제에 부역하면서 안정된 삶을 누린다면, 퀴어의 입장에서 그것은 페미니즘 스스로가 페미니즘을 배신하는 전략에 불과한 셈이 된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돌봄 문제와 관련하여 출발에서부터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했다. 특히 돌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현신에 주로 맡겨졌으므로, 약자로서 여성들은 무보수 돌봄 노동에서 해방을 원했다.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는 『여성 권력과 공동체의 전복』에서 여성해방이 계급투

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가정주부 여성은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아래 핵가족 안에서 억압받는 존재다.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라 러딕처럼 여성의 돌봄노동에서 여성적 윤리를 찾으려는 경향도 있었다. 이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돌봄노동은 한편으로는 성스러운 것으로 칭송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한 노동으로 치부되었다. 영어의 care는 보살핌, 관심, 걱정, 슬픔, 애통, 곤경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caru에서 왔다. 이 단어의 상반된 의미는 취약한 생명체의 요구와 대면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현실을 담고 있다(더 케어 콜렉티브 2021).

인간으로서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이 타인의 배설물을 받고 치워주는 것이다. 그런 비천한 일은 그런 일에 걸맞는 사람들, 노예, 하인, 여자들의 노역이자 열등한 인간이 하는 일로 치부되었다. 비천한 육체를 다루는 사람을 비천하게 여기면서도 여성의 돌봄은 성스러운 것이라는 이 양가성이 누구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가, 라는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수많은 논쟁과 투쟁을 야기했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한 방식으로 여성의 임신 출산, 돌봄을 아예 외주화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한 사회의 기본가를 임노동 경제가 아니라 보편적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낸시 폴브레가 말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슴’을 생각해야 한다. 즉, 우리는 돌봄과 연민의 힘이 시장화된 개인의 이기심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돌봄 모델은 이러한 경제적 모순의 해소를 향한 중요한 단계다.

난잡한 돌봄은 예술사학자이자 동성애자였고 1980년-90년대 액트업 에이즈 인권활동가였던 더글러스 크림프의 개념이다. 그는 에이즈라는 ‘의미화의 에피데믹’에 맞서 투쟁했다. 크림프의 〈에피데믹 중에 난잡할

수 있는 방법(How to Have Promiscuity in an Epidemic)은 에이즈가 게이들의 성적 문란과 난잡함에서 기인했다는 비난에 대한 답이다. HIV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주먹 성교와 같은 도착적이고 역겨운 성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비난에 대한 응전으로서, ‘우리의 난잡함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난잡함이 우리를 구할 것’(Crimp 1987, 235)이라고 크림프는 주장한다. 크림프는 난잡함을 취약성으로 인해 서로의 안위를 배려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친밀감을 나누는 다양한 실험적 관계맺음으로 정의했다(더 케어컬렉티브 2021, 195 재인용). 난잡한 돌봄이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가장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증식해가는 윤리다.

난잡한 돌봄은 재생산 미래주의의 약속을 이행하는 대신, 타종과의 상호의존과 공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난잡한 돌봄은 보편적 경제주체가 아니라 보편적 돌봄 주체를 사회의 기본가로 삼고자 한다. 돌봄 공동체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돌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거나 돌봄을 시장으로 외주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의 돌봄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이 아니라 퀴어/생태/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난잡하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자는 뜻이다. 난잡한 친족은 혈연,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생존을 위해 상호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말, 살, 흙, 물, 바람, 동물, 식물, 등 지상의, 지구 행성의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맺기로 확장하는 것이다.

해러웨이는 난잡하고 퀴어한 돌봄의 형태로 동식물과 합체 사이보그인 카밀 우화를 제안한다. 우파 가속주의자(accelerationism)들이 전지구적 자원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내버린 폐허에서 생존하기 위해 카밀은 소멸 직전의 종들을 인간 종인 자신의 몸에 이주시키고 이식한다. 카밀 스토리는 인간과 비인간 파트너들과 더불어 새로운 서식지에 씨를 뿌리

며 세계 짓기를 하는 이야기다. 해러웨이의 카밀 우화는 멸균 서사가 아니다. 카밀 공동체는 텅빈 유토피아적 대지가 아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강력한 식민주의, 가부장제, 종교적 복고주의 등으로 이미 언제나 오염된 곳이다. 유토피아 거주자들과는 달리 ‘툴루세(Chthulucene)’ 시대 퇴비의 아이들은 오염과 부패에서 탄생한 존재들이다. 그런 오염과 부식이 비체화된 타자들(이주민, 외계인, 부랑자들, 약물중독자들)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감염원(carrier)과 더불어 여행하는 바이러스적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점을 그들은 인정한다. 계급, 피부색, 카스트, 종교, 세속주의, 지역주의, 국가주의가 서로를 감염시키고 불화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카밀 스토리는 에트우드식의 유스토피아⁷⁵⁾다.

해러웨이는 카밀 이야기를 지구상에서 생물학적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멈추고(지구 종말을 면하기 위해), 귀여한 친족(odd kinship)을 만들자고 선언한다. 그것은 소멸되는 다른 종들과의 이종합체를 통해 살아남는 페미니즘적인 쟁투기다. 카밀 공동체는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제가 망쳐놓은 곳에서 지구 행성의 생명체를 재생시키고자 한다. 자기가 사는 공간의 물, 공기, 흙을 황폐화시키는 자본세의 채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은 지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랑으로 촉발된다. 대량학살과 파괴와 마주하면서 비롯된 사랑과 분노와 폭력은 동시에 오염 균(germ) 뿐만 아니라 치유의 싹(germ) 또한 솟아나도록 한다.

난잡한 친족들의 난잡한 돌봄이란 혈연가족을 운명공동체로 여기는 그들만의 돌봄 노동이 아니라 난잡한 방식으로 합체, 혼성되면서 상호의존하는 세계에 대한 비유이다. 그것은 복잡성의 시대 돌봄의 개념을 확대하

75) 마거릿 애트우는 『나는 왜 SF를 쓰는가』에서 어떤 디스토피아 사회에서도 유토피아적인 조각을, 어떤 유토피아 사회에서도 디스토피아적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SF는 유스토피아(유토피아 + 디스토피아의 합성어)라고 일컫는다.

여 귀어한 친족들과 관계 맺기를 뜻한다. 해러웨이의 카밀 우화에서 카밀은 인류와 지구 행성의 멸종을 막기 위해 타종의 DNA를 자기 몸에 삽입한다. 타종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소멸한 종에 대한 애도이면서 난잡한 돌봄의 윤리가 된다. 비인간 생물다양체들과 관계맺기 놀이의 무대에서 행위자, 플레이어로서 지구행성과 더불어 지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위자로서 존재들의 안무에 동참하는 것이다. 트러블에 처한 지구 행성의 반격(reaction)에 서로 갈등하면서 협상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인간종에게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책무이다. 이처럼 난잡한 돌봄은 혈연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것이다. 난잡한 가족들은 사회적인 삶의 재생산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변혁의 장이 될 수도 있다(김순남 2022). 그것이 저출산의 뉴노멀화된 시대, 돌봄이 사회의 기본가로 설정되어야 할 이유다. 저출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삶의 불평등을 염려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제3절-1. 토론 1: 난잡한 돌봄은 그 ‘역설’을 극복할까?76)

‘공동 육아’에 대해서 장기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다. 종사자들을 만날수록 놀라운 언어들에 채집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공동’ 육아를 ‘바른’ 육아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육아가 아닌 육아의 아쉬움을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을 교도소처럼 묘사했다. 어린이집의 학습활동은 학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활동들은 ‘윤리적으로 옳은’ 위치를 자연스레 선점했다. 아이가 6개월 때부터 다른 거 안 따지고 오직 효율성만으로 고려해 동네에 가

76) 오찬호(작가,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 저자)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

장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보냈던 나는 그들 앞에서 굉장히 무안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 ‘공동육아를 하는 부모는 보통 부모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무엇이 남다른지를 물었다. 어떤 증거도 없었다. 공동육아를 하면 다양성을 배운다는데, 어떤 증거도 없었다.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보여주지 못했고, 다만 그걸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그 반대와 자신들을 분류하고 수직적으로 구분했다.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증거가 더 잘 보였다.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일차적 이유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르다!’는 신념이 과해서 나타나는 평범한 육아에 대한 혐오는 매우 표출했는데 본인들은 결코 인정도 인지도 하지 않았다.

일부의 사례일 거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선택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그 반대편을 과장하게 만드는 건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부자 되는 법은 늘 가난한 이들은 이렇다는 설명으로 이어지고, 긍정을 강조하다 보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제멋대로 나열된다. 공동육아를 즐겁게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비교’할 반대편이 있을 때 더 선명해진다. 길거리에 쉽게 보이는 어린이집은 엉터리라고, 거길 보내는 부모는 잘못된 거라고 말할수록 자신의 선택은 더 상식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가. 난잡한 돌봄의 ‘다양성’을 위해 정상 가족은 하나로 설명되어야 하나?

난잡한 돌봄은 ‘기존 정상 가족’의 한계를 부각해야지만 그 개념이 잘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의 돌봄 노동은 문제가 많다.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다. 무엇보다 ‘제한적’이다. 그런데 그 층위는 너무 넓고 겹은

무수하다. 모든 경우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거나 헤게모니에 순응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련하게 체념의 상태를 표출하는 조각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문제는 이 다양성들이, 전통을 타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원죄로 인해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연료가 된다는 거다. 즉, 다양성 그 자체라는 난잡한 돌봄은 역설적으로 수천 개의 조각들은 거대한 정상 가족에 불과한 것으로 강하게 못 박을수록 설득력이 커진다. 내부적으로는 효과적인 방식일 건데, 이 패러다임의 확장과 사회적 동의에 이르는 여정에서도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나. 정상 가족에서 ‘벗어날수록’ 성별 정체성이 더 또렷해진다면?

정상 가족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건 ‘여성의 목소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급된 〈나의 해방일지〉도 한 명의 아버지(옆이 아닌) 밑에 존재하는 이름 없는 어머니의 상황과 그 옆에서 어머니를 돕는 두 딸의 목소리가 교차되면서 정상 가족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투박한 공기가 있기에 염미정이 말하는 ‘추앙’의 맥락이 잘 드러난다. 질서가 무엇인가. 규칙이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딸, 그것도 막내딸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앞뒤 따지지 말고 무조건 ‘환대’받고 싶음을 낮은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이라고 가족의 역할만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사람이기에 추앙받을 수 있다는 전제, 그래서 환대하고 환대받으라는 ‘선순환’의 가치는 난잡한 돌봄의 핵심 연료다. 그런데 이 연료는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올림이 클 수밖에 없다. 즉 정상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결의할수록 난잡한 돌봄이란 공동

체는 견고해진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 배경이 오래된 사회적 관성을 전복시키면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여성들이’ 결속할수록 드러난 특징은 ‘역시나 여성이기에’ 가능한 이 유처럼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행사에 가보면 쉽게 보인다. 경력이 단절된 안타까움이 성토되는 것까지는 무난한데, 그 해법이라고 제시되는 내용 안에는 ‘엄마근성’, ‘엄마다움’, ‘엄마라면’ 등의 단어가 무수하다.

난잡한 돌봄도 본래의 정교한 뜻을 떠나, 겉으로 드러나는 향기에는 다정함과 친밀감의 농도가 짙다. 아마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이 감정을 공유하며 환대, 연대, 유대를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다정함과 친밀함은 여성성이라는 고정관념과 지독히도 쉽게 연결될 성질이다.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정상 가족과 비교하면 매우 전복적이다. 하지만 ‘누가’ 그러는지를 논하다 보면, 그 이야기들은 정상 가족 안에서 쉽게 들리는 관성적인 성별 차이 이론과 큰 차이가 없다. 여성을 ‘억압하는’ 정상 가족을 벗어나 역설적으로 ‘여성다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난잡한 돌봄의 역설, 이는 여전히 정상 가족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괜한 우려일까?

〈나의 해방일지〉의 아버지 염제호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젊은 자신에게 “가족을 건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아내와 자녀들이 너를 건사하고 있는 걸 알아야 해!”라고 알려줬다고 하자. 그때부터 염제호는 어떻게 ‘난잡한 돌봄’을 실천할까? 아마 ‘권위를 내려놓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착한’ 남편이 될 것이다. ‘점손한’ 남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해방일지’를 쓸 필요도 없고 대신에 ‘감사일지’를 쓰지 않겠는가. 그 안에는 “우리 아버지는 다정했다”(할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좋은 아빠였다!)는 구절이 넘쳐날 것이다. 그 이유로, 가족은 아버지를

존경할 것이고 아버지는 그 환대를 발판 삼아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에 매진할 거다. 사랑이 넘치는 ‘과거보다 덜 불평한’ 가정에서, 누구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타파할’ 필요성을 못 느낄 거다. 다정함과 친밀함이 ‘과잉’ 부각될 때, 과연 난잡한 돌봄이 정상 가족 앞에 붙은 ‘정상’이란 수식어를 깰 힘을 가질지 의문이다.

제3절-2. 토론 277)

가. 저출산의 뉴노멀화를 수긍하게 하는 다양한 풍경

‘불안’이란 정동이 흐르면서 서로 수렴되기도, 갈라지기도 하는 풍경들을 설명하면서 발표자는 연결에 연결을 거듭하며 다른 세계, 다른 상상을 촉구한다. 다른 세계를 꿈꾸려면 배치를 달리해야 한다. 이성애·정상 가족 전제에 붙들린 초고령·저출생 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기여에 공감한다. 그런데 이 작업이 더 너른 연대로 나아가려면 각각의 존재를, 존재와 존재 사이 연결의 ‘마디’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 풍경 속 존재들

- 1) 취업, 연애, 결혼, 집 등 ‘엄청난’ 행복은 애초에 포기한 한국의 ‘3포 세대’
- 2) 송파구, 신림동, 수원 세 모녀의 죽음과 자살에서 드러난 취약한 노약자·장애인·싱글맘·여성·아이

77) 조문영(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 (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개조식 문장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23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 3) ‘예외적’ 비상사태라야 노출되는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거주자들,
- 4) 집 하나를 물려주지 못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중산층 여성
- 5) ‘행동하는’ 교수로 열심히 살았으나 은퇴 후 치매 환자로 홀로 남고, 요양
보호사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여성 노인,
- 6) 공기처럼 돌봄을 하다 죽어서야 제 이름 석 자를 남긴 어머니
- 7) 자기 삶을 살기 위해 이성애 결혼을 거부하는 ‘능력자’ 여성 청년
- 8) 신혼부부 대출도, 혼인·사망 신고도 못하지만 남성성의 권위를 조롱하면
서 저들 간의 섹스와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 커플.... 등

다. 정상성, 포기인가 거부인가? 누가 ‘포기’하고, 누가 ‘거부’하나?

사랑, 연애, 결혼, 아이, 집, 직장, 가족, 건강, 시민권, 국적 등 “한 사회가 정상적인 삶으로 축복해주는 것들”. 발표자는 상기한 목록들을 “3포 세대가 역설적으로 욕망하는 것들”이라 언급하나, 동시에 이를 당당히 거부하는 소설 속 인물들을 전면 등장시킨다. ‘가녀장’ 이슬아는 1인 여성 가구주이자 모부를 전사하는 생계부양자로 이성애 정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비정상’이 되고만 ‘82년생’ 김지영과 비교된다. 당당한 거부는 김멜라 <저녁놀>의 도발적인 상상력으로 ‘나’ 딜도의 당황, 무기력, 두려움, 혐오, 분노, 남성적 나르시시즘에 대한 통쾌한 비판이다.

청년들의 세계를 관통하는 불안의 양가성은 우울이자 열망이다. 그간 현장연구를 통해 토론자가 만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공유하면 서도, 그 미래에 각자 다른 세계상을 접속”하고 있다. “한편에선 생태적 전환이 더딘 데 대한 우울이, 다른 한편에선 개천의 용 신화가 무너졌는데도 각종 경쟁에 내몰리고 스스로 그것에 중독되는 데 대한 우울이 넘쳐 흐른다. 탈성장의 외침도 커졌으나, 발전, 안정, 성취의 열망은 ‘K’라는 표상을 붙든 채 여전히 트림 중이다”(『빈곤 과정』, 366쪽). 포기과 거부 사이는 〈딸에 대하여〉에서 딸의 퀴어 서사와 독거노인 여성의 가난/질병/돌봄 서사의 중첩을 말한다.

라. ‘대한민국 청년세대 공론장’에 출현하는 청년은 누구인가? ‘어떤’ 청년이 저 자신을 ‘어떤’ 식으로 등장시키는가?

발표문의 소설가 청년이나 소설 속 청년 화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하나 일정한 교육·문화 자본을 획득한 존재들이다. 작가이자 셀럽인 슬아, 대학 강사를 하다 해고된 ‘나’의 딸, 대학에서 만나 사귀고, 옥탑방을 전전하지만 덜도를 ‘책갈피’로, 모텔을 ‘도서관’으로 은어화하며 교감하는 성 소수자 커플...

필자는 이들을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the precariat that can speak)’로 주목해왔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디지털 리터러시’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가진 나라에서 자신의 피해, 고통, 우울, 열망을 (자의든 타의든) 가장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청년들이다. ‘청년 당사자’로서 언론, 출판, 청년 거버넌스 등 다양한 공론장에 진출하고, 청년 의제를 선취하고 발굴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여 가부장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GDP 주의 등 규범적

정상성에 도전하고, 청년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기 위한 매개로 재등장시킨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공론장에 등장시키는 교육·문화자본을 갖춘 (특히 수도권 대학생/대졸자) 청년들 vs. 미디어를 통해 이따금 발굴되고 호명되는 청년들(‘지방 청년’, ‘실업계 청년’, ‘산업현장의 청년’, ‘플랫폼 노동자 청년’, ‘수급자 청년’, ‘성매매 청년’...)

가족구성권, 쿼어 실천, 동물권, 비거니즘, 기본소득, 기후 행동 등 전자가 언론·출판·사회운동에서 적극적으로 등장시킨 주제들은 2018년 서울청년학회에서는 ‘핫한’ 주제였으나, 2016년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가 성남에 거주하는 250명(생존형·생계형) 독립생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빈곤 과정』, 321쪽). 한 중국 여성 청년노동자에 관한 필자의 문화기술지에는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계발할 기회가 계속 축소되고, 자원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결혼과 혈연가족으로 축소된 상황으로 결혼이라는 불안한 ‘성취’(『빈곤 과정』, 3장)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프레카리아트 내부의 차이와 (더 나아가) 위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발표자도 필자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본 혈연 너머의 가족 구성이 어떤 집단에게 통약불가능한 언어로 남았다면, (이들을 정상성의 가망 없는 수호자로 단순히 폄하하거나 외면할 게 아니라면) 운동·정치·교육·행정은 어떤 접근을 모색해야 할까? 계몽이 떠난 자리에서, 새로운 실천·사회운동이 (특정한) ‘나’를 피해자·증언자·당사자로 등장시켰을 때의 딜레마를 생각해 보게 된다.⁷⁸⁾

78) 장류진, 『달까지 가자』에 대한 서평(서울리뷰오브북스 3호) 참조.

마. 돌봄노동, 어떻게 연결하고 연대할 것인가?

〈나의 해방일지〉는 (가부장 체제를 여전히 붙들고 군림하는 남성뿐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여성 청년도 ‘엄마’의 돌봄 노동을 자연화하고 기생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에서 돌봄 노동에 가장 혹사당하는 (대부분 중장년 저학력·저소득 여성) 당사자들이 정작 돌봄 공론장에 등장할 여유나 감각이 부재하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난잡한 돌봄’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가장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증식해가는 윤리”이다. 더글러스 크림프는 ‘난잡함’을 “취약성으로 인해 서로의 안위를 배려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친밀감을 나누는 다양한 실험적 관계 맺음”으로 정의한다.

돌봄 공동체는 돌봄의 신자유주의적 외주화를 거부한다. “사람들의 돌봄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이 아니라 퀴어/생태/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난잡하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자는 뜻이다. 난잡한 친족은 혈연,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생존을 위해 상호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말, 살, 흙, 물, 바람, 동물, 식물 등 지상의, 지구 행성의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맺기로 확장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소설 속 인물들한테서 ‘난잡한 돌봄’의 가능성/잠재력을 포착한 것인지? ‘정상성’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엮이고 연대하고 새로운 실천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에 종속되기도, 또 다른 돌봄 착취를 낳기도, 정체성이 취향으로, 문화 자본으로 남으면서 배타적 부족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삶의 위험, 불안, 공포를 갖는 자들의 연대’는 예비된 것도, 자동발생적인 것도 아니다. 공장식 축사에 갇힌 돼지의 위험에 눈 뜨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축사에 갇힌, 다른 생명에 대한 폭력을 업으로 삼는 것 외에 별다른 출로가 없는 인간 노동자의 위험에 모두의 시선이 가닿는 것은 아니다.”(『빈곤 과정』, 340쪽)

“난잡한 친족들의 난잡한 돌봄이란 혈연가족을 운명공동체로 여기는 그들만의 돌봄 노동이 아니라 난잡한 방식으로 합체, 혼성되면서 상호의존하는 세계에 대한 비유이다.” → (앞서 소개한) 자원을 획득하려는 부단한 시도에서 결국 결혼밖에 남지 않은 가난한 여성의 자리, 결혼이 불안하나 유일한 ‘성취’가 되어 버린 취약한 여성의 자리는? 특히나 발표자가 강조했듯 “저출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삶의 불평등을 염려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면? 관련해서 소개해줄 만한 다른 소설이 있는지?

바. 현 정부의 퇴행!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 평등’, ‘성 소수자’ 같은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4절 Covid-19 이후,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 고령화와 노동 변화에 대한 대응-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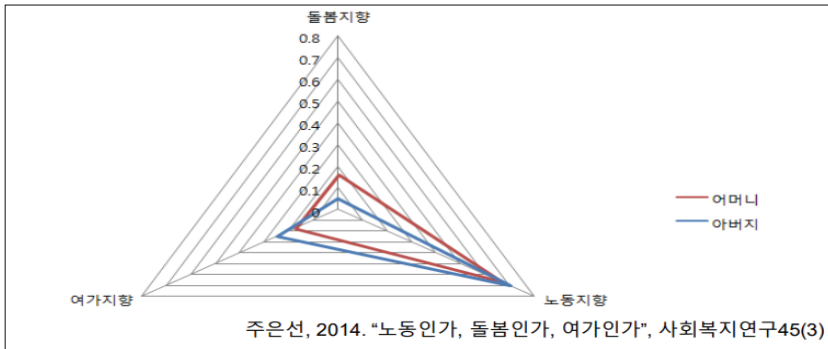
1. 서론: Covid-19 이후,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 탐색?

복지국가의 현실을 보면 세계 경제질서 재편 요구는 높지만 금융자본 주도의 축적과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와 결합한 신자유주의 국가가 지속되어 왔다. 그 속에서 복지국가는 최소 보

79)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발표문 내용임(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슬라이드 발표문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장으로 목표와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공공영역은 후퇴되고 민영화 등으로 시장과 복지가 결합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투자 패러다임과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삶의 변화는 요원하다. 유급노동과 무급 재생산노동에서의 불평등은 불완전한 젠더 혁명, 불완전한 가족 혁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국가가 여전히 대안일까?

[그림 5-26] 노동·돌봄·여가 지향 정도



불완전한 복지국가인 한국은 복지지출 증가 및 돌봄의 사회화에도 젠더 불평등 해소는 요원하다. 불완전한 젠더 혁명은 가부장주의적 노동시장과 가부장주의적 가족 속에서 여성 노동력 상품화로 돌파되지 않는 한계인 일, 소득, 시간의 젠더 불평등이 남아있고, 젠더 혁명의 계층화도 보인다. 불평등 증폭장치로서 가족은 동질혼, 출산의 계층화, 돌봄의 계층화로 설명된다.

Covid-19를 통해 왜 복지국가를 다시 살펴보게 되는가?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고용 및 소득보장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재발견하였다. 의료, 돌봄 관련 공공사회서비스와 국가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였다. 둘째,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유연한 결합과 새로운 균형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도덕적 모순”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거리두기(Sandel, Michael J., The Tyranny of Merit)는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연대를 강조하나 연대하지 않는 자들이 세계화의 승자(국가, 지역 상호의존과 무관한 수익)가 되었다. 넷째, 개인과 가족이 고립이다. 약자의 고통(학대, 영양실조, 젠더 불평등, 정서 문제 등)이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복지국가는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 때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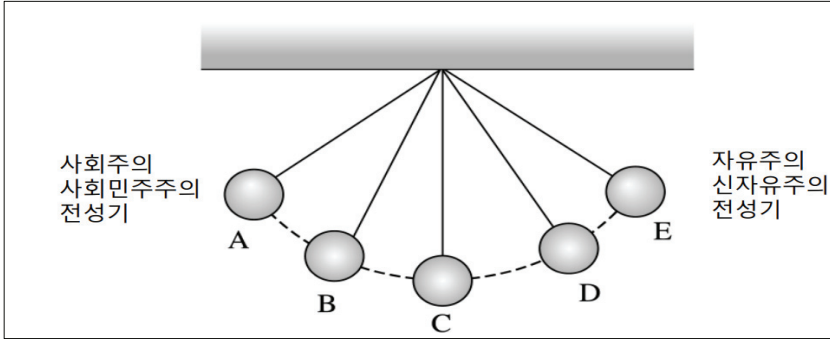
〈표 5-11〉 복지국가의 정의

- “복지국가는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에서의 불평등을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에서의 평등을 통해 수정해 낸 것”(Walter Korpi,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1983)
- 복지국가란 “시장의 힘을 수정하기 위해 조직적 권력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국가”(Asa Briggs,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1)

2. 복지국가의 본질과 역할: 한계? 가능성?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대공황, 파시즘, 세계 전쟁 등 자본주의 파국 위험에서 등장한 정치(노-자 타협) 경제(시장개입) 체제로서 복지국가이다. 정치적·사회적 수단의 작동,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수요 창출, 양질의 노동력 재생산 등)을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림 5-27] 복지국가의 성격



자본주의의 인간화, 평등, 연대 추구는 새로운 문화, 정서, 삶의 태도를 형성한다. 문명사회에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치이며, 스웨덴 사민당의 한손 총리의 언급처럼 ‘인민의 집’으로서의 사회이고, 시민권을 통한 평등을 추구한다(계급 분할 극복?)⁸⁰⁾ 이렇게 볼 때 복지국가는 ‘복지제도 묶음’, 또는 ‘복지지출’을 넘어서는 것이다.

노동력 동원 및 관리체계로서의 복지국가는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재생산 개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관여한다.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친구빈법 등은 공장으로의 동원에 일조하였다. 복지국가의 시대는 대량생산, 대중소비(일-빈곤의 분리)의 포디즘의 시대였다.

노동력 재생산 체계로서 복지국가는 돌봄의 사회화, 특히 공공화로 Social Care가 발전하였다. 여성이 임노동의 세계로 편입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중심 문제로 부각되었다. 일부 복지국가에서는 양성이 동등한 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제공자로 등장하였다(가부장주의의 극복?).

이렇게 볼 때 새로운 복지국가는 분배·노동·돌봄·정치·문화의 재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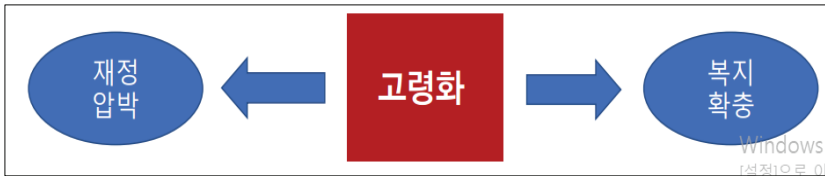
80) T.H. Marshall에 의하면 완벽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음.

사회권: 빈곤하지 않을 권리, 건강, 교육, 안정된 노후, 안전한 주거, 문화적 생활 등에 대한 권리

3. 복지국가에 대한 압박: 고령화와 노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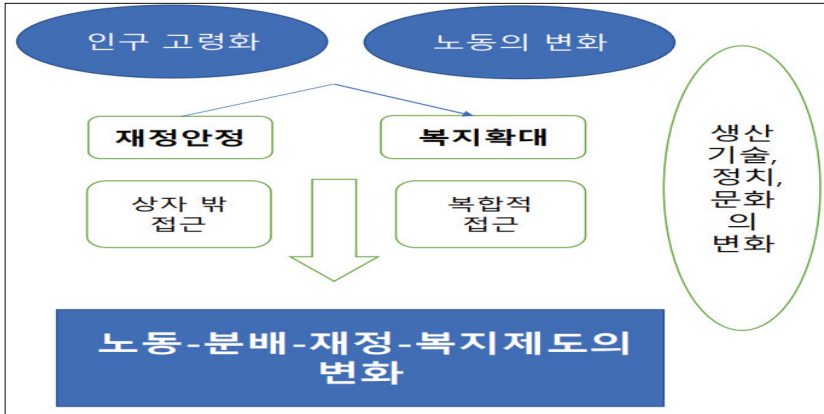
복지국가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산의 변화이다. 산업자본 이윤율 하락, 탈규제와 금융화, 기술혁신은 부문 간 이윤율 격차를 확대했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둘째, 노동의 변화이다. 불황+기술혁신은 사회적 필요 노동을 감소시키고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만성적 실업은 재정압박+복지요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셋째, 정치의 변화이다. 민주주의와 노동 해계모니가 쇠퇴되었다. 넷째는 인구의 변화이다. 고령화는 재정시한 폭탄?으로 간주되고 복지(안정적 소득보장과 사회적 돌봄)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그림 5-28] 노동의 변화, 인구의 변화가 가져오는 두 가지 요구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해 다른 접근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접근의 시작>인데, 하나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로 미래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기존의 문제 틀을 넘어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의 복합성, 다양한 연결에 주목하기!로 경제(성장·분배·재정)·노동·정치·문화 등과의 연결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논의 범위와 문제 구성에서도 두 개의 압력(고령화+노동의 변화), 두 개의 요구(재정 안정+복지 확대), 두 개의 접근 원칙(상자 밖 접근+연결성(복합성)) 하에 궁극적인 하나의 질문, 즉, '복지국가, 어떤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을 추구한다.

[그림 5-29] 논의 범위와 문제 구성



4. 다른 접근의 예: 인구 및 노동의 변화와 공적 연금

토론자는 연금 전공자이므로 복지국가의 새로운 접근에 있어 공적연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려고 한다. 즉, 인구, 노동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분배-재정-연금제도/재정방식 변화를 강조한다.

기존의 접근방법은 (생산 가능) 인구수 중심(핵심지표: 부양비), 보험료 중심(핵심지표: 필요보험료율)으로 접근함으로써 노동소득은 주어진 변수이며 유일한 재원이라는 재원에 대한 닫힌 사고를 바탕으로 한 양 중심, 노동소득 중심의 접근이다.

새로운 접근은 이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질 중심, 생산-분배-재정 복합적 접근방법이다. 인구의 질, 생산의 질 중심(핵심지표: 생산성, GDP 대비 지출(총량접근)) 접근이고 재원에 대한 열린 사고로 노동 소득 분배의 개선을 추구하고, 재원의 다변화를 추구(투자소득 등)한다. 혁신에 기초한 생산·분배·노동·재정의 변화는 삶과 사회를 재편하고 다른 복지국가로 전환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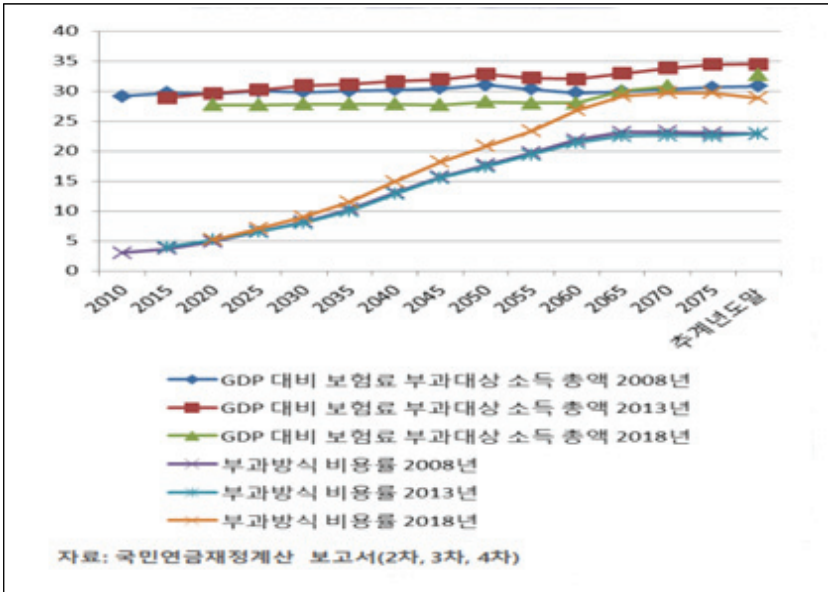
가. 다른 접근: 질 중심, 혁신에 기초한 노동(생산)·분배·재정 변화

질 중심, 혁신에 기초한 생산-분배-재정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출발점이 필요한데 이는 초점을 ‘양’에서 ‘질’로 바꾸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인지자본주의, AI를 이야기하면서도 ‘양’에 집착하는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 일자리의 질, 생산의 질, 소비의 질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산업사회의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규모를 의미하는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탁현우, 2016, p.60).”

연금정책에서도 기존에는 노동자 1명이 ‘노인을 몇 명’ 부양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었다면, 이제는 ‘어떤 노동자’가 ‘어떤 노인’을 부양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양’적 요소의 확대는 당연한 선택이나 고령 인구 부양에서는 노동인구 수만큼이나 생산력과 분배체계에 대한 동의, 지속성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GDP의 30% 수준에 그치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변화가 필요하다(상한 조정, 노동의 몫 증가 필요).

[그림 5-30]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추정치



새로운 접근은 또한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인 접근(사회의 질=삶의 질=공적연금지속가능성)이다. 노동의 재설계는 기존의 퇴직 인구, 퇴직 시기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의 재설계(자동화+work sharing → 주4일제)가 필요하다. 또한 생애 노동시간 재설계로 peaktime의 시간빈곤을 해결(일-삶 균형)하고 은퇴연령의 조정으로 노후, 은퇴, 필요노동 등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분배의 재설계 역시 노동소득 분배비율의 증가, 이전소득비율의 증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의 재설계, 분배의 재설계에 발맞춘 연금제도와 연금재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 다른 접근: 노동 재설계

1) 사회적 노동시간 재설계

자동화와 필요 노동량의 감소는 work sharing, Job sharing으로 필요 노동을 재분배하고, 대량실업은 대량 불안정고용(underem ployment)을 야기하고 급진적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주40시간제→주35시간제→주32시간제→주24시간제→주15시간제로 줄어들 수 있다.

“전후 22년은 공공부문이 ‘가난, 질병, 무지, 불결 등 사회악’의 제거. 이후 국가는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 ‘여가’를 장려하고 소득을 ‘공정분배’ 하여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Beveridge,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pp.31, 101, 159, 273).”

“경제가 성숙하면 노동수요를 자극하기보다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입해 산출량 대신 여가를 늘리는 편이 옳다(Keynes, General Theory, p.324).”

“민간의 투자수익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으로 줄일 것” “이는 아담이 남긴 본성, 즉 쓸모있는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Keynes, “Economic Possibilities”, pp.368-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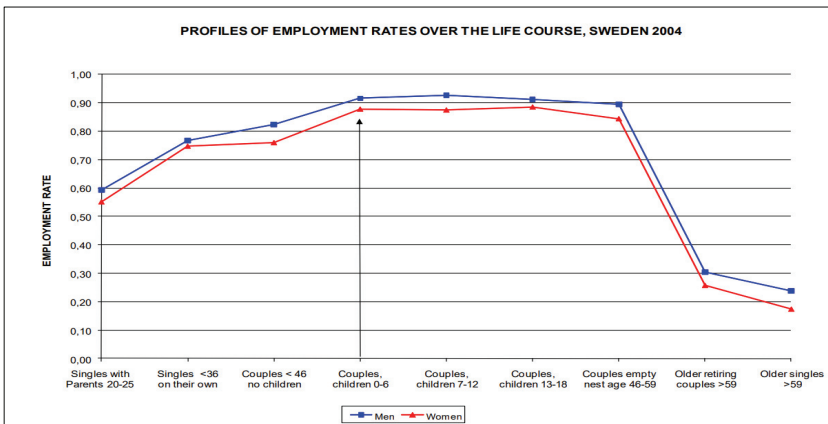
2) 생애 노동시간 재설계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간 부여와 정년연장을 의미하며, 새로운 작업능력 개념에 기초한 평생교육, 훈련체계 구축, 노동현장 변

화, Age Management 등을 포함한다.

우선 peacktime의 시간빈곤 해결을 통한 일-삶 균형(work-life balance)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만0~6세 아동 양육기와 만7~12세 아동 양육기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을 결합하여 단축된 노동(줄어든 임금)+돌봄수당+아동크레딧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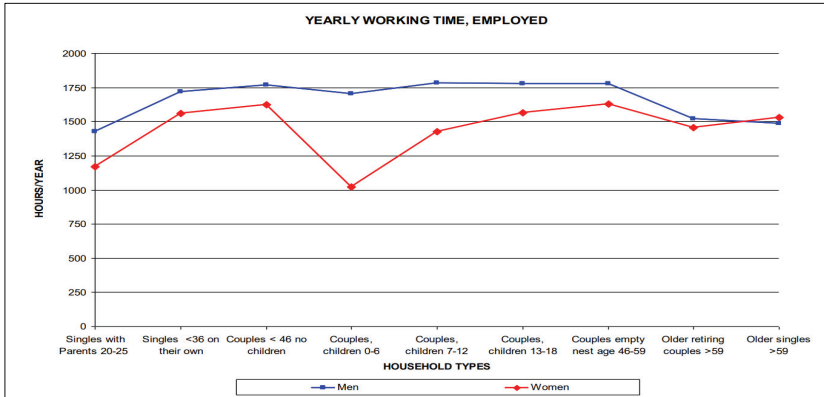
[그림 5-31] 스웨덴 생애 고용량



Anxo, Dominique(2013) "Life Transitions and Welfare Policies -The Swedish Experience". KLF International Symposium 23 April 2013, SEOUL

24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그림 5-32] 스웨덴 노동시간



Anxo, Dominique(2013) “Life Transitions and Welfare Policies -The Swedish Experience”. KLF International Symposium 23 April 2013, SEOUL.

또한 은퇴 연령의 조정으로 노후/은퇴/필요노동 개념을 재정립한다. 2033년 만65세→67세→70세 →70세 이상으로 은퇴 연령을 조정하고 중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65~74세, 75~84세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을 결합하여 단축된 노동(줄어든 임금)+부분연금을 활용한다.

스웨덴 생애 고용량과 노동시간 그래프([그림 5-31. 5-32])에서 볼 수 있듯이 생애 고용량과 노동 시간량은 일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관대한 사회적 임금(Social Wage), 급진적 휴가정책을 조건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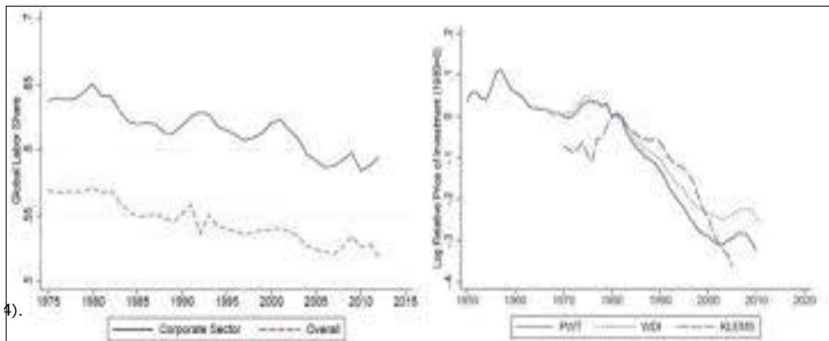
은퇴 연령 조정의 조건은 작업능력 개념의 재정립과 노동 현장의 변화 (Age management)가 전제되어야 한다. 작업능력 개념은 1990년대 초 핀란드 산업보건원(FIOH: 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이 기존 개인 중심의 작업능력(workability)개념을 ‘개인·작업 조직·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재정립한 것이다.(1층: 기능상 역량,

건강 등, 2층: 지식, 숙련, 3층: 인적 자원: 가치관, 태도, 동기, 4층: 노동 환경: 일 내용, 일의 요구, 작업조직, 조직관리 등(Gould et al., 2008)).

다. 다른 접근: 연금재정의 변화

한국 국민연금의 경우 점진적인 보험료율의 인상과 함께 소득 상한을 대폭 조정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보험료 부과 기반(GDP의 약 30%)을 확충함으로써 기여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의 향상이 필요하다(노동소득 분배율 = 총피용자 보수 / (총피용자 보수 + 총영업 잉여)).

[그림 5-33] 전 세계 노동 소득분배율 추이



자료: 유동훈 외(2019). 노동소득 변화와 동학, KLI; 원자료: 그림1과 7 Karabarbounis and Neiman(2014).

* 1980년 65%에서 2013년 58%로 감소 **자료있는 59개국 중 42개국의 경향 *** 오른쪽 그림: 4개국(미, 일, 중, 독)

연금 재원 다변화의 전제는 높은 수급률(2050년 이후)인데 이를 위해 ‘목적세’의 부과와 조세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아래는 프랑스의 사례들이다.

24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① 예1: 다양한 투자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 투자소득에 대한 프랑스의 사회보장목적세: 2022년 기준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사회보장 목적세는 CSG 9.2%, CRDS 0.5%, 사회세, 연대세, 추가기여금 7.5%로 총 17.2%임

② 예2: 기업 매출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 법인세에 대한 사회적 기여: 2022년 기준 연 매출 763만 유로 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세 결정시 정의된 과세표준에 3.3%의 세율을 적용함
- C3S: 대규모 법인에게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모든 기업, 공기업, 협력 부문, 경쟁 및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에 부과함으로써 비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호 재원을 보조함(김은경, 2018). 2022년 기준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 €19,000,000을 초과한 회사에게 부과하며 매출의 0.16%임
- 프랑스의 특별기여(CACE): 2022년 기준 10억 유로 이상 매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에서 76만3천 유로를 공제한 액수에 부과함
- 특별기여에 대한 추가 기여금: 2022년 기준 매출 30억 유로 이상 기업

③ 예3: 연금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라. 다른 접근: 연금제도의 변화

1) 연금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의 조정

가입 상한 연령을 만70세? 또는 만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고용 기간 대 은퇴 기간의 비율 고려하여 정년 변화에 연동된 수급 연령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 조치로 소방관, 경찰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

이 큰일에 장기(38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는 삭감없이 이른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장기 재직연금(years of service pension)도 필요하다.

2)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 지급률을 조정해야 한다.

3) ‘연금+기타 소득’의 다양한 조합에 적극적으로 노화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만65세 이상부터는 적극적 노화 개념을 반영한 다양한 ‘연금+기타 소득’ 결합방식을 제시한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에 시간제 노동이 수급요건이었던 파트타임연금(part-time pension)을 파트연금(part-pension)으로 전환하고 수급요건에서 노동요건을 삭제하였다. 파트연금은 감소한 소득과 감액된 연금을 조합한 것으로 일본만 아니라 자원봉사, 예술 활동, 정치 활동, 노조 활동 등 다른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4) 장애연금은 사용자 기여에 지출 책임을 반영하여 대기업에는 경험요율제를 적용하고 장애연금 휴면제 등을 도입하도록 한다.

5) 공적연금 수급률 확대

우선,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한다. 주 15시간 미만, 60세 이상 노동자 등에 대한 가입의무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비전형적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5년으로 단축하고 수급률은 1956년생이 35.2%에서 49.4%로, 1990년생은 73.4%에서 82.9%로 상향 조정한다.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한다(‘위장된 자영자’들의 실질적 종속성과 사용자 책임 부과 문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 전속성과 지속성,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있는 개인 단위 가입자의 범주 구성). 넷째, 사업장가입자의 지위 유지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수급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체납사업장은 보험료 추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

마. 구조개혁(연금급여 축소/부분 민영화)은 재정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가?

구조개혁은 확정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던 연금과 퇴직수당을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분리한다. 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보장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연금제도가 된다. 보장의 안정성 약화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안정성 강화 요구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즉, 시장위험과 수익률 편차는 급여 불안정으로 이어져 노후는 은퇴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낮은 수익률의 DB, 불안정한 DC, 위험 감수자는 노동자, 유일한 승자는... 금융자본+혼탁한 시장..., Mis-selling Issues)

구조개혁은 또한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여지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퇴직연금은 상층노동자에게 의미있는 추가적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다. 또한 구조개혁은 물가연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고령 노인 빈곤과 장수 위험에 대한 대응 기능이 부족하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하락으로 사망, 장애에 대한 보장도 약화된다.

5. 정리

가. 요약

인구와 노동 변화로 인한 재정 안정, 보장강화의 요구는 노동(시간) 배분의 근본적 재편이 대응의 핵심이다.

또한 인구와 노동의 변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은 노동·분배·복지 재정 및 제도의 조응적 변화이다. 노동은 더 늦은 나이까지, 더 유연하게(시간유연성) 일하도록 하는 것이고, 분배는 더 평등한 1차 분배가 복지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며, 재정은 사용자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재정 책임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능력 개념, 노동 조직화 방식과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임금구조, 노사관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 국가와 정치의 기능은 변화를 주도하고, 영역간 변화의 속도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현장 실행력 높이는 것이다.

인구 및 노동 변화와 공적연금은 노동·분배·연금 재정 및 제도의 포괄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해법인 공적연금 축소와 이에 수반된 부분 민영화(소위 다층체계구성)는 연금(복지)시장의 창출로 금융자본의 수익만 안정화할 뿐, 노후보장을 더 불안정하게, 더 불평등하게 만들고 재정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대안은 연금제도라는 상자를 넘어서는 다른 접근을 통해 삶의 질을 현격하게 높이는 다른 사회, 다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고령화 및 노동 변화에 ‘더 작은 정부와 더 큰 시장’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장 총비용 절감의 실패와 사회 후생 개선의 실패로 불평등이 커지게 된다. 현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 사회서비스 강화 전략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나. 노동의 변화로부터 이어나가야 할 이야기

가족, 돌봄의 재설계는 가족 혁명과 성 평등 혁명이다. 가족과 노동(재생산/생산, 공/사 영역)을 가로지르는 변화를 추구하고, 돌봄의 질 제고, 선택권 강화, carer-caree의 동등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제고 및 성 평등의 계층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열린가족)을 공식화하고 시민권, 복지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간 자율성 강화에서 시작하여 정치, 정서, 문화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권력과 변화의 리더십을, 문화적으

25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로는 존중과 연대의 회복, ‘사회적 지위 불안, 혐오, 수치심’ (Wilkinson, Richard and Kate Pikett, The Inner Level, 2018)의 극복과 함께 새로운 사회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책임과 돈의 연대(연금?)를 넘어서는 연대로 연결을 통한 공감(empathy)이며, 집단의 단일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연대로 연결을 통한 empowerment이다. 이와 함께 생태적으로는 노동-복지의 대안적 결합과 lagom, 새로운 삶의 양식과 절제이다.

〈표 5-12〉 공적연금 지출 전망

(단위: %, GDP 대비 비율)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도	40%	45%	50%	연도	30만원 대상 70%	30만원 대상 100%	40만원 대상 70%	40만원 대상 100%
2021	1.6	1.6	1.6					
2028	2.3	2.3	2.3	2022	1.0	1.43	1.3	1.86
2030	2.5	2.5	2.5	2030	1.4	2	1.8	2.57
2040	4.1	4.3	4.4	2040	2.0	2.85	2.7	3.86
2050	5.8	6.1	6.5	2050	2.6	3.71	3.4	4.86
2060	7.5	8.1	8.8	2060	2.9	4.14	3.9	5.57
2070	8.9	9.9	10.9	2070	3.2	4.57	4.3	6.14

주: 45%, 50% 급여율은 2021년 이후 적용

제4절-1. 토론 181)

가. 토론 논점 #1

본 행사 프로그램에 기재된 발표 제목은 “저출생 고령사회 팬데믹 이후의 삶의 질과 복지”였다. 이를 실제 발표자의 제목과 비교해보면 그것들이 담고 있는 요소들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한국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압박하는 주된 환경요인에 더해진 또 다른 외생변수인 코로나19와 복지국가 미래 구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이거나 경험적인 논의를 발표자의 슬라이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발표자는 슬라이드 3쪽에서 코로나19를 통해 국가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고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유연한 결합과 새로운 균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필요성이며 코로나19 때문에 새롭게 드러난 문제영역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사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팬데믹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낳을지를 예단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그렇지만 복지국가의 재편 또는 재개념화를 고민한다면 코로나19가 노동과 삶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이론적, 역사적 검토를 해야 한다. 발표자의 슬라이드에서 코로나19는 이러한 체계적 외생변수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81) 조찬수(강남대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 이 토론문의 내용은 그 자체가 저작물이므로 필자의 사전 허락없는 인용을 금합니다.

나. 토론 논점 #2

발표자는 슬라이드 5쪽에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한 단계”로 규정하면서 그 등장 배경으로서 대공황부터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의 기원은 1930년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유럽, 특히 제정독일에서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 특히 노동계급의 수적 증가가 초래할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한 지배계급이 민주화 대신 선택한 대응책이 복지국가였다.⁸²⁾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발전단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본주의 존속을 위해 북미와 서유럽의 나라들에서 지배계급이 내린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다. 복지국가는 지도에 표시된 다음 정거장이 아니라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름길이나 우회로를 여행자가 직접 그려 넣은 것이었다. 복지국가는 그 어떤 제도나 현상보다도 정치적이다. 발표자가 슬라이드 여러 쪽에서 “문화”를 반복하여 언급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코로나19와 같이 21세기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총체적 반성을 요하는 체계 수준의 도전에 맞서 복지국가를 재설계하기 위한 궁극의 조건은 생산과 소비에서의 ‘행태변화(behavior change)’라고 보는 시각에 토론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복지국가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념으로의 진전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전과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세상은 결국 정치가 바뀌는 것이다. 발표자는 슬라이드 여러 쪽에서 “정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복지국가 재설계를 위한 공론장이 정치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을 상론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슬라이드 뒷부분으로 가서는 갑자기 연금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빼곡히 쓰여 있다.

82) Herbert Obinger and Carina Schmitt, “Guns and Butter? Regime Competition and the Welfare State during the Cold War,” *World Politics*, Vol. 63, No. 2 (April 2011), p. 250.

체계 수준, 초국적 수준의 주요 변수들—냉전 종식,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주주의 퇴행, 코로나19 등—을 복지국가 재설계와 연결하여 논의했어야 한다고 토론자는 생각한다.

다. 토론 논점 #3

복지국가 위기론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들이 꽤 있다.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복지국가 지출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⁸³⁾ 세계화는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려 오히려 확대시켰다. 한번 주어진 복지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된 부담이 아니다. 권위주의 체제 통치자들에게도 복지지출 감축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선택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복지국가는 퇴락하기보다는 바뀐 현실에 맞춰 고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물론 복지국가를 압박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있다. 발표자도 복지국가 압박요인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과관계를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생 및 고령화 추세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복지국가를 압박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복지국가 성공의 결과이다. 저출생은 젠더혁명의 결과이기도 하다. 젠더혁명은 20세기 후반 민주주의 심화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동시에 젠더혁명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우파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데 일조했다. 정체성의 정치에서 젠더는 다른 어떤 구성요소들보

83) 1990년대 중반에 복지국가 축소론을 반박한 대표적 학자인 폴 피어슨의 주장은 201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존 스티븐스의 진단에 토론자는 동의한다. John D. Stephens, "Revisiting Pierson's Work on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Reform in the Era of Retrenchment Twenty Years Later,"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48, No. 2 (April 2015), pp. 274-278.

다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라. 토론 논점 #4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서구에서 자리 잡은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를 대공황을 전후로 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양차대전 사이에 자유시장 자본주의 위기를 촉발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제1차 세계대전 자체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위기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볼셰비키 혁명이었다. 그리고 냉전을 빼고서는 전후 복지국가 발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⁸⁴⁾ 복지국가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응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국가 재편의 필요성은 자본주의 자체의 변화—서비스 경제와 지식경제의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화—로 설명되어야 하는 정도만큼이나 냉전 종식의 효과로써 설명되어야 한다. 냉전 종식은 자본가들이 너그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열어주었다. 동시에 장벽의 시스템이었던 냉전이 끝나면서 민주주의도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심화되었고 그것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온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서구의 민주적 자본주의 모델의 위기의 원인이다. 복지국가가 위기는 바로 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84) Klaus Petersen, "The Early Cold War and the Western Welfare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Vol. 29, No. 3 (October 2013), pp. 226-240.

마. 토론 논점 #5

발표자가 케인스를 인용하는 방식에 대한 토론자의 지적과 발표자의 ‘사실인정’을 여기에 기록해두고자 한다. 토론자는 발표자에게 슬라이드 14쪽에 따옴표로 인용한 구절들이 원문에서 가져온 것인지 물었다. 발표자는 원문을 인용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원문에서 인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따옴표로 묶은 문장 1개와 구절 2개를 써놓았다. “경제가 성숙하면 노동수요를 자극하기보다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입해 산출량 대신 여가를 늘리는 편이 옳다”고 쓴 것의 출처는 【Keynes, General Theory, p.324】로, “민간의 투자수익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으로 줄일 것”, “이는 아담이 남긴 본성, 즉 쓸모있는 존재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쓴 두 구절의 출처는 【Keynes, “Economic Possibilities”, pp.368-369】로 표시하였다. 발표자가 케인스를 인용한 주된 이유가 노동을 통한 소득에 대비되는 “여유”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케인스가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의 326쪽⁸⁵⁾(발표자는 324쪽이라고 썼음)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케인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여가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원한다고 봐야 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여가를 강요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케인스는 말한다. 토론자는 발표자를 비롯한 학술회의 참여자들에게 326쪽 내용의 일부를 읽어주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t present the evidence is, I think, strong that the great majority of individuals would prefer increased income to increased

85) 토론자가 참조한 케인스의 텍스트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된 2013년 판이다.

leisure; and I see no sufficient reason for compelling those who would prefer more income to enjoy more leisure.” 아울러 토론자는 케인스의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이 Essays in Persuasion (1931)⁸⁶⁾에 실린 글임을, ‘주 15시간 노동’을 케인스가 언급한 것은 맞지만 발표자가 따옴표 안에 쓴 구절은 원문에 없음을 발표자를 비롯한 학술회의 참여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발표자는 슬라이드 4쪽에 아사 브릭스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1】로 써놓았는데, 브릭스의 이 1961년 저술은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 No. 2, pp. 221-258에 실린 논문이므로 저서를 나타내는 이탤릭체가 아닌 따옴표로 제목을 묶어 표시했어야 한다.

제4절-2. 토론 287)

발표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이와 함께 한국식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노동비용의 다운사이징으로 빚어진 사회 문제들을 유지할 만큼 자본의 헤게모니는 불변적인가? 지구적 차원의 자연재해와 재난 등으로 드러난 기후정의 등, 생태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는 지속가능한가? 두 번째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은 어떠한가? 저출

86) 토론자가 참조한 케인스의 텍스트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된 2013년 판이고, 해당 논문은 321-332쪽에 실려 있다. 발표자가 슬라이드 14쪽에 “pp.368-369”라고 쓴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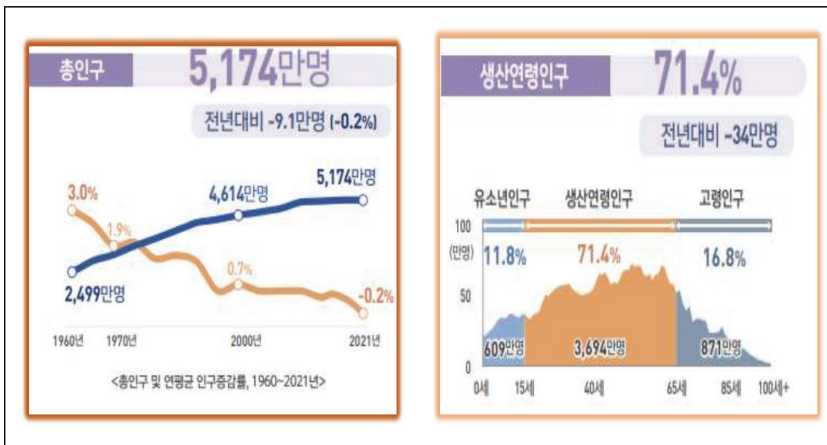
87) 제갈현숙(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토론문 내용임(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슬라이드 토론문을 서술식 문장으로 수정함)

생으로 빚어진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 신자유주의 시대 경쟁체제에 내몰린 개인의 생애 지속가능성, 그리고 양극화와 돌봄 공백의 비례적 확산이 시민에게 미치는 보편적 결과는 어떠한가?

가. 한국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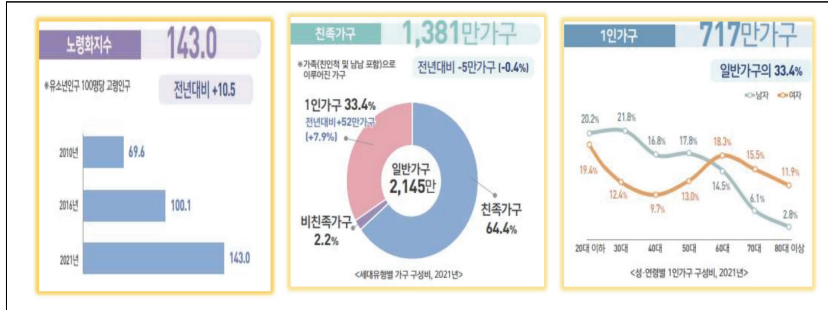
한국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추세가 확연히 나타난다.

[그림 5-34]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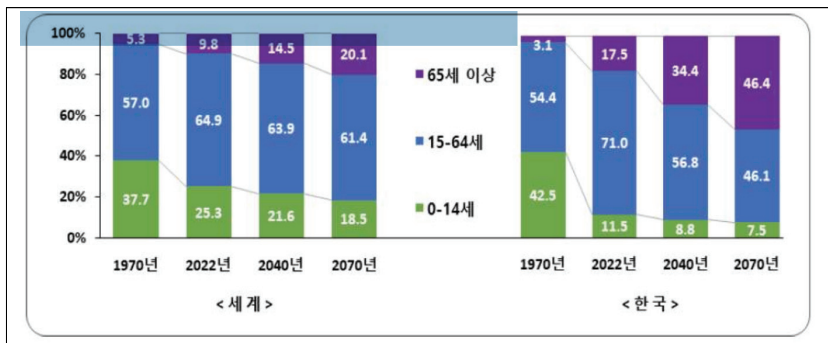
25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그림 5-35]노령화지수, 세대유형별 가구 구성비, 성·연령별 1인가구 구성비



고령화지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 가구는 감소하고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33.4%이다. 60대 이전까지는 남성의 1인 가구가 여성보다 높다가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사적 돌봄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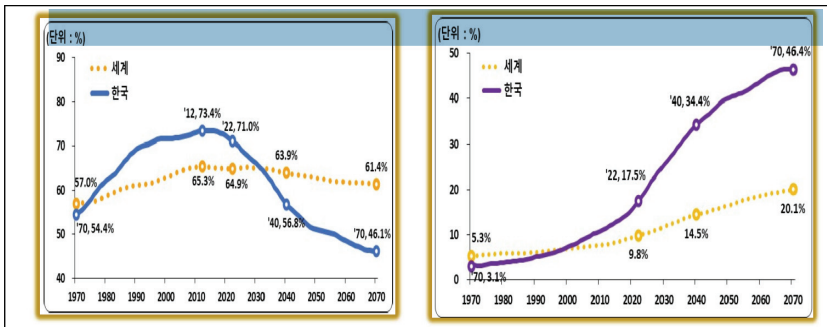
[그림 5-36]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2022.9.)



1970년(한국의 국가적 차원의 산아제한정책 시기)에는 0~14세까지 비율이 세계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2022년 기준, 세계보다 한국이 높지만, 향후 18년 후인 2040년의 한국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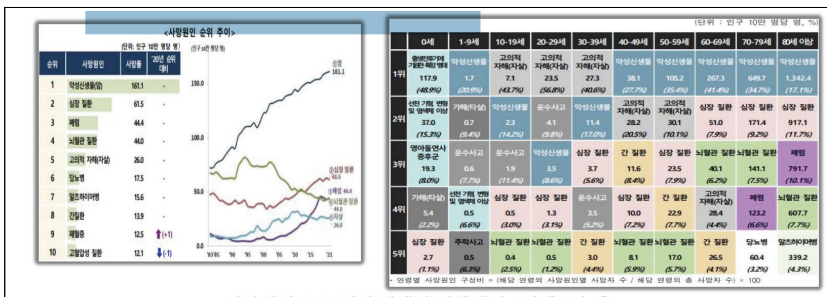
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평균보다 7.1%p 낮고, 2070년에는 18%p로 2.5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급감한다. 이러한 인구의 급감은 전지구적으로 보면 보편적 현상이 아니다.

[그림 5-37]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및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



2030년 이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세계평균보다 낮아져서 2070년에는 15.3%p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 구성비에서 2022년 세계와 한국의 격차는 한국이 7.7%p 높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40년 19.9%p, 2070년 26.3%p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계된다.

[그림 5-38]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가 전체에서 5번째로 높다. 그러나 10세~39세까지는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위이고, 40세~59세까지는 사망원인의 2위가 고의적 자해이다. 이는 살고 싶은 사회로서의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질문하게 된다.

주요 지표를 요약해보면 세계의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와 고령 인구의 합인 부양인구의 비)는 2022년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54.0명에서 2070년 62.9명으로 1.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중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총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 40.8명 → 2070년 116.8명으로 2.9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국가 중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2년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2070년 상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고령 인구의 비)는 2022년 15.1명→2070년 32.7명으로 2.2배 증가할 전망이다. 2070년 라틴아메리카는 3.3배로, 아시아는 2.8배로, 2022년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970년 5.7명(188위)에서 2022년 24.6명으로 56위, 2040년 60.5명으로 9위, 그리고 2070년에는 100.6명으로 1위의 국가로 전망된다.

나. 20세기 복지국가의 대체물로서 돌봄 국가

1) 돌봄 국가 구상의 주요 컨셉

돌봄 국가의 복지란 일반적인 의미의 필요(needs)라기보다 구체적으로 돌봄 필요(care needs)를 제공하는 의무이다. 20세기 복지국가는 사회문제와 필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복

지가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인간의 의존성, 이에 따른 돌봄의 필요, 특히 의존자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의 돌봄 필요에 대한 인식을 찾기 어려워진다. 특히, 돌봄 제공자가 겪는 불평등, 차별, 착취와 억압의 구조적 부정의를 직시할 수 없다. 즉,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낙인과 수모, 국가를 시혜적인 기관으로 보는 입장이 재생산될 수 있다.

필요에 기초한 복지는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 제공자의 돌봄을 고려해서 복지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 돌봄 국가는 의존자의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돌봄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로서 복지이다. 이를 위해서 돌봄 제공자의 돌봄 필요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되고,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국가가 시장을 규율하는 정도인 탈상품화에 따라 복지가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돌봄 국가에서 복지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돌봄 관계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본다.

2) 돌봄 국가에서 돌봄의 공공윤리와 복지

돌봄 국가에서 돌봄윤리는 공적 책임의 원리로, 즉 돌봄의 공공윤리로 적용·운영된다. 복지란 결국 사회 전체가 담당하는 집합적인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의 논리에 기초한다.

20세기 복지국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돌봄 위기’에 선제적이고 심층적인 대응에 한계를 맞고 있다.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 필요, 돌봄 의무와 돌봄 관계를 전제하는 돌봄 국가는 돌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 가능하다(Engster, 2015). 돌봄 국가 복지의 장점은 단지 돌봄 이슈

를 포함하도록 복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선다. 궁극적으로 돌봄 국가의 복지는 돌봄 필요와 돌봄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경제구조의 재건축을 추구(돌봄 인프라의 구축)한다. 엄격한 공사 구분에 기초한 현행 복지정책을 재정립하고,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는 복지국가 레짐의 변화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⁸⁸⁾

돌봄 국가의 복지는 돌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 일반에 보다 큰 함의를 갖는다. 돌봄 국가의 복지에서는 빈곤 문제에 대해 다르게 접근한다. 기존의 빈곤 정책은 크게 생계부양자 모델과 빈자 모델 중심이었지만,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실제로 빈곤을 겪는 대다수의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 특히 한부모가족이 빈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빈곤이 돌봄과 여러 겹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겪는 돌봄 결핍, 돌봄 제공자에 대한 차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감내하는 불평등 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정책은 인간의 상호의존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직시하는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편은 사회정책의 전환 수준 이상의 체제의 문제와 직결된다.

88) 돌봄 국가 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와 돌봄의 이질성과 대립성이 갖는 쟁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

다. 복지와 돌봄에 대한 대안적 접근

1) 돌봄 혁명 행동회의(Aktionskonferenz Care Revolution)

□ 돌봄 혁명 네트워크

의료, 간병, 보육, 교육, 주거, 가사노동, 섹스노동 등 사회적 재생산 부문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우리 이상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필요 지향적인 돌봄경제(eine bedürfnisorientierte Care- Ökonomie)로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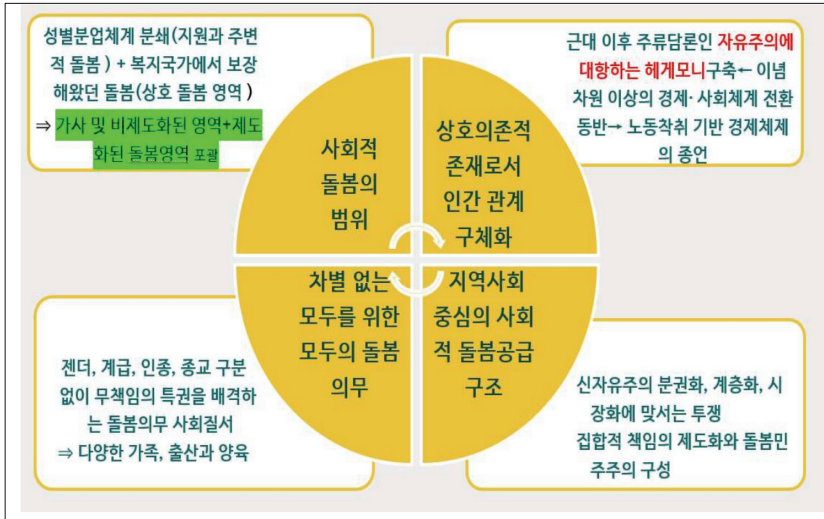
-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가?
- 어떻게 스스로를, 그리고 타인을 돌볼 것인가?
- 우리는 어떻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며 훌륭한 의료의 제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적 재생산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긴축 수단들로 인해 빈곤과 폭력, 혹은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차별에 노출되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시장이 사회적인 것을 밀어내는 가운데 공적 서비스와 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간병 및 주거와 같은 공적 서비스가 점점 더 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부자들의 특권이 되고 있다. 돌봄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시화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돌볼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가치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돌봄 혁명 결의문 6가지 제안

- ① ‘좋은 삶’을 목표로 해야 한다. 좋은 삶은 자본주의적 경쟁 및 이윤 논리와는 모순 관계에 있다.
- ②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배려의 문화를 보장해야 한다. 돌봄 노동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며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돌봄 노동의 경제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③ 돌봄 노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수재나 식료품의 생산에 드는 시간은 지난 5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모두가 시간을 얻어야만 돌봄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를 돌볼 시간 또한 낼 수 있다.
- ④ 주거는 인권이다. 저렴하고 품위를 갖춘 거주공간과 삶의 공간이 모든 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⑤ 교육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며 교육은 민주화되어야 한다. 배움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지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다.
- ⑥ ‘함께하는 공적인 것(das gemeinsame Öffentliche)’을 강화해야 한다. ‘모두의 권리에 대한 권리(ein Recht auf Rechte für alle)’가 필요하다

[그림 5-39] 요약: 새로운 복지국가의 탐색 중 하나로서 돌봄 사회





제6장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

제1절 한국의 인구 현상과 가족 변화

제2절 저출생과 청년세대

제3절 가족의 변화와 재생산 위기

제4절 젠더, 성 평등(성차별), 가족문화

제5절 토론 및 제언

제 6 장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⁸⁹⁾

제1절 한국의 인구 현상과 가족 변화

1. 인구 현상과 가족인구학

인구의 결정, 즉 저출생(저출산), 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 현상과 인구 변화의 요인들은 매우 많기에 인구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인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인구학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기보다 인구와 인구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며 사람(개인)에 대해 논하는 학문이라 할 것이다(조영태 2021). 이러한 인구학 분야에서도 가족인구학(family demography)은 인구와 가족, 가족과 인구의 관계와 그 변화, 개인과 가족, 인구와 개인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가족 인구학이란 가족과 가족과정(family processes)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로 주로 가족에서의 인구 변화와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해 연구한다. 가족에서의 인구 변화란 자녀 수의 변화, 혼인 시기 및 지속 기간, 부모와 자녀의 동거 기간, 커플 관계, 가족 구성의 변화 등을 말한다. 가족 개념은 복잡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가족, 가족

89) 김인춘·최정원(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중간보고 내용을 수정한 것임(“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에서 발표)

변화, 나아가 인구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Seltzer 2019). 또한 외형적, 수량적 가족 변화뿐 아니라 가족의 행동, 생각, 태도, 선호 등을 연구해야 가족과정, 즉 가족이 어떠한지,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가족인구학은 ‘각 개인의 가족 관계’라는 관점에서 가족을 연구한다. 가족은 인구학에 매우 중요한데 가족의 구성과 역할, 가족과정이 인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족의 변화는 인구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가족인구학적 관점은 인구와 인구 현상에 대한 거시적, 구조적인 관점의 접근보다 개인과 가족의 미시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중시한다. 인구 변화는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근대화의 완성과 포스트 산업사회가 될수록 가족에서의 인구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크게 나타난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에서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들 간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요인 등 여러 배경과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상이한 가족 경험, 세대를 통한 경제적 자원에서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불평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 유대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또한 개인의 행복이나 가족의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인구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고 극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비관적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를 심대하게 변화시켜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더해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부양 문제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노동력, 특히 돌봄 노동력 부족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기에 해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에서 사적 소득 이전이나 가족 돌봄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급격한 가족의 변화에도 크게 기인한다.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해체는 물론, 가족의 다양성과 다양한 출생 등으로 가족 구성원은 갈수록 복잡적이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역할, 특히 부양과 돌봄의 의무 문제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인구절벽, 초고령화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경각심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다. 2022년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를 보면 국민의 46.8%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4.7%가 ‘비혼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 따라서 인구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보다 그 현상과 변화된 인식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응(적응) 방안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인구 현상은 사회 변화의 주요 결과이기도 하고,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다. 현재의 인구 현상은 여러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의 결과이다. 악화된 소득분배는 물론, 크게 높아진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긍정적 요인 또한 현재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를 촉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과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인식과 가치관, 행동의 변화는 매우 중요했고 이는 앞으로 또 다른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나아갈 방향 또한 달라질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를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이므로 과거로의 회귀(?)가 필요하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를 ‘문제’로 보는 경우에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인이 행복한 사회’의 추구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시각과는 다

른 저출생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생 사회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가치, 행복 등에 대한 개념과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명을 대하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관점에서 의존-자립의 개념, 노동이라는 개념 등 우리 사회의 근본 조직 원리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예측보다는 현상적 관측이, 대응보다는 적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바탕 하에 모든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이상직 2022). 인구감소의 경향을 수용하는 가운데 전환의 과정을 어떻게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거시적 관점보다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 개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인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삶과 생애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에 맞는 법·제도적, 정책적 적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적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2. 한국의 인구 현상과 저출생·고령화의 요인들

한국의 초저출생·초고령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사회 자유화라는 우리 사회가 성취한 급속한 성공의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다. 초고령화 현상은 확실히 근대화, 즉, 발전주의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의 결과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 또한 향상되어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잘 관리해 올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위생과 의료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고, 국

가적으로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신정완 2022). ‘장수’의 문화적, 심리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초고령화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 급속하게 커진 경제력과 사회발전,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현재의 저출산 현상 또한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공동체 가치 속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산아제한)이라는 근대화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정책의 성과 또한 각 가족과 개인들의 가치관과 행동의 변화가 함께 한 결과이기도 하다.

비혼, 만혼, 무자녀 또한 성공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성찰적이고 더 주체적으로 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사회적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자신의 미래 삶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별 문제가 없더라도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가족과 가문, 타인의 시선, ‘국가적’ 요구(필요)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 근대화, 즉 사회 자유화의 전형적 모습이다. 북유럽 사회에서처럼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선진적인 개인주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인구학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와 달리 여성과 젠더, 청년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주체성, 선택의 자유가 중요해진 것이다.

개인의 주체성과 자유는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초저출생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주거비, 교육비 등 저출생 현상

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들이 거론되어 왔고, 특히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계급이나 집단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기 어렵다는 실증적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이는 초저출산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경제가 성숙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노동시장 양극화나 ‘고용 없는 성장’,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등도 출생율이 높은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그 정도는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엔 실소득 대비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한국보다 높지만 출생율이 더 높은 나라들도 있다는 점에서⁹⁰⁾ 경제적 요인이 저출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출생률이 낮은 나라는 없고, 한국만큼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나라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국 사회 특유의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청년세대의 현실이나 특성, 한국의 ‘가족’과 가족주의, 한국 여성의 삶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많은 연구들이 강조해왔다.

제2절 저출생과 청년세대

1. 청년세대의 특성과 가치관의 변화 - 뉴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

가치, 규범, 목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

90)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PIIE)의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 한국의 재정 및 출산율 전망” 참조.(PIIE, 2021)

는 최종렬 교수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민족주의라는 공동체적 가치 아래 작게는 가족공동체, 크게는 국민국가 공동체가 형성되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기는 주관적 가치 추구나 자기계발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개인의 자기계발 차원의 성공, 생존, 힐링, 좀비주의 외에도 소박한 소시민적 가족주의나 나르시즘적 개인주의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민족주의 공동체, 즉 ‘국가’의 가치를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2030 세대가 직접 겪은 세월호 참사와 최근의 이태원 참사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한때 ‘국민국가 만들기’를 추동한 민족주의의 공동체 가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한계에 처하면서 모두가 준거할 수 있는 초월적 상징체계로서의 힘을 잃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따라 삶을 조직하지 않는다.

한계효용 차원에서 자기계발과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거나, 이것이 어렵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타자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작은 차이만들기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다. 저출산 현상은 이러한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 이상 ‘(정상)가족’이나 ‘아이’의 가치를 얻기 위해 희생하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정상)가족이나 아이의 가치는 크게 낮아져 있고, 사회와 국가가 규정한, ‘이상적’이라는 가치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법적인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된 결과가 결혼이나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해 매우 다양해졌다. 더 이상 규범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닌 것이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그리고 그 조합이 다양하며, 이에 따라 삶의 방향과 경로가 다양하게 결정된다. 예전에는 한 개인의 삶은 혼자 살거나 결혼하는 삶, 둘 중 하나로 구분해왔다면, 이제는 한 개인이 선택한 지금의 삶의 방식이 평생 유지되지도 않고, 여러 방식을 걸쳐가며 변화할 수도 있어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는 청년세대의 생애과정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으로, '1인 가구의 증가' '3포-5포-7포-N포 세대', '비혼주의 선언' '워라벨 문화' 담론들의 확산은 주로 청년세대의 생애과정의 변동과 관련지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애과정은 교육, 취업, 결혼, 출산의 순서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표준적인' 생애과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생애과정⁹¹⁾들의 출현에서 청년들의 생애과정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통과의례로서의 연애-결혼-출산의 순서와는 다르게 생애과정의 편차와 변이가 많아지면서 탈표준화, 탈구조화되고 있으며, 생애과정을 사회적 관습에 맞추기보다는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 추구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정병은 2022).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는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8년에는 68%였으나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20년에는 51.2%였으며(통계청, 2008-2020.), 2021년 조사에서는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⁹¹⁾이 동의했는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 학생, 1인 가구에서 높았다. 마찬가지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1998년 23.8%에서 2010년 30.7%, 그리고 2020년에는

91)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주된 이유는 '저소득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이 32.0%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 집단보다 개인적 삶과 여유를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이 30.4%로 그 뒤를 이었다.

41.4%로 증가함으로써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30대 남성 42.5%, 여성 33.6%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혼인율은 1996년 9.4명에서 2020년에는 4.2명으로 20여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또한 비혼, 이혼,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모든 생애 단계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1인 가구가 한국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되었다. 생애의 한 시점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사는 시간은 생애의 일부분만을 차지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인구는 증가하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인구는 감소하는 등,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거나 확대하는 행동에서의 변화를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수치들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규범적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되는 하나의 추세임을 보여준다.

결혼과 관련된 환경이나 조건이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고, 이러한 조건이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와 혼인율 변화를 보면 이런 사고와 태도의 변화가 결국 행동, 실천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우 역동적이고 새로운 다양한 ‘가족과정들(family processes)’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핵가족이 점차 부모를 비롯한 친족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얻어왔듯이, 이제 개인들은 가족 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포-5포-7포-N포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청년들이 포기한 것들은 그 항목들이 각자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그동안 요구해온 ‘스펙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애-결혼-출산의 ‘선택’ 또는 ‘거

부'는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가족 구성과 출생의 다양성 또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사회적 관습에 맞추기보다는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한 혼자의 삶'을 선택하는 데도 적극적이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연애, 비혼, 무자녀를 '선택'한 것이다.⁹²⁾

이와 더불어 이상적인 부부상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청년세대 대상의 사회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 분리형 부부가 아닌, '함께 일하고 함께 기르는' 협력적 부부상에 대한 지지이다. 성역할 의식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000년대부터 20-40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결혼의향은 이들이 갖는 성역할 규범에 동조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지배적인 문화와 사회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성역할 규범과 타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고등교육의 확대,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성장한 젊은 여성들은 가족 형성(결혼과 출산)이든 성역할 규범이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거 등 어떤 삶의 형태는 통계상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형태도 있다. 동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사람은 2020년 59.7%로 2012년 45.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전보다 결혼의 당위성은 감소하고 비혼 동거에 대한 개방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22 사회조사>에서는 국민의 65.2%가 '동거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낮은 연령대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92) "비혼이라는 하나의 삶의 방식 안에는 여러 모습이 존재한다. 결혼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토록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은, 너무 선부르지 않은가"(정병은 2022)

것을 예상할 수 있다⁹³⁾. 영국의 한 사례연구에서는 영국은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족 형성에서 주택 소유가 중요한 조건이었지만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출산, 결혼의 순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 같은 생애과정의 순서가 불확실해지고 연기됨에 따라 동거에 대한 인식과 주택-결혼-출산이라는 전통적인 규범이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한다.⁹⁴⁾ 기존의 생애과정 순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짐에 따라 전통적인 지표는 덜 표준화됨으로써 결혼을 ‘다음 단계’로 상정하지만, 이 단계가 인생의 특정 시점에 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출산 또한 동거라는 파트너십 안에서 생애과정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본다. 생애과정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2. 청년세대의 현실

저성장과 취업난, 아노미적 사회 등 청년세대의 불안한 미래는 비혼과 저출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치관의 변화나 개인의 선택 이외에 또는 이면에 있는 저출생 현상의 비관적 측면이 그것이다. 청년세대에서 소수의 1% 정도만 빼고는 대부분이 생존주의자라는 점에서(최종렬 2022) 청년세대가 자신과 잠재적 자녀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고 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

93) 북미나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도 결혼이 감소하는 대신 동거와 혼외 출산이 늘어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Cherlin, 2004). 도시화 과정에서 기존 가족이 소규모 형태로 자리 잡은 1차 인구 변동과 이혼의 증가, 결혼의 지연,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의 2차 인구 변동을 거쳐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고 나서야 동거와 혼외 출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Lesthaeghe and Kaa, 1986).

94) Ann Berrington, Brienna Perelli-Harris, Paulina Trevena. 2015. Commitment and the changing sequence of cohabitation, childbearing, and marriage: Insights from qualitative research in the UK.

는 것이다. 더구나 빈곤의 대물림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삶이 재생산된다면, 자신은 물론 잠재적 자녀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아이는 포기하게 된다. 저출산의 뉴노멀화가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생산의 정점에 있는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 또는 미래를 포기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수의 생존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행복 추구를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비혼, 비출산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다.

‘지옥’ 같은 사교육과 입시, 취업을 거쳐 온 현재의 청년세대의 다수는 이미 삶에 지치고 경쟁에 지쳐버린 세대로, 그들의 고생과 투자에 비해 삶의 전망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세대일 것이다. 이들은 그간의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또한, 소위 ‘수저론’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미래를 상당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세대이고,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욕구 수준과 삶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세대라 할 수 있는(신정완 2022) 이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의향도 별로 없고 낮은 수준의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혼인과 출산을 권하는 사회’는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여길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회와 국가를 경멸하듯이 혼인과 출산을 거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면 혼인과 출산은 늘어날 것인가. 최소한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최소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것인가.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초저출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3절 가족의 변화와 재생산 위기

1. 가족의 변화, 가족의 위기

가족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가족은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수행적인 것이다(김순남 2022, 55). 이는 가족인구학에서 말하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es)이다. 가족의 ‘과정들’은 움직이고, 변화하고,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 가족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정상 가족’의 구조변동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일부 계급에서는 여성 생계부양자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 이상(유토피아)은 여전하다. 가부장이 아닌 ‘가모장’은 물론 ‘가녀장’도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와 여성 가사노동자라는 성별 분업에 기반한 이성애 핵가족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다수의 청년세대는 물론 일부 기성세대에게도 통하지 않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거 등 실제로 사람들이 실천하는 다양한 ‘관계 맺기’가 그러한 형태이다. 더구나 인간이 아닌 동식물 반려종과 관계 맺기를 선택하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세상은 엄청난 변화이다(임옥희 2022). 생활방식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빠른 변화, 특히 청년세대에서 변화 속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역시 개인의 삶과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각도에서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하기에 전형적,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편견을 갖기 쉽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의 삶, 즉 다양한 가족, 다양한 출생, 다양한 돌봄 등을 마주해야 하는 사회로서 장기적으로는 개개인이 혼자, 또는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더라도

낙인이나 도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제도나 정책적으로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족 차원에서 볼 때도 청년세대의 혼인과 출산의 선택은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한국 가족은 핵가족의 이상과 대가족의 현실이 공존하는 전통 가족의 변형, 즉 신가족주의에서 개인화와 평등 지향적 움직임 속에서도 가족주의의 지속이라는 포스트가부장제로의 특징을 갖는다고 한다(이재경 2022). 특히, 한국 가족은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21세기 들어 계급에 의해, 계층에 따라 급격히 변화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 정책적 담론이 확산되어 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결혼 감소, 이혼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성별 분업의 균열, 일·가족의 제도적 갈등,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가족 간 불평등 심화 등은 지금까지 당연하고 익숙했던 핵가족이 제도적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준다.

낭만적(이성애)사랑과 성별 분업으로 제도화된 근대 결혼이 지속적으로 쇠퇴되어 왔고,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가부장적 젠더 규범이 약화되고 젠더 질서는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젠더 질서의 균열과 갈등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보상, 정치적 대표성,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의 유산, 일·가족 충돌 등으로 심화되어 왔다. 특히, 일·가족에서의 역할 갈등과 시간 갈등은 여성의 혼인 및 혼인유지,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가구 구성의 변화로 가족 형태의 전형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무자녀 가족, 이혼 또는 재혼가족, 1인가구, 다양한 동거가족 등 ‘가족 구성의 탈표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가족 형태가 갈수록 주류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성평등이 실현되고 가족의 다양성이 수용되는 가족과 사회는 여전히 요원하다.

한국 가족은 개인화의 추세와 가족주의가 공존하는 ‘포스트가부장제’ 속에서, 가족의 급격한 외형적, 내용적 변화에도 여전히 젠더 질서의 갈

등이 발생하고, 가족주의적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 성평등이 실현되는 가족과 사회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과 사회조직을 만들어낼 때 시작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뿐 아니라 이기적인 ‘반사회적(anti-social)’ 가족주의도 지양해야 한다. 반사회적 가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물론 신뢰와 공동체적 연대와 결속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가족주의의 지속이라는 포스트가부장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개인화 경향을 중시하고, 공정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선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되어온 저출생 문제 대책들은 저출생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경제적인 대책만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가족의 다양성과 새로운 가족, 새로운 돌봄

가족의 다양성, 사회의 다양성은 규범이 아니라 현실이다. 갈수록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선호에 따라 삶의 방향과 경로가 결정됨에 따라 개인이 구성하고 실천하는 가족의 모습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 당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던 시기에는 결혼으로 가족이 시작되고 아이가 생기면서 가족이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애였기에 가족 형태는 획일적이었다. 이혼과 재혼, 비혼, 동거가족, 비혼 출산 등 과거의 결혼을 기준으로 한 삶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한국의 가족은 하나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가족에 대한 연구는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 가족 다양성 관점, 개인화론에 주로 기반

해 왔다. 실제로 페미니즘이 어떤 면에서는 일상화되기도 했고, 가족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 양상까지 포함하면 매우 다양해졌고, 개인화는 한국 가족의 변화, ‘가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도 역시 높아졌다. 2021년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인 ‘혈연이나 법적 혼인관계만 가족’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13.2%p 하락한 51.1%인 반면, 확장된 가족 개념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61.7%, 그리고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45.3%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도 증가하여 외국인과 결혼(91.4%), 이혼 혹은 재혼(87.6%), 비혼 독신/1인 가구(87.0%)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고,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것(79.4%)과 남녀가 동거하는 것(69.4%)에 대한 수용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특히 비혼 동거의 수용도는 2019년 65.5%, 2020년 67.0%, 2021년 69.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비출산 혼인 가구에 대한 수용도는 다양한 가족 유형 중 전년 대비 상승폭이 12.3%p로 가장 컸다. 비혼 동거와 비출산 혼인 가구에 대한 수용도는 30대 이하 연령층, 학생, 미혼, 1인 가구에서 특히 높았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제 청년세대에게는 결혼은 선택이 되고, 가족은 반드시 혈연과 혼인만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일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앞서와 같은 조사에 따르면, 비록 과거에 비해 편견이 많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대부분(85.8%)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편견

이 매우 많다는 비율도 31.4%나 되었다. 특히, 비혼 가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예컨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55.3%),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아이를 기르는 것(56.1%),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녀가 아이를 낳는 것(46.6%)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편이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24.1%)은 수용도가 매우 낮았다. 또 다른 조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고, 이러한 인식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 결과 가장 편견이 많은 가족은 동성 커플(연인) 가족(81.2%)이고, 그다음이 미혼부(77.5%)/미혼모(76.7%) 가족,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여성혼자 64.4%, 남성혼자 6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형태를 ‘정상 가족’으로 보는지에 대한 또 다른 설문결과⁹⁵⁾는 ‘국제결혼·다문화가족(87%)’, ‘입양 가족(86%)’, ‘재혼 가족(86%)’, ‘한부모가족(76%)’, ‘무자녀 가족(76%)’, ‘조손 가족(64%)’, ‘미혼모(56%)·미혼부(54%) 가족’, ‘소년·소녀 가장 가족(45%)’ 등으로 나타났으며 동거, 동성, 대안, 일반위탁 가정을 정상 가족으로 보는 응답률은 30~4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⁹⁶⁾을 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 중 2.6점으로 나왔다(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정적, 4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긍정적). ‘비혼 출산’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부정보다 긍정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9%는 비혼 출산을 지금보다 더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비혼여성의 26.2%는

95) 이소연, 2022,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의 설문조사임

9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년 조사

비혼 출산을 고려해본 적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45.4%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답했다. ‘방송에서 비혼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서’라는 응답도 14.7%였다. 그럼에도 비혼 출산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유로는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 아이를 키울만한 경제적 여건 부족, 경력 중단으로 인한 생계 위협이 1~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중심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개선하고 한부모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혼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들을 위해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비혼·만혼 입양도 마찬가지이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친밀성의 구성 방식과 관계 맺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수용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옳지 않다고 보는 시선은 현실에서 실제적인 차별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이유는 정상가족 규범 내에서 작동되는 실제적인 차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이들은 여전히 가족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가족 구성의 범주와 인식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입장이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정상 가족’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에 소자녀 직계가족 규범이 확립되었다. 이 시기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을 제조업 부문으로 유인하는 동시에 산아를 제한하는 가족계획 사업이 필요해진 결과 전통적인 대가족을 부정적으로 개념화하는 가족 담론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규범이 정착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언제 변화할지 모르는 것임에도 ‘정상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족 형태가 차별받아 왔다. 더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임에도 ‘정상 가족’만 지원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정상 가족’에 기초하여 지원하는 정부의 비용과 부담이 커지는 만큼 효과는 높지 않게 될 반면, 가족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는 사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가족형성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이 개선된다고 해서, 과거의 가족 형태로 되돌아갈 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남성 단독부양에서 부부 공동부양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가족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부양에서만 찾지 않음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애정적 관계로서의 가족, 시장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돌봄 관계로서의 가족이 앞으로 기대되는 가족의 존재가치라면, 이러한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 돌봄 관계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사례 발표를 보면(최선경 2022), 스웨덴 가족의 형태는 동거(Sambo), 결혼 가족, LAT(따로함께살기, living apart together), 이혼 가족 등, 자유롭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정도로 다양하다. 이 중 이혼 가족은 법적인 이혼 가족만도 50%가 넘는데, 이는 스웨덴이 이혼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이혼했다고 해서 사회의 복지제도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혼 가정이 많아질수록 이혼 가족, 편모가정, 이혼 자녀에 대한 복지 제

도는 더 세분화되어 이혼으로 인해 이들과 이들의 자녀가 사회적 소외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막을 만든다. 스웨덴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법적 혼인 외 출생이 전체 출생의 50%를 넘는다. ‘보너스 가족(Bonusfamilj)’과 ‘라떼파파’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각각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respect/respect)’하며 대하는 기본적 관계 맺음으로서의 스웨덴 가족문화를 잘 보여주는데, 상대가 어른이건, 아이 건, 그리고 이혼을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끊임 없이 관계 맺기를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어나간다. 이혼 가족이 새롭게 구성한 가족에 대한 호칭 변화는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Välfärdssystem)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2022년도의 가족복지 제도를 토대로 보면 이혼 가족에 대한 그 어떤 규제나 불평등한 조건들이 보이지 않으며, 그 어떤 가족형태도 스웨덴의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다. 스웨덴 사회를 대표하는 슬로건인 ‘국민/인민의 가정(Folkhemmet)’에서 나타나듯이, 스웨덴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생애사적 사건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다만 개인이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고 시도한다면, 정부는 차별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보편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모든 가족 형태와 출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혈연과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가족으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 권리를 가족 단위로 보장하는(복지)정책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개인 중심에 기반하여 개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삶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가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법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변화하는 가족의 (미래)모습과 제도 사이 괴

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정상 가족’이라고 사실상 강요하는 법적 (이성애) 결혼제도와 같이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사회관계를 바꾸지 않고는 현실과 제도 간 괴리는 커져갈 것이고, 부작용은 물론 저출산의 기조 또한 바꾸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은 기존 제도와 질서를 거부하고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변혁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저출산이 새롭고도 낯선 ‘정상적’ 현상이 되는 시대에, 재생산 역량의 상실은 미래를 위한 역량 상실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다. ‘미래 없음’은 미래에 대해 노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미래가 없다는 부정을 긍정하는 것이다. 유토피아는 현재에 없는 것을 늦게 도래할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에 드러난 구멍과 결여에 주목하는 것이다(임옥희 2022). 인간이 아닌 동식물 반려종과 관계 맺기를 선택하는 오늘날, 혈연가족 너머로의 관계 맺기의 주체와 개념, 돌봄의 주체와 개념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돌봄 노동의 유급화를 강조하지만 단지 돌봄 노동의 유급화만을 이룬다면 결과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기존 가부장제와 가족주의에 부역하게 하여 페미니즘 스스로가 페미니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돌봄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헌신에 주로 맡겨졌으므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하의 핵가족에서 억압받는 존재인 여성들은 무보수 돌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다. 여성의 돌봄노동을 성스러운 여성적 윤리로 보는 관점도, 유급화의 관점도 돌봄노동의 본질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저출생 고령화가 뉴노멀화가 된 이 시대에서 돌봄은 보편화되어야 한다. ‘보편적 돌봄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로 보편적 돌봄주체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사회의 다양성 - 사회적 신뢰와 유대, 다양한 ‘관계 맺기’

한국 사회가 다양해 졌는가라는 문제 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그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삶의 형식이나 삶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의 삶이 과거보다 덜 획일화되었다고, 즉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관점도 있다(이상직 2022). 물론, 저출생을 초래하는,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요인들 중 유사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요인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의 상대적으로 임금 일자리, 수도권의 국민평형 아파트 장만, 자녀의 (좋은)대학입학, 멋진(?) 삶 등이 그것이다. 청년 인구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과도하게 경쟁, 갈등하는 현상 역시 획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 경향 역시 물질적,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형식이 비슷해져서 단일 경쟁체제에 편입된 결과일 수 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맥락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상대적 비교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직 2022). 일상과 생애도 통제되고, 학교, 회사, 제도 등과 같은 조직화된 환경에서 획일적으로 사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성과 개인의 삶,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은 다르지 않을까.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자유롭고 개방적이지 못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법과 제도, 정책, 국가가 문제가 아닐까. 개인의 삶이나 가족은 매우, 급속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 비혼동거 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급속히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개

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김순남(2022)은 정상인구, 정상 출생, 정상 가족만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시민과 시민 간의 유대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 연결되는 시민들의 삶이 가능한 사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인구 위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인구로 바라보는 ‘사회의 위기’임을 주장한다. ‘저출산’은 사회적인 조건과 무관한 ‘현상’이 아니라, 성장중심, 발전중심, 각자도생의 사회 분위기, 차별과 배제를 ‘정상적인 삶’으로 간주하는 사회 환경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비혼”(조선일보 2017.11.09.)이라는 기사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해소’를 외치며 지자체들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와 같은, 결혼을 위한 남녀 만남 추진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혼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⁹⁷⁾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결혼’ 생활이며, 시민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전제이기 에, ‘그렇지 못한 시민들’은 이처럼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김순남 2022). 그러면 “결혼해도 애 안 낳아... ‘혼인 대비 출산비’도 역대 최저 수준”(중앙일보 2022. 03. 15)이라는 기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직장환경, 육아 환경에 의해 출산율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2015년 이후 세종시가 줄곧 출산율 1위인 데서 알 수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이 높고, 가사노동 부담이 잘 이루어질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한

97) 예를 들면, 진주시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진행하고, 대구 달서구는 20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해서 배우자를 찾아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결혼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을 위해서 총예산 67억을 들여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웨딩 TV, 2021.06.30.).

다(한국일보 2022.08.27). 미래 세대와의 연결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회와 삶의 환경이 어떤가에 깊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정상 가족 만들기’라는 국가의 욕망과는 다른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전의 시절을 꿈꾸는 국가와는 달리 개인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미 다른 방식의 생존전략을 모색해 왔고, 다른 삶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 체계’가 없는 국내 고립인구의 비율이 2019년 기준 21.7%로 OCE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김성아 2022, 74-86), 노년 인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가장 부족한 나라 1위가 한국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더 이상 혈연이나, 법적 결혼만이 아니라고 하고, 비친족 가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한국 사회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무급)의 대상은 여전히 ‘그 가족’으로 제한되었고, 방역 정책의 ‘가족’ 또한 민법이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되어 함께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공동체와 시민적 유대는 삶의 다양성, 즉 다양한 관계 맺기와 다양한 관계망이 사회의 토대이기에 사회적인 삶, 관계적인 삶은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가족 정책은 삶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시민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성과 재생산권리뿐만 아니라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거나 주변적인 가치가 아닌, 삶의 핵심적 가치로 재정의하는 돌봄 정의의 관점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편적 돌봄 주체의 사회’가 그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개인과 개인이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미래의 세대와의 유대로서의 ‘출생’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으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가 아닌, 출산에 대한 ‘증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의 주거정책이나,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혈연과 결혼을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 조항 등의 삭제는 (시민)개인들 간의 다양한 유대와 다양한 가족 실천의 관점으로 사회가 이동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제4절 젠더, 성 평등(성차별), 가족문화

1. 성차별적인 사회와 문화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는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라며,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에게 가사노동과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여성이라면 힘든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고 한다. 그는 한국이 성평등을 이루기 전까지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⁹⁸⁾.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연령과 교육 수준을 가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을 비교하면, 비혼/비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결혼/유자녀 여성은 남성뿐 아니라 비혼/비자녀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성취 및 성공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정주부를 ‘맘충’으로, 일하는 여성은 ‘독한 여자’로 보는 시선이나 여성에게는 슈퍼우먼(일과 가정의 양립)을 요구하는 반면, 남성에게

98) 장수현 2022. 한국일보 인터뷰. / Dynan, Karen, Jacob Funk Kirkegaard & Anna Stansbury. 2022. “Why Gender Disparities Persist in South Korea’s Labor Market” PIIE. 22-11.

는 동일한 수준이 요구되지 않는 성 불평등한 문화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파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년세대는 과거 세대와는 달리 전통적인 젠더 규범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청년 세대(2030 세대)는 남녀 모두 ‘노동 중심적 생애’를 우선시하고 있고, 자신의 노동 중심적 생애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의 친밀성을 원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여성들에게 더욱 두드러지는데, 남성들은 대개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중심적 생애를 유지하는 반면, 여성들은 과거의 가족 중심적 생애에서 노동 중심적 생애과정으로의 생애전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청년 세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해 거의 동의하지 않으며, 성평등한 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컨대 ‘가사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데에는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의 19%, 남성의 26%만 동의하고 있고, ‘여성이 가정일과 관계없이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20대 여성의 70%가, 동의율이 가장 낮은 30대 남성도 거의 절반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양육과 가사 참여에 대한 동의율은 80% 수준에 달했고, 여성의 일⁹⁹⁾에 대한 동의율도 70%에 가까웠다. 이는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고 여성이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세대 내에서 평등한 성 역할이 어느 정도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규범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의 성 평등 인식이 증가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쇠퇴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여

99) ‘일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들도 일해야 한다’.

전히 성 불평등한 구조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와 현실의 이러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2021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5%, 남성은 72.6%로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19.1%p로 여전히 크게 존재하며,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M자형 모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임금근로자 중 여성 정규직 비율은 52.6%로 남성 69.0%보다 낮은 반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7.4%로 남성 31.0%보다 16.4%p나 높다. 임시근로자 역시 여성이 24.4%, 남성이 11.4%로 두 배 이상 높다.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남성과 비교해 더 불안정하고 열악한 불평등한 사회구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65.4%, 남성의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하고, ‘남녀 평등하다’는 응답은 5년 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여성은 27.8% 남성은 41.7%로 그 인식의 차이가 크다¹⁰⁰⁾.

이런 인식 차이는 현실의 성 불평등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가사·돌봄 영역은 성 평등 인식의 증가와는 달리 여전히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인데, 응답자의 68.9%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답했다.¹⁰¹⁾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들에 대해서도 남녀 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어, 여성은 ‘경력단절(32.0%)’, ‘고용상 성차별(20.4%)’,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14.8%)’, ‘여성에 대한 폭력(14.5%)’ 순인 반면, 남성은 ‘고용상 성차별(29.0%)’, ‘경력단절(24.8%)’, ‘여성에 대한 폭력(14.2%)’, ‘낮은 돌봄 참여(10.2%)’ 순이었다. 이러한 사회의

1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통계청.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요약』 2016년 21.0%, 2020년 34.7%

101) 여성의 71.5%, 남성의 66.6%, 한편 20대(여성 45.3%, 남성 40.6%)와 30대(여성 32.2%, 남성 36.7%)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 불평등 및 성 불평등 문제들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는 현실에서 직면하는 성 불평등 문제들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여혐, 남혐의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가사’로, 응답자의 56.3%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평균 돌봄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¹⁰²⁾ 공적 영역의 돌봄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면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돌봄 공백의 문제는 맞벌이 가구일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 중에서도 맞벌이 여성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20). 또한 자녀 돌봄 분담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여성이든 외벌이든,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 남성은 60~70%(평일: 60.8%, 주말: 71%)가 가사노동을 하는 반면, 여성은 92%가 가사노동(평일: 91.6%, 주말: 93.3%)을 하고 있다(통계청 2020).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남성은 평일에는 48분, 주말에는 1시간 17분, 여성은 평일에는 3시간 10분이고 주말에도 유사한 수준이다. 더욱이 여성이 혼자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37분이었는데, 남성이 혼자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경우 부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무려 4시간 48분으로 매우 크다(통계청 2020). 이는 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의 일로 성별화되어 여성에게만 일과 가정의

102)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확인’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코로나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로 설문대상자는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 경험이 있는 여성’이었고, 유효 응답자 수는 318명이었다. 김원정 2020; 김명숙 2020.

양립 의무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 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 즉 성별 임금 격차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경제 내에서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여성에게로의 성별 분업적 돌봄 노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 경험은 남성(32.7%)보다 여성(40.0%)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또한 남성(49.3%)보다 여성(66.0%)에게서 더 많이 보인다(김영란 2020).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가정에서는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가족과 돌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문제이며, 전통적 성별분업의 역할 분담이 잔존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게 부담이 전적으로 전가되는 성불평등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전 국민의 돌봄 공백을 경험하면서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2020년 8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5%가 ‘돌봄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47.6%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그리고 보건의료, 교육,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아이 돌봄(보육)에 대해 90% 이상이 국가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돌봄 교사, 보육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 80% 정도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선경·김희강 2021). 이를 계기로 사회적 돌봄과 가족돌봄의 양과 질을 모두 따

저볼 필요가 있으며, 돌보는 입장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입장, 양쪽에서
 서의 행복(만족) 정도를 검토해 봐야 한다.¹⁰³⁾

2. 한국 (젊은)여성의 삶, 개인의 가치와 주체성

미시적,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편견과 배제, 심각한 혐오와 폭력의 일상화가 사회 집단 간, 세대 간, 성별 간의 간극과 갈등을 증폭해 왔다. 이러한 간극과 갈등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확대, 과장되어온 면도 있겠지만,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및 가족변화가 가져온 가치관의 변화와 ‘문화 지체(culture lag)’에도 기인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결과들이 보여주었다(최셋별 2018). 청년 세대, 특히, 젊은 여성의

103)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족 돌봄문화(돌봄의 양, 내용 등)의 경우, 아동에 대한 집중 돌봄이 강화되었다. 즉, 부모의 아동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자녀 수는 줄었지만 부모의 돌봄 총량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아버지 돌봄 시간의 증가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한편으론 성평등의 진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보다는 육아를 선호하는 점과 돌봄과 교육의 혼합 속에서 돌봄 인식이 변화하면서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아동 돌봄 시간이 증가함을 비추어 볼 때 아버지 돌봄이 자녀교육에서 가지는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자발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노인돌봄 문화는 아동 돌봄과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양은 증가했으나, 돌봄의 전제인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보편적이며 본질적’이라는 인식은 별로 일반화되지 않았다. 가족 구성의 변화와 가족의 돌봄 문화의 변화로 인해 가족에서 이루어지던 위계적 돌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돌봄의 증가는 공적 영역으로의 확대가 아니라 거대한 ‘돌봄 위탁 피라미드’라는 돌봄의 상업화 경향을 수반했다. 이 속에서 노인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특정(의존적) 인구’로 전락하였다. 결국 노인의 삶의 존엄성은 의료적·생물학적(biological) 문제로 치환되어 입소 노인의 ‘수분·영양 공급’이 본질이 되고, ‘입맛’은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된다. 이는 노인에 대한 존중 감소와 더 이상 자원이 아닌 존재라는 사회의 편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은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평가되어 비용투입이 정당화되는 반면, 노인에 대한 비용 투입은 꺼려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평등화 기제(각종 수당, 돌봄체제)가 작동하여 돌봄-교육이 결합한 계층 재생산 시도와 갈등하는 반면, 노인 돌봄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최소돌봄은 보장되겠지만 돌봄의 질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보는 자와 돌봄받는 자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돌봄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계 창출’의 위험이 상존한다. 노동시장을 포함해 가정과 돌봄이 성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재편성될 때 사회 전 영역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비혼과 출산 기피는 가치관의 변화 및 문화 지체 현상이 가져온 특성이자 이들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여성의 삶과 문화는 여전히 위태로우면서 동시에 일상 속의 대응과 저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페미니즘적 사고와 운동이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과 저항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젠더 갈등은 심화되고, 그 결과의 하나로 만혼 비혼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 환경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과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와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가족 구성과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 즉 개인의 주체성과 선택의 자유는 사회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이기도 한다(김인춘 2022). 개인의 자유나 개인화를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연상하고, 개인주의는 쉽게 ‘이기주의’로 이해된다. 그러나 개인화, 개인주의는 개인의 주체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중시하는 것으로 사회공동체에 무관심하거나 가족 구성, 사회적 관계 맺기, 돌봄 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여성성이나 ‘어머니 됨(모성성)’ 등과 같은 여성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성차별이 여전한 가운데 성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지나친 ‘여성(성, 다움)’, ‘남성(성, 다움)’의 구분과 배타적 분리가 오히려 여성의 결혼이나 결혼지속, 출산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등 출생율이 높은 선진국들에서처럼, 각 개인의 삶의 질, 선호하는 가치, 원하는 삶과 생애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와 국가야말로 저

출생 문제를 대하는 기본이라 할 것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에 기반한 사회공동체만이 진보할 수 있고, 견고하게 지속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 및 인구구조에 기반하여 사람, 즉 각 개인들의 삶과 생애를 보다 풍족하고 자유로우며 의미있게 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인구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구가 이미 그려놓은 현재와 미래에 바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앞으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출생률은 앞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하락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더 시급히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단기적인 출생률 제고 방안보다는 개인의 가치, 성 평등, 출생과 가족의 다양성을 위한 문화적, 제도적 혁신으로, 저출생·고령화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제5절 토론 및 제언

1. 토론 1104)

한국의 신사회 문제인 저출산 정책은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2022년 현재 4차 기본계획에 접어드는 등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

104) 홍세영(안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중간보고의 토론문 내용임(“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1차에서 3차 기본계획이 15년 동안 수행되었고 총액 380조를 투자했지만 2021년 현재 0.81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2022년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⁰⁵⁾.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목적과 불일치한 사업내용들, 부처 간에 의사소통 부족, 분만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생) 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6장에서는 저출산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자체를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해석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준다. 또한 여성을 자유로운 주체로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출산과 이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여기서 ‘보편적 돌봄 주체의 사회’와 ‘성 평등적 사회문화 환경 조성’은 인상적이다. 돌봄의 개념을 협소한 개념에서 벗어나 보편성에 기반하여 재구성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주체나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개인의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방식을 존중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찬성한다. 그리고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출산은 개인의 영역인 동시에 사회적 영역이다. 최근 저출산 사회를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MZ 세대들에게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그런데 오늘날 개인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충실히 따랐던 기성세대들 역시 권위주의 정부의 강요 때문이지 진정한 사회적 책임감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화와 같은 외부 환경과 어느정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105) <https://www.nocutnews.co.kr/news/5778615>

그렇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MZ 이후 세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 “저출산(생) 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거 같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환경 조성이고 사회적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 가운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하고 싶다.

또한 이 글에서는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출산은 남성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젠더적 관점에서 남성도 출산 담론에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출산에 대한 논의는 ‘권리’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복지 분야에서 권리의 개념은 TH MarSall의 시민권(Citizenship)이다. 시민권에서 한 국가에서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한국에서 남성에게는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여성에게는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런 의무는 결국 성 불평등적 제도를 구성하고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6장에서도 강조하듯이 성 평등적 제도와 문화가 조성될 것을 요구하면서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권리도 동시에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남성도 아버지가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적다. 이미 복지국가에서는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의 권리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시간을 가지고,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는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받을 권리 등 아동 양육과 가족계획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¹⁰⁶⁾. 몇 년 전 필

106) <https://www.findlaw.com/family/paternity/fathers-rights.html>

자는 부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 MZ 세대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들은 가부장적인 가치 때문에 자녀와 거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다. 4~5명 인터뷰했을 때 그들이 공통된 의견은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환경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즉 아직도 한국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로 여성은 가사돌봄자로서 남성은 경제적 부양자로 요구받고 있다. 일부 연구결과에서도(서원경, 2016), 아버지의 권리가 확대될 경우 출산율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바로 아버지의 권리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라떼 파파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 남성들의 육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오래전부터 노력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버지의 권리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일례로 미혼부 사례가 있다. 미혼부는 출생신고부터 벽에 부딪친다. 민법 844조 법에 따라 친생자 추정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혼외 출산의 경우 남성이 자녀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친부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 제2항에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남자가 자신의 자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재판까지 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3~12개월 걸린다. 그나마 2015년 사랑이 법이 제정되면서 재판과정이 간소화되었다고 한다¹⁰⁷⁾.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아이는 유령으로 존재해야 한다.

107) <https://www.goodnews1.com>

2. 토론 2108)

본 연구는 저출생, 고령사회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저출생, 고령사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만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를 과거로의 회귀를 요하는 ‘문제’가 아닌 ‘현상’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적 목표가 ‘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문제’로만 인식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참고할 때 그 타당성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5년 5월 18일에 제정된 해당 법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할 문제로 간주하고, 법의 목적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이라고 규정하며, 법의 기본이념을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2조)으로 밝히고 있다.

둘째, 저출생, 고령사회 상황을 청년과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양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개인 인식 변화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도·정책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 주고 있다. 많은 경우 개인 인식 변화를 짧게 한 두 줄 언급하고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저출생·고령사회 문제를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가치관과 사회변화를 각각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 보인다.

108) 손연우(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중간보고의 토론문 내용임(“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셋째,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을 구체적인 수치 변화로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해당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개념들(예: 가족인구학, 가족과정, 가족자유주의 등)을 소개함으로써 현상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넷째, 더불어, 작은 부분이지만 해당 이슈를 다룰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에 구체적인 전제를 붙임으로써 표현의 적절성을 되짚어 보게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여성’을 ‘(젊은) 여성’으로 표현한 것 등이다.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여러 강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장 제목에 포함된 ‘문화 환경’의 정의를 내려준다면 본 장이 설명하는 범위를 더 분명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분석내용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정도로 이해되는데, 문화 환경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겪는 독자들을 위해 두 개념을 비교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둘째, 글을 읽으면서 청년세대와 여성이 모두 동일한 문화 환경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물론 중장년, 노년층과 구별되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문화 환경,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이 대면한 문화 환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세대와 여성을 각각 한 범주로 이해하기에는 각 집단 내 소득계층,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당면한 문화 환경이 다르며 사회적 차별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세부 서술이 청년, 여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기존 주장들과의 차별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에스핑 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의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2009)에서 인구문제, 복지,

보육 관련 여성내 계층 불평등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것 같다.

셋째,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인구 현상에 대해 문제가 아닌 현상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두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전개 방향은 문제적 이해와 해결책 제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상적 이해의 관점을 더 강조해 주면 어떨까 생각된다.

넷째, 저출산과 고령사회 이슈를 다루는 연구임에도 주로 저출산의 현황 이해와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관련된 청년세대와 여성을 둘러싼 문화 환경을 주로 분석하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고령화 이슈도 균형적으로 다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경우 현재 다소 여러 절에서 나누어 다루고 계신 돌봄 이슈를 독립된 한 절로 꾸려도 좋을 것 같다.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 및 노년층 노동 직위 유지 관련 내용까지 포함하면 어떤지 제안드린다.

다섯째, 더불어, 저출산 현상에 있어서도 청년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들이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가족 양상과 사회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본 연구의 방향을 살려서, 해당 현상을 청년과 여성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을 막아내는 서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섯째, 통상 사용하는 ‘저출산’(아이를 적게 낳음) 대신 ‘저출생’(태어나는 아이 수가 적음)으로 변경하고자 한 이유도 짧게 밝혀주는게 좋을 것 같다.

일곱째, 6장 5절에서는 불평등을 저출생 현상의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국가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다. 재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참고하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제5조)하는 것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다(제20조, 제21조).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제도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행계획에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국민의 책무도 돌봄과 노후준비 등에 머무르지 않고 불평등 해소의 맥락에서 재해석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관련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3. 토론 3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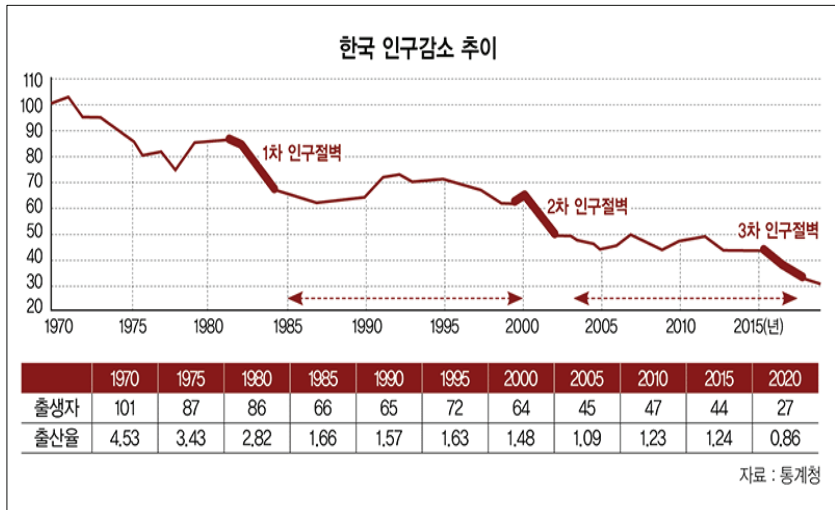
한국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 권리의 악화는 단순히 여성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초저출산의 문제로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초저출산의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부양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저출산의 문제는 한국 사회를 매우 불안하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의 인구는 2021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60년에는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살률 역시 OECD 국가(2020년) 중에 가장 높으며 청년들의 자살률도 높아 한국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109) 심민석(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중간보고의 토론문 내용임(“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컨퍼런스(2022.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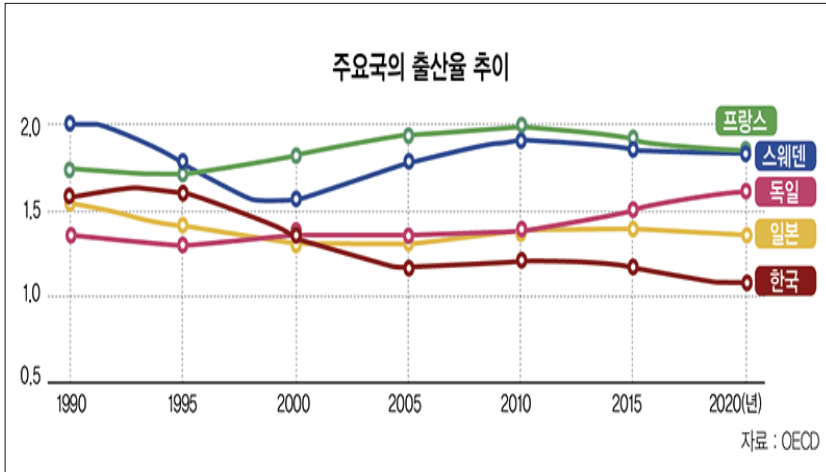
30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그림 6-1] 한국 인구감소 추이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2021/2022’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29개 나라 중에 성 평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편견이 가장 좋아진 나라가 독일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이러한 편견이 여전히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독일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여성에 대한 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정치참여, 경제적 지위, 교육 환경, 성폭력 등 한국 여성의 전반적인 권리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2] 주요국의 출산율 추이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의 주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첫째 사회적 양극화(부와 주거의 양극화), 둘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 약화, 셋째, 핵가족화로 인한 여성의 육아 부담 증가, 넷째, 사교육비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부연하면,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 내 집 마련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 평균값이 10년 전에는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의 10배였으나 현재는 18배로 올랐으며,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사 일을 대부분 부담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 기혼여성의 복지 및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25~39세 여성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비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음), 여성이 누군가 도움 없이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부담감, 중고교생 1인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약 830만 원(2021년 기준) 정도로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이 없다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발표자의 발표문을 보면,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발표문은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구성과 출생 형태(비혼 출산, 비혼여성(남성)이나 장년, 노년의 아동입양을 일정 정도 제도화)를 제도 안으로 받아들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 친화적’ 인식과 젠더 관점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다양한 가족 및 출생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이와 더불어 추가할 제도적 추진 방안에 대해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요 요인들과 대안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복지혜택 실현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여 총 480일의 부부휴직 기간에 90일을 의무적으로 남성만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중 급여는 약 77%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75명으로 우리보다 두 배가 높다. 또한 스웨덴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양성평등 노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 내 차별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발판 위에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76%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이고, 스웨덴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8%로

OECD 평균인 59.7%에 못 미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의무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기반 형성,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출산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4무(無)의 나라로 선행학습이 없고 사교육비가 없으며, 입시지옥이 없고, 대학 등록금이 없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 과정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한국은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파나 정권을 초월하여 중장기 계획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전국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요 대기업, 금융업, 공영방송,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초고령화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67%에 그치고, 그마저도 경비·청소직 등 저임금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65살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6개월 이상 무직인 55살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스웨덴의 55~64살 고용률은 78%에 이르고, 평균임금도 25~54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스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거주자 중 10%는 타 국적자이며, 이민자 포용 정책이 최고 수준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용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민자에 해당 교육을 시행한 뒤 고용하고 있다.

한국의 초저출산, 초고령화, 인구감소의 문제는 한국의 미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실효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제7장

결론: 정책적 함의

제1절 저출산(생)·고령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제2절 평등성과 다양성의 강화

제3절 가족 제도(법) 개혁의 시급성

제 7 장 결론: 정책적 함의

제1절 저출산(생)·고령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한국은 저출산(생)·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5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였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2021년 현재 0.81명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경신하는 가운데, 2022년에는 0.7%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저출생·고령화의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출산장려 정책과 제도의 효과가 ‘백약이 무효’임을 한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저출생과 변화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일 것이다. 즉, 저출산(생)·고령화가 과연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과연 현시점과 현 상태에서 그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어야 적절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생)·고령화는 우리가 성취한 여러 성공의 결과인 측면이 상당하다. 성공의 결과이기도 하기에 이를 ‘문제’로 보기도 어렵고, 되돌리기도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고령화는 되돌릴 수가 없다. 흔히 저출생 사회의 문제점을 사회적 부양 능력의 저하로 인한 후세대의 부담과 불리함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저출생 사회라고 무조건 사회적 부양 능력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후세대가 가지는 가능성, 즉 소수인 미래 세대가 다수의 현재 세대가 이룩한 사회적 자산(자본/지식,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을 활용하면서 높은 수익/생산성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주은선 2022). 따라서 단순히 연령대별 인구수에 따른 사회적 부양비 계산은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또한, 인구수 감소는 생산 부문을 포함하여 여러 부문의 (성)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 평등 효과 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저출생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출산을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 혹은 사회적 의무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에서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고 돌봄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을 도구화하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아이를 가지고 키운다는 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깊이있는 성찰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저출산 추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예상되었던 인구폭발을 막은 “조용한 기적”(다니엘 코엔, 122)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선진국들에서의 저출산은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생) 사회는 지구환경과의 공존과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정도의 인구수의 적정 규모로의 감소를 가져오는 한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반려종으로 보는(보려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저출생은 국가 차원에서 문제화하는 것이지, 개인 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인구감소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적정 인구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등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가족은 더 이상 국가적 도구화와 전략적 생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가족은 우리의 굴곡진 현대사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국인들의 가족은 단순히 사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나 관계를 넘어 (개발)자본주의 체제에서 기본적인 더러는 배타적이기까지 한 책임, 권리, 자유의 정치경제적 단위(political economic unit)였기 때문이다(장경섭 2018).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가족 관계와 가정생활은 국가 경제 등에 대두되는 거시적 혼란이나 위기에 매우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반응하며, 전략적 생존을 위해 가족 구성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 재조정해 왔다고 한다. 가족 구성과 관계가 개인의 의지보다 가시적 생존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온 것이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기본질서를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로 개념화·이론화하는 장경섭(2018)은 후기 개발 자본주의적 상황에서 인구, 가족, 계급에서의 급진적인 사회재생산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인구위기는 한국인들이 국가, 사회, 자본주의 경제와 공유하는 가족자유주의의 고질성에 대응하여 가족 관계의 유효한 범위, 강도, 기간을 실용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가족자유주의적 개인과 가족들의 사회 재생산에 관한 일종의 자기부과적인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의 국가와 정치가 가족은 물론 출산(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저출생은 국가의 한계, 정치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절 평등성과 다양성의 강화

저출산을 걱정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불평등의 개선은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가치를 다하는 일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역할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와 정치가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초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기초적 아동 돌봄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급락한 출산율을 회복시키려는 것은 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된 어떠한 정책수단도 문제의 근본에는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대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공공 보육시설 증설 등을 통해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금지 등을 통해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는 스웨덴의 성공적인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출생률에 미치는 효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도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계속 꾸준히 추진할 필요는 있다.

서구에서 효과적이었던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을 통한 출생률 반등이 한국에서는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 가족의 현실과 사회문화적인 조건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갈수록 인구와 미래 가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가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구 규모나 구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출생 장려는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한가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확실한 것은 단일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기존의 가족 개념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부장제와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삶, 가족, 사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가족

과 젠더 규범은 아직 요원하다는 점이다. 인구를, 생명을 여전히 생산인구, 부양인구로, 인력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도구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초저출생이라는 유래 없는 인구변천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생명을 돌보고,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며, 왜곡된 제도와 시스템, 불공정한 관행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개인의 사회경제적 기회는 물론 정치적, 문화적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생, 인구, 가족 등 사회 재생산의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위기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있다 할 것이다. 그 위기의 원인과 과정, 결과는 구조적이고, 결국 정치적이며 국가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결혼 연기나 기피, 자살 등은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불신의 정치와 국가 등 초저출산과 같은 뿌리의 원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바라는 인구 회복은 가족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와 사회정책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을 요구한다. 세대와 계급, 성별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회갈등과 심각한 불평등은 저출산의 한 요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에 관한 이러한 한국적 맥락은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노르딕 지역을 포함한 서유럽 지역의 책임지는 정치와 투명한 권력에 기반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국가적 맥락과 대비된다.

'개인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에 집중함으로써 개인, 가족, 또는 아이에 대한 기대와 미래의 계획을 갖도록 하는 것이 출생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과 국가의 발전·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사회경제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한 현실(고용, 노동시장, 주거문제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신의 주관적, 심리적 인식은 개인의 삶의 변화(결혼과 출산 지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자원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구의 다수국가들의 저출산 극복 성공사례가 보여주듯이 성 평등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여성들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과 ‘남녀 모두의 근로와 양육 참여’라는 여성 친화적 사회는 고용기회 및 임금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해소되고 여성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제3절 가족 제도(법) 개혁의 시급성

국가가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문제로 본다면,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해야 할 일은 사실 명확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1인 가구, 싱글 맘, 싱글 대디, 입양 가족, 동거, 비혼 출산 등 가족의 다양성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가족 형태를 불문한 가족 기능 강화정책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 구성과 출생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비혼 출산, 비혼여성(남성)이나 장년 노년의 아동입양을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것이다.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서유럽의 다수국가들에서 출생아의 50% 전후가 법적 혼인 외 출생이고, 미국도 출생아의 1/3이 법적 혼인 외 출생이다.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냈듯이(‘아동고아수출국’) 이들 나라는 입양도 활발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가족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비해 훨씬 지체되어 있어

급격한 인구 변화 및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 차원의 경제적, (전통)가족적 관점에서의 인구문제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그동안의 정책과 제도에서 벗어나 개인과 여성의 관점에서 이들의 가치관과 주체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가족인구학(family demography)적 정책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편견 및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규범(선택의 자유와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 가구(가족) 아닌 개인 기준의 가족인구정책과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또 다른 부분은 인식과 제도 개선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인식과 젠더 관점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다양한 가족 및 출생에 대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사회 만들기가 그것이다. 출산의 주체가 여성임에도 여성의 물리적인 힘이 약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현실에서 여성 중심의 전략이 중요하며, ‘여성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 ‘여성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여성의 삶의 질이 곧 사회의 질’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비혼여성, 비혼모, 싱글 맘 등 모든 여성의 주체적인 삶이 전제되고 인정되어야 행복한 여성의 삶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여성의 삶이 가능해질 때 아이와 함께하는 여성이 증가할 것이다. 일과 돌봄이 자연스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과 제도적 노력은 여성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소득을 가져다주어 일과 육아의 이중부담으로 포기한 출산 결정을 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 세대와 여성의 관점과 인식을 서로 이해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의 삶과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개인들(특히,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기회를 확대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의 삶

32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의 질, 그리고 성 평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는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 Ann Berrington, Brienna Perelli-Harris, Paulina Trevena. 2015. "Commitment and the changing sequence of cohabitation, childbearing, and marriage: Insights from qualitative research in the UK". *Demographic Research*. 33. pp. 327-362.
- Briggs, Asa. 1961.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2(2), pp. 221-258.
- Cherlin, Andrew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pp. 848-861.
- Duncan, Simon & Anne Barlow. 2012. "Why Don't They Marry? Cohabitation, Commitment and DIY Marriage." *Child and Family Law Quarterly*. 17(3), pp. 383-398.
- Dynan, Karen, Jacob Funk Kirkegaard and Anna Stansbury. 2022. "Motherhood accounts for almost all of South Korea's gender employment gap." *PIIE Chart*.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motherhood-accounts-almost-all-south-koreas-gender-employment-gap>
- Johnson, M. P. 1991. "Commitment to personal relationship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3. pp. 117-143.
- Keynes, John Maynard. 1932.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1930)," in *Essays in Persuasion*. New York: Harcourt Brace, pp. 358-373.
- Keynes, John Maynard.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Palgrave Macmillan.
- Gluckhohn, C.. 1951.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T. Parsons, E. A. Shils(ed.) NY: Harper, pp. 388-433.

- Lee Edelman. 2004.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 Lesthaeghe, R., & Van de Kaa, D. J. 1986.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s(Twee Demografische Transitities)." in Lesthaeghe and van de Kaa (eds). Groei of Krimp?. Van Loghum Slaterus, Deventer: Mens en Maatschappij.
- Obinger, Herbert and Carina Schmitt. 2011. April. "Guns and Butter? Regime Competition and the Welfare State during the Cold War," World Politics. 63(2).
-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 OECD Publishing.
- Petersen, Klaus. 2013. "The Early Cold War and the Western Welfare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29(3), pp. 226-240.
- PIIE. 2021. The Pandemic's Long Reach: South Korea's Fiscal and Fertility Outlook.
- Seltzer, Judith A. 2019. "Family Change and Changing Family Demography" Demography 56(2): 405-426
- Smith, Anthony D. 1988. "The Myth of 'Modern Nation' and the Myths of N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1(1), pp. 1-26.
- Stephens, John D.. 2015. "Revisiting Pierson's Work on the Politics of Welfare State Reform in the Era of Retrenchment Twenty Years Later."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48(2), pp. 274-278.
- Wilkinson, Richard and Kate Pickett. 2018. The Inner Level: How More Equal Societies Reduce Stress, Restore Sanity and Improve Everyone's Wellbeing. Penguin Books.

- 강은애, 이재경. 2021.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 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권여선. 2020. “손톱” 『아직 멀었다는 말』. 문학동네.
- 권진희. 2017. “법 탄생에서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주요 이슈를 통해 본 시사점.” 《의료정책포럼》15(2), 8~14쪽.
- 권희정. 2022.09.03. “영화 〈브로커〉와 베이비박스, 너 자신을 세탁하라!” 《프레시안》.
- 김나윤, 이수민. 2021. “비혼 출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 속의 여론》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김멜라. 2021. 『소설보다 겨울』. 문학과지성.
- 김명숙. 2020.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 노동에 미친 영향.” 『여성 노동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자료집(2020. 9. 16).
-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포럼》제305권 3월호, 74-86쪽.
-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봄.
- 김영화 외. 2021. 『죽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서울: 시사IN북.
- 김원정. 2020. “재난 위기,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여성노동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자료집(2020. 9. 16).
- 김지연·정규철·허진욱. 2022.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김지원. 2022. “저출생 대책 마련한다더니…정부, 미숙아 지원 예산 삭감.” [한국경제] 2022.09.3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93087137>
- 김창엽. 2021. “상품화된 의료에 돌봄은 없다.” [한겨레21] 1370호.
- 김태완·이주미·김기태·정세정·오성욱·송치호. 2022. 『근로연령층 사회보장 현황과 복지-고용서비스 연계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수 외. 2022. 『가장 외로운 선택 - 청년 자살,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북하우스.
- 김혜경. 2009. “박정희 체제하 “핵가족” 담론의 변화과정과 이원구조연구: 조선 일보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82호, 169-212쪽.
- 김혜진. 2017. 『딸에 대하여』. 민음사.
- 낸시 폴블레. 윤자영 옮김.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또하나의문화.
-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옮김. 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 다니엘 잉스터. 김희강 외 옮김. 2017. 『돌봄: 정의의 심장』. 박영사.
- 다니엘 코엔. 박나리 옮김. 2019. 『출구없는 사회: 무한한 욕망의 세계사』. 글항아리.
- 도널드 위니캣. 이재훈 옮김. 2011. 『소아의를 거쳐 정신분석학으로』.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라인하르트 코젤렉. 2019.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1: 위기』. 서울: 푸른역사.
- 레이먼드 카버. 김연수 옮김. 2007. 『대성당』. 문학동네.
- 로즈마리 통. 김동진 옮김. 2019.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학이시습.
- 마거릿 애트우. 양미래 옮김. 2021. 『나는 왜 SF를 쓰는가』 민음사.
-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마. 김현지.이영주 옮김. 2017. 『집안의 노동자: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갈무리.
- 매들린 번팅. 김승진 옮김. 2022. 『사랑의 노동』 반비.
- 밀턴 프리드먼. 2022. 『선택할 자유』. 서울: 자유기업원.
- 박경숙 외. 2020.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선경·김희강. 2021. “코로나19 위기 속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에 대한 인식.” 《한국과 국제정치》제37권 1호, 117-152쪽.
- 백영경. 2013.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 1960년대 『사상계』속의 정치적 상상과 자유주의적 통치의 한계.” 《여성문학연구》29호.
- 보건복지부. 2005. 『2004 보건복지 백서』.
- 사라 러덕·모이라 데이비 엮음, 김하현 옮김. 2018. 『분노와 애정』. 시대의 창.
-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옮김. 2021.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 신정완. 2022. <저출생 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프로젝트

트 자문서(2022.11.9)

- 신준섭. 2022. “저출산 해결한다더니… 내년 임신부 먹거리 지원예산 삭감.” [국민일보] 2022.09.26.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5424&code=11151100&cp=nv>
- 신진옥. 2018. 『한스 요아스, 가치의 생성』. 커뮤니케이션북스
-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 옮김. 2013. 『혁명의 영점』. 갈무리.
- 여성가족부. 2021. 06.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745
- 유선영 외. 2013. 『지금, 여기, 여성적 삶과 문화 - 위태로운 시대와 그녀들의 일상적 응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소연. 2022. “미혼 절반은 ‘반려동물도 가족, 동거가족도 정상가족’.” [한국일보] 2022.07.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715550001186>
- 이소영.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슬아. 2022. 『가녀장의 시대』. 이야기장수.
- 이재경. 2022. 『한국 가족 - 신가족주의에서 포스트가부장제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지영. 2019. “일본의 출산정책의 젠더적 함의.” 『日本學報』 118호.
- 장강명. 2018. “‘저출산 대책’을 넘어서” [한국일보] 2018.01.04.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1041570691220>
-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終焉)? :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 장류진. 2021. “『달까지 가자』에 대한 서평” 『서울리뷰오브북스』 3호.
- 장수현. 2022. “[인터뷰]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 성평등 없이 출산을 반등 없다.” [한국일보] 2022.09.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711020003369?did=NA>
- 재클린 로즈, 김영아 옮김. 2020. 『승배와 혐오: 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창비.

- 전기택. 2020. “코로나 이후 여성 일자리 변화와 정책 전망.” 『제1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의 여성 노동위기 현황과 정책과제』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집(2020. 6. 11.)
- 정책브리핑. 2018.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245>
- 정책브리핑. 2020. “저출산 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671>
- 조영태. 2021. 『인구 미래 공존 -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북스톤.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파주: 창비.
- 지은숙. 2020. “한·일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 비혼담론의 특성과 생애사구축에서 나타나는 정치성” 《한국문화인류학》제 53권 1호, 179-218쪽.
- 최섯별. 2018.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시현. 2021.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는가』. 창비.
- 통계청.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사회조사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08-2020. 『사회조사 결과』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4/index.board?bmode=read&bSeq=&aSeq=38416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통계청. 2020a. 사회동향.
- 통계청. 2020b.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청. 2022. “2021년 출생통계”. 보도자료 2022. 8. 24.
- 통계청. 2022a.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
- 통계청. 2022b.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통계청. 2022c. 『2022 고령자 통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

- 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 2021.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1):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진주. 2022. “‘가족 다양성’ 입장 뒤집은 여가부…‘사실혼·동거’ 포함 원점으로.” [아시아경제] 2022.09.2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2415514734783>
- 황두영. 2020. 『외롭지 않을 권리』. 서울: 시사IN북.
- “결혼해도 애 안 낳아…‘혼인 대비 출산비’도 역대 최저 수준”. [중앙일보] 2022. 03. 15.
- “‘인터넷 입양, 알고 보니 신생아 매매’”. [베이비뉴스] 2012.4.26.
-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비혼”. [조선일보] 2017.11.09.
- “노인수가 개발-병원 설립기준 완화해야”. [의학신문] 2003. 10. 23.
-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한겨레] 2019. 5. 13.
- “작년 요양병원 당 요양급여비용 39억원”. [의료애펙지뉴스] 2021. 11. 5.
- “전국 요양병원 1천개 시대 들어섰다”. [메디칼타임즈], 2012. 3. 23;
- “한국인 상호신뢰 바닥킨다....사회자본 168개국 중 142위”. [연합뉴스] 2019.11.25.
-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합의” 1차 포럼,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하고 뉴 라이프스타일’ 자료.
-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합의” 2차 포럼,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자료.
-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합의” 3차 포럼,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자료.
-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합의” 컨퍼런스,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자료.



[부록 1]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자문 자료

1. 자문 자료 1110)

앞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를 심대하게 변화시켜갈 문제인 저출생·고령화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성취한 보기 드문 성공의 결과인 측면이 강하다. 우선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 위생시설과 위생 관념의 개선,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등을 반영한다. 반면에 저출생은 주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부정적 현상으로 간주되어왔지만, 여기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저출생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성찰적으로 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적정 나이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혼하고, 결혼하면 자녀부양 능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두 자녀 이상을 갖는 게 자연스런 삶이라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이 결코 자연스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자신의 미래 삶의 전망, 자신의 처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향후 어디까지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성찰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가문,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110) 신정완(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자문서 내용임

사회 근대화의 전형적 양상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출생에는 물론 어두운 측면이 있다. 저출생 현상은 청년세대가 자신과 잠재적 자녀의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청년세대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통상 저출생 현상의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어온 것은 주로 경제적 요인들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기술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기업들의 경영방식 변화 등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진과 노동시장 양극화, 오랜 역사를 가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수도권의 주거비 상승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 사교육비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어왔다. 이런 진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경제가 성숙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노동시장 양극화나 ‘고용 없는 성장’,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등도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출생률이 낮은 나라는 없고 한국만큼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나라도 없다. 따라서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려면 무언가 한국 사회 특유의 요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한국 사회의 강한 경쟁적 성격이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사교육에 노출되었던 세대이고, 대학 진학 후에는 좁은 취업시장 문을 뚫기 위해 학점 관리와 스펙 쌓기에 몰두한 세대다. 그들은 이미 삶에 지치고 경쟁에 지쳐버린 세대이며, 본인들이 공부와 스펙 쌓기에 투자해온 것에 비해 본인들에게 열려 있는 삶의 전망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세대일 것이다. 청년 세대의 다수는 그간의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이런 수준의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고도성장 시대와는 달리 개천에서 용 나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그들은 자신의 학력 등 스펙과 부모의 재산 등에 비추어 자신의 미래를 상당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화려하고 멋진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단편적으로나마 간접 체험해온 세대여서 욕구 수준과 삶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의향도 별로 없고, 자녀가 유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로 살아가게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크게 보면 아동수당 도입과 같이 양육비용의 일부를 사회화하고, 공공보육 시설 증설 등을 통해 기혼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금지 등을 통해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조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와 여성계 등에서 이런 방향의 사회개혁을 주창해왔고, 해외사례로는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이 대표적 모범사례로 간주되어왔다. 이런 방향의 노력은 출생률에 미치는 효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도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의 정책을 더 강도 있게 추진한다고 해서 출생률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1930년대의 스웨덴과 2020년대의 한국은 여러모로 사정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출생률은 앞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하락할 것이고,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도 꾸준히 감소하리라 전망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더 시급히 고민해야 할 문제는 출생률 제고 방안보다는 저출생·고령화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위기라는 점에서 인구감소, 특히 소비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의 인구감소는 인류 전체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인구감소는 자연환경 보존뿐 아니라 주거비 하락, 교통시간 단축, 교육과 취업에서의 경쟁 완화, 임금 상승 가능성 제고 등 여러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

저출생·고령화가 던져주는 가장 무거운 숙제는 점점 더 증가하는 노령 인구를 점점 더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한다는 경제적 문제다. 저출생·고령화는 개인 수준에서는 개인의 생애 기간 중 취업 기간 대비 비취업 기간, 즉 은퇴 후 생애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해외로부터 노동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해결책은 취업 기간에 번 돈 중 길어진 비취업 기간에 지출할 돈의 몫을 늘리거나, 취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취업 기간의 소비수준을 낮추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대안은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노인은 이미 대체로 가난하여 한국의 빈곤층의 핵심이 빈곤 노인인 실정므로, 노인들의 소비수준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은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첫째 대안, 즉 취업 기간에 번 돈 중 비취업 기간에 쓸 돈의 몫을 늘린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조세 부담률을 높이거나 개인저축을 촉진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경우엔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급하기도 하다. 급격한 인상은 사회적 저항을 낳을 것이므로 예컨대 5년에 1%p 인상과 같이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으로 인해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구 소비지출에서 자녀를 위한 지출이 다소 줄어들 텐데, 이 부분이 노인부양비용 증가에 대한 완충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안인 취업기간의 연장은 거의 모든 선진국 정부가 선호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취업률은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것이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오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근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년 연장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중·고령자의 건강수준이 개선되는 데 발맞추어 법정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고용조건 격차가 매우 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가 드물다. 정년 연장은 주로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민간 대기업 종사자 등 상위 노동자층에게만 혜택을 줄 것인데, 이들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여서 정년 연장은 청년세대의 취업 기회를 더 막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서의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령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는 대체로 비정규직 일자리 중에서도 고용조건이 열악한 편이었는데, 노동시간에 따른 비례적 보상 체계를 정착시켜 파트타임 일자리가 고령층이나 유자녀 여성 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애 취업 기간을 늘리려면 평생교육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도 고령층을 주 타깃으로 삼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재취업 능력 함양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특히 중·고령층의 digital literacy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digital literacy

는 중·고령층의 취업능력 개선뿐 아니라 합리적 소비능력 등 종합적인 생활능력 향상에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개혁도 필요하다. 이미 한국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대학이 평생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또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이 필요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원에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 개혁도 필요하며, 직장에서 학업휴가제를 도입하거나 학업기간 중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여 가능하면 퇴직하지 않고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학업과 근무 모두 현재보다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양자가 더 잘 결합되도록 해야, 중·고령층의 취업능력이 유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는 의료비 상승을 낳는다. 한국에서 이미 건강보험 지출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쓰이고, 다른 선진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 의료비 지출에서 생애 마지막 1년간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 못지 않게 의료비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 존엄사 기준 완화를 통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감소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의 노인 편중성을 다소나마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의존도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소위 3D 업종에서는 외국인 인력 없이는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출생률이 더 떨어지고 특히 빈곤계층에서 출생률이 더 낮아질 경우, 생산직이나 단순 서비스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

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현재보다 몇 배 규모의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국 경제에서의 필요성, 문화적 친근성, 외국인 인력의 노동권과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인력의 증가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낳는다.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다문화주의'적 접근보다는 한국 문화에의 '동화'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조가 이주민들에게도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출신지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정책이 스웨덴어와 스웨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울 동기를 약화시켜 이들의 취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고 한국의 제도와 문화를 빠르게 배우고 이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더 유리한 정책일 것이라 생각된다.

2. 자문 자료 2. 일본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례를 통해 본 정책적 함의¹¹¹⁾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연구는 저출산(생)·고령사회에 대한 기존의 인구학적, 경제학적, 국가주의적 접근 외에 개인의 주관적 태도와 가치관 및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경로에 대한 미시적,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진단하고, 새로운 현실적인

111) 이지영(대전대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 조교수)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자문서 내용임

방안들을 모색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출산율 6.0과 연 3%의 인구증가율을 배경으로 인구 증가를 근대화의 저해 요인으로 파악하여 강력한 출산 억제정책을 시행해왔다. 1988년 합계출산율이 1.6을 기록하면서 출산 억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995년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출산 억제정책은 폐지되게 된다. 출산 억제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접어들면서 2001년 합계출산율 1.30, 2002년 1.17명, 2005년 1.08로 급격히 저하하면서 본격적인 출산장려정책 도입되었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에 이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된 이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분기 출생율은 0.75를 기록하며 OECD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연구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저출산(생)·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한국의 저출산(생)·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¹¹²⁾.

일본에서 저출산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1990년, 후생성이 1989년의 출산율 1.57을 ‘쇼크’로 발표하면서이다.

112) 본 글의 일부는 이지영, 2019, “일본의 출산정책의 젠더적 함의,” 『日本學報』 118호를 바탕으로 기술되었음.

출산율 1.57을 일본 정부가 쇼크로 인식한 이유는 제1차, 제2차 베이비붐을 거치며 2.1명 정도를 유지하던 출산율이 1989년에는 전후 가장 낮았던 1966년의 1.58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치보다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1.57 최저 출산율의 이유이다. 1966년 병오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마(白馬)의 해로 이 해에 태어나는 아이는 ‘팔자가 사납다’는 통념으로 인해 부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피했기 때문에 전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낸 것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1989년은 다르다. 출산을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당시 일본은 거품경제의 활황 속에 완전고용 상태였고 임금은 해마다 인상되었다. 즉, 출산을 기피하지 않은 자연 출산율이 최저 수준인 1.57을 기록한 것이다. 1.57 쇼크는 기존의 인구는 자연 증가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적정 수준에서 인구증가를 정지시킬 것인가 하는 인구정지론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에 대한 예측과 전망으로 이어졌고 생산인구의 감소와 사회보장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우선 ‘1.57 쇼크’의 원인 분석에 나섰다. 전후 1946년에서 1949년까지 3년간 260만 명 이상의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했고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은 1971년에서 1974년까지 3년간 210만 명 이상이 출생하는 제2차 베이비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제3차 베이비붐은 도래하지 않았다. 왜 제3차 베이비붐은 오지 않았는가. 1998년 후생성백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배경’으로 ‘개인의 삶의 다양화, 여성의 사회진출과 그것을 저해하는 고정적인 성별역할분업과 고용관행’이라고 제시했다. 지금까지 후생성이 유지해왔던 가족과 저출산에 관한 인식이 일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백서의 진단이다.

이후 일본은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수립, 실시했으며 출산율은 1989년의 1.57에서 2005년 최저치인 1.26을 기록했다가 2015년에 1.45까지

회복했으나 2022년 1.33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비해 급격하게 출산율이 저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백서의 진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 최초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젤플랜(1995년~1999년)¹¹³⁾이 1994년에 책정되었고 이를 확대한 신 엔젤플랜(2000년~2004년)¹¹⁴⁾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어린이집에서 0세에서 3세까지의 영유아의 돌봄을 가능하게 하였고 지역의 육아 지원센터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육아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모자보건, 육아 상담과 교육 등 질적인 부분도 확충해 나갔다. 둘째는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법’ 제정, 2007년 노·사·정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 민관회의’에서 ‘일과 생활의 조화 현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했다.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시켰다. 셋째는 아동수당의 내실화이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자녀로 중학교 졸업까지 0세에서 3세 미만은 월 15,000엔을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3세에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첫째와 둘째는 10,000엔, 셋째부터 15,000엔을 지급받는다. 중학생은 일률적으로 10,000엔을, 그리고 소득제한 이상은 일률적으로 5,000엔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일본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응을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이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저출산과 분리해서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2007년 문제’와 ‘2025년 문제’가 있다. ‘2007년 문제’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 일제히 정년퇴직을 맞이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

113) 정식 명칭은 「향후의 양육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방침에 관하여」이다.

114) 정식 명칭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관하여」이다.

생산성 하락과 숙련노동자의 부족 문제를 일컫는 것으로 이에 대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다. ‘2025년 문제’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일제히 75세 이상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의 초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가리킨다. 고령자 부부세대 또는 1인 세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경제적 위기, 돌봄 부족, 사회적 고립이 대두하면서 고령자의 자아실현, 삶의 만족도,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인간 존엄에 대한 욕구에 기반한 시책을 펴고 있다. 특징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을 인정하는데 중심은 다양한 NPO와의 거버넌스, 기능의 결절점으로서의 지자체의 역할, 완전한 관계망의 구축, 무상지원에서 유상의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2012년에는 군마현(群馬県)의 주택공급공사가 다세대 교류, 협동, 지켜보기, 상부상조의 커뮤니티 구축을 목적으로 일본 최초의 공설 콜렉티브 하우스를 개설했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응을 분리해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출산과 결혼, 가족 구성은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고령화는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이다. 두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목표, 수단이 같을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시책에도 완만하지만 출산율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일본적 수용의 특징 때문이라고 하겠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지만 그 시작은 1991년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와 함께였다. 이후 ‘잃어버린 10년’과 2000년대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여성의 노동력화에 중점이 두어지고 일본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생산성 효과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일본기업의 요구에 밀려 고용정책으로 전환돼버린 것이다. 비정규직이 여성 고용형태의 주류가 되고, 이어서 남성을 비정규직화하는 노

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소수의 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한정되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나 전업주부, 싱글 맘 등의 출산, 육아, 돌봄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 여성의 출산, 육아, 돌봄 노동의 부담은 해소되었는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이 2012년에 실시한 ‘가족과 성별 역할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남녀의 한 주간 평균 가사, 육아, 돌봄 시간은 일본의 경우 남성이 12시간, 여성은 53.7시간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참여율은 여성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을 보면 2016년 2.65%로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역할임이 드러났다. 정규직 여성의 출산 이후 직장 복귀율이 8%밖에 되지 않는 것은 육아와 가족책임에 있어서 여성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직장과의 분위기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대책의 강조와는 달리 마더니티 하라스먼트(maternity harassment)라는 용어가 널리 퍼져 있을 만큼 임신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본 기업의 논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 견고한 성 역할분업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책이 ‘정상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있다.

출산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2012년에 발족한 2차 아베 내각은 출산율에 수치목표를 도입하며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돌입했다.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제시되었고 그를 위해 30.1억 엔의 ‘저출산 위기돌파 기금’이 창설되었다. 이 기금은 ‘지역의 소자화대책 강화’로 명칭이 바뀌어 신규사업 ‘지역의 저출산 대책 강화 교부금’으로 일본의 광역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상한 4,000만 엔, 기초 자치단체

인 시정촌(市町村)에 상한 800만 엔에서 2,000만 엔을 교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기적인 출산 장려 등 양적 통제와 여성의 몸에 대한 대상 통제의 접근은 출산율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성과 가족을 둘러싼 양상과 개인의 삶의 방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적 정향과 지향이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점차 하나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고, 이성 간의 별륜혼에 의해 구성되며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근대가족도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출산율 증가가 정말 중요하다면 수치 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의 저출산대책 사업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보다 저출산 대책을 정형화된 특정 가족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별륜혼 가족, 한 부모 가족, 비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고 동등하게 처우와 권리를 보장할 때 보다 실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을 구성하지 않을 자유와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과 권리가 함께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과 가족의 구성은 개인의 자유권의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정책이 비혼 1인 세대의 부담으로 유지되는 세제와 공제 제도의 문제점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을 구성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이 세제 등 정책에 있어서의 더 많은 부담과 더 적은 혜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자문 자료 3. ‘가족 혁명’과 지속가능한 사회¹¹⁵⁾

어떤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볼 것인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인구 규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경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인구 현상에 대한 가치판단보다 그 현상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시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항목 중 SDGs 3.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 증진을 강조하고 있고, SDGs 5.는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의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2022년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혼주의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은 결혼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고, 남녀가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0%에 육박했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계청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나누어 조사하는데, 2022년도에는 가족, 교육,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부문을 조사하였고,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의견, 응답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직전 조사보다

115) 성정희(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자문서 내용임

1.2%포인트 감소한 50%로 조사되었다(남성은 55.8%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 여성은 44.3%만 결혼에 찬성한다고 응답). 미혼 남녀만을 보면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꼭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혼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전체 연령대 남녀 의견 격차는 11.5%p였는데, 미혼 남녀(남성 36.9%, 여성 22.1%)에서는 격차가 14.8%p였다.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비혼주의가 더 강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요한 점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미혼 남녀 간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미혼 남성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2%),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3.4%),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1.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혼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3.3%로 가장 많았고,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22.0%),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1.9%),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11.2%) 등의 순이었다. 미혼 남성의 8.4%도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혼 여성의 9.1%는 ‘일과 결혼의 병행이 어려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적 맥락에서 여성들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남성’이 꼭 좋은 반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으로 자신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또한 결혼으로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미혼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를 그 어느 세대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국가주의, 집단주의, 민족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담론과 대비된다. 갈수록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화되고 개인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는 비혼, 만혼, 무자녀, 비혼 출산 등 기성 세대와 매우 다른 젊은 세대의 결혼관, 자녀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고나 생각의 관점에서 나아가 행동과 실천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정적인 의미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인, 즉 리터러시(literacy) 수준이 높은 개인은 민주적인 가족은 물론, 견고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사회공동체의 구성요소이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개인과 민주적인 사회공동체가 어우러진다면 가족 구성은 활발해질 수 있다. 사회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도 높아질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일 결혼 병행 어려워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약화될 것이다.

이혼·재혼에 대한 관점도 크게 달라졌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8년 전에 비해 9.3%p 상승한 49.2%로, ‘하지 말아야 한다’(부정응답)고 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17.3%p 감소한 27.1%로 나타났다. 동거와 출산에 대한 생각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전 조사보다 5.5%p 늘어 65.2%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찬성한 사람은 직전 조사보다 4%p 증가한 34.7%로 나타났고 특히 이 조사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5%p 더 높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가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 현상은 사회 변화의 주요 결과이기도 하고,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구학적·거시적 관점보다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 개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인구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삶과 생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맞는 법·제도적, 정책적 대응, 구체적으로 적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34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부록 2] 포럼 및 컨퍼런스 안내문

1. 제1차 포럼 안내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젠더, 세대간, 세대내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대한 모든 세대의 인식 전환 없이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극복은 물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속 포럼을 통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1차 포럼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 포럼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일시: 2022년 6월 16일 (목) 오후 2:00 - 오후 4:30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광정환홀(B146) & ZOOM 동시진행

참여방법: 현장 & 줌(ZOOM)

사전 온라인 등록: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kfWsMNBdN5Tc4LWx6>)

프로그램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우미성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원장)
14:10 - 14:40	기조발표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문화사회학회 회장)
14:40 - 16:00	패널토론	좌장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패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용규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복지팀장)
16:00 - 16:30	질문 및 종합토론	국도형 (청년문화포럼 부회장/한국사회공헌협회 회장)
		이성준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 강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 제2차 포럼 안내문



2차 포럼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오후 2:00 - 오후 4:45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학생회관(B146) & ZOOM 동시진행
- 참여방법: 현장 & 줌(ZOOM)
- 사전 온라인 등록: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zT4A7PYtwUDqN7oq5>)



프로그램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원장)
		좌장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패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순남 (성공회대 연구교수 /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14:10 - 15:40	1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주 (전국임양가족연대 활동가)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안미향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15:40 - 15:50	휴식	
15:50 - 16:45	2부	전체 토론

* 전체 행사 일정

- 1차 포럼(2022.06.16) :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 3차 포럼(2022.10.07) : '젠더, 가족, 가족문화'
- 컨퍼런스(2022.11.18) : '코로나19 이후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50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3. 제3차 포럼 안내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

저출산·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3차 포럼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 일시: 2022년 10월 7일(금) 오후 2:00 – 오후 4:30
- 참여방법: 줌(ZOOM) 화상 회의
- 사전신청: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4mXzXHtnQFpNBcnd7>)



프로그램			
14:00 – 14:05	개회		
			좌장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패널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14:05 – 15:30	1부		최선경 (한국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강사)
			송병기 (의료인류학자)
			김재현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홍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15:30 – 15:40	휴식		
15:40 – 16:30	2부	전체 토론	

*** 전체 행사 일정**

1차 포럼(2022.06.16) :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2차 포럼(2022.09.16) :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컨퍼런스(2022.11.18) : ‘코로나19 이후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공동체’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제4차 포럼(컨퍼런스) 안내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합동연구
저출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 일시: 2022년 11월 18일(금) 오후 1:00 - 오후 5:50
- 장소: 연세대 백양누리 객정관홀(B146) & 줌(Zoom) 동시 진행
- 사전 온라인 등록: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작성
<https://forms.gle/YQuvv4wsVlJAjMwa9>



— 프로그램 —

13:00 - 13:10	개회	
13:10 - 15:00	1부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개인, 가족, 사회 사회: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발표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준비는 되어있나?: 현황과 과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부원장) 토론 최종철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이민다문화센터 소장) /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저출생 초고령사회의 문제들과 해결방안” 이양호 (연세대 신과대학 명예교수) 토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15:00 - 15:10	휴식	
15:10 - 17:00	2부	팬데믹 이후의 삶과 사회 사회: 이호철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발표 3 “재생산 위기의 뉴노멀화와 난잡한 돌봄” 임옥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교수) 토론 오한호 (작가,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 저자) /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발표 4 “저출생 고령사회와 팬데믹 이후의 삶의 질과 복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조찬수 (강남대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17:00 - 17:50	3부	<저출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중간발표 발제 김인춘·최정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패널 홍세영 (안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손연우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 전체 행사 일정

1차 포럼(2022.06.16) :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2차 포럼(2022.09.16) :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3차 포럼(2022.10.07) :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